

우리의 진정한 자산은 몇 권의 책이 아닌 여러분의 집단지성입니다

새사연은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모든 간행물을 출간 1년 뒤
PDF Book으로 제작해 공유하려 합니다.

이러한 지식 공유는 대안 연구의 성과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며 소통하기 위한 새사연의 노력이자 다짐입니다.

새사연 PDF Book이 올바른 정책 공론장 형성에
밑거름으로 값지게 쓰일 수 있도록
새사연 회원과 독자 여러분 모두가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편하게 읽는 법

화면 왼쪽의 책갈피를 펼쳐 원하는 페이지를 찾아가거나, 목차 페이지의 링크를
통해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한 뒤에는 ctrl+L을 눌러 전체 화면으로 읽으면 됩니다.

:: 파일 저장하는 법

현재 상태에서 '파일>다른이름으로저장'을 선택하거나 ctrl+shift+S를 누르면
원하는 폴더에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새사연 PDF Book 다운로드 배너'에 마우스를 올리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다른이름으로대상저장'을 선택해도 원하는 폴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게시판에 옮기는 법

PDF Book은 용량이 커서 카페나 블로그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새사연<http://saesayon.org> <새로운 미래> 게시판에 등록된 '새사연
PDF Book 다운로드 배너'를 긁어 복사한 뒤 원하는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에
붙여넣으면 링크가 함께 복사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2006 2 ()

2008 2 2008 가
, 2008 12 < >가 ' 100 ' 가 15 가
가 2008 가 ,

1/10 100 800

가 가 1000
' saesayon.org ' cafe.daum.net/saesayon ' sisun.tistory.com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

“혁명은 미풍처럼 스며들고,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친다”

새사연 신서 ②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

지은이 | 김병권 · 손우정 · 안태환 · 여경훈 · 이상동 · 정희용 · 한우림
 부록번역 | 이아정 · 한병채
 펴낸이 | 김성실
 편집주간 | 김이수
 편집기획 | 조성우 · 박남주 · 천경호
 마케팅 | 이동준 · 이준경 · 강지연 · 이유진
 편집디자인 | 하람 커뮤니케이션(02-322-5405)
 표지인쇄 | 중앙 P&L(주)
 본문인쇄 · 제본 | 한영문화사
 펴낸곳 | 시대의창
 출판등록 | 제10-1756호(1999. 5. 11)

초판 1쇄 발행 | 2007년 2월 21일
 초판 3쇄 발행 | 2007년 10월 22일

주소 | 121-816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13-81 (4층)
 전화 | 편집부 (02) 335-6125, 영업부 (02) 335-6121
 팩스 | (02) 325-5607
 홈페이지 | www.sicaew.co.kr

ISBN 978-89-5940-060-7 (03300)
 값 16,500 원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07,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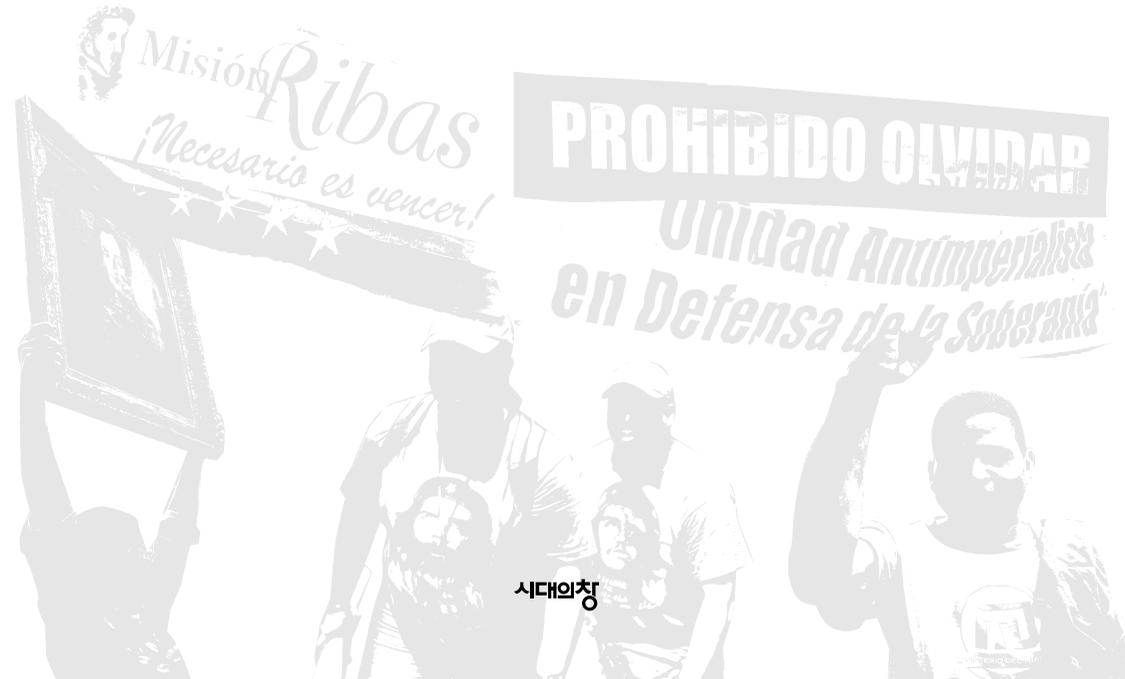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차베스의 상상력, 21세기 혁명의 방식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

김병권 · 손우정 · 안태환 · 여경훈 · 이상동 · 정희용 · 한우림 지음



혁명의 시대. 누군가 지금

을 혁명의 시대라 부른다면 편견받기 십상이다. 혁명의 꿈은 어느새 덧없는 열망으로 취급받기 일쑤다.

그랬다. 혁명의 시대라면 흔히 1980년대를 이른다. 저 뉴라이트의 전도사를 자임한 신문조차 그 시대를 서슴없이 혁명의 시대로 쓴다. 그러하지 않은가. 실제로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하나들이 아니지 않았던가. 마치 혁명이 임박했다는 듯이 격문이 오갔다. 더러는 곧 혁명을 이룬다는 열정에 들뜬 시절이기도 했다.

하지만 냉철히 훑아볼 일이다. 과연 그 시기가 혁명의 시대였을까. 아니다. 굳이 규정하자면 개혁의 시대였다. 1987년 6월항쟁을 보라. 군부독재에 빼앗긴 가장 초보적인 민주주의를 되찾자는 게 항쟁

의 공감대였다. 혁명의 열기가 살짝 드러난 것은 87년 노동자대투쟁이었다. 하지만 그조차 아무런 준비 없이 일어난 자연발생적 저항이었다.

그랬다. 먹물들 사이에 혁명의 담론은 넘쳤다. 하지만 노동자와 농민은 달랐다. 혁명을 더불어 꿈꾸기엔 아직 일렀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신화가 남아 있었다.

문제는 6월항쟁 20돌을 맞는 지금 여기다. 어떤가. 군부독재는 오래전에 물러갔다. 정치적 자유는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넘친다. 권위주의 정권만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대통령의 권위조차 실종될 정도다. 하지만 민중의 살림살이는 어떤가. 1980년대와 비교해 더 악화되었다.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농민은 벼랑으로 물리고 있다. 부익부빈익빈은 갈수록 깊어진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도 모자란다면 ‘개혁 세력’을 자임하는 자들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강행하고 있다. 그뿐인가. 미국 조지 부시 정부의 제국주의 정책이 드리운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다.

그럼에도 생계망게한 일이다. 혁명의 객관적 조건이 익어 갔음에도 정작 혁명의 노래는 들려오지 않는다. 때 이르게 혁명의 담론을 즐겨 외치던 먹물들은 언죽번죽 말한다. 1980년대식 논리는 이제 집어치우라고.

과연 그러한가. 먹물들에게는 그럴지도 모른다. 권력과 명예와 부가 따르는 자리에 저마다 한자리씩 꿰차고 앉은 그들에게 더 이상 자신들의 출세를 가로막을 독재정권도, 굳이 민족통일도 중요하지 않을 터다. 하지만 아니다. 민중의 삶은. 일흔을 앞둔 소작 농민과 40대 중반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낮에 경찰이 휘두른 폭력에 맞아 숨지는 시대다. 미국 네오콘의 제국주의 정책이 평택미군기지과 대북 목 죄기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혁명이 필요한 시대다. 1980년대의 논리가 민중의 삶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시대다.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렇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세계 곳곳에서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의 꿈이 영글어간다.

오해 없기 바란다. 무장 혁명을 하지는 게 아니다. 시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무장 혁명의 시대는 지났다. 선거 혁명의 시대다. 그것이 현실적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선거 혁명이 옳은 노선이다. 비단 브라질의 룰라가 보기는 아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보라. 미국과 맞서 꾀꾀하게 베네수엘라 경제를 혁명적으로 재건하고 있다. 선거를 통한 혁명적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차베스의 실험은 생생하게 증언해준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이 베네수엘라 차베스 실험에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사연은 이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에서 독창적인 그림을 제시했다. 새사연의 두 번째 결실인 이 책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는 우리의 그림이 결코 백일몽이 아님을 증언한다.

이 책은 새사연의 김병권 연구센터장과 정희용 미디어센터장을 비롯해 손우정, 여경훈, 이상동, 한우림 상임연구원들이 한국 사회에 차베스 실험이 주는 함의가 무엇인가라는 치열한 문제의식으로 베네수엘라 혁명을 낱알이 분석했다. 기왕의 차베스 관련 저서들과 그 점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고, 바로 그렇기에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모든 독자들에게 갈피갈피마다 감미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리라는 확신을 갖는다.

그렇다. 1980년대가 아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민중의 상황을 보라. 바로 지금이다. 긴 호흡, 깊은 상상력으로 선거 혁명의 큰 그림을 그릴 때다. 먼동 트는 혁명의 시대에 이 책을 바친다.

2007년 2월 13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 원장 손 석 춘

새사연이 첫 해외 사례 연

구 대상으로 베네수엘라를 선정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베네수엘라 혁명은 21세기에 일어난 사실상의 첫 혁명이라는 점에 관심을 두었다. 최근 우리는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때문이든, 아니면 정보기술 혁명에 의한 것이든 사회경제 면에서, 외부 환경 면에서 거대한 변화를 경험했다. 이러한 변화의 한복판에 선 한국 사회의 대안 모색 역시 최근 연간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베네수엘라 역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구조적 변화 한가운데에서 일어난 세계화 시대의 혁명이었다. 이 점이 1차적인 연구 동기다.

위의 이유에서 발생하기도 하겠거니와 베네수엘라 혁명은 같은 남미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물론이고 아시아나 여타 나라들의 ‘선거 혁명을 통한 개혁 정부’와는 여러모로 구분되는 차별성을 가

졌다. 두 번째로 베네수엘라 혁명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를 하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연속적인 선거와 투표를 통해 권력 교체와 제도 교체를 신속히 추진해 나간 점”이나, “자본에 대한 일방적 수탈이나 강제적 몰수를 하지 않으면서도 경제 제도의 근본적인 변혁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간 점”이 그러하다. 확실히 이러한 면에서 베네수엘라는 대안 모델로 이행하는 경로를 모색해야 하는 한국의 진보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리라라는 판단이었다.

이 연구서는 지난 10년간의 베네수엘라 혁명 전개 과정을 시간적으로 추적하는 방식의 베네수엘라 혁명사 개론서가 아니다. 정치, 경제, 주민자치, 석유 산업, 지역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별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혁명 역사 개론서들과 큰 차이가 있다.

제1장은 베네수엘라의 사회경제적 현황과 혁명 전개 과정을 압축적으로 요약한 개요다. 최근 베네수엘라 혁명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독자들을 위해 경제적·정치적 현황과 혁명 진행의 단계별 특징을 간략히 짚어보았다. 베네수엘라 혁명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는 독자라면 건너뛰어도 좋고, 전체 흐름과 맥락을 잡기 위해 읽어도 좋다.

제2장은 베네수엘라 혁명의 정치적 특징을 살펴본다. 정치적 이행이 ‘어떻게 완전히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는

지' 분석한다. 나아가 차베스의 위로부터의 개혁이 민중의 주체적 참여를 이끌어낸 과정, 이렇게 창출된 아래로부터의 힘이 혁명을 급진전시킨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덧붙여 베네수엘라 혁명에서 '국민을 능동적 주체로 세우는 직접 정치의 구현' 방식을 짚어보며 한국 사회 대안 모델의 시사점을 얻어 보려 했다.

제3장은 이른바 베네수엘라 방식의 '참여민주주의'의 실체와 특성을 분석한다. 기존의 포퓰리즘이나 국가주의로는 해석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적 실험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게 본 장의 목적이다. 구체적 사례로 주민 참여형으로 조직된 베네수엘라의 대표적이면서 독특한 두 개의 조직, 즉 정치 조직인 볼리마리안 서클과 자치 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점 분석해 보았다.

베네수엘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미약하지만 실체적 접근을 통해서 그것이 '한국의 참여정치'와 어떤 점에서 근본적으로 구분되는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제4장은 경제 변혁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사회의 내부 경제 변혁 과정, 경제 구조의 변화에서 노동자와 민중의 참여와 역할,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경제 모델의 지향점 등을 검토하는 글이다.

이 장에서는 베네수엘라에 독특한 공동경영 제도 실험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협동조합 건설 사례를 통해 일차적인 분석 근거를 제공한다. 나아가 이것이 어떻게 '사회적 생산 기업'과 '사회적

경제'로 집중되는지 맥락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경제 변혁 실험이 단순히 반신자유주의 경제 대안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주장대로 20세기 사회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21세기 사회주의'의 목표와 프로젝트, 경로를 재창조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볼 것이다. 국내에 이와 관련된 소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대안 경제 분야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꼭 일독을 권한다.

제5장은 베네수엘라 '석유경제 체제'를 별도의 주제로 분리하여 분석한 연구다. 본 장을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석유 자원이 처음부터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하게 된다. 제5장의 제목이 시사하듯이 석유가 어떻게 '악마의 배설물'에서 '축복의 씨앗'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를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하게 된다. 특히, 2003년 이후 혁명의 통제권 안에 확실하게 들어온 국영석유회사의 이익을 지렛대로 차베스 정부가 석유 일변도의 기형화된 산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향후 베네수엘라가 석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해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6장은 남미 공동체를 향한 차베스의 독특한 구상과 방식, 그 초기적 전개 과정을 짚어보는 글이다. 본 장을 통해 차베스가 시몬 볼리바르의 지역 통합 이념을 좀더 명쾌하고 참신한 지역 협력 프로그램으로 구체화시키려는 구상, '남미를 위한 볼리바르 대안'을 집중

조명하여 그것이 미국 주도의 무역 질서, 세계 질서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분석해 본다.

특히 최근 미국식 경제 통합 모델을 추종하는 한미 FTA 구상과 대척점에 있는 남미 경제공동체 구상은 대안적 통상 전략과 대외 경제 전략 구상에 강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마지막으로 결론부에 해당하는 제7장은 베네수엘라 혁명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총괄적으로 요약한다. 베네수엘라 혁명을 종합하면서 20세기 방식을 뛰어넘는 진정한 ‘21세기 방식의 혁명’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학술이론적 엄밀성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대략 세 가지다. 첫째는, 연구 대상이 되는 베네수엘라 혁명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차베스의 집권 1기인 2000~2006년 과정은 미래를 포함하는 베네수엘라 혁명 전 과정에 비취 볼 때 어찌먼 초기 단계일 수도 있다. 진정한 혁명의 본질이 시작되는 단계는 이제 막 집권 2기를 시작하는 올해부터일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대부분의 분석이 쉽게 결론을 도출하기보다 그 진행 경과를 더 두고 보아야 할 대목이 많이 있다.

둘째는, 한국의 남미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연구 수준이 극히 초보적인 단계라는 점이 작용한다. 80년대 ‘종속 이론’ 연구로 유행했던 남미에 대한 관심은 현재는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베네수엘라 혁명에 대한 국내 소개 역시 극히 초보적인 수준이거나 차베스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많아서 국내 연구 성과를 수렴해 연구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았다.

셋째는, 본 연구를 깊이 있게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 못지않게 핵심 맥락을 빠르게 전달하여 이후 학계의 풍부한 연구와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일차 목표로 삼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각종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볼리바리안 헌법을 초벌 번역하여 연구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준 멕시코 거주 안태환 객원연구원께 감사드린다. 또한 연구 진행을 성원해 준 새사연 운영 위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다분히 시론적인 이 연구를 계기로 하여, 한국 사회에도 베네수엘라 혁명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지평이 본격적으로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센터장 김 병 권

발간사 ... 4

머리말 ... 8

여는 글 왜 ‘베네수엘라 혁명’인가 | 정희용

1. 미스 유니버스의 나라에서 혁명의 나라로 ... 21

베네수엘라는 미인 천국 | 혁명 8년이 베네수엘라를 깨우다 | 혁명은 방송에 나오지 않는다 | 포퓰리즘인가 자각된 국민의 힘인가

2. 차베스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몇 가지 오해 ... 30

첫째, 베네수엘라에는 조종동이 없다? | ‘조종동’과 체급이 다른 시스네로스 그룹 | 주류 언론, 차베스 지지 시위 외면 | 둘째, 차베스의 성공은 국제적 고유가 때문이다? | 셋째, 차베스는 정치 후진국의 독재자 혹은 포퓰리스트다? | 21세기 한국과 베네수엘라

제 1 장 베네수엘라 혁명의 배경과 개요 | 김병권

1. 베네수엘라는 어떤 나라인가? ... 45

경제 현황 | 정치 제도와 정당

2. 베네수엘라 혁명의 배경-신자유주의 10년 ... 55

80년대 외채 위기와 장기 경제 침체 | 신자유주의의 전격적 수용 | 즉각적 반신자유주의 민중 봉기 | 신자유주의 확대와 심화

3. 반신자유주의 정치사회 혁명의 전개 과정 ... 61

1단계, 대통령 당선과 새 헌법 공포 | 2단계, 사회 개혁 착수와 반혁명의 제압 | 3단계, 민중 참여 개혁의 전면화와 질적 도약 모색

4. 주요 용어 정리 ... 78

제 2 장 진정한 민중 권력의 형성 과정 | 손우정

1. 들어가며 ... 89

2. 반란 세력의 합법적 집권 ... 92

실패한 쿠데타와 차베스의 등장 | 무장 혁명에서 선거 혁명으로

3. 위로부터의 혁명: 제한의회와 볼리바리안 헌법 ... 100

국민직접정치가 구현된 새로운 헌법 | 인적 잔재 청산을 통한 과도 지배 체제의 해체

4. 반혁명 세력의 도전과 민중의 응전 ... 109

반혁명 세력의 반란 | 일어서는 민중, “민중이 단결하면 못할 게 없다” | 사장들의 파업, 반혁명이 혁명을 강화시키다 | 민중을 위한 임무 : 볼리바리안 혁명의 전진

5. 베네수엘라 혁명의 전망 ... 125

혁명의 장애물 : 내부의 문제 | 외부로부터의 위협 | 여전히 존존하는 반대파의 영향력

6.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시사점 ... 135

국민을 능동적 주체로 세우는 직접정치의 구현 | 준비된 권력 : 공동의 ‘집권 후’ 프로그램 마련 | 혁명 의지와 반혁명 세력과의 관계

제 3 장 베네수엘라 방식의 참여민주주의 | 김병권

1. 베네수엘라 정치 모델에 대한 접근법 ... 145

2. ‘국민 주도-국가 지원’, 새로운 민주주의의 관점 ... 154

국가-공동체-개인의 새로운 관계 | 복지주의와 엘리트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주의의 ‘실행을 통한 학습’ 방식으로 찾아나가는 대안

3. ‘볼리바리안 서클’, 베네수엘라의 노사모? ... 163

볼리바리안 서클은 어떤 조직인가? | 볼리바리안 서클은 누가 조직했고 왜 만들어졌는가? | 볼리바리안 서클은 집권 여당과 어떤 관계인가? | 볼리바리안 서클은

지역 자치 단체와 어떻게 연계되는가?

4.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정치의 핵심 기초 단위 ... 177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모든 개별 주민 단체들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우산 아래로 | 주민이 진정 주도적으로 참여하는가? | 주민자치위원회는 새
로운 민중 권력이 될까?

5. 한국 정치의 혁신을 위하여 ... 198

민중 참여를 통한 관료주의의 극복 | 헌법을 통한 국민의 정치 통제 시스템 상설화

제 4 장 공동경영 제도 도입과 협동조합의 확산 | 여경훈

1. 들어가며 : 21세기 사회주의 ... 211

2. 공동경영 제도 :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실험 ... 215

제도 도입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 | 적용 대상 기업과 이행 과정 | 공동경영 기업의
운영 방식

3. 협동조합의 대대적 확산 ... 231

볼리바리안 협동조합 창조와 전개 과정 | 협동조합의 구체적 사례와 몇 가지 문제점

4. 사회적 생산 기업과 내생적 발전 모형 ... 245

사회적 생산 기업 창출 | 내생적 발전 모형

5. 사회적 경제의 성과 ... 256

노동자 참여와 생산성 | 주요 거시 지표 변화 | 국내 고용 상황 변화 | 다양한 미션
을 통한 삶의 질 변화

6. 사회주의에 대한 새 세기적 해석 : Socialism in Evolution ... 273

노동자 주도와 연대성 | 노동자 참여와 민주주의 | 혁명에 대한 조심스런 전망

제 5 장 석유, '악마의 배설물'에서 '축복의 씨앗'으로 | 이상동

1. 들어가며 : '네덜란드 병'에 걸린 베네수엘라 ... 291

2. '석유-국가 체제'의 역사 ... 296

석유-국가 체제의 탄생 | 석유-국가 체제의 강화 | 석유 산업 1차 국유화 | 신자유
주의의 극복, 제2차 국유화

3. 석유 산업 개혁의 내용 ... 308

PDVSA 개혁 | 세금 개혁 | OPEC 강화

4. 석유 산업과 사회적 경제 ... 316

경제 성장 | 경제 구조 변화 | 가난과의 전쟁 그리고 인간 개발

5. 베네수엘라의 상식에서 배운다 ... 333

제 6 장 대안적 지역협력체 건설은 가능할까? | 한우림

1. 대안적 지역협력체 건설은 중남미의 살 길인가? ... 337

2. 중남미 경제 개발 정책과 지역 통합 움직임 ... 340

벽에 부딪힌 미국의 구상

3. ALBA 구상과 그 내용 ... 352

ALBA 구상의 배경과 이념 |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 | 중남미 민중을 위한 대안적
통상협정 | 문화 · 교육 · 의료의 연대 매개 | 국제주의를 지향하는 ALBA와 남남
협력

4. 중남미 지역 통합 전망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주는 시사점 ... 374

왜 ‘베네수엘라 혁명’ 인가

맺는 글 21세기 혁명은 어떻게 가능한가? | 새사연연구센터

1. 베네수엘라는 ‘21세기 방식의 최초의 혁명’ 인가? ... 381
 첫째, 반신자유주의 | 둘째, 구체제의 법적·제도적 극복 | 셋째, 대안경제 혁명 | 넷째, 진정한 참여 정치의 구현 | 다섯째, 새로운 지역 공동체와 국제 관계의 건설 | 여섯째, 20세기 국가사회주의의 극복
2. 무장 투쟁보다 단호한 선거 혁명 ... 387
3. 몰수 없는 혁명 ... 393
4. 민중 헤게모니로 추진되는 혁명 ... 400
5. 파괴보다 창조가 중심인 혁명 ... 404
6. 국민의 지배 강화로 관료주의를 넘는 혁명 ... 406
7.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한국의 미래 ... 408

부록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헌법 | 안태환 · 이아정 · 한병채(번역) ... 413

찾아보기 ... 497

정희용

- 1 미스 유니버스의 나라에서 혁명의 나라로
- 2 차베스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몇 가지 오해

VENEZUELA

베네수엘라에서 혁명이 진행된 지난 8년의 변화는 놀라움 그 자체다. 40년간 권력을 장악해왔던 보수 정당 집권 체제(폰토피호 협정)가 거의 완벽하게 종말을 고했다. 신자유주의 10년 동안 피폐해진 빈곤층의 삶은 극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학교 문턱을 밟아보지 못했던 140만 명의 국민이 처음으로 배움의 기회를 가졌고 전체 인구의 70퍼센트인 국민 1700만 명이 생애 처음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1 미스 유니버스의 나라에서 혁명의 나라로

2006년 12월 3일 실시된 베네수엘라 대선은 현직 대통령인 우고 차베스의 압승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폭발적 지지를 안고 세 번의 대선을 연속 승리했다.

그동안 대부분 국내 언론은 차베스를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인으로 묘사했다. 포퓰리즘, 즉 대중영합주의는 권력의 필요에 따라 대중에 영합하고 대중을 이용하는 정치를 말한다. 포퓰리즘은 일시적으로 득세하나 지속적이지는 않다. 아무리 국민의 눈을 가려도 정치경제적 성과는 머지않아 판명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주적 선거가 충분히 보장된 나라에서 세 번의 대선을 거치며 국민들이 연속적으로 지지를 보낸 정치인을 과연 포퓰리스트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이걸 그 나라 국민들이 분별력이 없거나

혹은 우리 언론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다. 자, 이제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지 접근해 보자.

베네수엘라는 미인 천국

남미 대륙에 위치한 베네수엘라는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시차가 11시간, 거의 지구 정반대편에 위치한 나라다. 지정학적 공간 개념만으로는 한국과 인연이 닿을 이유가 별로 없다. 실제로 양국간 교역과 교류는 많지 않다. 때문에 일반적인 한국인이 갖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관심과 지식은 극히 미미하다.

같은 남미 국가들 가운데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은 축구를 통해서나마 자주 접하지만 베네수엘라는 피파 랭킹 70위권을

오르내리는 정도로 축구 대륙 남미에서 가장 약체다. 우리가 두 번의 월드컵에 열광하는 동안에 베네수엘라에 한번도 눈길을 주지 않은 이유다.

호사가들에게 베네수엘라는 미인이 많은 나라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지난 20년간 미스 유니버스 넷과 미스 월드 다섯 명을 배출했다. 미모에 관한 한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은 셈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유독 미인이 많이 배출되는 이유가 기가 막힌다.

한국보다 약 10년 앞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베네수엘라는 2600만 인구 가운데 64퍼센트가 빈곤층, 다시 그중 절반이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절대빈곤층을 이룬다. 차베스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1998년 당시 상황이 그랬다.

베네수엘라는 한반도의 네 배가 넘는 너른 국토를 가졌으며 또한 세계 5위 산유국이다. 그러나 평평 터지는 석유 외에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지 못했으며 석유에서 나오는 막대한 부는 해외 자본과 국내 일부 자본 그리고 관료들이 독차지했다.

오일 달러로 생필품과 농산물을 해외로부터 수입해 쓰면서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었고 나라 전체로 일찌감치 농업을 포기했다. 농민들이 먹고살 것을 찾아 도시로 몰려들어 인구 90퍼센트가 도시에 집중되었다. 이들 대다수는 빈민가를 형성하고 노점상과 비정규직 일로 연명하며 살아갔다.

수도 카라카스는 폭우가 쏟아지면 일쭉 무너져 내리곤 하는 조악한 빈민들의 거주지와 사설 경비 업체들이 군대보다 삼엄한 경비를 펼치는 부유층의 호화 주택가가 정확한 경계를 가지고 나뉜다. 빈민



들이 그 경계를 넘어보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이런 베네수엘라에서 미인대회는 일부 젊은 여성들에게 지독한 가난을 탈출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 신데렐라의 무도회장이었다. 물론 그 확률은 젊은 여성 전체로 본다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경우의 수와 별반 다르지 않다.

혁명 8년이 베네수엘라를 깨우다

이 같은 절망적 상황에서 치러진 1998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마흔네 살의 젊은 후보 차베스를 새 대통령으로 뽑았다. 차베스의 집권을 기점으로 베네수엘라는 선거로 당선된 대



▲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는 '두 얼굴의 도시'로 불린다. 오일 달러의 수혜를 누리는 발달된 도시 이면에 빈민들의 절망이 짙게 깔려 있다. © 출처: venezuelanalysis.com

통령과 그를 뽑은 민중들이 함께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혁명을 추진 중이다.

20세기 역사는 무장 투쟁을 통한 혁명의 많은 사례를 기록했다. 좌파나 개혁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하여 합법적으로 정권을 인수한 경우는 그보다 더 흔하다. 그러나 지난 세기는 이 양자가 결합된 경험을 남기지 못했다. 베네수엘라는 혁명 세력이 선거를 통해 집권하고 국민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혁명을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베네수엘라에서 혁명이 진행된 지난 8년의 변화는 놀라움 그 자체다. 40년간 권력을 장악해왔던 보수 정당 집권 체제(폰토피호협정)가 거의 완벽하게 종말을 고했다. 신자유주의 10년 동안 피폐해진 빈곤층의 삶은 극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학교 문턱을 밟아보지 못했던 140만 명의 국민이 처음으로 배움의 기회를 가졌고 전체 인구의 70 퍼센트인 국민 1700만 명이 생애 처음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베네수엘라가 내부에서 진행중인 역동적 혁명의 자신감은 남미 대륙 전체에 대한 활기찬 제안으로도 이어진다. 차베스가 제안한 남미 대륙을 위한 볼리바리안 대안^{ALBA} 구상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하여 이 지역을 계속 자신들의 뒷마당으로 묶으려는 부시의 기도를 번번이 좌절시키는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남미 지역 공동체만이 아니라 국제 관계에서도 차베스의 당당한 발언은 지지세를 거침없이 확장 중이다. 2006년 9월 UN 총회 연단에 선 차베스는 전일 유엔 연설을 한 부시를 가리켜 “어제 여기에 악마가 왔었다”며 미국의 패권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를 맹비난

했다. 그는 유엔 총회 역사상 가장 과격한 발언을 했고 가장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혁명은 방승에 나오지 않는다

지금도 베네수엘라의 미인 산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미인 산업만이 젊은 여성들의 유일한 희망이지는 않다. 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기에는 아직 짧은 기간이지만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경제적 자구책을 만드는 중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혁명 이전 762개에 불과했으나 2006년 8월 시점에는 15만 3000개로 늘어난 협동조합이다. 새로 만들어진 이들 조합 안에서 줄잡아 150만 명의 농민과 노동자가 스스로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경제활동을 벌어나간다.

무엇보다 경제 운영의 원리와 목표가 바뀌었다. 혁명 이전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다른 어느 신자유주의 국가와 다름없이 이윤의 끊임 없는 확대만이 최종 목적이었다. 주주의 이익만이 경제활동을 규정하는 원리였다. 그러나 지금 베네수엘라는 '사회적 경제'라는 관점에서 경제를 재구성한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활동의 최종 목적을 국민들의 경제적 가치 향상에 둔다. 좀더 나아가서는 경제가 인간의 능력을 계발하는데 쓰이도록 만든다. 이러한 경제의 작동을 규정하는 원리는 '주주의 이익'이 아닌 '사회적 연대성'이다. 자본이 인간 위에 올라선 전도된 자본주의 현상을 경제 시스템 전체적으로 극복하려는 의도다.

이런 혁명의 진행 상황은 20세기에 선보인 익숙한 방식들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자본주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시장과 자본을 철폐하거나 적대시하지 않고 새로운 체제 내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택한다. 혁명에 대하여 적대적인 세력이나 반대 정당을 탄압하지도 않는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든가 일당독재 개념은 찾아볼 수 없다.

민주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 공평하게 확산되었다. 그 수혜를 한껏 누리는 대표적인 집단이 베네수엘라 언론이다. 수십 년간 지배 체제의 일환이었던 기성 언론은 차베스 정부를 공격하고 혁명을 비아냥대는 일을 제1의 과제로 여기지만 어느 방송이나 언론사도 탄압을 걱정하지 않는다.

2002년 4월 발생한 군부 일각의 쿠데타는 명백히 미국과 자본이 사주하고, 베네수엘라의 주요 매스컴들이 부추긴 구기득권 세력의 총체적 반혁명 기도였다. 반정부 언론은 시위 도중 친차베스 진영과 반차베스 진영의 충돌로 발생한 유혈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며 차베스의 하야를 주장했다.

4월 12일 군 장교 일부가 정국 혼란을 틈타 쿠데타를 벌였다. 쿠데타군이 차베스를 군 기지에 감금하고 사퇴 요구를 한 그 시각 이미 보수 언론은 차베스가 대통령직을 사임했다는 방송을 내보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민중들은 쿠데타 발발 사흘 만에 차베스를 대통령궁으로 복귀시켰다. TV는 혁명을 보도하지 않았다. 차베스에게 모든 혐의를 덮어씌운 채 혼돈과 공포만을 전할 뿐이다. 그러나 이미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혁명을 경험하기 시작한 상태였다. 카라카스의 주요 거리와 차베스가 감금되었던 군 기지가 거대한 민중의 물결로 넘쳤다. 30만 시민들이 대통령 관저를 에워쌌다. 그리고 마침내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하고 자신들과 함께 혁명을 추진해온 차베스를 대통령직에 복귀시켰다.

포퓰리즘인가 자각된 국민의 힘인가

우리 언론은 늘 그렇듯이 이 사건 또한 남미의 정치적 혼돈으로만 치부했다. 그러나 이 드라마 같은 과정의 이면에는 베네수엘라 민중의 정치적 진출이 자리한다. 이 점이 1973년 칠레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당시 선거로 집권한 사회당 정부의 합법적 사회주의 실험은 미국이 지원하는 피노체트 군부 쿠데타에 의해 좌절되고 아옌데 대통령은 고립된 상태에서 카스트로가 선물한 기관총을 들고 맞서다 최후를 맞이했다. 그러나 2002년 베네수엘라에서 반혁명 쿠데타는 국민을 더욱 강하게 단련하는 계기에 불과했다.

군부 쿠데타, 국민 총생산을 -10퍼센트로 떨어뜨린 자본의 철시



와 총과업, 기독교 세력이 주도한 대통령 소환 시도 등 베네수엘라는 주요한 반혁명을 세 번이나 넘어서며 계속 전진 중이다. 지역 단위와 공장에서 그리고 각종 단체와 정당에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정치와 경제에 대한 직접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권력의 진정한 주체로 탄생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8년간 진행되고 현재도 더욱 가속도를 내는 혁명은 왜곡되고 뒤틀린 채 우리에게 전해진다.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동성, 신자유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총체적 시도, 핵심 동력을 이루는 국민들의 자주적인 참여, 수차례에 걸친 반혁명 기도에 맞서 혁명을 수호한 간고한 투쟁, 이전 시기에는 찾아지지 않는 새로운 혁명의 특징에 대해 국내 대부분의 언론은 아무 것도 전하지 않았다.

대신 차베스는 감당하기 어려운 돌출 정치인이거나 국제 무대의 돈키호테로, 베네수엘라 인들은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몽매한 국민으로 묘사되기 일쑤다. 신자유주의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반기를 드는 일에 호의적인 언론이 드물기는 한국이나 베네수엘라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언론이 혁명을 보도하든 무시하든,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은 변화 중이며, 베네수엘라의 투쟁은 지속된다.



2 차베스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차베스는 선동가이며 오일 달러로 빈민들에게 선심 정책을 쓰는 포퓰리스트일 뿐,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적 상황은 좋지 않다.”

“베네수엘라에는 조중동이 없기 때문에 차베스의 대통령 당선과 혁명이 가능했다.”

맞는 말일까? 국내 언론의 창을 통해 외부 세계를 내다볼 수밖에 없는 일반인들에게 베네수엘라 혁명과 차베스의 이미지는 상당히 왜곡된 면을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베네수엘라가 단지 지도자의 카리스마나 오일 달러, 과격한 반미 구호로만 뒤덮이지는 않았다. 그 내부는 훨씬 더 역동적이며 창조적이고 복합적이다. 베네수엘라 혁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을 호도하고 잘못된 선



◀ 베네수엘라에는 한국 신문 시장을 지배하는 '조중동'과 같은 독과점 매체가 없기 때문에 차베스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정을 들여다보면 베네수엘라 언론의 보수성, 반개혁성은 한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 오마이뉴스 김시연

입견을 낳는 몇 가지 오해 또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해야 한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자.

첫째, 베네수엘라에는 조중동이 없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원수이고 행정부를 대표하며 자국 군대의 최고사령관이다. 이런 대통령이 사퇴했다면 모든 언론이 이를 시시각각 보도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그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여 정상 업무를 진행하기 시작하자 모든 언론이 약속이나 한 듯 이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종일 리처드 기어와 줄리아 로버츠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귀여운 여인」 같은 외화나 틀어댄다면?

이 황당한 장면은 2002년 4월 반차베스 군부 쿠데타 시에 실제로 벌어졌던 상황이다. 하루 전까지 10분 단위로 차베스의 사퇴와 임시 정부를 선전해대던 베네수엘라 상업 언론은 복귀하는 차베스를 이

렇게 차디차게 맞았다. 베네수엘라 언론은 차베스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1998년부터 8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차베스에 대한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언론 환경은 기형적 현대사와 함께 조성되었다. 대자본이 주도하는 상업 미디어가 베네수엘라 언론 시장의 90퍼센트를 장악했다. 방송 언론의 공공성보다는 상업성, 수익성과 경쟁을 강조하는 미국식 모델이 일찍부터 이식되었다.

이들 상업 언론은 독재 시절에는 독재정권과 결탁해서 그리고 군사 통치가 종식된 뒤 ‘푼토피호협정’을 통해 양대 보수 정당인 민주행동당^{AD}과 기독교사회당^{COPEI}이 40여 년간 권력 돌려먹기를 하는 동안에는 이들 엘리트 지배 세력을 지원하거나 때로는 이끌면서 착실히 세를 불렀다.

‘조중동’과 체급이 다른 시스네로스 그룹

베네수엘라 상업 언론의 영향력과 규모는 한국의 조중동과 아예 체급이 다르다. 전체 언론의 70퍼센트 이상을 시스네로스 그룹 등



몇 개의 대표적 독과점 미디어 재벌이 소유한다. 이 가운데 시스네로스 가문은 1920년대에 수도 카라카스에서 운송 업체로 출발하여 베네수엘라 최대의 TV네트워크이자 세계 39개국에 70개 계열사를 거느린 베네비전의 주인이다.

이 밖에도 플레이보이 라틴 아메리카, 코카콜라, 야구 구단까지 보유했으며 베네수엘라 미인 산업을 부추기는 미인대회도 이 회사가 개최한다. 언론만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에 발을 걸치고 국민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다. 더구나 그 영향력 범위는 라틴 아메리카 전반에 과급된다. 『조선일보』가 아시아 전체를 주무르는 끔찍한 상황을 떠올려 보면 된다.

시스네로스 그룹의 구스타보 시스네로스 회장은 베네수엘라라는 물론이고 중남미 전체 여론과 언론 산업에 미치는 막강한 영향력으로 『뉴스위크』 표지 기사 ‘2004년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8인’에 선정되었으며 부시 미국 대통령의 낯시 친구로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시스네로스 그룹의 연간 매출액은 2002년 기준 35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지상파 방송의 시장 규모(2005년, 3조 5000억원)와 맞먹는 수준이며 국내 신문 중 매출 1위라는 『조선일보』(2004년 매출액 약 3400억 원 추산)의 10배에 해당한다.

이들 거대 언론 재벌들이 소유한 상업 방송은 빈곤층만 64퍼센트에 달하는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미국인들의 오락 프로와 드라마를 방영하고 자본주의적 소비를 부추기는 신자유주의의 전도사, 과두 지배 엘리트 집단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

주류 언론, 차베스 지지 시위 외면

차베스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단 하나밖에 없는 국영 TV방송은 낙후되어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는 형편이었고, 5개 주요 상업 방송 전부와 10개 주요 일간지 가운데 9개 신문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며 언제든지 차베스를 집어삼키려 노리는 형국이었다.

언론이 완전히 반차베스 일색인 상황에서 2002년 4월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사퇴한 게 아니라 반란군에게 감금당한 상황임을 숨 가쁘게 알린 것은 민중들의 자발성에 의해 지역적으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각종 대안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들이었다. 명백한 적대 행위를 당하면서도 차베스는 집권 기간 동안 언론을 손대지 않았다.

그러나 쿠데타군은 이들 자발적 언론을 탄압하고 기자를 연행해 갔으며 주요 언론사 사주들은 쿠데타군을 정당화하는 보도를 끊임 없이 되풀이하면서 차베스 지지 시위는 전혀 취급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주류 언론의 작태로 차베스 지지자들은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리고 쉴 새 없이 휴대폰을 눌러 베네수엘라 전국 각지에 그들의 지도자가 처한 위기 상황을 알렸다.

둘째, 차베스의 성공은 국제적 고유가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혁명은 산유량 세계 5위를 자랑하는 석유가 없었다면 성공할 수 없는 혁명인가? 이 역시 차베스와 혁명 세력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민중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기울인 엄청난 노력을 의

도적으로 무시하는 한에서만 타당하다.

고유가로 인한 막대한 재정 수입이 베네수엘라 혁명에 순풍이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2005년 추정치 기준으로 베네수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미국, 이란, 중국, 멕시코,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석유 생산이 많은 나라다. 나이지리아와 쿠웨이트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들 10개국 가운데 민중이 주체가 되어 혁명을 수행하는 나라는 베네수엘라 외에는 없다. 석유가 나오기 때문에 혁명이나 개혁에 성공한다면 중동과 중남미, 아프리카의 많은 산유국들이 왜 아직까지도 전근대적 왕정이나 비민주적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지 전혀 설명할 수 없다.

가까이 베네수엘라의 최근 50년을 놓고 보더라도 석유로 거둔 이익이 베네수엘라 국가 경제 시스템의 발전이나 국민들의 복리에 사용된 예가 차베스 이전에는 한번도 없었다. 오히려 석유는 베네수엘라의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농업을 몰락시키며 비석유 부문의 정채와 저임금 구조를 고착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낳았을 뿐이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과거 베네수엘라 에너지부 장관을 지냈던 페레즈 알폰소는 석유가 가져오는 이러한 효과를 가리켜 ‘악마의 배설물’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국가적 혜택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사용하기까지 차베스 정부가 기울인 노력은 정권의 진퇴를 건 도전이었다. 차베스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1998년경 국제 석유 가격은 배럴당 10달러가 채 되지 못했다.

그 이전까지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출국 기구인 OPEC 회원국 가운데 가장 미국의 요구에 충실한 국가였다. 석유 가격을 유지하려는 OPEC 회원국들의 약속을 번번이 어기며 석유 감산 협약을 지키지 않았던 나라다.

차베스는 집권 초창기 대외 정책의 상당 부분을 OPEC 국가들에 돌려 신뢰 회복에 힘쓰고 석유 감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2002년이 넘어가면서 국제 유가를 20달러 수준으로 올리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한다. OPEC이 국제 석유 생산량과 가격 조절 기능을 회복한 것은 80년대 중반 이후 처음이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을 이끌어낸 인물이 바로 차베스였다.

OPEC의 정상적 가동 그리고 석유 가격 인상과 함께 차베스는 정말로 어려운 과정, 즉 이전의 신자유주의 정부에서 외국 자본과 국내 기득권 세력에 이권이 전부 넘어가 빈곤펀데기만 남았던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를 실질적으로 국영화하는 작업에 나서야 했다. PDVSA는 베네수엘라 기득권 세력들의 가장 큰 이익을 창출해주는 도구였기에 이에 대한 개혁 착수는 구지배층과의 피할 수 없는 정면충돌을 의미한다.

차베스 집권 기간 가운데 가장 어렵던 2002년 4월 쿠데타와 12월 자본파업의 핵심적 원인도 PDVSA 개혁에 있었다. 자본가들과 경영진들, 기득권에 취한 노조까지 가세한 파업 와중에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은 평상시의 10퍼센트 수준으로 곤두박질쳐 산유국인 베네수엘라가 산업 설비를 가동할 석유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할 정도로 곤란을 겪었다.

경영진이 막아놓은 공장문을 열고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공장을 가동시키면서 이 고비를 이겨내고, PDVSA를 완전히 통제하면서 차베스는 2004년부터 비로소 석유에서 나오는 이익을 제대로 사회 개혁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만약 차베스 정부가 석유 판매 이익으로 단지 빈민을 위한 '시혜적 복지' 정책만 사용했다면 베네수엘라 경제 구조는 변화되지 못한 채 계속 석유로 번 이익으로 한없이 재정 지출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이었을 터다. 그러나 차베스 정부는 철저히 국내 정치사회 개혁과 경제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에 연동시켜 석유 재정을 투입해왔다.

현재 베네수엘라에서는 석유 산업 일변도인 국가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체질 전환하는 경제적 변혁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 중이며 그 결과로서 최근 수년간 연 10퍼센트대의 경제 성장을 지속 중이다. 이는 다른 산유국의 경제 성장률이 국제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5퍼센트대에 머무는 상황과 크게 비교된다.

셋째, 차베스는 정치 후진국의 독재자 혹은 포퓰리스트다?

앞의 주제들에 비한다면 이 세 번째 주제는 오해보다는 너무도 의도적이고 졸렬한 왜곡에 가까운, 주로 국내외 언론이 차베스와 베네수엘라에 덧씌운 이미지다. 일반적으로 베네수엘라 혁명과 차베스에 대한 폄하나 오도된 정보는 세 단계를 거쳐 양산되고 증폭된다.

첫 단계는 협박하기 그지없는 베네수엘라 언론 자체다. 다음으로 전 세계 여론을 좌우하는 미국의 시각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언론의

안이한 베껴 쓰기 또는 악의적인 보도가 가세한다. 이들 언론은 차베스가 빈민들에 선심을 써서 얻은 인기로 반대파를 억누르고 독재를 휘둘러 장기 집권을 획책한다고 선전한다.

이 고의성 강한 고약한 편견을 하나씩 뜯어보자. 우선 베네수엘라 혁명이 차베스 혼자만의 독단적 리더십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길을 걷는가? 성인 인구의 10퍼센트가 넘는 200만 회원에 달하는 정치 조직인 볼리바리안 서클과 역시 경제활동 인구의 10퍼센트(약 150만 명)를 포괄하는 15만여 개의 각종 협동조합, 1년도 안 되어 1만여 개를 넘어 확산 중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의도적으로 무시할 때만 이 같은 언급이 가능하다.

또한 차베스는 밖으로 과격한 반미 언행으로 안으로는 실속 없는 대중 인기 영합주의로 지금껏 정권을 유지해왔는가? 물론 국제적 활동에서도 차베스가 행동이 따르지 않는 반미, 반신자유주의적 강경 발언에만 머물지는 않았다. 국내 정치가 안정화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남미의 지역적 연대와 국제적 연대를 구체화하기 위한 행보를 해왔고 대안적 남미 공동체인 ALBA 구상을 본격화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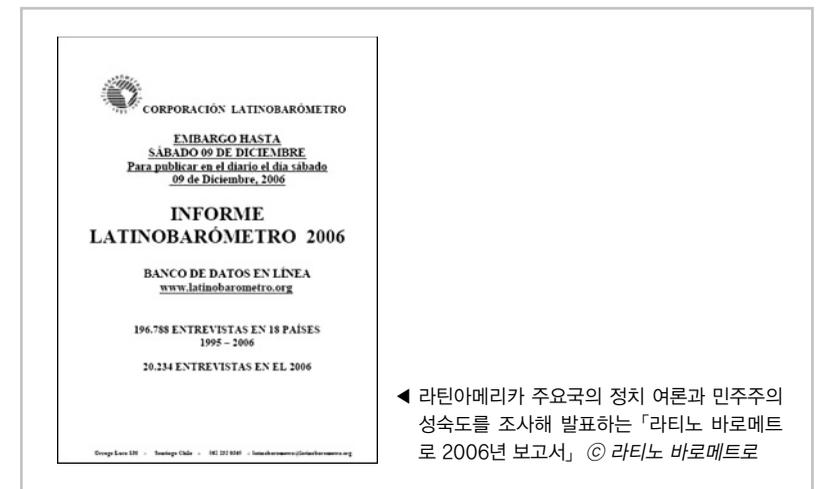
그러나 무엇보다 차베스가 98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이후 국내의 제도 개혁과 경제 변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줄기차게 추진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잘 알려진 볼리바리안 헌법 제정(99년)을 필두로 빈민 지원 사업인 플랜 볼리바르 2000^{Plan Volivar 2000}과 사회 구조에 대한 전면 개혁을 추진할 49개 개혁 법률(2001년)을 연속적으로 집행한다. 2003년부터는 교육과 의료, 유통과 경제 부분을 망라하여

추진하는 개혁 프로그램인 각종 미션^{Mission}을 수행(2003년~현재)해 왔으며 이 결과로 공동경영, 협동조합, 주민자치위원회 등 민중 참여 조직들이 속속 사회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경탄할 만한 내용이다.

이처럼 차베스가 추진하는 국내의 폭넓은 혁명적 개혁 조치들을 도외시하고 단지 대외적으로 반미 행보를 걷는 지점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는 베네수엘라 혁명의 심장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빚는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문제다. 차베스가 베네수엘라를 비민주적으로 이끈다거나 한국에 비해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가 낙후되었다고 말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2006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제 통신사인 AP와 여론 조사 기관 입소스^{Ipsos}가 베네수엘라 국민 25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방식 설문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퍼센트가 “베네수엘라



가 현재 올바른 길로 나아간다”고 응답했다. 63퍼센트가 차베스의 공약을 지지했으며 특히 교육 정책(75퍼센트), 의료 정책(74퍼센트)에 높은 지지를 보여 가난한 민중에 우선권을 두고 개혁 조치를 취한 정부에 적극 호응했다.

차베스는 이를 바탕으로 빈곤층에서 80퍼센트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며 중간층에서도 56퍼센트의 지지를 얻었다. 참고로 베네수엘라 인구의 약 25퍼센트에 달하는 백인들이 메스티소(혼혈) 출신의 차베스에 비우호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지지도나 이번 대선에서 얻은 62.89퍼센트의 득표율은 거의 전폭적인 국민 지지도였다.

차베스가 구세력을 탄압하거나 정치적으로 박해하지 않았다는 점은 2002년 4월 쿠데타 주동자들을 석방하고 그 배후인 언론 재벌 총수들에게 어떤 정치적 보복도 가하지 않은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오랫동안 버려둔 유휴 토지를 빈민들에게 나눠주거나 사주가 경영을 포기한 기업을 노동자들의 ‘자주관리’로 재가동할 때에도 일방적 몰수가 아닌 시가 배상 원칙을 적용했다.

차베스를 ‘소련 제국 붕괴 후 최대의 위협인물’로 취급한 미국조차도 혁명 추진 과정을 국민들로부터 확인하는 다섯 번의 국민투표, 차베스가 승리한 세 번의 대선 그리고 지난 2004년 8월 미국의 원격 조정과 차베스 반대파들의 주도에 따라 실시된 대통령 소환 투표 결과까지 모두 공정하고 적법한 선거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매년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정치 여론과 민주주의 성숙도를 조사해 발표하는 라티노 바로메트로 www.latinobarometro.org의 2005년 보

고서는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현주소가 중남미 전체에서 어떤 정도인지 선명히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국이 민주적이냐는 10점 만점 질문에 베네수엘라는 7.6점으로 전체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차베스 집권 이전인 1996년 30퍼센트에 불과했던 자국 민주주의에 만족하는 비율이 2005년 조사에서는 56퍼센트로 대폭 늘었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희망과 참여도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정치 냉소주의 항목에서 베네수엘라는 40점으로 냉소 지수가 가장 낮았다. 18개국 평균 점수는 55점이었으며 룰라 대통령의 브라질이 58점, 멕시코가 51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주주의가 발전의 유일한 길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18개국 가운데 베네수엘라인들의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베네수엘라의 민주정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의 결과다.

21세기 한국과 베네수엘라

한국은 1997년 환란을 계기로 사회 전체가 송두리째 신자유주의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FTA는 지난 10년간 국민들이 체험한 것보다 더 크고 가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베네수엘라는 한국보다 이미 10년 앞서 그 과정을 실패 겪었고 이제는 의연히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신자유주의를 제압하는 단계를 향한다. 일부 정치적 리더들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함께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눈여겨보아야 할 까닭이다.

베네수엘라 혁명의 배경과 개요

베네수엘라 혁명은 현재 진행형이고 끊임없이 진화하기에 지금 그 전망을 선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 2005년 1월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에서 차베스는 “우리는 사회주의를 재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은 옛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라며 사회주의를 선언했다. 그리고 2006년 5월 노동절 집회에서는 지향해야 할 사회주의를 ‘21세기 사회주의’라고 정의했다. 베네수엘라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았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차베스와 베네수엘라의 최종 귀착지가 어디인지 판명되기까지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실험이 무엇을 지향했고 어떤 성과를 남겼는지, 역사가들의 해석이 나오기를 한가로이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다. 한국의 현실 또한 베네수엘라 못지않게 팍팍하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혁명이 아직 미완이라 해도 거기서 발견되는 시대적 보편성과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작업은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의 굴레를 벗어나 새로운 사회를 모색하는 데 풍부한 상상력과 간접 경험을 제공한다.

우리는 21세기를 산다. 19세기의 이론도 20세기의 경험도 중요하다. 그러나 21세기의 혁명은 지금 이루어지는 변화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치열한 삶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차베스와 베네수엘라는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은 21세기 역사의 선두에 섰다.

김병권

- 1 베네수엘라는 어떤 나라인가
- 2 베네수엘라 혁명의 배경 - 신자유주의 10년
- 3 반신자유주의 정치사회 혁명의 전개 과정
- 4 주요 용어 정리

VENEZUELA

차베스는 현재 '21세기 사회주의' 라는 이름 아래 2007년부터 시작되는 집권 2기의 청사진을 준비 중이다. 2000년~2006년 사이의 집권 1기에 비해 2007년~2012년 집권 2기는 비교가 무색할 만큼 탄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 자신이 처음으로 60 퍼센트를 넘는 지지율로 재선되었을 뿐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경제·정치적 환경은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이다.



1 베네수엘라는 어떤 나라인가?

베네수엘라의 정식 국가 명칭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영어로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스페인어로 Repu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로 표기)이다. 수도는 인구 약 420만 명의 카라카스^{Caracas}다. 국토 면적은 91만 6445제곱킬로미터로 남한의 아홉 배에 해당하는 크기다. 전체 인구는 2656만 2642명(2005년 9월 기준)이며 언어는 스페인어, 종교는 가톨릭이 96퍼센트로 압도적이다. 화폐는 볼리바르 bolivares이며 환율은 현재 달러당 2150볼리바르다.

군대는 만 18~29세의 전국 청년에게 2년간 부과된 의무병역제를 기반으로 육군이 약 4만, 해군과 공군이 각각 2만, 그리고 경비대가 약 4만 5000명의 병력이다.

베네수엘라는 메스티조(백인과 원주민의 혼혈)가 67퍼센트로 주류

를 이루는 가운데 백인 21퍼센트, 흑인 10퍼센트, 인디오 2퍼센트로 인종이 구성된다. 차베스 현 대통령도 메스티조다.

남미의 인종은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과 백인 이주가 시작된 이래, 현재에는 원래 인디오(토착 원주민)가 남미 전체의 10퍼센트 미만일 정도로 줄었고, 대부분은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과 메스티조로 복잡하게 구성되었다.

도표 1-1 __ 남미 주요국의 인종 구성

분 류	주요 국가
백인 다수	브라질(백인 55%), 아르헨티나(백인 98%), 쿠바,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메스티조 다수	베네수엘라, 멕시코(메스티조 55%), 나카라과, 칠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인디오 다수	볼리비아(인디오 50%), 페루, 에콰도르, 과테말라

경제 현황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집권 이전까지 광활한 농지를 가졌으면서도 인구의 90퍼센트가 도시에 살 정도로 도시화된 나라, 도시화가 되기는 했지만 극단적인 양극화로 인해 도시민의 절반 이상이 빈민촌(바리오, barrio)에 살면서 이른바 비공식 부문(노점상과 유사)에 종사하며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나라, 자동차나 전자·통신이 최근 급속히 발전 중이기는 하지만 경제 규모나 재정의 절반을 석유 산업에 의지하는 나라였다.

차베스가 혁명 초기, 집중점을 석유 산업 국유화와 빈민들의 생활 개선에 맞추었던 이유는 이러한 베네수엘라 경제 구조에서 연유한다. 고질적인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은 최근 차베스 정부의 강도

높은 개혁 프로그램에 따라 빠르게 개선되는 추세다.

경제 규모

2002년 4월 반혁명 쿠데타로 시작하여 2003년 2월 자본파업이 종결될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끊이지 않았던 자본의 자해 행위는 2002년과 2003년 베네수엘라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99년에 1만 2000개 수준이었던 제조업 분야 기업이 두 해를 거치고 나서 7000개만 남았을 정도로 경제 파괴가 심각해, 결국 GDP가 2002년 -8.9, 2003년 -9.4로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자본파업을 이겨낸 2004년부터는 경제가 급격히 회복되고 정치 안정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3년 연속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 2006년 12월 대선에서 차베스는 역대 최고 득표율인 62.89퍼센트로 당선되었다. 같은 해의 경제 성장률도 10.2퍼센트로 추정되는 등 구체적 지표가 이를 말해준다.

도표 1-2 __ 베네수엘라 거시 경제 지표

구분	단위	2002	2003	2004	2005	2006
GDP	US십억	95.4	85.5	111.2	145.2	167.1
GDP 성장률	퍼센트	-8.9	-9.4	17.9	7.1	6.0
인구	백만 명	25.1	25.5	26.0	26.5	27.1
인플레이	퍼센트	22.4	31.1	21.8	15.0	14.0
경상수지	US십억	7.6	11.5	15.0	14.5	15.3
대외 수입	US백만	11,673	8,337	15,160	33,186	30,600
외환보유고	US백만	14,860	21,366	24,208	38,523	37,789

자료 :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통계

* 2006은 전망치다(2006년 GDP 성장률에 대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10.2퍼센트로 잠정 집계했다).

도표 1-3 __ 석유 가격 변동 추이(단위 : 배럴당 US 달러)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Venezuelan 가격	25,91	20,21	21,95	25,76	32,61	51,28

이런 이유로 2000년 이후 베네수엘라의 모든 경제 지표는 2002년과 2003년이 최악의 상태를 보인 이후, 2004년부터는 연속 3년간 호조세를 나타낸다(물론 이 시기에 석유 의존도가 높은 베네수엘라 경제가 석유 가격 폭등에 도움을 받은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전반적 경기 지표 호조에 힘입어 내수도 2004년부터 급격한 회복세를 탔다. 특히 휴대폰, 가전, 자동차 소비가 급증했는데, 실례로 자동차 판매 대수는 2004년 13만 4357대, 2005년 22만 8378대였고 2006년은 25만 대 이상의 판매를 예상한다.

산업 구조

베네수엘라의 산업은 아직 절대적으로 석유에 의존한다.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1/3, 수출의 80퍼센트, 정부 재정의 5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석유 위주의 기형적 산업 구조다. 차베스 정부는 이를 극복하고자 석유 산업의 이익을 지렛대로 하여 산업 구조 균형을 줄기차게 추진했지만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아직 더 시일이 필요해 보인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업 구조를 보면 대략 농업 4퍼센트, 제조업 41.9퍼센트, 서비스업 54.1퍼센트다. 이를 좀더 세분화하면 보면 <도표 1-4>와 같다.

도표 1-4 __ 연간 산업 부문별 GDP와 비중(단위 : 97년 불변 가격 기준 백만 볼리바르)

항목	2003		2004		2005		2006(잠정)	
석유 부문								
석유/가스	4,636,217	13.0	5,419,104	12.8	5,630,449	12.1	5,461,887	11.4
정유	1,836,012	5.1	1,806,368	4.3	1,795,530	3.8	1,747,227	3.6
생산 부문								
농업	2,099,705	5.8	2,220,041	5.2	2,182,300	4.6	2,223,764	4.6
광업	270,056	0.7	301,868	0.7	293,416	0.6	324,297	0.6
제조업	5,774,826	16.1	7,239,626	17.2	8,057,704	17.3	8,271,309	17.2
전력, 상수	941,050	2.6	1,005,946	2.3	1,128,711	2.4	1,086,744	2.2
건설업	1,654,133	4.6	2,184,760	5.2	2,711,287	5.8	3,196,741	6.6
서비스 부문								
상업	2,826,260	7.9	3,545,829	8.4	4,237,266	9.1	4,205,619	8.7
호텔, 식당	374,929	1.0	429,294	1.0	460,203	1.0	490,841	1.0
통신	1,162,102	3.2	1,280,844	3.0	1,537,013	3.3	1,715,716	3.5
금융·보험	776,250	2.1	982,623	2.3	1,221,400	2.6	1,108,792	2.3
부동산/기업 서비스	3,877,107	10.8	4,251,783	10.1	4,557,911	9.8	4,597,640	9.6
공공 비영리	1,906,045	5.3	2,216,730	5.2	2,445,054	5.2	2,483,148	5.1
정부 서비스	4,692,582	13.1	5,337,899	12.7	5,626,146	12.0	5,934,676	12.4
이자	-860,195		-1,066,739		-1,125,410		-1,170,426	

자료 :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첫째, 석유 산업

76년, 당시 외국 회사들에게 완전 장악된 석유회사(18개 외국 석유회사와 서비스 용역회사 2개)를 모두 국유화하여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민영 석유회사가 폐지되었다. 그 후 95년에 칼데라 정권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 참여를 허용하기 시작했으나, 차베스의 집권으로 민영화 금지와 내부 경영진 교체가 시작되었다.

2001년 탄화수소법이 제정되고 나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로열티

를 종전 1~16.66퍼센트에서 20~30퍼센트로 인상하고 향후 공동 합작 투자 시 국영석유회사^{PDVSA} 지분을 51퍼센트로 의무화한다. 그리고 2006년 차베스는 원유 자원에 대한 국유화를 선언하고 모든 운영권을 베네수엘라 정부로 귀속시킨다. 로열티도 34퍼센트(소득세 50퍼센트)로 인상하고 PDVSA의 지분은 60퍼센트로 의무화한다.

현재 PDVSA는 베네수엘라 유일의 석유회사이며 모든 석유 관련 회사는 PDVSA의 자회사다. 차베스는 PDVSA의 국유화를 추진하는 한편, 석유 산업 구조를 다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다. 이에 따라 PDVSA는 석유화학 산업, 천연가스 개발, 신시장 개척, 경질유의 생산 확대, 정유 설비 증대, 그리고 이를 위한 국내외 민간 부문의 사업 참여 유도를 추진 중이다.

둘째, 농업

베네수엘라는 총 국토 면적 910만 헥타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농업용으로 이용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1/4 정도인 220만 헥타르만이 농업용으로 사용 중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약 32만 헥타르 정도만 경작될 뿐 나머지는 주로 목초지로 이용한다.

베네수엘라 토지 소유자는 겨우 40만 명 정도며 평균 경작 규모가 약 80헥타르로 대규모인데 1퍼센트의 농장이 거의 50퍼센트의 농지 면적을 소유하며, 74퍼센트의 농장이 소유한 농지는 4퍼센트에 불과할 정도로 토지의 집중이 심하다. 식량 자급률은 3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차베스 정부의 개혁 프로그램 가운데 토지

개혁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차베스 정부는 토지 재분배를 위한 적극적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한편, 식량 100퍼센트 자급자족을 위한 농업 부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셋째, 고용 구조

1997년 고용 기준으로 농업 분야 13퍼센트, 제조업 분야 23퍼센트, 서비스 분야 64퍼센트의 분포를 보인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른바 비공식 부문으로 분류되는 고용 구조다. 한국의 비정규직 보다는 차라리 노점상에 가까운 극히 불안정한 구조로 존재하는 노동 인구가 80년 34.5퍼센트에서 99년 53퍼센트까지 상승했으며 2005년 현재 45.9퍼센트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수치다.

차베스 정부는 노점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에 대해 각종 직업 교육 프로그램과 협동조합 설립 등을 통해 공식 부문으로 흡수하려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도표 1-5 __ 노동 통계 자료

지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고용 인구(%)	47.0	49.9	48.6	47.3	51.4	54.1
실업률(%)	13.7	13.5	14.8	17.0	13.9	11.2
월 최저 임금(천Bs)	144.0	158.0	190.0	247.1	321.2	405.0
임금 상승률(%)	20.0	10.0	20.4	30.0	36.5	27.4
평균 근로 시간(주)	44	44	44	44	44	44

자료 : KOTRA 해외 자료

* 2006년 고용률은 55.5퍼센트, 실업률은 8.4퍼센트로 잠정 집계되었다.

통신 분야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에서도 유무선 통신과 인터넷은 차베스 집권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속했다. 현재 유선 회선 수는 약 360만 회선으로 느린 증가세를 보인 반면, 휴대폰 사용자 수는 1200만 명에 이를 만큼 빠른 성장을 보였다(96년 약 50만 명, 2000년 약 500만 명).

인터넷 역시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데, 현재 사용자는 380만 명으로 추산된다. 반면 개인 컴퓨터 보급률은 16퍼센트 정도로 낮은 편인데 이는 인터넷 보급이 수도인 카라카스 중심으로만 확대되어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2005년 기준 CIA 자료, 남미에서 인구 대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은 칠레 35.7퍼센트, 아르헨티나 26.4퍼센트에 비해 베네수엘라는 12퍼센트로 낮은 편이다).

최대 무선통신회사(우리의 SKT와 유사)는 모비스타^{Movistar}다. 2004년 이후 스페인 통신회사 소유로 되었으며, 기간통신회사인 CANTV(우리의 KT와 유사)도 96년 이래 민영화되어 통신 분야는 아직 신자유주의적인 메커니즘의 영향력이 강하다.

환율 정책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을 정점으로 두 해 동안 자본과업이 극심해지고 자본의 해외 도피가 급증하면서 환율 불안정성이 대거 증폭된다. 차베스 정부는 자본과업이 정점에 다다른 2003년 2월 6일부터 지금까지 고정환율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외환 통제를 실시해왔다. 자본과업으로 한때 극심한 자본 도피가 행해지고 외환 보유

도표 1-6 __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의 달러당 환율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환율(연말 기준)	700.0	758.00	1600.00	1600.00	1920.00	2150.00

자료 :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 환율은 2003년부터는 외환 통제에 따른 고정 환율이며 민간 부분에서 적용되는 실제 환율은 아니다.

고가 바닥나는 등 환율 불안정성이 심각했으나 외환 통제로 이를 극복했다.

정치 체제와 정당

정당 구도

58년 이른바 폰토피호^{Punto Fijo}협정 이후 사회민주주의를 뿌리로 한 민주행동당^{AD}(41년 창당)과 극우 이념으로 시작한 기독교사회당^{COPEI}(46년 창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양당 중심 체제가 40년간 확고히 지속되어 왔다(예로 78년 대선에서 두 당의 득표율이 90퍼센트).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정당 구도는 차베스의 98년 선거 참여와 집권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다. 차베스가 결성한 여당인 5공화국운동^{MVR}이 다수당이 되고, 기존의 주류 보수 정당인 민주행동당과 기독교사회당은 순식간에 소수 정당으로 전락한다. 차베스의 부상과 함께 이전까지 소수 그룹으로 존재했던 다양한 좌익 정치 세력들이 새로운 이합집산을 하며 규모를 키우고 차베스와 연합한다.

현재 차베스 정부에 연합하여 공조를 취한 정치 단체는 97년 출범한 MVR^{Movimiento Quinta Republica}을 축으로 하여, PODEMOS(‘할 수 있다’는 의미), 베네수엘라 공산당^{PCV}, 사회주의운동^{MAS} 등이며 이외에



2 베네수엘라 혁명의 배경 - 신자유주의 10년

PPT(‘모두를 위한 조국’의 의미) 등이다. PPT는 2000년 선거에서 차베스 연대에서 이탈한 바 있고, MAS는 2002년 4월 쿠데타를 지지하면서 이탈했다(PODEMOS는 MAS에서 분리되어 세력을 키웠다).

정치 제도

베네수엘라는 대통령-부통령 제도다. 대통령은 99년 통과된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헌법’에 의해 따라 임기 6년에 재선까지 가능하다. 현재 대통령 우고 차베스(Hugo Chavez Frias)는 2000년 새 헌법에 따라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며 2006년 12월 3일 재선되었다. 지난해 까지 부통령은 랑헬(Jose Vicente Rangel Vale)이었으며 2007년 내각 개편으로 호르헤 로드리게스(Jorge Rodriguez)가 새로 취임했다.

베네수엘라는 연방공화국을 국체로 하는데 23개 주와 1연방 직할구(수도인 카라카스)를 기본으로 구성된다. 2004년 10월 주지사 선거에서 23개 주 가운데 20개 주에서 친차베스 후보가 당선되었다.

과거 상하원으로 구성되었던 베네수엘라의 의회 제도는 99년 새 헌법에 따라 총의석 167석의 단원제 국회(National Assembly)로 바뀌어 현재에 이른다. 임기는 5년이며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2005년 12월 치러진 총선에서 친차베스 진영은 89퍼센트의 득표로 167개 의석 전체를 차지하여 현재의 국회를 구성하고 있다.(MVR 114석, PODEMOS 15석, PPT 11석, 원주민 2석, 기타 25석 모두 친정부적 의원들이다. 반차베스 정당들은 선거에서 승산이 없자 보이콧했다). 차기 총선은 2010년이다.

80년대 외채 위기와 장기 경제 침체

베네수엘라는 80년대까지 석유 수출을 기반으로 국가가 재정 정책을 쥐고 경제 개발을 해왔고 재정 확대와 외채 도입을 추진하였다.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남미의 경제는 80년대 들어오면서 심각한 위기에 빠져든다. 유가가 하락하고 석유 담보의 무분별한 외채 도입이 급팽창하면서 82년, 83년도의 이른바 잘 알려진 남미의 ‘외채 위기’가 폭발했다. 이후 남미의 80년대는 콜롬비아와 칠레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잃어버린 10년’(이 용어는 유엔 중남미 경제위원회(Cepal)가 80년대의 남미 경제 특징으로 사용)이라 불리는 만성적인 경제 위기로 점철되었다.

남미의 경제 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돌입하자 이미 ‘신자유주의 정

책'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레이건 정부의 미국 재무부가 나서서 해답을 모색하게 된다. 그 해답은 85년의 베이커 플랜과 89년의 브래디 플랜을 통해 형성된 워싱턴 컨센서스로서, 미국 재무부의 지도 아래 국제통화기금이 외채 위기에 빠진 남미에 직접 개입하여 구제금융 조건으로 경제 개혁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핵심 내용은 긴축 재정, 사회보장제의 축소, 외채 상환 시기 조정, 부채의 주식 전환, 통신, 항만, 석유, 철강, 항공 등 기간 국유기업의 민영화, 미국식의 남미 무역 자유화 등이다. 이 기반 아래에서 80년대 말부터 남미 국가들은 전반적인 신자유주의 경제 기조로 선회한다.

그런데 남미의 신자유주의화, 즉 자본과 시장 자유화는 필연적으로 국가 기능 약화를 동반해야 했고, 이는 정치적으로 남미에서 군부의 퇴진과 민간 정부의 출현을 촉진하게 된다. 80년대 말 무렵 아르헨티나 메넴(89년), 브라질의 코요르(89년), 페루의 후지모리(90년), 멕시코의 살리나스(88년), 베네수엘라의 페레스(89년), 그리고 칠레 아일윈(89년) 정권에 이르기까지 유행처럼 등장한 민선 정부는 시기적,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 추진과 궤를 같이했다. 신자유주의 전환과 민간 개혁 정부의 등장은 쌍으로 맞물려 추진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나 남미나 공통적이다.

한국보다 약 10년 이상 앞서서 80년대 말부터 신자유주의를 본격 도입한 남미는 90년대 10여 년에 걸쳐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폐해가 심각해진다. 급기야 90년대 말부터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은 정치적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신자유주의의 정책에 비판적인 정부가 속속 등장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베네수엘라도 이러한 궤도에 있었다.

신자유주의의 전격적 수용(89년 페레스 정권)

이미 외채 지불 능력을 상실하고 장기 경기 침체에 빠진 베네수엘라에 대해, 미국은 IMF를 통해 외채 지불을 유예해 주고 새로운 신용 공여를 재개해 주는 대가로 '신자유주의 도입'을 요구한다(한국에서 외환 위기 타개를 위한 IMF 자금 공여를 대가로 신자유주의 정책 전면화를 요구했던 내용과 같다).

89년 2월 집권한 페레스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IMF와 협상을 한 후, IMF가 신용을 공여하는 대가로 신자유주의적 안정화와 구조조정 프로그램 도입을 약속하는 신자유주의로의 '대전환'을 시도한다. 페레스가 공식 취임 2주 만에 발표한 '신경제종합정책'(이른바 대전환)은 이후 90년대 남미와 아시아 등 개도국 전역에 신자유주의와 미국식 시장 경제 체제를 강요하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전형적 내용을 담는다. 불과 10여 년 전인 76년 석유 산업을 국유화시켰던 장본인인 그가 민영화, 자유화의 기수로 둔갑하는 순간이었다.

페레스 정부에서 이 정책의 주도자였던 로드리게스는 리처드 고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프로그램(신경제종합정책-인용자)은 포괄적이었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무역 제한의 전면적 철폐와 관세의 폭 축소 등 전면적인 무역 개혁, 외환 관리의 전면 철폐와 비전통적 수출 산업 개발에 적합한 변동환율제의 채택, 가격 자유화, 폭넓은 분권화와 준 국영 기업의 민영화 등 공공 부분의 구조조정... 그리고 금융자유화와 경쟁력 강화, 조정 기능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금융 부문의 구조조정, 연기금의 조성과 사회보장 제도의 개편을 포함하는 노동 입법의 현대화"였다고 증언한다.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

책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 정책 추진의 대가로 3년간 IMF 차관 45억 달러를 베네수엘라에 내 주기로 약속한다.

즉각적 반신자유주의 민중 봉기(89년 카라카스 봉기)

페레스의 대전환 발표 11일 만에 터진 89년 2월 27일의 카라카스 봉기는 페레스 정부의 전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 초기에 발생한 반신자유주의 민중 봉기다. 자유화와 민영화, 공공 부문 축소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 시장 가격 통제 제도를 폐지하자 즉시 국내 유가가 오르고 대중 교통비가 며칠 만에 두 배가 뛰는 등 물가 폭등을 야기했다. 좌절된 빈민들이 수도 카라카스 일대를 중심으로 봉기에 나서자 페레스 정권은 군대를 동원한 유혈 진압으로 응답하고 이 과정에서 수천의 민중이 희생된다.

한국의 광주민중항쟁에 비견될 카라카스 봉기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정치 지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초기부터 민중의 반감은 일거에 높아졌고, 이에 맞물려 지난 30여 년간 베네수엘라 정치를 지배해온 양당 체제와 기성 정치 세력에 대한 빈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해 두 보수 정당의 정치적 기반이 급속히 와해되기 시작한다.

반미와 반신자유주의를 내걸고 92년 쿠데타를 일으킨 차베스 중령은 비록 실패하여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기존 정치 엘리트 집단 밖에 있었던 그는 민중의 정치적 희망으로 새로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를 반영하듯 기존 양대 보수 정당들도 정치적 수사

로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실제로 93년 집권한 칼데라 정권도 신자유주의 정책 반대와 부정부패 청산, 그리고 차베스 지지를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신자유주의의 확대와 심화(93년 칼데라 정권)

93년 '신자유주의 반대-국가의 경제 개입'을 주장하면서 등장한 칼데라 정권은 IMF에 반대하는 '국민과의 협정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 정책을 집행하면서는 2년 만에 다시 신자유주의로 경도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96년 4월 IMF의 14억 달러 차관을 제공받는 대가로 '베네수엘라 아젠다'라고 불리는 IMF의 요구를 전격 수행하면서 가격과 환율 자유화, 자본 자유화, 국영기업 민영화 등의 정책을 전면화한다.

98년 차베스의 집권은 바로 10여 년간 기존 보수 정당의 지속적인 신자유주의 추진과 이에 저항하는 베네수엘라 국민 사이의 갈등의 산물이었다.

페레스에서 칼데라에 이르기까지(89년~98년) 10년 동안 신자유주의는 계속 심화되었고, 그 결과 88년 53.5퍼센트(절대 빈곤 22퍼센트) 수준이던 빈곤율이 97년 64.2퍼센트(절대 빈곤 31.4퍼센트)로 더 심각해지고 사회 양극화가 확대되었다.

또한 이 기간에 석유를 필두로 철강, 항공, 항만, 통신 등 주요 기간산업들의 민영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76년 국유화되어 외형 구조에서는 국유 체제를 유지하던 석유회사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 자본의 참여를 허용한 민영화도 칼데라 정권 시기인 95년이었

다(이는 차베스 집권 후에 즉시 중단된다. 차베스는 2001년 탄화수소법과 2006년 원유 국유화 선언으로 석유 국유화를 더욱 강화한다).

베네수엘라 통신의 핵심을 쥔 국영전화공사CANTV가 민영화된 시점도 96년이다. 칼데라 정부가 보유 주식 49퍼센트를 국내외 주식 시장에 매각함으로써 완전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이어 금융 기관들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97년에 오면 외국 기관이 베네수엘라 은행의 지분 41퍼센트를 가지게 되었다.



3 반신자유주의 정치사회 혁명의 전개 과정

베네수엘라 혁명은 이 같은 역사의 산물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80년대의 '잃어버린 10년'과 뒤이어 극단적 사회 양극화를 낳은 10년간의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베네수엘라 민중의 집약적 분노와 새로운 희망에 대한 갈구였다. 이런 점에서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혁명은 무엇보다 '반신자유주의 대안 경제 모델을 추구하는 경제 제도 혁명'이다.

베네수엘라 혁명은 또한 40여 년간 확고히 유지된 보수 기득권 정당 체제(민주행동당과 기독교사회당)라는 기존 정치 구도에 대한 국민 불신의 폭발이었다. 더 이상 양당 가운데 한 정당의 선택이 아니라 기존 정치 구도 자체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이 정치 구도를 지탱하는 국가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새로 설계하는, '새로운 국가

를 건설하는 정치 혁명'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부' 5년, '참여정부' 4년 총 9년여 동안, 베네수엘라의 90년대와 다를 바 없이 신자유주의는 계속 확대되어 현재 극심한 저성장과 사회 양극화를 경험하며, 이에 조용하여 기성 정치 세력(한나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까지)에 대한 불신 역시 팽배해지는 시점이다. 수많은 사회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직 현재 진행형인 혁명임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의 경험은 그 보편성과 시사점이 적지 않다.

혁명 추진 세력이 혁명 실천을 구체화시켜나가는 단계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베네수엘라 혁명은 크게 3단계로 요약된다.

1단계는 98년 선거 참여 결정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나라(5공화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헌법으로 명문화한 '볼리바리안 헌법'을 통과시킨 1999년까지다.

2단계는 헌법을 기반으로 중앙의 주요 권력의 교체를 이루고 사회 개혁을 집행하기 위해 49개 개혁 법률을 통과시킨 시기다. 이에 대한 반혁명 세력의 조직적 반발을 제압하는 2003년 초까지 포괄한다.

3단계는 새로운 헌법적 기초, 법률적 기제와 더불어, 반혁명을 극복하면서 확대된 민중의 조직화를 토대로 민중 참여 개혁 실천이 본격화한 시기다. 정부의 조직적 지원과 민중 참여에 따라 각종 미션이 수행되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고 이를 '21세기 사회주의'라는 더 높은 지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현 단계까지 아우른다(내부 정치, 경제 혁명을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 대외 정책이나 대외 관계는 생략한다).

1단계, 대통령 당선과 새 헌법 공포(98년~99년)

40년 보수 정당 정치의 종언(차베스의 대선 승리 : 98년)

정치적으로만 국한한다면, 베네수엘라는 한국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58년 푼토피호협정 이후 군부의 정치 개입은 차단되었고 비록 보수 정당간의 권력 나눠먹기 차원이지만 민주행동당과 기독교사회당 사이의 평화적 정권 교체는 40여 년간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다.

보수 양당의 지배력이 워낙 단단했지만, 진보 세력 역시 그 틈에서 부단히 자신의 생존과 발전을 모색했다. 진보 세력은 60년대 공산당(1931년에 창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 혁명 노선이 실패한 뒤 노동자, 학생, 빈민 속으로 들어가 7,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저변에서 활동성을 유지해 온다. 예를 들어 73년 창당한 급진혁명당^{LCR}의 경우, 88년 3석을 확보하여 의회에 진출하게 되고, 92년에는 카라카스 시장을 배출하였으며 93년 대선에서는 지지율 22퍼센트를 얻어 제3당으로 부상하는 성과를 거둔다(이 당은 97년 PPT('모두를 위한 조국')로 발전하여 초기 차베스 정부에 참여하였다).

차베스도 이러한 정치 지형과 무관하지 않다. 즉 차베스가 군대 일부의 장교를 조직하여 돌출적으로 등장한 세력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 차베스는 진보 이념을 교조적으로 수용하지도 않았고 보수 양당 체제에 대한 기대를 걸고 정치운동을 하려는 생각도 없었다.

시몬 볼리바르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82년 12월 군대 안에 MBR-200이라는 지하 정치 조직을 결성하면서 독자적인 진보 정치

운동을 시작한 차베스(당시 대위)는 89년 카라카스 봉기에 자극을 받아 92년 군대 안의 MBR-200을 주축으로 쿠데타를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투옥된다.

차베스는 쿠데타에 대한 기대는 접지만 그렇다고 선거를 통해 기존 정치 구도에 참여할 생각은 여전히 없었다. 차베스는 수감 중이던 93년 대통령 선거에 대해 보이콧 운동을 주장한다. 그는 선거를 통한 정치 혁명보다는 “기존 정당과 선거 방식에 반대하며 민중을 위한 제헌의회 소집”을 요구로 내건다.

92년 쿠데타 전후부터 제헌의회를 통한 새로운 국가 건설을 고려했던 그는 98년 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선거 참여를 결정하고 선거 준비에 돌입한다. 97년 기존 MBR-200을 축으로 각계의 진보적 정치, 사회인을 포괄하여 그해 7월 ‘5공화국운동’^{MVR}이라는 선거 조직을 결성한다.

차베스의 대선 참여가 기존 정치 체제에의 편입과 전혀 다른 각도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구체제 청산의 목표가 분명했으며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해 선거 조직의 명칭도 새로운 공화국, 즉 제5공화국운동이라고 정했다. 대선 구호 역시 “의회의 해산”과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한 제헌의회 소집”을 시종일관 주장한다. 이러한 차베스의 새 국가 건설 노선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는 대선 결과가 말해준다. 98년 12월 10일 대통령에 당선된 차베스의 득표율 56.2퍼센트는 당시까지 사상 최고의 기록이었다.

정권 교체를 신속한 권력 교체로(제헌의회 소집과 신헌법 제정 : 99년)

80년대 이후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룩한 나라들을 보면, 선거 혁명 이후 권력 전반의 교체와 제도 혁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다가 대부분 타협하거나 좌절하고 만다. 심지어 개혁의 이름으로 신자유주의를 적극 도입한 나라들도 부지기수다. 한국의 참여정부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차베스는 제헌의회와 새 헌법 제정으로 첫 관문을 성공적으로 돌파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차베스는 기성의 틀에 갇혀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기보다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는 취지를 국민 앞에 명백히 하고, 그 나라의 정체성을 헌법으로 확정짓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다. 99년 2월 2일 취임 첫 연설에서 새 헌법을 기초할 제헌의회 구성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시행 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힐 만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를 추진한다.

99년 4월 19일 제헌의회 소집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86퍼센트 찬성으로 통과시키고, 그해 6월 25일 제헌의회 의원 선출 선거를 하여 총 131석 가운데 차베스 지지자 119명을 당선시킨다.

제헌의회는 곧바로 새 헌법 제정 작업에 들어가 99년 11월 17일 350조항에 이르는 상세한 내용의 새 헌법을 제정하고 다시 99년 12월 16일 새 헌법의 동의를 얻는 국민투표를 시행해 71.21퍼센트의 지지로 통과시킨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1년이 못되는 기간에 세 번의 국민투표를 치러냄으로써, 이후 베네수엘라 혁명 추진의 근간이 될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헌법'이 만들어진다. 새 헌법은 21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발효되었다.

새 헌법은 즉각적으로 권력 교체와 제도 혁명, 사회 혁명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밀레니엄의 첫 해 2000년이 되면서 당시까지의 모든 헌법 기관들이 무효화되고 대법원과 기존 의회는 공식 해산되었다. 2000년 7월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주지사 선거 등 모든 선거를 한꺼번에 치러 차베스 정부는 행정부는 물론 입법, 사법, 지방까지 권력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즉 중앙 권력의 완전한 교체가 새로운 헌법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새 헌법은 기존 보수 양당 체제를 지탱했던 모든 정치 제도적 기반을 파기하고 국민투표의 대폭 강화를 포함, 국민의 정치 통제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석유회사 등 국영 기업의 민영화를 원천 봉쇄하는 등 시장 가치 대신에 연대성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노동자 공동 경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축으로 한 국민경제의 원칙을 확고히 세우게 된다.

2단계, 사회 개혁 착수와 반혁명의 제압(2000년~2002년)

위로부터의 사회, 경제적 개혁(플랜 볼리바르 2000의 실행: 99년~2001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헌법으로 국가 정체성의 틀을 명문화하기는 했지만 혁명을 구체화하기 위해 차베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전히 많지 않았다. 빈민을 중심으로 한 민중의 지지는 압도

적이었지만 조직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여전히 반대파들도 적지 않았다. 제헌의회 소집 여부를 묻는 투표와 새 헌법의 동의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투표 불참률이 각각 63퍼센트와 55.6퍼센트 달했던 이유는 제헌의회 소집이 갖는 중요한 함의에 대해 아직 민중이 적극적인 이해도를 갖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더욱이 차베스 정부가 민중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재원을 확보한 상태도 아니었다. 차베스는 98년 선거에 승리했을 때 엘리트들이 통제하는 의회로부터 신자유주의적인 예산을 넘겨받았다고 토로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베스는 해당 조건에서 가용할 자원을 총 동원하여 지체 없이 개혁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우선 비교적 조직적 준비가 잘된 군대를 동원하여 실제 도움이 되는 빈민 지원 사업을 착수하는데, 제도보다는 중앙에서 민중 봉사 및 지원의 형식으로 군대를 파견하는 운동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이것이 '플랜 볼리바르 2000' Plan Volivar 2000이다.

군인들은 빈민 속으로 들어가 가전기기를 수리해 주고 협동조합 결성과 교육을 지원하며 빈민층에게 집을 지어주거나 낡은 집을 수리해 주었다. 이를 통해 수천 개의 학교와 병원, 보건소, 주택, 교회, 공원이 재정비되었다. 200만 명 이상이 이를 통해 의료 혜택을 받았고 거의 1000여 개의 공설 시장이 문을 열었으며 200만 이상의 어린이들이 예방주사를 맞았다.

플랜 볼리바르 2000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진행되었다. 이러한 신속하고 실제적인 조치는 초기 민중의 지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

기가 된다.

차베스는 플랜 볼리바르 2000년의 집행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99년은 사회적 측면에서 보자면 다소 방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들어서 플랜 볼리바르 2000의 실행과 함께 개혁 과제들이 시작되자마자 정말 공격적인 열풍을 가져왔습니다.”(2004년 알레이다 게바라와의 인터뷰)

법률을 기반으로 구체적 개혁 추진(49개 개혁 입법 전격 통과 : 2001년 11월)

차베스는 “2001년은 구조적인 부문에서 역시 사회적 진보를 가져 온 해였습니다” 라고 언급했다.

새 헌법으로 나라의 정체성 근간을 재확립하는 데 이은 혁명 정착의 두 번째 획기적 조치가 바로 ‘49개 개혁 입법’이다.

2000년 11월 9일 신속한 개혁 추진을 위해 국회 승인 없이 대통령에게 1년간 입법권을 부여하는 ‘대통령 특별입법권’을 국회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한 만료 직전인 2001년 11월 10일 차베스 대통령은 탄화수소법(석유 산업 통제를 위한 법률), 토지법, 소액대출신용법, 협동조합법, 어업법 등의 49개 개혁 입법을 선포한다. 이들 법률은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수개월 동안 준비하여 작성되었다. 49개 법률은 속도를 늦추자는 주위의 권고를 물리치고 개혁을 더욱 가속화하려는 차베스의 의지를 담았다. 이들 법률이 가지는 중대한 의의를 짚어보기 위해 대표적인 탄화수소법, 토지법, 협동조합법을 살펴보자.

탄화수소법은 석유기업을 다시 국영화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석유회사의 국영화와 이익의 국민경제 환원은 경제 개혁의 사실상 성패를 가름할 잣대였다. 차베스는 그동안 석유 산업에 참여하는 사기업에게 기존 1~16퍼센트 정도로 적용되던 로열티를 30퍼센트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 국가 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외국 기업이 합작하더라도 51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국영석유회사가 소유해야 함을 법률로 못 박는다. 이어서 차베스는 기존 부패한 이사진을 해임하고 새 이사진을 파견한다. 기존 PDVSA 경영진과 이에 결탁한 노조(CTV)가 거세게 반발했음은 물론이다.

토지법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고 때문에 기득권 세력의 반발도 그만큼 컸다. 이 법은 개인 토지 소유를 5000헥타르로 제한하고 정부가 사유의 미경작지와 휴경지에 대해 시장 가격 배상을 전제로 징발하여 농민에게 분배하려는 조치다. 더불어 국가의 미사용 토지 분배도 포함한다(국유지 200만 헥타르를 13만 농민에게 분배했다). 이법은 2005년 5월 18일 ‘토지와 농업 발전에 관한 법률’로 발전하여 유휴 부동산에 비례해 과세하는 등 더욱 강화된 조치가 시행되었다.

토지법은 단지 농민을 위한 농지 관련 법뿐 아니라 도시 빈민이 점유한 주택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도시의 유휴지를 민중을 위해 사용하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도시의 각지에서도 ‘도시토지개혁위원회’가 결성되어 그 당시까지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지은 주택을 합법화하고 주택 개선을 지원한다.

협동조합법의 영향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0개 미만이었던 조합은 법률 통과 후 수년 사이

에 10만 개 이상으로 팽창했고, 2006년 5월 현재 150여만 명(인구의 5 퍼센트)이 조합에서 일을 한다. 이것이 비공식 부문 노동자를 공식 부문으로 흡수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실업률 저하에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이들 법률은 사회 각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전격적인 개혁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새로운 국가 정체성의 수립과 상부 권력의 교체를 헌법이 수행했다면, 49개 개혁 입법은 사회 각 영역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의 적용과 주도 세력의 교체를 상징한다. 49개 법률이 모태가 되어 각 분야에서 개혁 입법이 속속 만들어지게 된다.

또한 이들 입법은 혁명이 혁명과 반혁명 세력 모두에게 더 이상 정치 구호가 아니라 실생활을 뒤흔드는 실체로 오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반혁명 세력의 조직적 반발(반혁명 쿠데타와 실패 : 2002년 4월)

49개 개혁 법률 선포로 공격은 먼저 차베스가 했다. 반혁명 세력은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이제 구체적인 방어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선 전통적인 보수당인 민주행동당과 기독교사회당은 물론 사회주의운동당^{MAS}과 신생 우익 정당이었던 '우선정의당' '베네수엘라 프로젝트' 등 이질적인 세력이 총 망라되어 반차베스 연합을 구축한다. 일부 상층 장교 집단과 보수적 노동조합인 CTV도 여기에 동조한다.

2002년 4월 12일 쿠데타가 실행되어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20여

명이 사망, 148명이 부상한다. 초기에 쿠데타는 성공한 듯이 보였고 베네수엘라 상공회의소 의장인 페드로 가르모나가 대통령에 취임했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차베스가 사임한 게 아니라 강제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위기는 반전된다. 대통령궁 주변에는 30만이 넘는 빈민들이 차베스의 복귀를 주장하며 종일 시위를 했고, 급기야 군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48시간 만에 쿠데타는 실패로 종결되고 4월 14일 새벽 3시 45분 차베스는 복귀한다.

반혁명 쿠데타의 정점, 경제 쿠데타(2002년 12월~2003년 2월)

4월 쿠데타에 실패한 반혁명 세력은 2002년 12월 2일을 기해 국영 석유회사를 축으로 주요 기업들의 직장 폐쇄를 감행하고 대형 유통점의 문을 닫는 등 자본 총파업을 일으킨다. 국영석유회사의 유조선이 멈추고 석유회사 컴퓨터 제어 시스템이 마비된다. 민중들은 식량 부족, 석유 부족, 정전, 교통 대란에 직면하고 심지어 은행들도 파업에 돌입한다. 이 파업으로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약 11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정도였다.

그러나 역으로 이 험난한 자본파업을 견디면서 차베스 정부와 민중 모두는 베네수엘라의 주도권을 행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혁명과 반혁명 세력의 실질적 역학 관계가 불가역적인 구조로 정착된 셈이다.

차베스는 2002년 겪었던 어려움을 이렇게 평가했다.

“우리는 놀라운 진보를 이룩했으나 2002년도에는 모든 게 멈춰 버

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죠. 우리는 다시 시작했지만 그러한 정체가 사회복지 계획과 경제에 미친 손해는 심각했습니다.”

3단계, 민중 참여 개혁의 전면화와 질적 도약 모색(2003년~현재)

민중 직접 참여를 통한 조직적인 개혁 전면화(각종 미션 : 2003년 4월~)

차베스는 반혁명 쿠데타를 이겨내는 가운데 더욱 높아진 민중 참여 의지를 토대로 중단된 개혁을 가속시킨다. 그 중심에 각종 사회 개혁 실행 계획인 ‘미션’^{Mission}이 자리한다.

우선 미션은 49개 법률의 구체적 집행 계획이자 사회적 공공성을 위한 연속적인 대안 실행 방침이다. 2001년 11월 개혁 입법 이후 토지 개혁은 2002년 자본의 연이은 파업으로 사실상 중단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2003년이 되면서부터 다시 본격화되어 150만 헥타르를 13만 가구에 분배해 주는 등 실행을 가속화한다.

미션 수행이 갖는 중대한 의의는 또한 국가의 계획적인 지원과 민중 참여, 자율적 의사결정이 결합된 유례없이 독특한 방법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국가가 모든 실행 계획을 짜서 민중에게 단지 따르기만을 요구하는 과거 국가사회주의 방식의 개혁과도 다르고, 기존 국가 시스템의 외곽에서 단지 지역적인 문제만을 처리하는 분산된 소규모 공동체 운동과도 확연히 구분된다. 국가는 지원과 조정을 하고 민중은 직접 참여하고 의사결정하여 국민적 규모의 개혁을 추진했다는 점이 베네수엘라 혁명의 큰 특징이다.

우선, 미션 수행은 플랜 볼리바르 2000처럼 군대의 인력 동원이 아니라 국가의 조직적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었다는 중요한 차별성을 가진다. 자본파업 후 PDVSA를 완전히 장악한 차베스 정부는 석유에서 발생한 이익을 민중에게 돌릴 조치를 취하였다. ‘국가 경제와 석유 이익의 올바른 관계’라는 목적을 내걸고 2004년 5월 14일 PDVSA는 ‘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한 기금’(폰데스빠^{FONDEDPA}) 설립을 결정했다. PDVSA는 여기에 기금을 제공하고 그 운영은 사회경제개발은행 BANDES이 맡도록 했다. 이 기금의 공식적인 조성으로 정부는 각종 개혁 프로그램을 더욱 조직적이고 큰 규모로 추진했다(PDVSA의 총재는 미션 프로젝트의 총재이기도 하다). 현재 국가 총 재정의 40퍼센트를 미션에 쏟아 붓는 중이다. 국민경제를 위한 엄청난 투자다.

또한 미션은 동시다발적이고 다방면적으로 추진되었다. “한 해 동안 이 모든 미션을 시작한다니 제정신이나”고 차베스 자신이 질문을 받았을 정도로 공격적인 미션을 실행했다.

그런데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기획한 이들 ‘개혁 사업’은 국가가 행정 조직을 동원하여 직접 지시하고 집행하지 않았다. 도시에서는 200~400가구, 농촌에서는 그 1/10에 해당하는 가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주민자치 의사결정체를 만들어 개혁의 집행 방식을 논의하고 자신의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집행했다. 국가는 여기에 전 국민적 사업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법률적 보장만을 했다.

또한 이들 사업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볼리바리안 서클이라는 자율적 정치 조직이 주민자치위원회나 노동조합, 협동조합

에 파고들어 정치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미션—주민자치위원회—볼리바리안 서클이 삼위일체가 되어 주민 직접 참여형 개혁으로 전 국민적 범위에서 전 분야에 걸쳐 착수된다. 미션은 민중이 하부로부터 참여하고 조직하여 그들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개혁 프로그램이었다.

참고로 고트는 미션이라는 개혁 추진 방식을 평가하면서 그런 방식을 취한 이유가 “여전히 반대파 세력이 장악한 복지부동의 관료 체제를 우회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초기에 교육 미션은 교육부와 별도로, 의료 미션은 보건부와 별도로 운영되었다. 관료주의를 피하고 주민 직접 참여 개혁을 실천하기 위한 차베스의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대표적으로 추진된 미션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미션

미션 로빈슨^{Mission Robinson}은 문맹 퇴치를 목적으로, 미션 리바스^{Mission Ribas}는 학업을 중도에 포기했으나 다시 중등 교육을 받기 위한 2년제 과정으로 추진된다. 2004년에 약 60만 명이 야간학교에 등록하여 장학금을 받았다. 미션 수크레^{Mission Sucre}는 3년의 대학 과정 프로그램으로 첫째 약 7만 명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이와 관련 4년제의 볼리바리안 대학^{Universidad Bolivariana de Venezuela, UBV}을 2003년에 새로 설립했다. 또한 미션 부엘반 카라스^{Mission Vuelvan Caras}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훈련 프로그램이었다.

둘째, 의료 미션

미션 바리오 아덴트로 I, II, III^{Mission Barrio Adentro I, II, III}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I은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다. 추진 2년차인 2004년에는 1만 3000여 명의 쿠바 의사들이 약 5000여 명의 베네수엘라 의료 보조원과 함께 의료 사업을 펼치는 수준이 되었다. II는 전국적인 ‘민중 의원’^{Clinicas Populares} 창설이다. III은 전국적으로 병원 사이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고급 진료와 수술이 가능한 장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셋째, 유통 시장 미션

미션 메르칼^{Mission Mercal}은 정부 지원을 받는 슈퍼마켓 건설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2002년 12월 자본과업으로 대형 상점이 자본 철시를 하면서부터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시장을 조직적으로 육성한 생필품 지급 네트워크다. 추진 3개월 만에 1만 4000여 개의 판매 지점을 구축하고 25~50퍼센트의 할인 가격에 식료품을 공급했다. 지금 메르칼은 국영석유회사 다음으로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며 최대 유통 업체가 되었다.

소퇴해가는 반혁명 세력(차베스의 소환 투표 승리 : 2004년 8월)

자본과업 실패로 이미 대세는 기울었고 반혁명 세력이 반격할 근거지는 거의 상실된 상태였다.

이에 2003년 초부터 기득권층은 새 헌법에 규정된 국민소환 투표를 요구했다. 새 헌법에 따르면 임기 절반을 넘긴 선출직 공무원들은

유권자 20퍼센트의 서명으로 소환 투표 대상이 된다. 반차베스 진영은 2003년 11월부터 대통령 국민소환을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갔고 24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환 투표를 하게 된다. 2004년 8월 15일 치러진 소환 투표 결과 투표자의 59.25퍼센트가 대통령직 계속 수행에 찬성했고 반대는 40.74퍼센트였다. 당연한 결과였다. 2004년은 이미 자율적 정치 조직인 볼리바리안 서클이 확대되고, 각 지역마다 다양한 자치 조직이 만들어졌으며 무엇보다 각종 미션의 수행으로 혁명에 대한 민중의 참여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던 시기였다.

이후 2004년 10월 31일 주지사 선거에서 23개 주 가운데 20개 주, 2005년 12월 4일 국회의원 총선에서 차베스 지지자 전원 당선으로 정치적 지배력은 확고해져 간다.

베네수엘라 혁명의 질적 도약(21세기 사회주의 선언 : 2005년~현재)

반혁명 과업을 이겨내고 각종 민중 직접 참여형 사회 개혁이 전면화 되자 차베스는 그간의 혁명 과정을 집약하고 이후의 발전 전망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꼈다. 차베스는 2005년 들어 ‘21세기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며 베네수엘라 혁명의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한다.

2005년 1월 ‘세계사회포럼’ 연설에서 차베스는 소비에트와 같은 국가사회주의를 버리는 대신 “사회주의를 재창조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나아가 2005년 5월 1일 새로운 민주노동조합 연맹체인 UNT가 주최한 노동절 기념 연설에서 재창조해야 할 사회주의를 21세기 사회주의로 명명하고 “베네수엘라는 21세기 사회주의로 나가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차베스는 2005년 9월 베네수엘라의 광업을 국유화하겠다고 선언, 기존에 외국 자본에게 허가해준 채굴권을 모두 취소하고 이후에도 다시 채굴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국영 철강 회사를 설립하여 광물을 직접 개발하겠다고 천명했다. 2006년 3월 31일에는 원유를 포함하여 모든 자원의 직접적인 정부 주도의 국유화를 선언하며 2006년 5월 1일 노동절을 기해 천연가스 에너지 자원의 국유화를 발표한다.

차베스는 현재 ‘21세기 사회주의’라는 이름 아래 2007년부터 시작되는 집권 2기의 청사진을 준비 중이다. 2000년~2006년 사이의 집권 1기에 비해 2007년~2012년 집권 2기는 비교가 무색할 만큼 탄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 자신이 처음으로 60퍼센트를 넘는 지지율로 재선되었을 뿐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경제·정치적 환경은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이다. 2006년 브라질, 니카라과, 에콰도르 등에서 연속적으로 차베스에 우호적인 지도자들이 당선되면서 남미에서의 연대와 협력 분위기도 가장 활발한 여건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볼리바리안 혁명’을 넘어서 ‘21세기 사회주의’라는 원대한 목표를 실현하려는 차베스의 의지는 현재의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차베스의 역사적 도전은 지구 반대편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적잖은 진보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4 주요 용어 정리

카라카스 봉기(카라카소)

89년 2월 27일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시작된 민중 봉기로 차베스 집권의 대중적 기초를 형성한다.

차베스의 집권을 가능케 하고 베네수엘라 사회를 급진화시킨 과정은 89년 2월 27일 시작되었다. 카라카스 봉기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시작되어 전국의 19개 도시로 확산되었고, 3월 5일까지 지속되었다.

카라카스 봉기의 도화선은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었다. 그 프로그램 때문에 국내 석유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 두 배로 뛰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사람들은 요금이 두 배로 올랐다는 말을 들어

야 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교통카드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관자촌 빈민들, 노동자들과 함께 카라카스 도심의 버스 정류장을 점거했다. 시위, 폭동, 약탈이 카라카스 전체에 들불처럼 번졌고, 그 소식이 전국으로 알려지자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시위, 폭동, 약탈이 일어났다.

정부는 카라카스를 전쟁터로 만들었다. 그 이후의 탄압 과정에서

남미 정권의 성격과 분포

연번	국가명	선거일(임기)	선거 결과	지도자	경제 협력체			
					LAIA	MERC OSUR	AN COM	CCM
1	베네수엘라	2006. 12. 3(6년)	좌파	우고 차베스 현 대통령	○	○	탈퇴	
2	볼리비아	2005	좌파	에보 모랄레스	○	△	○	
3	브라질	2006. 10. 1(4년)	중도좌파	룰라 다 실바	○	○		
4	아르헨티나	2003	중도좌파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	○		
5	우루과이	2004	중도좌파	타바레 바스케스	○	○		
6	칠레	2006. 1. 15(4년)	중도좌파 연합 · 4회 재집권	미첼레 바첼레트	○	△	탈퇴	
7	페루	2006. 4. 9(5년)	중도좌파	알란 가르시아	○		○	
8	에콰도르	2006. 11. 26(4년)	좌파	라파엘 코레아	○		○	
9	콜롬비아	2006. 5. 28(4년)	우파	알바로 Uribe 현 대통령	○		○	
10	파라과이	2003	우파	니카노르 두아르테 프루토스	○	○		
11	수리남	2005	중도	로날드 베네티안				
12	가이아나	2001(6년)	좌파	재그디오				○
13	가이아나	프랑스 해외령						
14	코스타리카	2006. 2	중도우파	오스카르 아리아스 산체스				
15	니카라과	2006. 11. 27(5년)	좌파	다니엘 오르테가				
16	파나마	2004	우파	마틴 토리호스				

14, 15, 16 번은 중미 국가임.

군인들이 빈민들에게 실탄을 발사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287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사망자는 십중팔구 1500명 이상이었고 많은 시체들이 암매장되었다”(Joseph Choonara, *Venezuela and Revolution in the 21st Century*, 2006.)

비공식 부문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공식적인 경제 구조에 편입되지 않고, 임시적인 영세 자영업이나 노점상으로 생계를 이어 가는 도시빈민들의 경제활동 형태를 비공식 부문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대부분 빈민가에 모여 살면서 사회 인프라 시설이나 사회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생활을 영위해왔다.

차베스는 이들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인구를 협동조합 결성 등의 방법으로 공식 부문에 흡수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지만 워낙 규모가 커 2005년 9월 현재까지도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500만 정도는 비공식 부문에 종사한다. 차베스는 초기 플랜 볼리바르 2000과 각종 미션의 초점을 이들 비공식 부문의 빈민에게 맞추었다.

베네수엘라의 과두제^{Oligarquia}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도시화와 제한적인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시대의 뿌리 깊은 유산을 극복하지 못했다. 정치적 독립 이후에도 전통적인 토지 귀족 지배력은 지속되었고, 독자적 군대를 보유하고 대사제이자 행정관의 역할을 하는 토지 귀족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전국적 차원에서는

대중적 참여를 제한하는 토지 귀족의 ‘과두제적’ 의회가 확립되었고 국가는 지역 영주들의 연맹체로서 권위적, 전체적 성격을 유지했다.” 2차대전 후에 이들의 영향력은 약화되었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새로 부상한 부유층을 흡수하여 과두제의 지배력을 지속시켰다(류주형, 「볼리바리안 혁명과 대안 세계화 운동」, 『월간 사회평론』).

베네수엘라 혁명 이전까지는 과두제를 형성한 기득권 집단은 경제에서는 국영석유회사의 경영진들이 포진하고, 정부에는 입법과 사법, 지방 정부를 장악한 관료 집단이 포진했으며, 언론을 장악하여 미디어 독점을 형성했고, 여기에 가톨릭교회와 일부 노동 귀족(2002년 쿠데타에 동조한 베네수엘라 노동조합연맹)이 가세하여 국내적으로 강력한 집단을 형성했다. 한국의 친일 세력을 뿌리로 하여 성장한 반공 수구 세력의 두터운 층과 비견될 만하다.

사회적 생산 기업

사회적 생산 기업^{EPS}이라는 용어는 2005년 중반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공동경영과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용어다. 만약 공유 형태의 소유 구조를 지닌 생산 단위를 창출했다고 해서, 그러한 소유와 통제가 자본주의 기업처럼 이윤을 극대화하는 원리를 따른다면 생산 관계의 질적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협동조합, 공동경영 그리고 국유기업은 새로운 기업 원리를 따라야 하는데, 이 새롭게 창조된 개념이 사회적 생산 기업이다.

사회적 생산 기업은 “위계 구조에 따라 지위와 관련된 특권이나 사회적 차별 없이 구성원들 사이에 실체적 평등이 존재하고, 계획

과정의 참여가 보장되며 국가적, 집단적 혹은 혼합 소유 형태에 따라서 운영되는 노동이 자신의 의미를 지니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복무하는 경제적 단위”라고 정의된다.

정부에 의해 EPS로 인정받으면 낮은 이자율로 신용을 제공받고, 정부 계약에 대해서 우선적인 협상 대상이 되는 특혜를 받는데 ‘수익성의 가치에 앞서, 연대성, 협조, 보완성, 호혜성, 공평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가치’ 등의 사회적 기업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마이클 레보비츠에 따르면 사회적 생산 기업의 개념은 교환가치로부터 사용가치로 생산적 활동의 중심 영역을 변경시키는 것인데,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에 본질적인 사회로부터 노동의 분리와 배제로부터 사회적 연대성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해석한다(본서 제4장 참조).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

베네수엘라 경제 시스템을 사회적 경제라고 부른다. 사회적 생산 기업과 내생적 발전 모형 개념을 포괄하는 경제 시스템이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는 전 계획개발부 장관 페레스 Felipe Perez와 지역계획부 차관 데니스 Ronal Denis가 주도했는데 다음의 일곱 가지 요소를 가졌다.

첫째, 사회적 경제는 대안 경제다.

둘째, 민주적, 자치적 실행이 우위를 차지한다.

셋째, 임금 수입이 아닌 협조를 기반으로 한 노동 형태가 이끈다.

넷째, (소기업을 제외하면)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는 집단적이다.

다섯째, 잉여의 평등한 분배를 기반으로 한다.

여섯째, 발전하는 환경과 연대적이다.

일곱째, 경제적 혹은 정치적 권력의 독점 앞에서 자주성을 견지한다.

안녕하세요 대통령 Alo Presidente 프로그램

2002년부터 매주 일요일 국영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는 프로그램. 국민 누구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거나 스튜디오, 현장 등에서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인터넷과 케이블 TV, 국영 라디오 채널로도 듣는다. 무려 6시간씩이나 진행할 때도 있다.

푼토피호 Punto Fijo 협정

1958년 10월 민주행동당, 기독교사회당, 민주공화연합 사이에 맺어진 협정. 사범부, 군부, 선관위 등을 포괄하는 공직을 선거의 승패와 관계없이 주요 정당들이 분배한다. 나아가 석유로 인한 수입도 정당을 통해 유권자들과 지지자들에게 분배한다.

볼리바르주의

공식 국가 명칭을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새 헌법 명칭을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헌법, 베네수엘라 혁명의 명칭을 볼리바리안 혁명, 자율적 정치 조직의 이름을 볼리바리안 서클, 차베스가 주창하는 대안적 남미 공동체를 미주 볼리바리안 대안 ALBA¹⁾으로 쓸 만큼 베네수엘라에서 볼리바르주의는 혁명의 대명사로 쓰인다.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혁명의 사상적 뿌리로 19세기 남미의 세 인물 시몬 볼리바르^{Simon Bolivar}, 시몬 로드리게스^{Simon Rodriguez}, 에제퀴엘 사모라^{Ezequiel Zamora}를 들고 있다.

시몬 볼리바르는 1783년에 태어나 남미에서 스페인 제국에 항거한 남미 독립의 아버지. 1830년대까지 10여 년 동안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의 해방을 위해 투쟁했다. 1769년에 태어난 시몬 로드리게스는 교육자이자 교육 철학자로서 남미에서 생활하면서 무상 교육을 주장하는 등 남미의 여러 나라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1817년 농촌에서 태어난 사모라는 군인이자 전략가로서 농민을 위한 토지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인물이었으며 1840~50년대에 남미의 연방 군대를 이끌었다.

베네수엘라의 전국노동조합 조직

베네수엘라 노동자 연맹^{CTV}은 1936년에 창설되었다. 민주행동당과 조직적으로 연결된 CTV는 2002년 4월 쿠데타에 참여하기도 했고 그해 12월 자본파업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차베스 지지자들은 이에 맞서 전국노동자연합^{UNT}을 조직하여 2003년 창립총회를 가졌다.

UNT가 자본파업을 이겨내는 가운데 조직된다는 점에 대해 UNT 지도자인 올란도 치리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합법적인 대통령을 무조건 방어하고, 혁명적 과정을 지속하고, 쿠데타 주모자들을 투옥시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우리

는 석유파업에 맞서 싸울 수 있었다. 석유 노동자들은 경영진과 기업주들이 없어도 산업을 재가동시킬 수 있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새로운 노총을 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적인 혁명 투쟁 속에서 UNT가 탄생했다.”

진정한 민중 권력의 형성 과정

손우정

- 1 들어가며
- 2 반란 세력의 합법적 집권
- 3 위로부터의 혁명: 제헌의회와 볼리바리안 헌법
- 4 반혁명의 도전과 민중의 응전
- 5 베네수엘라 혁명의 전망
- 6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시사점

VENEZUELA

오래전부터 제헌의회를 염두에 두었던 차베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 과정을 몰아붙였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차베스에게 걸었던 기대는 계급과 이데올로기 문제를 어느 정도 떠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치 개혁은 구체제에 기생하는 소수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제외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2002년 4월 남미의 베네수엘라에는 세계인의 눈과 귀가 집중되었다.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집권한 정부가 쿠데타로 실각 위기에 처했으나 거대한 민중의 힘으로 정권을 다시 되찾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권력을 둘러싼 쿠데타와 역쿠데타로 점철된 남미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만 여겨지던 베네수엘라의 경험은 그로부터 불과 몇 년 후 신자유주의적 정치 질서를 대신할 새로운 대안 모델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200여 년 전 스페인의 지배로부터 라틴 아메리카를 해방시킨 시몬 볼리바르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볼리바리안 혁명이라고 이름 붙여진 베네수엘라의 정치 이행 과정은 선거를 통해 집권한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와 새로운 의지와 열정으로 충만한 민중의 자

발적 참여가 핵심 동력을 이룬다. 베네수엘라 사례가 우리에게 흥미롭게 다가오는 이유는 체제 전환 과정의 독창성 때문이다.

세계사에는 국가 권력을 획득한 수많은 좌파 세력이 존재했지만, 정권을 넘어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변혁을 합법적으로 이루어 낸 나라는 거의 없다. 어떤 성격의 정치 세력이 국가 권력을 획득하더라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평화로운 방식을 동원해서는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 체제 이행을 연구한 학자들의 결론이었다. 폭력적 방식을 동원하면 체제 이행은 성공하더라도 독재가 뒤따르게 마련이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을 동원해서는 부르주아와 기득권 세력의 방해와 저항을 이겨낼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딜레마는 변혁을 꿈꾸는 모든 이들이 맞닥뜨린 문제로 이행을 전락시킬 위험을 둘러싼 운동 세력간 갈등의 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 성공적인 체제 이행을 경험했다. 물론 2005년 공식적으로 '신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선언한 베네수엘라의 '현재'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지배적 형태로 구현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2002년 4월 쿠데타와 같은 구체제 인사들과의 유혈 충돌도 존재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이 자본주의 체제를 목적의식적으로 거부하고 꾸준히 체제 변혁 과정을 진행해 나간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베네수엘라가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달리 체제 내에 지배 세력의 헤게모니가 확고하게 구축되지 못한 제3세계 국가이기 때문이라거나, 석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는 한다. 또한 베네수엘

라 혁명의 지도자 차베스가 군부 내에 확고한 지지 세력을 구축했기 때문에 반혁명 세력의 도전을 물리쳤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위의 평가들은 모두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런 구조적 조건들 이외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한 점은 베네수엘라에서 형성된 진정한 민중 권력이다. 베네수엘라는 최고 지도자로부터 시작된 위로부터의 혁명적 힘이 구체제 과두 세력의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아래로부터의 민중적 힘으로 극복해 나간 독특한 정치 과정을 밟아왔다. 혁명이 진행되면서 형성된 민중 권력은 볼리바리안 혁명을 추동하는 실질적인 힘이다.

여기에서는 차베스의 위로부터의 개혁이 어떻게 민중의 주체적 참여를 만들어 냈고, 이렇게 창출된 아래로부터의 힘이 어떻게 혁명을 급진전시켜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베네수엘라의 정치 이행 과정을 1992년 쿠데타에 실패한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집권 이후 제헌의회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위로부터의 혁명적 개혁을 실시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반혁명 세력과의 대결을 통한 민중적 자각에 따라 혁명이 더욱 강화되어 나가는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혁명의 전망을 짚어보고, 베네수엘라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2 반란 세력의 합법적 집권

1998년 대통령에 당선된 우고 라파엘 차베스 프리아스Hugo Rafael Chavez Frias는 베네수엘라 정예 공수부대 장교 출신이다. 인구 4000여 명의 작은 도시 사바네타에서 태어난 차베스는 육군 전자통신학교를 3등으로 졸업하고 기갑학교와 기갑학교 고급 과정을 각각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1990년에는 '시몬볼리바르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군 엘리트였다. 비록 명예 학위이기는 하지만 차베스의 정치학 박사 학위는 1999년 우리나라 경희대학교에서 수여받았으니, 우리와의 인연도 전혀 없지는 않다.

실패한 쿠데타와 차베스의 등장

차베스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총 3만 명의 육군 병력 가운

데 1000여 명이 넘는 군인들이 참가한 1992년 2월 4일 쿠데타 때문이다. 제국주의로부터 남미를 해방시킨 시몬 볼리바르의 정신을 베네수엘라에서 재현하고자 했던 차베스는 대통령궁에 입성하지도 못한 채 12시간 만에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그러나 쿠데타가 진압되고 난 후 군사 반란의 동기가 알려지자,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노에 가득찼던 베네수엘라 민중들은 차베스를 영웅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비록 쿠데타 실패로 장래가 보장된 군인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지만,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가슴속에 그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시켜 놓는 데 성공했다. 이때의 경험은 그가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데 큰 자원이 되었다.

차베스의 쿠데타가 비록 구체제에 실망한 민중들의 분노를 대변했다고는 하지만, 군사 반란에 실패한 주모자가 불과 7년 만에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남미 특유의 정치 문화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은 1959년 '쿠바 혁명'이 성공한 이후 공산 혁명을 확산을 방지하고자 친미파 군 장교들을 동원한 쿠데타를 추진했다. 브라질을 시작으로 칠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은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군부에 의해 하나하나 장악되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우파만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좌익 세력들도 쿠데타를 이용해 집권했는데, 베네수엘라 역시 1944년 메디나 앙가리타 집권 쿠데타, 1958년 페레스 히메네스 집권 쿠데타, 1962년 로물로 베탕쿠르트 집권 쿠데타 등에 민간 좌익 세력들이 부분적으로 참여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차베스의 군사 반란에 대해서도 그 방식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고, 그것이 좌익 세력인지 우익 세력인지에 대해 궁



◀ TV에 등장해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무장해제를 명령하는 차베스. 이때의 TV 연설로 차베스는 민중의 영웅이 된다.

금해 했을 뿐이다.

처음부터 차베스의 목적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쿠데타에 민중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도의 기동성과 보안이 요구되는 기습적인 군사 개입이 으레 그렇듯이 민간 세력은 소수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 차베스는 민간인 공모자들과 민간 세력의 참여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쿠데타 모의 과정에 참여했던 민간 좌익 세력 가운데 하나인 베네수엘라혁명당^{PRV}의 지도자 더글라스 브라보는 민간 측이 혁명 운동에 먼저 참여하고 군부가 그 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차베스는 군의 주도성을 분명히 했다.¹

쿠데타와 같은 군사 개입 방식은 규율이 떨어지고 보안이 지켜지기 어려운 민간인의 참여가 방해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인들은 쿠데타가 성공한 뒤에 집권을 논의할 때 불려야 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했다. 이처럼 초기의 차베스는 민중의 힘보다 무장

1 리처드 고트, 『민중의 호민관 차베스』, 당대, 2006.

권력을 더 효과적인 혁명적 힘으로 보았다. 그가 민중이 가진 진정한 힘을 깨달은 때는 훨씬 뒤의 일이다.

어쨌든 차베스는 쿠데타에 실패하여 감옥에 가게 됐지만, 정치 활동을 중단하지는 않았다. 1993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 보이콧을 주장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라파엘 칼데라의 지지율 30퍼센트보다 훨씬 높은 40퍼센트의 투표 기권을 조직해냈다. 이는 1988년 12월 페레스가 대통령에 당선될 때 1/4의 유권자가 기권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확대된 수치였다.

차베스는 1994년 2월 대통령에 당선된 칼데라의 사면으로 그해 3월 27일 출소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지만, 합법적인 수단을 통한 집권 가능성에 대해 아직 확신하지 못했다. 같은 해 12월 14일 쿠바 아바나 대학에서 행했던 연설에서도 무력을 동원한 군사 개입 방식에 대해 여전한 미련을 드러냈다.

“베네수엘라에서 우리는 무장 투쟁을 배격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베네수엘라 육·해·공군의 80퍼센트 이상이 우리를 지지합니다. … (중략) … 이에 덧붙여 우리는 한계 수준의 빈곤 속에 사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서 60퍼센트라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방출된 후에도 차베스에게 군의 존재는 변함없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자 혁명 주체였다. 훗날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플랜 볼리바르 2000이라는 군대를 동원한 사회 인프라 구축 사업이었던 것을 보면, 무장 투쟁의 여부와 상관없



이 그가 얼마나 군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²

무장 혁명에서 선거 혁명으로

자신의 동료가 1996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자 격렬하게 반대할 정도로 선거에 대한 불신이 강했던 차베스는 1997년으로 접어들면서 생각을 바꾼다. 선거에 '적극 참여'를 결심한 차베스는 자신의 정치 조직인 볼리바르 혁명운동 200^{MBR-200}을 '제5공화국운동' Movimiento Quinta Republica(MVR)이라고 바꾸고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 운동을 조직한다.

제5공화국운동이라는 조직을 새로 구성한 이유는 정당 이름에 '볼리바르'라는 국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법적인 이유도 존재했지만, 그의 오랜 구상인 제헌의회 소집을 통해 구체제와 단절된

2 차베스는 1999년 2월 2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군대를 국가의 사회·경제적 생활 속에 통합 시켰다면서 볼리바르 2000 계획을 언급했다. 이 구상은 군을 지역사회 집단과 연계시켜 사회적 인프라를 복원하는 내용이다. 군대는 막사, 운동장, 취사도구 등 군 시설을 지역사회에 제공하였고, 여분의 인력을 동원하여 학교 시설과 도로 보수 작업을 지원하였다. 1999년 12월 바르가스 주에서 일어난 산사태는 군이 복구 과정에 개입하여 좋은 성과를 낸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일각에서는 제헌의회 전술이 평화적인 정치 변혁을 이루기 위한 시도였다고 평가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평화적인 수단을 전제하지는 않았다. 제헌의회 전술은 그가 합법적인 집권 방식을 선호하게 된 이후에 등장한 게 아니라, 1989년 카라카소 이후 결성된 좌익 세력간 연합전선인 '애국전선'³의 핵심 전술 가운데 하나였다.

이때 마련된 헌법 초안은 차베스 정치 강령의 기본 줄기를 이룬다. 즉 제헌의회 전술의 핵심은 이행 방식의 폭력성 여부와 관련된 게 아니라, 새로운 대안 체제는 구체제와의 분명한 단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정치적 확신에 무게가 실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베스가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제헌을 내세우고 국영석유회사 민영화에 반대했어도, 그를 아주 급진적인 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나중에 차베스 반대파가 되는 기득권 세력의 대부분은 차베스의 존재를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상대적인 개혁 정권 정도로 인식했다.

최악의 상황은 차베스의 당선이 아니라 무능하고 부패에 빠진 기성 정치 세력의 재집권이었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선거 기간 동안 외국으로 빠져나갔던 국내 투자자들이 차베스 당선 직후 되돌아오기도 했다. 선거 결과에 자신들의 미래가 걸린 구체제 정당인들을 제외

3 1989년 카라카소 이후 결성된 애국전선은 구성원이 너무 다양하고 정치적 분열이 심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분열되었다. 당시 의회는 애국전선의 제안을 받아 전 대통령 칼데라를 위원장으로 하는 '합동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위원회를 민주행동당과 기독교사회당 등 낡은 정당 소속 의원들이 지배하게 되면서 유아무야 되고 만다. 1992년 차베스의 쿠데타 뒤 다시 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으나 얼마 뒤 과열된 논란 속에 심의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 민주행동당과 기독교사회당, 민주공화연합은 폰토피호협정을 통해 베네수엘라 정치 체제를 독점해 왔다. © zapata

하면, 대부분의 상류층은 충분히 그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1997년 5월 콜롬비아 일간지 『나시오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스 월드 출신으로 미모와 능력을 겸비한 차가오 시장 이레네가 47.7퍼센트의 지지를 얻었을 때 차베스는 고작 9.3퍼센트의 지지를 얻었지만, 불과 1년 뒤에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⁴

1998년 5월 집권당이었던 기독교사회당이 당내 갈등을 무릅쓰고 이레네를 여당 후보로 선출하자 그녀의 지지율은 하염없이 추락하기 시작했고, 차베스의 인기는 날로 높아져 갔다. 무엇보다도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차베스라는 새로운 인물을 대통령에 당선시킨 일등공신이었다.

당시 베네수엘라에서는 모든 정치 활동이 정당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무소속으로는 선거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 대신 정당 등록은 1만 명의 서명만 있으면 가능해 1998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총 31개 정당이 선거에 개입했다. 차베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베네수엘라 정치 체

4 송기도, 「'차베스혁명'과 '신베네수엘라」, 『권력과 리더십 2』, 인물과사상사, 1999.

제는 이른바 폰토피호협정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이는 1958년 독재자 페레스 헤메네스를 축출한 이후 민주행동당과 기독교사회당, 그리고 민주공화연합^{URD}이 정당 민주주의 기제를 강화하여 정치·사회적 갈등을 조절해 나가자고 합의한 협정이다.⁵

협약의 구체적 내용은 헌법을 수호하고 선거를 통해 통치할 것, 야당의 정부 참여를 통해 거국 내각을 구성할 것, 최소한의 공동 정책을 채택하여 정당간 협력을 보장할 것 등이다. 1958년 12월 이후 민주행동당과 기독교사회당은 베네수엘라 국가 권력을 독점해 왔다.

그러나 1998년 선거 결과는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민주행동당과 기독교사회당은 선거 중반 이레네를 버리고 카라보보 주지사 출신의 살라스를 지지했지만 그들이 획득한 표는 모두 합쳐 11.2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제5공화국운동은 차베스가 획득한 총 56.2퍼센트의 지지율 가운데 40.17퍼센트를 차지함으로써 이번 선거에서 차베스 개인이 가지는 의미를 그대로 보여줬다.⁶ 심지어 그를 지지하는 좌익 세력들이 결성한 애국의 극^{PP}조차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기보다 차베스 선거운동에 그나마 다양한 성격의 좌파 이념을 불어 넣었을 뿐이다.

결국 차베스는 민중 역량이 폭력적으로 분출되는 혁명적 방식이

5 1908년 비센테 고메스 정권은 쿠데타를 통해 시프리아노 가스트로 정부를 무너뜨리고 1935년까지 통치를 이어 간다. 고메스 정권은 시민 자유를 억압하고 석유 자원을 외국 다국적 기업에 팔아넘겨 민중들의 원성을 샀다. 이때 '28세대'라고 불리는 학생들은 고메스 정권에 저항하면서 오늘날 베네수엘라 공산당, 민주행동당, 기독교사회당, 민주공화연합 등을 만들게 된다.
6 베네수엘라에서는 후보 개인에게 투표하는 게 아니라,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정당에게 투표한다. 각 후보는 자신을 지지하기로 한 정당이 획득한 표를 모두 가져간다.

도표 2-1 __ 1998년 대통령 선거 득표율

후 보	정 당	득표수	득표율
우고 차베스	제5공화국운동(MVR)	2,625,839	40.17
	사회주의운동(MAS)	588,643	9.00
	만민을 위한 조국(PPT)	142,859	2.19
	베네수엘라공산당(PCV)	81,979	1.25
	5개 군소정당	234,365	3.59
	Total	3,673,685	56.2
살라스	:	:	:
	민주행동당(AD)	591,362	9.05
	기독교사회당(COPEI)	140,792	2.15

* 자료 : 베네수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V E N E Z U E L A ★

3 위로부터의 혁명 : 제헌의회와 볼리바리안 헌법

나 군사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합법적인 제도적 틀 속에서 베네수엘라 역사상 가장 젊은 대통령이 되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 사이에는 기존의 틀을 완전히 바꾸지 않고서는 어떠한 획기적인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나라 전체가 부패와 무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등장한 차베스는 바로 그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올 구원자로 인식되었다.

차베스가 정권을 잡기까지 그의 개인적 능력과 인기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집권 초기의 다양한 조치들은 전적으로 차베스 개인의 리더십에 의존해 추진되었다. 차베스는 새로운 헌법 제정을 통해 구 체제와의 완전한 단절을 시도하고, 볼리바리안 혁명의 좌표를 설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헌법에는 정치적 역관계가 총체적으로 반영된다고 할 때, 선거 때부터 압도적인 정치적 우위를 점한 차베스의 의도가 새로운 헌법안에 반영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제헌’은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바탕으로 국가 기구를 재조직하기 때문에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이루기에는 더 없이 적절했다.

오래전부터 제헌의회를 염두에 두었던 차베스는 매우 빠른 속도

로 이 과정을 몰아붙였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차베스에게 걸었던 기대는 계급과 이데올로기 문제를 어느 정도 떠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치 개혁은 구체제에 기생하는 소수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제외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베네수엘라 정치 과정에서 새로운 헌법 제정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구체제를 완전하게 극복하고자 하는 정치 세력이 구체제의 헌법 틀에 근거해 활동한다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합법적인 정치 변혁을 이루려고 시도한 정치 세력들이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던 이유는 법과 제도, 인적 자원과 같은 구체제의 구조적 잔재들이 혁명적 조치를 가로막는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이다.

차베스는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하기에 앞서 헌법부터 뜯어 고침으로써, 앞으로 추진할 혁명에 완전한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구체제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공간을 확보했다. 베네수엘라라는 해방자 볼리바르의 이름을 국호에까지 담으면서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다.

국민직접정치가 구현된 새로운 헌법

새로운 헌법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치 체계는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오로지 정당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정치 활동은 국가 운영 동력을 국민 자체에게서 찾는 직접정치로 변환되기 시작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직접민주주의 기제를 강조함으로써 민중이 볼리바리안 혁명의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를 열어 놓은 것이다.

정치 활동과 국가 운영에 관한 신헌법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5조에서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형태에 따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었으며, 다양한 직접민주주의 조항들이 도입되었다.

현대 민주주의 방식의 주류인 대의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사회 세력간 갈등 표출이 정당을 매개로 이루어지며 정당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조절하는 가운데 권력 창출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이 기제는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가 ‘지나치지 않도록’ 조절함으로써 다수의 직접적 지배를 가로막는다.

차베스는 푼토피호 체제를 지탱하던 정당이라는 정치 활동의 독점물을 처음부터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정당간 협의 기능을 이용해 국민들의 의견을 조정하기보다는 직접 민중을 찾아가고 그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기 바랐다.

차베스가 민중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 체도를 구상했던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는 정당 체계를 이끌어 나갈 정치 세력과 정부 내 중간 관료들의 상황 때문이었다. 당시 차베스의 ‘제5공화국운동’은 거의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고, 차베스를 지지한 ‘만민을위한조국’^{PPT}과 ‘사회주의운동’^{MAS}은 갈등이 심했다.

또한 구체제의 안락함을 선호했던 중간 관료들은 혁명의 주체라기보다 대상에 가까웠다. 이런 조건에서는 미조직화 상태에 있는 민중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화하여 변혁의 동력으로 삼는 게 필요했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가 체제를 건설하기 위해 차베스가



◀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베네수엘라 토지위원회 회의 모습.

믿고 의지할 곳은 군대와 자신에 대한 민중의 높은 지지뿐이었다.

정당 구조를 통하지 않으면서도 민중의 저항, 혹은 혁명을 이끌어 낸다는 생각은 70년대 베네수엘라 급진혁명당을 만든 알프레도 마네이로가 제시한 정치 목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의 시도는 대중이 자기 스스로 정치적 방향을 결정하고, 특정한 정치 구조가 미리 주어지는 게 아니라 평범한 대중들 사이에서도 지도부가 구축된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정당은 혁명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혁명이 어느 정도 발전된 단계에서 나타나는 결과’이며, 운동을 조직하는 대신 운동의 형식에 참여하게 된다.⁷

뛰어난 좌파 지도자였던 마네이로는 1982년에 갑작스레 사망했지만, 그의 구상은 2001년 12월 차베스가 반대 진영의 총파업에 맞서 출범시킨 볼리바리안 서클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자주 경영, 공동 관리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현된다.

가급적 중간 단계를 통하지 않고서도 민중의 동력이 최고 권력자와 직접 연결되는 기제는 베네수엘라 정치 과정의 독특한 특징이다.

7 Margarita Lopez Maya, *Del viernes negro al referendo revocatorio*, p.78, Alfadil, Caracas, 2005, 안태환, 미발표 원고, 2006에서 재인용.

정당에 대한 차베스의 불신은 제헌 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신 헌법 제67조에는 정당 대신,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결사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또한 “어떠한 정치 단체의 자금도 국가 기금을 통해 조달될 수 없다”고 규정해 거대 정당의 특권을 모두 없애 버렸고, 국민의 의사가 전달되는 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기존의 양원제를 단원제로 바꿔 놓았다.

이 외에도 새로운 헌법 체계 아래에서는 자문, 소환, 승인, 폐지의 네 가지 형태를 가진 국민투표가 가능하고, 대표자에 대한 국민소환과 국민 스스로의 정책 발의도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의 3권 분립에 ‘선거권력’과 ‘시민권력’을 추가하여 5권 분립 체제를 만들었다. 시민권력은 민중의 수호자, 검찰총장, 감사원장으로 구성된 공화국 윤리위원회에 의해 행사되며, 다른 4개의 권력들이 헌법에 정의된 기능을 따르도록 예방, 조사, 처벌하는 권한을 가진다.⁸

이처럼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헌법은 국민직접정치를 통해 민중이 국가 운영의 주체로 서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

인적 잔재 청산을 통한 과두 지배 체제의 해체

새 헌법 제정은 인적 청산을 통해 혁명 세력이 권력 장악도를 대폭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대통령 선거의 패배로 이미 큰 타격을 받은 폰토피호 체제는 제헌의회의 성립과 함께 근본부터 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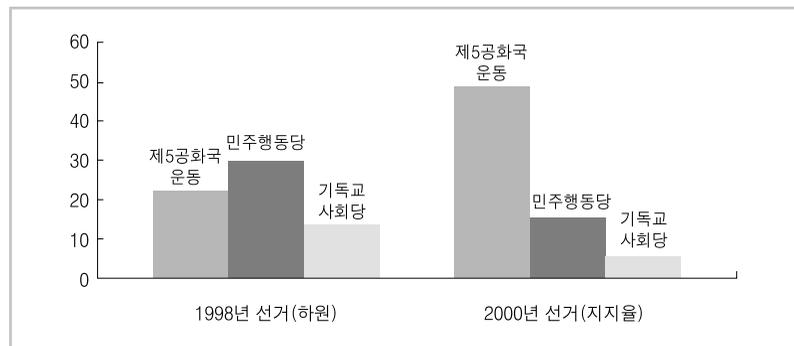
8 민중의 수호자(People's Defender)는 공화국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로 선출되며, 공공 사업이나 행정 업무의 감시나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한다. 임기는 7년간 보장된다.

어지기 시작했다.

1999년 2월 2일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가 천명된 이후 4월 19일 제헌의회 소집 국민투표는 88퍼센트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어 제헌의원을 뽑는 7월 선거 결과 재헌의회는 전체 131명 가운데 친차베스 세력이 119명을 차지했다. 이어 국호를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공화국'으로 변경한 새로운 헌법안이 1999년 12월 71.21퍼센트의 찬성으로 통과함으로써 불과 10개월 만에 베네수엘라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 다음 수순은 새로운 헌법에 근거한 정치 세력 재구성이었다. 먼저 2000년 7월 새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차베스는 유효표의 59.76퍼센트를 획득하여 6년 동안의 새 임기를 다시 시작했고, 그의 제5공화국운동은 새 국회의 과반수와 총 23개의 주지사 자리 가운데 15개를 차지했다. 반면 1998년 대선 직전 치러진 총선에서 하원 의석의 52.2퍼센트를 차지했던 민주행동당과 기독교사회당은 불과 2년

도표 2-2 _ 1998년 하원 선거와 2000년 선거 지지율



만에 절반의 의석을 차베스에게 빼앗겼다. 기존의 과두 지배 세력들은 그들을 보호해주던 법과 제도가 이제는 자신들을 끌어내리는 상황을 고스란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체제를 사수하는 수단이던 법과 제도들이 이제는 반대로 새로운 정치 변혁의 수호자가 되었다.

만일 차베스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구체제의 인적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면, 베네수엘라의 정치 과정은 지금과는 상당히 달라졌을지 모른다. 해방 후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태생적 한계가 오늘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생각해보면, 제헌의회의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차베스 집권 초기의 다양한 조치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의 영향력을 확대해 주기는 했지만 내용 자체가 급진적이지는 않았다. 차베스는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변혁의 실제 내용을 결정하는 경제 정책만큼은 극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1999년 2월 대통령 취임사에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국가의 보이는 손이 서로 맞잡는 중간 지대”를 경제 계획의 목표로 제시했고, 같은 해 아시아 순방 이후 독일 슈뢰더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는 자신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위해 “독일과 유럽의 모델을 검토 중이다”며 “베네수엘라 새 헌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투자에 좀더 큰 안정과 안전을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의 구상은 부정 부패나 정과 갈등 등 도덕적인 영역의 해결에는 급진적이었지만,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혁명적이라기보다 서구의 복지국가 모델에 가까운 내용을 선호했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헌법에 근거한 국가 운영이 자리를 잡아 나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과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세력 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뿐 모두가 알고 있었다.

9 리처드 고트, 앞의 책.



4 반혁명 세력의 도전과 민중의 응전

차베스의 개혁 의지가 강해질수록 반혁명 세력의 저항도 점차 거세져 갔다. 선전포고는 차베스가 먼저 단행했다. 1년간 대통령에게 법안을 승인하는 권한을 주는 수권법^{Enabling laws}이 만료되는 2001년 11월, 차베스는 49개의 개혁 법안을 갑작스럽게 공포했다. 이 개혁 법안은 토지 보유 기간과 석유 산업의 생산과 과세, 수산업 조업 규제, 사회보장 제도의 민영화 계획 취소 등을 골자로 신헌법이 지향하는 목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49개 법안은 사실 급진적이라기보다 온건한 진보적 개혁 조치에 가까웠다. 석유 산업은 이미 1976년부터 국유화되었고, 토지 개혁 조치는 국유지와 유흥지를 유상으로 분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첨예한 갈등을 빚은 탄화수소법은 단지 석유 산업에 참

여하는 사기업에 이전보다 높은 30퍼센트 이상의 로열티를 부과하고 외국 기업과의 합작에서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가 51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내용이 추가됐다.¹⁰

그러나 나라의 부를 200년 동안 통제해 온 베네수엘라 과두 세력은 이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49개 법안을 단순한 개혁 조치가 아니라 '혁명의 씨앗'으로 인식했다. 여기서 차베스의 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대중 의식화와 노동자, 도시빈민, 영세 농민들의 조직화 등 모든 종류의 혁명적 흐름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혁명에 대한 공포는 그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

반혁명 세력의 반란

49개 개혁 법안 공포를 신호로 정국은 급격하게 혁명 세력과 반혁명 세력으로 나뉘어졌다. 차베스 진영에서 어중간하게 자리를 차지했던 기회주의 세력도 발 빠르게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했다. 탄화수소법에 반대했던 국영석유회사 사장 과이카이푸로 라메다 장군이 해고되어 반차베스 진영으로 자리를 옮겼고, 차베스에게 좀더 온건적인 개혁 노선을 요구했던 내무장관 루이스 미킬레나도 반대파에 합류했다. 베네수엘라는 혁명 세력과 반혁명 세력 간의 계속되는 시위로 내전 직전의 상황까지 치달았다.

구체제의 열매를 마음껏 향유하던 과두 세력은 비록 신헌법 제정

10 Jorge Martin, Venezuelan Presidential Elections—A Crucial Turning Point for the Revolution, venezuelanalysis.com, 2006.

으로 영향력이 급격히 위축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무시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들은 정부의 중간 관료층을 장악했고 미국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는 베네수엘라 노동조합총연맹과 군부 일부에 분명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무엇보다 대중 여론을 조성하는 수많은 민영 TV 등 언론사는 반차베스 전선의 선봉에 섰다. 되돌아보면, 1999년 12월 15일 71.8퍼센트의 찬성으로 통과된 신헌법 국민투표 결과의 이면에도 투표 보이콧을 주장했던 반대파가 조직한 기권율은 55.6퍼센트에 달했다. 이는 차베스가 1993년 선거 보이콧 운동을 펼쳤을 때의 기권율 40퍼센트를 훨씬 상회하는 비율이다.

반면 차베스의 지지 세력은 군과 오랫동안 베네수엘라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다수 빈민들이었다. 빈민들은 그동안 집권 세력의 정치적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 차베스와 그의 지지자들은 빈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부패와 빈곤 척결을 약속하고 볼리바리안 헌법의 정신과 가치, 그리고 그가 그리는 새로운 대안 사회를 역설해 나갔다. 자생적 활동 조직인 볼리바리안 서클은 바리오(빈민촌) 곳곳으로 찾아 들어가 민중을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돌려놓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반차베스 세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낮았지만, 분명 베네수엘라 국민의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2002년 4월 7일 PDVSA 고위 관료 7명을 차베스가 해고하자, 베네수엘라 상공회의소와 베네수엘라 노동조합총연맹^{CTV} 그리고 전체 시장의 90퍼센트를 차지하는 민영방송국들이 주축이 된 반차베스 진영은 반혁명 쿠데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미국은 2001



▲ 차베스 지지자들이 저격수에게 응사하는 이 장면은 민영 TV에 의해 반차베스 세력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하는 모습으로 조작되었다. © 다큐멘터리 「혁명은 방송되지 않는다」

년 11월 국무부와 국방부, 국가안보국이 베네수엘라 관련 합동 회의를 열고 “베네수엘라를 외교적 고립 상태에 몰아넣겠다”고 발표한 이후 반차베스 세력이 꾸민 음모의 든든한 후원자를 자청했다.

치밀하게 사전 기획되어 발생한 4월 11일 차베스-반차베스 진영 간 유혈 충돌은 미디어가 진실을 어떻게 왜곡하고 조작하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차베스 지지 세력이 평화적인 반차베스 시위 군중에게 무차별 권총 사격을 가하는 장면으로 조작된 이미지는 민영방송 채널을 통해 반복해서 반영되었고, 퇴역 장성들은 카메라 앞에서 차베스의 하야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결국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쿠데타군이 대통령궁을 향해 다가오자, 결사 항전을 결심했던 차베스는 카스트로의 조

언을 받아들여 나중을 기약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조건부 사임 입장을 정하고 “사임서는 국회에 제출할 것, 헌법을 존중할 것, 대통령궁 내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것, 모두의 출국을 보장할 것”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쿠데타 측이 조건 수용 입장을 번복하고 ‘무조건 사임’을 요구하자 다음날 차베스는 사임을 거부했고 쿠데타 세력에 의해 군사기지로 압송되었다. 이 모든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4월 12일,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대표적인 반차베스 민영방송국인 베네비전 Venevision을 통해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새 대통령을 갖게 되었습니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아침 인사를 듣게 된다.

대통령궁을 장악한 쿠데타 세력은 모든 것을 과거로 되돌려 놓았다. 신헌법을 부정하고, 국호에서도 ‘볼리바르’라는 명칭을 삭제했다. 국회와 대법원의 기능을 정지시켰으며, 49개 개혁 법안 또한 무효로 선언했다. 1998년 차베스의 집권 이후 빈민들의 열광적인 지지 속에 진행되었던 각종 개혁의 성과들은 이렇게 물거품이 되고 있었다.

정치의 중심으로 불러왔던 민중은 다시 변방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고, 곳곳에서 우익 세력의 난동과 테러가 시작되었다. 오직 민영방송국만이 평화롭게 쿠데타를 칭송하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내보낼 뿐이었다. 뒤에서 웃음 짓던 미국은 곧바로 새 정부를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

일어서는 민중, “민중이 단결하면 못할 게 없다”

만일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차베스도 1973년에 칠레의 아연



▲ 차베스를 지지하는 민중들은 반혁명 세력의 쿠데타가 발발하자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데가 그랬듯이 또 한 명의 비극적 정치 지도자 정도로만 역사에 남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혁명의 독특한 여정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민중들이 지난 3년 동안 차베스가 그들에게 보낸 신뢰에 답하기 시작한 것이다.

빈민촌이 몰려 있는 언덕 위에서 수많은 민중들이 구름처럼 밀려 내려왔다. 그들은 대통령궁과 차베스가 억류된 군사 기지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약속이나 한 듯 민중들이 손에 든 볼리바리안 헌법의 제333조에는 “이 헌법은 여기에서 규정된 방식 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해 폐기되거나 강제적 힘에 의해 기능이 정지되어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럴 경우 모든 시민들은 헌법의 효력을 복구하는 데 협력할 의무를 지닌다”고 써어 있다. 헌법을 부정한 쿠데타 세력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은 ‘헌법적으로’ 완전히 정당했다. 반차베스 진영

에 속한 카라카스의 경찰들이 빈민들에게 발포해 5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이런 식의 진압은 분노한 민중을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대한 민족주의적 감흥과 도덕적 정당성으로 촉발된 볼리바리안 혁명은 점차 계급적 성격을 띠어 갔다. 민중은 반혁명 과정을 겪으면서 차베스의 정책이 바로 그들 자신의 혁명이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결국 반혁명 기도는 거대한 민중들의 저항과 차베스에게 동조한 군인들의 역쿠데타로 인해 3일 만에 좌절되고 말았다. 4월 14일 카스트로의 물밑 지원을 받은 최정예 공수부대원들에 의해 구출되어 대통령궁으로 돌아온 차베스는 “민중이 역사를 창조했다”며 벽차오르는 감격 속에 반혁명 세력을 향한 귀환연설을 시작했다.

“나를 반대 하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헌법을 반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민중의 책임입니다.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당신들은 이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¹¹

헌법 복원을 선언한 이 메시지는 볼리바리안 혁명의 극적인 복귀를 선포한 것이었다. 쿠데타가 좌절된 이후에도 구체제의 과두 세력들은 여전히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차를 타고 다녔지만, 새로운 베네수엘라에서 그들은 분명 비주류가 되어가고 있었다.

11 2002년 4월 쿠데타를 다룬 아일랜드 다큐멘터리 「The Revolution will not be televised」 중서 인용.

2002년 4월 쿠데타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반차베스 세력의 반란이 실패한 사실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여러모로 베네수엘라 혁명의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먼저 군에서는 장성 약 60여 명이 강제 예편을 당했고, 나중에 400명의 우익 장교가 추방되었다. 이는 군대가 혁명의 진정한 수호자이자 집행자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해 준다.

2002년 4월 쿠데타 이후에는 반혁명 세력의 다양한 공세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장교도 호응하지 않았다. 평화적인 방식으로는 쉽지 않았던 군과 관료 체계 내 반혁명 세력의 인적 청산이 이들의 쿠데타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반혁명은 혁명을 더욱 강화시켜 나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볼리바리안 혁명에서 민중이 가지는 지위였다. 그동안 빈민들은 차베스 개혁의 수혜자로서 그를 열렬히 지지하는 수동적인 역할만을 수행했었다. 그러나 반혁명 세력의 쿠데타를 목격하면서 민중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헌법 체계에서 획득한 모든 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베스를 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혁명을 구현하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002년 4월 반쿠데타 시위에 참여한 한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차비스타^{Chavista}(차베스 지지자)가 아닙니다. 우린 혁명가요. 우리는 이 정부를 옹호해야 합니다만,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

은 자유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차베스를 옹호하는 이유는 그가 지금까지의 대통령들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우리 투쟁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중들은 그를 우리와 대등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요.”¹²

차베스가 시작한 위로부터의 혁명은 점차 민중들이 주체가 된 아래로부터의 혁명으로 변화되어 갔다.

사장들의 파업, 반혁명이 혁명을 강화시키다

쿠데타가 끝난 뒤 민중들의 혁명 의지는 날로 높아 갔지만, 차베스는 오히려 일련의 유화 조치를 시도했다. 경제팀을 덜 급진적인 장관들로 대체했고, PDVSA에도 좀더 온건한 인사들을 선임했다. 심지어 해고된 경영진을 다시 되돌려 놓기도 했다. 많은 지지자들이 이러한 조치에 반대했지만, 그는 조금 속도를 늦추더라도 모든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지지하는 볼리바리안 혁명을 원했다. 그러나 차베스의 이런 시도가 소용없는 것이었고, 좀더 강력한 개혁을 요구했던 민중이 옳았다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증명되었다.

반혁명 세력은 차베스의 유화 조치에 직장 폐쇄로 응답했다. 대법원이 석방한 쿠데타 주모자들은 ‘민주연합’^{Coordinadora Democrática}이란 이름으로 세력을 규합하여 2002년 12월 2일부터 다음해 2월까지 총파업을 벌였다. 이는 ‘사장들의 총파업’ 혹은 ‘석유 파업’으로도

12 리처드 고트, 앞의 책, 370쪽에서 인용.

불렀는데 베네수엘라 GDP의 3분의 1, 정부 재정의 75퍼센트, 수출 총액의 80퍼센트를 넘게 차지하는 석유 산업을 마비시킴으로써 차베스의 항복을 얻어내려 한 일종의 '자해 행위'였다.

2002년 12월 6일 반차베스 시위대 세 명이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은 후에 반차베스 성향의 경찰과 연계된 포르투갈 사람들의 소행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파업을 지속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했다. 반혁명 세력들은 계속해서 석유 정제소를 파괴하고 가축을 죽이고 우유를 강에 버리는 등 사회 혼란을 부추겼다. 공장 폐쇄에 적극 참여한 민영방송국은 4월 쿠데타 당시 그랬듯이 약 700개의 반차베스 성향의 광고를 내보내며 파업을 지원했다.

또한,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화가 바닥나 외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볼리바르 화폐가 평가절하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려 중소 상인으로 하여금 매점매석에 들어가게 했다. 사회 불안과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악의적 선전은 공장 폐쇄 기간 내내 계속되었다.

물론 반혁명 세력의 파업은 효과가 있었다. 그 당시의 파업으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수입해야 했고, 전체 GDP는 24.9퍼센트나 하락했다. 물가 상승률은 20퍼센트에 달했으며 실업률은 17.8퍼센트를 기록했다. 차베스에 대한 지지도는 한때 20퍼센트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량이 없었다. 아마도 1973년 칠레 아옌데 정부가 그랬듯이 보통의 정부라면 민심 이반 때문에 권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4월 쿠데타의 경험은 하층 민중들로 하여금 고통을 감수하게 했다. 파업 기간 중 빈민촌을 방문한 차베스에게 한 노인은 이

렇게 말했다

“차베스, 내 집에는 의자가 남아 있지 않아요. 우리는 가구, 지붕을 뜯어서 불을 피울 겁니다. 우리는 문도 떼어낼지 모르겠군요. 그렇게 해서 요리를 할 거예요. 하지만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차베스.”¹³

4월 쿠데타의 경험을 통해 민중들은 이것이 차베스와 반차베스 세력 간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들과 반혁명 세력 간의 투쟁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직장 폐쇄는 볼리바리안 혁명에 또 하나의 중요한 동기를 부여했다. 석유 파업 당시 쿠바에서는 콩을 가득 실은 배를 보내주었고 브라질에서도 식량이 들어왔다. 또한 콜롬비아로부터 우유, 고기, 석유를 구입해 식량난과 에너지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연대는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가 스페인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중남미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듯이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볼리바르 대안을 강조하는 차베스의 구상을 강화시켰다. 직장 폐쇄 이후 추진된 각종 국제적 지원과 2006년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간 베네수엘라-브라질-페루-볼리비아-콜롬비아-우루과이-아르헨티나-칠레를 잇는 1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가스관 공사도 헌법 전문에 명시된

13 베네수엘라 혁명 연구모임, 『차베스, 미국과 맞짱뜨다』, 시대의창, 2006, 171쪽에서 재인용.

중남미 통합 구상과 관련이 깊다.

국제 연대에 관한 차베스의 구상은 남미 대륙의 범위에 머물지 않는다. 2006년 9월 20일 차베스가 유엔 연설에서 부시 미 대통령을 “악마”라고 호칭하고 국제적인 반미 전선 구축을 명분으로 유엔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온 힘을 기울였던 노력에서 보듯이 볼리바리안 대안은 국제적 성격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결국 반차베스 세력은 또다시 반혁명 기도에 실패하여 4월 쿠데타 실패로 잃은 것보다 더 많이 잃었다. 차베스는 석유 과업이 없었다면 쉽게 진행시키지 못했을 PDVSA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고위 경영진은 물론 과잉 고용 상태에서 석유 이익의 독점에만 눈이 멀었던 특권적 노동자 1만 8000여 명을 연속 62일 동안 피고용자 의무를 방기한 혐의로 노동기본법 102조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해고했다. 자본 총과업의 좌절과 PDVSA에 대한 정부의 지배권 확립은 베네수엘라의 정치 이행 과정이 더욱 급물살을 타는 계기로 작용했다. 거액의 오일 달러가 49개 개혁 법안을 추진할 재정적 토대가 되었다. 반대파는 차베스에게 도전하면서 차례차례 자신들의 무기를 혁명 세력에게 넘겨주었다.

차베스는 4월 쿠데타 때와 달리 좀더 엄격하게 대응했다. 그는 이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전국민의 통합을 추구하는 전략을 포기하고, 분명한 자기 기반을 중심으로 구체제의 기득권 세력과 투쟁하려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 반혁명 세력의 군사 개입과 직장 폐쇄는 민중들에게 혁명 주체로서의 의식을 자각시켜준 동시에 볼리바리안 혁명을 더욱 급진화시켰다.

민중들은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끔 만든 동인이자 차베스가 가진 자신감의 원천이었다. 차베스는 더 이상 구체제의 기득권층과 빈민들 간의 화해를 억지로 모색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확실한 민중의 ‘사령관’이 되었다.

민중을 위한 임무 : 볼리바리안 혁명의 전진

직장 폐쇄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말할 수 없이 피폐해졌지만, 차베스는 고유가를 바탕으로 한 석유 산업의 수익을 국가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 사업에 투자했다.

차베스는 2003년 4월, 매우 중요한 일련의 미션들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미션 바리오 아텐트로(빈민촌으로, 의료복지 사업), 미션 메



▲ 문맹퇴치 프로그램인 미션 로빈슨에 따라 한 할머니가 글을 배우고 있다. © 임승수

르갈(빈민에 대한 식품 지원), 미션 로빈슨(문맹 퇴치), 미션 리바스(중등 교육), 미션 수크레(고등 교육-대학), 미션 부엘반 카라스(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훈련 프로그램. 리바스, 수크레 수료자를 대상으로 시행), 미션 사모라(농민 문제), 미션 피아르(광산 문제), 미션 과이카이푸로(원주민 권리 보장), 미션 아비타트(주택 문제) 등 사회적 공공성 확보를 기치로 한 전 사회적 체질 개선 사업은 볼리바리안 혁명의 가치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

각종 미션 사업은 지금도 계속 확대 중인데 최근에는 빈민들에게 무료로 개안 수술을 해주는 미션 밀라그로와 안보, 재난 방지, 사법, 보건 등의 영역 확대를 위해 16개의 개방 대학과 8개의 기술 대학 연구소를 건설하려는 미션 알마 마스터, 그리고 빈민들에게 틀니를 제공하려는 미션 스마일 등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한 미션 바리오 아텐트로 는 쿠바와 베네수엘라 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가능하게 된 의료복지 사업이다. 차베스 집권 이전인 1997년 12월 신자유주의적인 복지 정책인 ‘종합사회보장체계법’에 따라 ‘베네수엘라 사회보장청’ Instituto Venezolano de los Seguros Sociales(IVSS)이 해체되면서 베네수엘라 전체 국민의 80퍼센트 이상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었다.¹⁴

석유 파업이 겨우 진정되었을 때 시작된 미션 바리오 아텐트로에 참여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에 도착한 58명의 쿠바 의사들은 반차베스 민영방송국으로부터 ‘카스트로의 선발대’라는 조롱을 받았으나 2003

14 Absalon Mendez Cegarra, *El Derecho a la Seguridad Social en la Constitución de la Repu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p. 168, UCV, Caracas, 2006, 안태환, 앞의 원고에서 재인용.

년 8000명, 2004년 1만 3000여 명의 쿠바 의사들이 약 5000명의 베네수엘라 의료 보조원들과 함께 의료 사업을 벌여 전체 인구의 약 70퍼센트에 해당하는 1700만여 명의 국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었다.

물론 이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2003년 아라구아 주에서 한 명의 쿠바 의사가 살해당했고, 카라카스의 페타레 지역에서는 쿠바 의사의 베네수엘라 인 보조원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반차베스 세력은 가두집회가 있을 때마다 노골적인 반쿠바 정서를 드러내며 “쿠바 의사를 죽이고 애국주의자가 되자”는 구호를 외치고 다녔다.¹⁵ 그러나 쿠바와 베네수엘라 민중 간의 국제적 연대는 어느 때보다 굳건해 지고 있었다. 차베스는 쿠바의 이런 헌신적 노력에 감사하는 의미와 중남미 연대의 뜻으로 저렴한 가격에 원유를 제공하고 있다.

무력과 자본을 이용한 도전에 모두 실패한 반대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소환을 통해 차베스에게 다시 도전하지만, 그것은 이미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반대파의 몽니일 뿐이었다. 여러 논란 끝에 2004년 8월 15일 진행된 소환 투표에서 반대파는 약 398만 9000명의 소환 찬성표를 조직해냈지만, 대대적인 유권자 등록 운동을 통해 2백에서 3백만 명의 신규 유권자를 만들어낸 차베스가 약 580만 명의 지지표를 조직해냄으로써 또 다시 패배하게 된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31일 결과가 확정된 도지사 선거에서 친차베스 후보는 22개 주 가운데 20개 주를 차지했고, 2005년 12월 4일 치

15 베네수엘라 혁명모임, 앞의 책에서 재인용.



5 베네수엘라 혁명의 전망

러진 베네수엘라 총선에서는 친정부 후보들이 89퍼센트의 득표로 총 167개 국회 의석을 모조리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카스트로가 지적했듯이 이제 차베스 반대파가 차베스를 제거할 방법은 암살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¹⁶

“저는 털끝만큼의 의심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세계의 많은 지식인들이 자본주의는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내부에서 극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자본주의는 반드시 사회주의, 진정한 사회주의를 통해서 극복되어야만 합니다. 평등과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하여!”¹⁷

2005년 1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에서 차베스는 역사 속에서 잠자던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다시 끄집어냈다. 그리

16 차베스에 대한 암살 위협은 실재한다. 베네수엘라 정치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폭로해온 베네수엘라계 미국 변호사인 에바 골링거(Eva Golinger)는 『Green Left Weekly』와의 2006년 10월 인터뷰에서 “카라카스에는 3000명이 넘는 민병대가 차베스를 암살하기 위해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 내용을 한 민병대 지도자에게서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17 World Social Forum : Our Peoples' South and North, From the Gigantinho Stadium, Porto Alegre, Brazil Sunday 30 January, 2005.



고 2005년 5월 1일 노동절 기념식에서 “베네수엘라는 21세기 사회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연설을 통해 볼리바리안 혁명의 목표가 ‘신사회주의’ 구현임을 분명히 선언했다.

이후 차베스는 2005년 9월 광업을 국유화한 데 이어 2006년 5월 1일에는 모든 자원에 대한 국유화를 선언했다. 또한 2006년 3월에는 국가 문장을 변경하면서 오른쪽을 향해 달리던 말의 방향을 왼쪽으로 바꾸었다. 국회 부의장 실리아 플로레스는 “(왼쪽을 향하는 말은) 지금 베네수엘라가 처한 역사적 계기를 상징한다”면서 “이를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차베스 집권 초기,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추구했던 베네수엘라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들어섰다. 새롭게 거듭난 자유주의처럼, 새롭게 부활한 사회주의는 볼리바리안 혁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차베스와 민중의 힘, 그리고 국제적 연대를 바탕으로 수행되어 온

볼리바리안 혁명은 불과 8년 만에 베네수엘라를 과거와는 전혀 다른 나라로 바꿔 놓았다. 그의 취임 첫해에 -7.2퍼센트였던 GDP 성장률은 2006년 10.2퍼센트를 달성했고, 직장 폐쇄 이후 17.8퍼센트까지 올랐던 실업률은 2006년 8.4퍼센트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런 경제 수치보다 더욱 중요한 변화는 베네수엘라 민중들이 갖게 된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이제 무상 의료와 무상 교육은 목표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고 완전한 문맹 탈출은 시간문제로 남았다. 베네수엘라 빈민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과거와는 달리 세대를 되풀이한 굶주림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리라는 희망과 자긍심에 가득 찼고, 이것이 혁명을 추진하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되었다.

혁명의 장애물 : 내부의 문제

그러나 베네수엘라 정치 과정이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해피엔딩으로 규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개혁 정책들은 비록 민중의 자발적 힘으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차베스 개인의 리더십에 크게 의존하는 측면이 크다.

차베스를 지지하는 정치 조직 내부에는 관료주의와 하향식 사업 방법 그리고 기회주의와 부패가 여전히 ‘볼리바리안 혁명 속의 또 하나의 혁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고, ‘사회주의 없는 차베스’를 원하는 그룹들과 공동 경영이나 자주 관리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간에 벌어지는 갈등을 적절하게 조율하면서도 중단 없는 전진을 추구할 줄 아는 차베스의 정치적 지도력은 볼리

바리안 혁명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차베스의 역할이 크다는 사실은 만에 하나 그의 부재 상황이 도래할 때 혁명의 안정적인 진행을 장담할 수만은 없는 취약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혁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차베스 지지자들의 주장은 차베스 없는 볼리바리안 혁명을 상상하기 힘든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차베스를 제외하고 혁명을 이끌어 나갈 확고한 정치 조직이 없다는 것은 볼리바리안 혁명의 취약점 가운데 하나로 자주 거론되는 문제다. 남미에는 당이나 전위, 때로는 리더십도 없이 ‘운동 자체가 모든 것’이라는 슬로건으로 활동하는 조직들이 많지만, 초기에 이슈를 효과적으로 확산시켰던 것을 제외하고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한 사례는 아직 없다.

이를 인식한 듯 차베스도 2006년 9월 9일 그의 MVR과 친여 성향의 4개 정당을 비롯해 베네수엘라 혁명을 지지하는 모든 그룹이 연합하여 ‘볼리바리안 혁명당’*great party of Bolivarian revolution*을 건설하고자 제안했고, 2006년 12월 대선 승리 직후에도 그의 ‘제5공화국운동’의 해산과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United Socialist Party of venezuela*의 창당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런 거대 정당의 탄생은 반대로 당의 과두제적 성격을 강화시켜 오히려 아래로부터의 혁명적 힘을 억제할 위험도 존재한다. 직접민주주의를 약화시켜 볼리바리안 혁명의 역동성을 사장시킨다면, 단일 정당의 탄생은 오히려 혁명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이제 볼리바리안 혁명은 차베스 개인을 떠나 혁명의 지속과 안정

을 보장하는 정치 조직을 건설해야 하는 과제와 함께 거대 정당의 건설이 가져오는 과두제의 한계 또한 뛰어넘어야 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물론 이런 딜레마는 혁명의 심화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부딪히는 문제다. 차베스가 뛰어난 리더십으로 독특한 정치 이행 과정을 이끌어 왔듯이 새로운 딜레마를 어떻게 돌파해내느냐는 혁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험대가 된다.

외부로부터의 위협

베네수엘라가 직면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재도 이미 직면하는 또 하나의 위협은 반대 세력의 존재다. 이는 단순히 베네수엘라 내 반 차베스 진영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서 호시탐탐 차베스 체제의 전복을 노리는 미국의 위협을 포함한다. 차베스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그의 공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온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2000년 OPEC 의장국이 되면서 8달러에 팔리던 원유 가격을 30달러로 올리고 차베스가 이라크를 방문하자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2001년 10월 차베스가 텔레비전에 등장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학살당한 민간인들의 사진을 들어 보이며 “행동하기 전에 생각할 것”을 부시에게 요구했을 때, 양국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리고 6개월 후 차베스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쿠데타에 직면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주로 전국민주주의기금 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레이건 정부의 냉전 전략에 기초해 1983년 설립된 NED는 동구 사회주의 국가

의 붕괴에 ‘그림자 세력’으로 작용했으며 칠레, 니카라과 등 중남미 반미 정권 붕괴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우리에게는 2003년 북한인권 단체에 ‘민주주의 상’을 수여해 잘 알려진 단체다.

베네수엘라계 미국 변호사인 에바 골링거^{Eva Golinger}에 따르면 미국은 반대파에 대한 예산 지원, 외교적 제재, 군사적 위협 등의 방식으로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왔다. 특히 NED는 미국노동총연맹^{AFL-CIO}의 국제 조직인 미국국제노동연대센터^{ACILS}를 통해 2002년 4월 쿠데타의 한 주역인 베네수엘라 노동조합총연맹에 많은 돈을 기부했으며 반차베스 진영의 세력이 약해질 때마다 기부액을 점점 더 증가시켜 왔다고 한다.¹⁸ NED 외에도 미국은 전환주도사무소^{OTI},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대안개발원^{DAI}, 국제공화주의연구소^{IRI} 등을 통해 베네수엘라 정치에 계속 개입했다. 또한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접한 콜롬비아에는 마약 퇴치를 구실로 미군이 파견되어 매년 10억 달러에 이르는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등 노골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켰다. 2005년 초에는 콜롬비아 특수 부대가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에 잠입하여 콜롬비아 좌익 게릴라 지도자를 납치해 감으로써 양국간에 외교 분쟁이 발생한 일도 있다.

최근에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전체 석유 생산의 40퍼센트를 차지하는 술리아 주의 독립운동을 부추기고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체제 전복을 노린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곳은 반차베스 진영의 근거지 가운데 하나로 지역 과두 지배 세

18 Jim McIlroy & Coral Wynter, 'Interview with Eva Golinger : Washington's "Three Fronts of Attack" on Venezuela', Green Left Weekly, 2006. 11.

력과 손잡은 석탄 채굴 다국적 기업들이 원주민 공동체를 심각하게 피해를 입힌 지역이기도 하다. 2006년 12월 3일에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연합의 후보로 나서 36.88퍼센트의 득표율을 기록한 민주 행동당의 마누엘 로살레스는 2000년부터 술리아 주지사를 역임하면서 2002년 쿠데타 당시 볼리바리안 헌법의 무효와 국회 해산을 승인하는 문서에 서명했던 인물이다.

술리아 주 마라카이보 시의 디 마르띠노 시장은 미국과 반차베스 세력에 의해 “대선 기간 중 사회 불안을 부추기기 위해 학생과 군인들로 위장한 반정부 시위대 조직과 대학생 암살 등을 부추길 광범위한 시나리오가 추진 중이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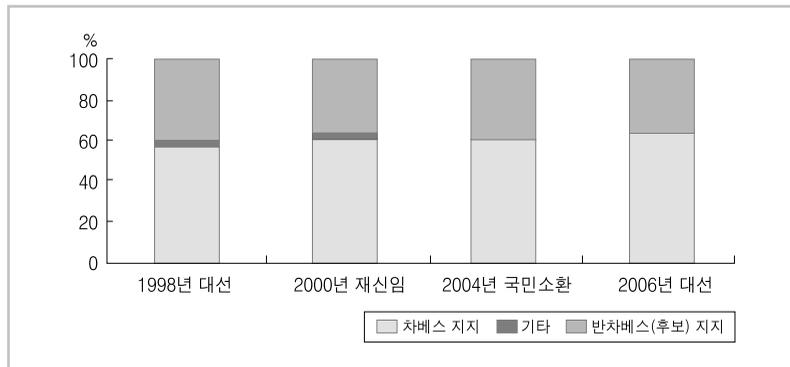
미국의 개입이 베네수엘라 정치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62.87퍼센트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베네수엘라 사상 최대 득표율 기록을 또 다시 갱신한 2006년 12월 대선에서도 술리아 주의 차베스 지지는 전체 주에서 가장 낮은 51.38퍼센트를 기록했고, 이는 1998년 대선 당시 이곳에서 획득한 55.33 퍼센트의 지지율보다 낮은 수치였다. 또한 2004년 차베스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에서도 미국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은 카라카스 인근 ‘빠타레’^{Petare} 지역에서는 국민소환에 찬성하는 표가 반대하는 표보다 많이 나왔다. 이 지역은 가난한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원래는 친차베스 성향의 지역이었다.¹⁹

19 Eva Golinger, ElCodigo Chavez, P. 20~21, Monte Avila, Caracas, 2005, 안태환, 앞의 원고에서 재인용.

여전히 잔존하는 반대파의 영향력

차베스에 대한 빈민층의 절대적 지지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반대파의 영향력이 여전히 잔존한다는 사실은 부담 요인이다. 차베스는 1998년 대통령 당선(56.2퍼센트), 2000년 재선임 선거(59.76퍼센트), 2004년 소환 투표(59.25퍼센트 차베스 지지), 지난 12월 3일 대선(62.87퍼센트)에서 모두 60퍼센트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얻었지만 약 40퍼센트의 반대파가 항상 따라다녔음을 부인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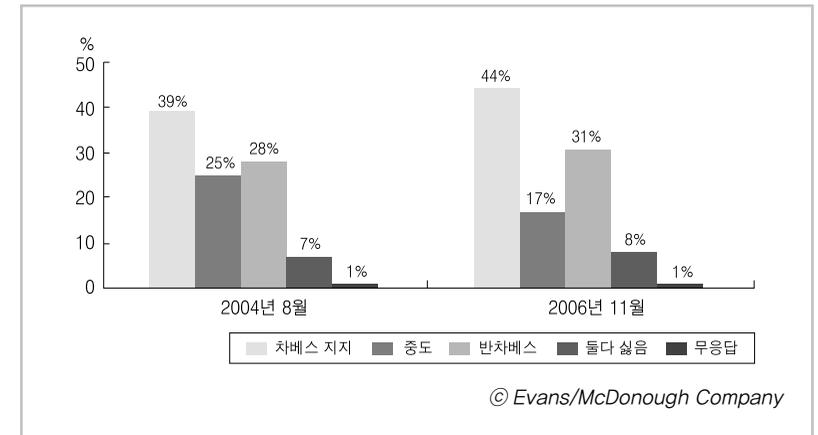
도표 2-3 __ 차베스 지지율 변화(1998년~2006년 선거)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에반스 맥도너프 컴퍼니에 따르면 2004년 8월 소환 투표 당시 39퍼센트였던 차베스 지지자 비율은 2006년 11월 현재 44퍼센트로 확대되었으나, 2004년 8월 28퍼센트였던 적극적인 반대자 역시 2006년 11월에는 31퍼센트로 확대되는 등 중간층이 점차 사라지는 중이다.²⁰

20 Evans/McDonough Company, Inc., Venezuelan Political Climate Registered Voters, November 2006.

도표 2-4 __ 에반스 맥도너프 컴퍼니가 조사한 차베스 지지자 비율 변화(2004년~2006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의 경험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찾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무수한 반혁명 세력의 체제 전복 시도에도 불구하고 차베스는 더욱 급진적인 민주주의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항상 차베스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독재 정권이라고 비난하지만 제멋대로 과격한 내용의 선동 방송을 하는 민간 텔레비전에 대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오히려 차베스는 혁명을 국제화하는 데 주력한다. 남미 차원의 볼리바리안 혁명을 이루겠다는 차베스의 지역통합정책 *Alternativa Bolivarian para las Americas* (ALBA, 중남미 지역을 위한 볼리바리안 대안)은 민중적 차원의 연대가 먼저 형성되면서 구체화 중이다. 최근 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한 중남미 좌파 정권들은 차베스의 이런 구상에 속도를 붙여줄 것이다.



6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시사점

그리고 재선에 성공한 차베스가 2007년 2월에 시작하여 2021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혀온 14년간의 ‘전국적인 시몬 볼리바르 프로젝트’는 그가 주창한 21세기 사회주의의 모습을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물론 볼리바르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 그의 지지 세력들이 헌법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가미하고 대통령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2010년 개헌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차베스를 반대하는 세력들과의 갈등도 더욱 가열될 수밖에 없다.

차베스의 볼리바리안 혁명의 성패 여부는 중남미 지역만이 아니라 세계 대안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차베스의 21세기 새로운 사회주의 공동체가 우리 앞에 어떤 모습을 드러낼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험은 분명 신자유주의적 지배 체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배울 수는 있지만, 베네수엘라 혁명 자체를 그대로 수입할 수는 없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경험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교훈과 시사점을 찾아야 할 뿐이다. 볼리바리안 혁명으로부터 얻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다.

국민을 능동적 주체로 세우는 직접정치의 구현

베네수엘라의 정치 이행 과정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할 대상 가운데 하나는 국민의 직접정치에 대한 내용이다. 차베스는 집권 초기부터 세력간 갈등에 매몰된 정당 조직과 중간 관료의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해 민중을 혁명의 주체로 내세우는 일련의 조치를 단행했다. 대의 체제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다양하게 구현해냈고 신헌법 제정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국민직접정치는 최근 학계에서 논쟁이 된 ‘정당을 강화할 것인가’ ‘운동을 강화할 것인가’라는 논의 지형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국가 운영의 기본 메커니즘에 관한 내용이다. 즉 모든 운동은 정치가 되고, 정치는 곧 국민을 주체로 한 운동이 된다. 이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가 부분적으로 통합된 형태로도 본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동안 정치사회를 독점해왔던 극우적 이념이 2003년 이후 본격적인 시민사회 조직화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미 운동과 정치는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최고 권력이라는 원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상식이지만 이를 제대로 구현하는 나라는 드물다. 9차레나 개정된 우리 헌법도 국민이 직접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제는 제대로 담지 못했다. 단지 대통령이 제한된 의제에 국한하여 제안할 수 있는 국민투표 조항과 헌법 개정 시 국민투표 조항이 슬며시 끼워져 있을 뿐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까지 치부하기도 한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전문가가 필요한 세부적인 기술적 문제를 제외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중대한 사회적 결정을 내릴 능력을 가진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직접민주주의 반대론자들은 이런 전제 자체를 거부한다.

그들은 “엘리트는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프로이므로, 엘리트의 주장에 반대하고 아마추어인 대중의 의사에 따르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선진화의 길로 들어서는 것”²¹이라고까지 주장한다. 베네수엘라의 구체제 인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까봐 민중의 직접정치를 반대했듯이, 우리의 기득권 세력도 교묘한 논리로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가로 막는다.

그러나 엘리트주의적 경향이 기득권 세력에게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함께 급속하게 대중으로부터 괴리되기 시작한 진보 세력들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들의 언어와 인식 체계는 이미 일반 국민들의 그것과 멀어져 있다. 모든 세력을 이렇게 비판할 개재는 아니지만, 일반 국민과 밀접하게 결합된 활동을 펼쳐나가는 진보 운동 단체를 쉽게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서로의 정치적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면서 상대 세력의 활동 자체를 옹아매는 지금의 세력 갈등 구도는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 대중으로부터 직접 검증받으려는 실천적 태도로 전환되어야만 한다. 소모적인 정치 세력간 논쟁에 의지하기보다 국민들을 직접 찾아가 대화하는 방법을 택했던 차베스의 리더십은 진보 진영이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 사업 기풍으로 구현해야 할 과제다.

21 박세일,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21세기북스, 2006, 204~210쪽.

준비된 권력 : 공동의 '집권 후' 프로그램 마련

우리는 차베스의 집권 프로그램으로부터도 배울 점이 많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그 내용에 걸맞은 제도적 틀을 새로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차베스는 '볼리바르적 대안'을 구현하기 위해 헌법 제정 등 제도 혁명을 매우 빠른 시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

차베스가 집권 즉시 정치 개혁을 그토록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집권 '이전'부터 집권 '이후'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이다. 선거를 통해 확보된 지지 기반을 곧바로 개혁의 동력으로 연결시켰던 '속도의 힘'은 집권 이전에 준비되지 않았다면 만들어질 수 없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헌의회는 1989년 카라카소 직후 일시적으로 형성되었던 '애국전선'에서 이미 마련된 전술이었다. 구체제에 대한 안티테제를 매개로 형성된 애국전선이 집권 후의 진테제를 모색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그동안 한국의 진보 세력은 권위적 정치 권력에 대한 저항의 동원에는 능숙했으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면에서는 미숙함을 드러냈다. 문제의 지적과 해결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이는 진보 세력이 대안 생산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저항을 동원했던 방식처럼 대안을 동원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공통의 비판' 속에 '각자의 대안'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집권을 위해, 혹은 집권 이후에 함께 펼쳐 나갈 공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했다.

공동 프로그램은 다양한 정치·사회 세력들이 가진 대안 구상을 하나의 틀로 결집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볼 수 있다. 차베스가 이

것을 볼리바리안 헌법으로 구성하고 베네수엘라 혁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듯이, 우리에게 적절한 대안 의제를 헌법과 같이 종합적인 틀로 구성하는 작업도 의미 있는 일이다.

각각의 대안 의제가 하나의 틀로 종합된다면, 분산된 진보적 동력도 하나의 힘으로 결집시킬 수 있다. 만일 새로운 대안 사회의 비전을 담은 공동 프로그램을 민중이 직접 참여하는 대중운동 방식으로 구성한다면, 차베스 집권 프로그램 이상의 효과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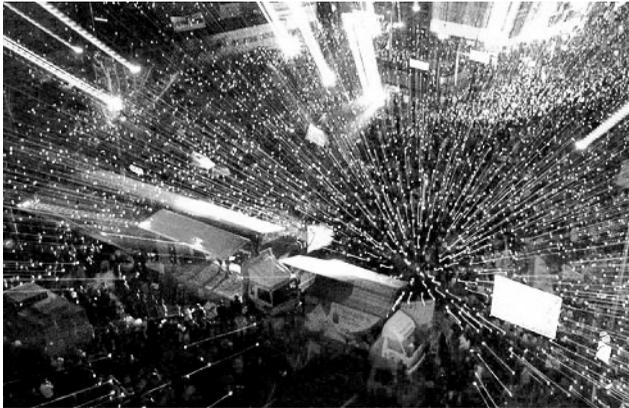
물론 차베스의 제헌의회 전술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광범위한 합의와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대선 후보도 과반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해 왔던 우리의 조건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선거 이전에 새로운 미래상과 그에 맞는 제도 개혁안이 공약으로 제시되고, 결선 투표제의 도입과 같이 국민 다수의 동의를 획득할 제도 마련이 선행된다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진보 세력이 비판 세력으로만 남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갈등을 통한 차별화에 주력하기보다는 새로운 변화를 구현할 새로운 제도적 틀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혁명 의지와 반혁명 세력과의 관계

베네수엘라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시사점은 반혁명 혹은 반개혁 세력과의 관계다.

차베스는 집권 이후 제헌의회 전술을 통한 과거와의 단절과, 49개 개혁 법안을 집행하면서 여러 차례 반혁명 세력의 저항에 맞닥뜨렸다. 민영방송국을 앞세워 차베스에게 대항한 반혁명 세력의 모습은



▲ 2004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모습.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자신을 지지한 세력을 대변하지 않았다. © ohmynews

오늘날 우리 극우 세력의 모습과도 판박이다. 물론 노무현 정권과 차베스 정권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노무현 정권 수준의 개혁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은 진보 세력이 새로운 대안 프로그램을 작동시켰을 때에도 반드시 직면하게 될 걸림돌이다.

일반적으로 기존 사회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국가 권력을 획득하게 되면 구체제에 기생하던 세력과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이때 국가 권력 담당자는 이 세력들과 투쟁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화해를 위한 타협을 시도한다.

똑같이 반대파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힌 차베스와 노무현 정권은 서로 다른 전략을 구사했다. 차베스의 경우 2002년 4월 쿠데타와 12월 석유 파업 이후 더욱 확고해진 권력 기반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했지만, 노무현 정권은 2004년 3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획득했음에도 이를 개혁의 동력으로 전환하지 못했다. 오히려 2004년 12월 국가보안법 폐지 무산을 기점으로 개혁보다는 어중간한 타협에 의존함으로써 통합은커녕 지지 기반만 잃고 말았다.

차베스의 뛰어난 지도력은 그를 지지하는 민중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아는 능력에서 비롯되었다. 그를 반대하는 언론에서 항상 문제로 지적하는 그의 직설적 화법은 대중을 현혹하는 미사 어구가 아니라 바로 민중들의 언어였다. 차베스는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인 연설을 통해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히 대신했으며, 때로는 그 자신도 그들에 의해 제약받기도 했다. 차베스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베네수엘라 민중들은 사실 차베스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호한 셈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자신의 권력을 ‘대변’이 아닌 ‘위임’으로 인식하면서 임의적으로 사용해 왔다.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당선됐음에도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세력들과 투쟁하기보다는 타협에만 몰두했다. 자신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를 지지할 국민은 없다. 결국 노무현 정권은 개혁을 추진하는데 사용해야 할 힘을 자신의 기반을 해체하는 데 사용했다.

물론 두 정권의 성공과 실패 원인을 지도자 개인에게서만 찾을 수는 없다. 선거 때만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위임 민주주의 체계에서는 권력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와 반대되는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 3 장

베네수엘라 방식의 참여민주주의

이런 문제는 일상적인 민중 통제가 가능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풀어야 하지만, 차베스와 노무현 정권이 반혁명 세력을 대하는 전략적 차이에서 얻어진 교훈은 향후 새로운 세력이 추진해 나갈 정치 이행 과정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김병권

- 1 베네수엘라 정치 모델에 대한 접근법
- 2 '국민 주도-국가 지원', 새로운 민주주의의 관점
- 3 '볼리바리안 서클', 베네수엘라의 노사모?
- 4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정치의 핵심 기초 단위
- 5 한국 정치의 혁신을 위하여

VENEZUELA

베네수엘라의 정치 실험 가운데 이런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지점은, 2002년과 2003년에 눈부신 활동과 놀라운 성장으로 단연 돋보였던 '볼리바리안 서클'과 2006년부터 본격화되어 불과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1만 개를 훌쩍 넘어서 전국에 건설 중인 주민자치위원회다.



1 베네수엘라 정치 모델에 대한 접근법

베네수엘라의 지난 8년 혁명 과정은 기존 도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독특한 측면이 매우 많고 창조적이다. 때문에 기존 관념과 이론 틀로 접근하면 현재 베네수엘라의 진면목을 보지 못할 개연성이 아주 높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첫째,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혁명을 추진하는 방식이 포퓰리즘 Populism에 기반 방식인가? 흔히 차베스의 카리스마적 언변과 민중의 열광적 지지 현상에 초점을 맞추면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와 유사한 포퓰리즘이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혁명을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

어떤 명시적인 군대나 경찰력을 동원하지도 않았고, 언론 통제 등 미디어에 대한 탄압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차베스는 집권 이후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항상 60퍼센트 가까운 지지율로 당선되거나
신임을 받았으며 현재 국회 167석 전부가 차베스를 지지하는 정당으로
채워졌고 23명의 주지사 가운데 차베스를 지지하는 주지사가 20
명이나 된다. 확실히 외형적으로 포퓰리즘의 가능성이 보인다.¹

그러나 차베스 베네수엘라 혁명의 실체를 보면 남미를 풍미했던
포퓰리즘과의 근본적인 차별성이 발견된다. 포퓰리즘은 실제 경제
체제를 혁신시키지 않는다. 민중에게 개혁을 추진하도록 권력을 주
지도 않는다. 단지 집권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와 같은
특정 국면에서 유권자들에게 선심 정책을 남발하는 인기 영합적 행
동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 할 뿐이다.

차베스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국민이 직접 참
여한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그것은 새 헌법에도 명문화되었고² 차베
스 자신이 헌법에 만들어 놓은 국민 소환권에 의해 2004년에 소환
투표를 당하기도 했다.³

차베스는 각종 사회 개혁 프로그램 추진을 실제 수행하는 각종 참
여 조직-미션 수행을 위한 각종 주민위원회와 협동조합, 단체들-

1 국내에서도 이런 분석이 있다. 일레로 조돈문 교수는 「중남미에서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실패와 좌파 정권의 등장」이라는 논문에서, “베네수엘라 모델은 안정적 지지 기반 없이 대중주의 지도자에 의한 동원에 기초하며, 대중주의 지도자가 절대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대중적 요구를 급진적 개혁으로 관철시킴으로써 경제적·정치적 불안정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대중주의 좌파 정권들과 매우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경제 위기 이후 10년 한국 사회의 변동과 전망」, 『2006년 비판사회학대회 자료집』, 2006. 11.)

2 볼리비아안 헌법 62조, “모든 시민은 공공적인 일에 직접 참여하든지 또는 선출된 대표를 통해 참여하든지,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 행정의 기획, 집행, 통제에 대한 시민의 참여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그들의 완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3 2004년 8월 15일 차베스 반대파들에 의해 제기된 소환 투표는 대통령 업무 수행 계속 찬성표가 59.25퍼센트로 나와 차베스가 승리했다.

에 대해서도 자기 부문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주고 권력 행사를 요구했다. 민중에게 실질적 권력을 주면서 포퓰리즘을 한 사례는 역사에 없다.⁴

둘째, 차베스는 과거 국가 사회주의 나라들이나 개발 독재와 같은 국가 자본주의 모델을 사용했는가? 선언적으로도 실제로도 아니다.

확실히 차베스는 집권 후에 신자유주의 개혁의 상징처럼 된 이른바 ‘분권화’ 방식의 정치 민주화를 취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전 정권인 페레스 정부나 칼데라 정부가 정치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수행한 분권화가 결국 국가의 시장^{Market} 통제력을 떨어뜨리고 권력이 국민이 아닌 시장으로 넘어갔던 점을 주목했다.

차베스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조직한 집권 여당인 MVR로 권력을 집중하지도 않았고, 언론 매체를 강제적으로 장악하지도 않았다. 법률에 따르지 않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추진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경제의 사적 부문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그런 점에서 그가 독재적 권력을 행사하여 개혁을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는 시장이 아닌 민중에게 실질적으로 권력을 어떻게 줄지 집중적으로 고민했다.

특히 그는 기존 체제로부터 물려받은 관료주의에 주목했다. 차베

4 노무현 정부도 초기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후 권력을 국민이 아닌 시장으로 넘겼고, 국민의 불신이 증폭되는 것과 비례하여 국민을 무시하는 엘리트주의 경향을 강화했다. “대통령은 21세기에 가 있는데 국민들은 아직도 독재 시대의 지도자와 문화에 빠져 있다”고 주장한 당시(2005년 8월 25일)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에서 엘리트주의의 백미를 본다. 그런 점에서 포퓰리즘과 엘리트주의는 한쪽이다.

스는 기존 관료들을 강제적으로 축출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관료 구조에 의존해서는 실질적인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혁명 실행 과정에서 명확히 인지했다. 따라서 그는 기존 관료 구조를 우회하여 실질적으로 민중이 개혁에 참여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특징은 우선 베네수엘라 혁명을 저변에서 정치적으로 이끄는 조직인 볼리바리안 서클에서 나타난다. 차베스는 기존 공식 여당 조직인 MVR의 하부 조직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정치 조직을 확대하지 않았다. 반대로 그는 MVR 외부에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정치 서클들을 무수히 조직하기를 민중에게 설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⁵ 수백만 회원이 가입되어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반혁명을 제압하고 혁명을 추동한 볼리바리안 서클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운영되었다.

전면적인 각종 사회 개혁 미션 역시 기존 관료 조직을 통해 수행하지 않았다. 리처드 고트는 “여전히 반대파 세력이 장악한 복지부 등의 관료 체제를 우회하기 위해 교육 미션은 교육부와 별도로, 의료 미션은 보건부와 별도로 추진되었다”고 주장한다.

현재 각 지역에서 베네수엘라 혁명의 핵심 추진 주체로 건설되는 ‘주민자치위원회’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베네수엘라 혁명 이후 7년 뒤인 2005년에야 비로서 본격적으로 조직되는데 이는 각 지역에서 개혁 추진과 관료 조직의 충돌이 더 이상 피하기

5 리처드 고트에 따르면 볼리바리안 서클의 “주된 목적이 오랫동안 사회에서 소외 받았던 사람들을 묶어 기존 정당들의 공식 구조 바깥에 정치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리처드 고트, 『민중의 호민관 차베스』, 2006.)

어려운 시점에 왔음을 뜻했다.⁶

더욱이 21세기 사회주의를 목표로 사회주의의 재창조를 주장하는 차베스는 기존의 국가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지극히 비판적이다. 그는 과거 소련을 국가사회주의로 보고 이런 유형을 수용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는데, “우리는 소비에트 연방의 동일한 왜곡이기도 했던 국가자본주의에 기댈 수 없다. 우리는 명제, 프로젝트, 그리고 경로로서 사회주의를 재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5년 1월 세계 사회포럼에서의 연설)

셋째, 그렇다면 반대로 차베스가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지역 울타리에서 움직이는 소규모 공동체 운동을 구상하고 실천했는가? 이에 대한 답도 여전히 ‘아니다’다.

최근 우리 사회의 진보 안에는 국가에 대해 지극히 회의적인 관점이 적지 않다. 그 이유는 대략 세 가지다.

우선 지난 시기 붕괴한 동구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과도한 국가의 역할’에 기대어 인민의 자율을 억압했고 그것이 몰락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인식이다.

다음으로 90년대 이래 한국 사회에서 팽창한 각종 NGO 성과를 보면서, 국가적 기구보다는 그 외부에 있는 제3세력(제3섹터)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반대급부로 국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키워왔다고 본다.

6 왜 정부는 주민자치위원회 결성을 하는데 7년을 기다렸을까. 주민위원회에 참여하는 리베이라Engels Riveira는 말했다. “만약에 시장이나 관리들이 일을 똑바로 했다면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Renaud Lambert, “Venezuela’s Promising Future”, 2006. 9.)

또한 9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가 급팽창하여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었는데 진보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아 국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깊어졌다.

이러한 선입견에서는 당연히 ‘국가는 필연적으로 관료화 등으로 빠지게 되며 국민의 자율을 항상적으로 억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암묵적 전제 아래 국가 자체의 개조보다는, 국가와 독립된 자율적인 공동체(시민사회 단체)를 조직하여 견제, 감시를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다.

차베스는 비록 국가주의와 관료주의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경계했지만, ‘자율적인 소공동체들의 연대’로 베네수엘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는 국가주의와 동일한 수준으로 집단 이기주의를 경계했다. 베네수엘라에서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그것이 (유고의 자주관리 기업처럼) 필연적으로 집단 이기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차베스는 인지했다.⁷

때문에 차베스는 개인과 자치 공동체가 전체 공동체(국가)에 대한 책임성을 갖기를 강조한다. 자율적인 소규모 스터디 모임으로부터 시작한 볼리바리안 서클 역시 10명을 기본 단위로 하여 20만 개가 넘는 독립 서클들로 조직되었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차베스가 요청한 공민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볼리바리안 헌법을 정치적 통일성

7 베네수엘라에서 협동조합 건설은 경이적이라고 할 만하다. 98년 법적으로 762개(2만 회원) 정도가 등록된 협동조합이 2001년 1000개, 2002년 2000개, 2003년 8000개로 증가했고 2006년 중반에는 10만 8000개(150만 회원)로 팽창했다.(Betsy Bowman and Bob Stone, "Venezuela's Cooperative Revolution", 2006. 7.)

의 기초로 가지며 헌법의 수호자라는 측면에서 공통성을 지닌 전국 조직이다.⁸

또한 차베스는 아래로부터의 자율적 민중 참여 조직이 단지 기존 관료 조직에 대한 감시자, 비판자 역할에 머무는 것을 목표로 하지도 않았다. 베네수엘라 사회경제적 개혁 초기에 각 지역에 조직된 수많은 의료위원회, 도시 토지위원회, 가스나 전기, 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공동체들은 해당 업무 부분에 대한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소유했고, 이들이 확대된 단위인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풀기 위한 실질적 의사결정권과 집행권을 가졌다.

넷째, 차베스와 베네수엘라는 자본의 사적 활동과 사적 기업,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을 부정했는가? 국가의 전반적 조정 기능과 각 지역 민중 참여 조직 사이에서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차베스는 시장을 부정하는가? 아니면 시장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가?

차베스는 집권 초기 베네수엘라에서 국가 통제 경제도 아니고 신자유주의(시장 지상주의) 경제도 아닌,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국가의 보이는 손이 맞잡는 중간 지대를 모색한다고 말했다.⁹ 즉 베네수

8 차베스는 볼리바리안 서클 회원들이 공민의 의무(civic duty) 수행을 요청했다. 그것은 새 헌법에서 명시된 권리와 의무에 대해 공부하고 (민중에게)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 후 서클 회원들은 볼리바리안 헌법의 수호자가 되었다.(Alvaro Sanchez, "Bolivarian Circles : A Grassroots Movement", 2003. 9.)

9 1999년 2월 취임사에서 차베스는 "우리의 계획은 국가 통제 경제도 아니고 신자유주의 경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국가의 보이는 손이 서로 맞잡는 중간 지대를 모색합니다, 국가도 필요하고 시장도 가능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처드 고트는, 말

엘라는 처음부터 시장 메커니즘을 완전 부인한다거나 사적 기업의 활동을 전면 정지시킨 적이 없다.

이는 새로 제정한 볼리바리안 헌법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차베스는 무한 경쟁의 원리가 아닌 협력을 기반으로 작동되는 ‘사회적 경제’를 베네수엘라 경제의 핵심 성격으로 정의하되, 동시에 사적 재산권을 보장하며 성장과 고용을 위한 사적 부문의 주도적인 역할 역시 인정했다.¹⁰

즉 협력과 연대성이라는 기본 원리 그리고 경제 주권을 강화한다는 전제 아래 성장과 분배, 국가의 역할과 사적 기업의 역할을 모두 인정하려 한 것이다. 이런 틀 아래에서 한편에서는 핵심 기간산업(석유, 광물)의 국영화를 추진해 나가고 공동경영 기업과 협동조합을 늘려나가지만, 다른 한편에서 사적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장려를 지속하고 있고, 국가 수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자본에 대한 일괄적 몰수가 아니라 시가 보상을 해 온 것이다.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국가나 시장이나 하는 이분법으로 베네수엘라를 분석해서는 핵심을 보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¹¹

숨씨는 경탄할 만하지만 경제 정책에서 보수주의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리처드 고트, 『민중의 호민관 차베스』, 2006, 276쪽.)

10 헌법 제299조는 베네수엘라 경제 시스템으로 정의된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사회적 경제 체제는 사회정의, 민주주의, 효율성, 자유 경쟁, 환경보호, 생산성과 연대의 원칙 아래 총체적인 개인 발전과 공동체를 위한 존엄 있고 유일한 실존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사적 주도성과 함께 국가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증진한다.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며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민주적·참여적·개방적 발전 전략 기획을 통해 부의 정당한 분배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경제 주권을 강화하고 법률적·항구적·역동적·지속적 안전성을 보장하며 경제 성장의 형평을 보장한다.”

11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마이클 레보비츠는 사회적 경제와 사적 부문이 공존하는 모순을 부각시키는 듯하다. “그러나 헌법 그 자체는 상호 모순적인 문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헌법

결론적으로,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8년여 동안 이루어진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를 기존의 포퓰리즘 시각은 물론 국가주의나 공동체주의 혹은 시장 메커니즘으로 분석하기에는 여러모로 무리가 생긴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에서 실제로 만들어진 현실에 입각하여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은 사적 욕구, 사적 자본, 중앙은행의 독립성 유지 등을 보장하는 요소들이 있다.”(Coral Wynter and Jim McIlroy, Interview with Michael Lebowitz “Challenges for Venezuela’s Revolution”, 2006, 11.)



2 ‘국민 주도-국가 지원’, 새로운 민주주의의 관점

베네수엘라는 과연 정치 후진국의 후진적 민주주의 실험을 했는가? 아니면 과거 시민 민주주의와 20세기식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21세기 방식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험했는가? 우선 베네수엘라 혁명의 현장에서 그 실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자.

“실질적인 민중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선거를 4년이나 5년마다 한 번씩 치러야 한다는 따위의 얘기가 아니다. 민중들이 중간 매개체 없이, 대의 체계 없이 자신의 발전 계획을 직접 짜고 감독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볼리바리안 서클을 통해서, 주민 조직과 협동조합을 통해서 민중

들은 지방 정부와 관료들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다. 헌법 166조와 192조는 지역 공동체가 지방 정부의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데 참여할 것을 허용한다.

이런 것을 당신은 뭐라고 부르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포폴리즘? 뭐라고 불러도 좋다. 우리는 그 과정이 실현된다면 그 이름에 개의치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볼리바르주의라고 부르며 참여민주주의라고 부른다.”¹²

볼리바리안 서클이라는 자율적 정치 조직의 조정자^{Coordinator}인 로드리고 차베스^{Rodrigo Chavez}가 한 말이다. 다른 지도자의 발언을 들어 보자.

“(지금까지—인용자)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대리인을 임명했다. 국회, 지역위원회 대리인 등. 지금 우리는 공동체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중이다. 그리하여 대의제에서 벗어나 주도적인 참여의 길로 갈 것이고 민중들이 앞장서 나갈 것이다.”¹³

인용에서 언급된 ‘국민이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명제가 단지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제적 구현 방법이라

12 Znet site, The Bolivarian Circles by Rodrigo Chaves and Tom Burke; 2003. 7.

13 베네수엘라 FIDES총재 카난^{Richard Canaan}의 발언이다. (Michael Fox-Venezuelanalysis.com, Venezuela's Secret Grassroots Democracy, 2006. 11.)

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베네수엘라 혁명 과정에서 현실화된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분석의 가치를 가진다.

베네수엘라 혁명의 다양한 요소 가운데에서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춘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베네수엘라의 독특한 ‘국민 직접 참여’가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설계되었고 실제 혁명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 방식의 가능성을 찾아본다.

국가-공동체-개인의 새로운 관계

이를 분석하기 위해 오랜 관심사인 국가(중앙)-공동체-개인의 새로운 관계 정립 가능성을 먼저 짚어보는 게 필요하다. 우선 그것이 국가 권력 기관이든 정치 정당이든 중앙의 역할을 어떻게 재규정할지를 확인해야 한다. 오랜 역사적 기간 동안, 중앙은 관리라는 명목이든 지도라는 명목이든 실제로 그 수사적 표현과 무관하게 ‘지배와 통제’를 기본 속성으로 부각시켜왔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수적 정치 세력은 물론 진보적 국가나 정당 역시 예외일 수 없다. 단적인 예가 붕괴된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정도의 차이를 불문하고 국가 사회주의적 특성이 나타났던 점이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보면 중앙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과거의 지배자 혹은 지도자 개념보다는 차라리 조정자^{Coordinator} 또는 지원자^{Supporter}에 가까움을 느낀다. 과연 ‘국가나 중앙 조직이 지도와 관리라는 이름 아래 지배자와 통제자로 전락하는 것을 피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의 지원자로 기능하는가’가 첫 번째 분석 대상이다.

또한 생활 단위에서 현실적으로 생활하는 국민(주민)이 어떻게 실질적인 권력의 지배자로 나설 수 있는가가 두 번째 분석 대상이다.

오랫동안 국민은 중앙 조직에 대해 단지 선거권만 가지고 주기적으로 자신의 제한된 권한만 행사했을 뿐 대부분의 기간은 수동적 통치 대상, 동원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다. 또한 국민이 자신의 지역과 직장에서 조직한 각종 자치 조직들은 자신과 관련된 정치적, 경제적 사안들에 대해 직접적인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한 채 단지 의견을 제안하고 요구하며 감시하고 비판할 뿐이었다. 노조의 경영 참여 요구도, 지역 주민 단체의 활동도, 협동조합도 다르지 않다. 더 나가 봐야 기존 질서 밖에서 자신들만의 소규모 공동체를 운영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국가와 중앙 조직에 대해 국민이 항상적으로 직접 참여하고 직접 제어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지역에서 스스로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 자체로 의사결정을 하고 자체로 집행할 수는 없는지 다시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베네수엘라 혁명이 시사하는 바를 분석해야 한다.

이는 ‘의연히 국민에게 주도성이 보장되면서도 국가가 조정, 지원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상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분석이다. 이것은 국가(중앙 조직)와 국민, 자치 조직이 과거처럼 수직 계열화된 국가주의 방식도 그렇다고 중앙 조직에서 이탈한 소규모 공동체도 아닌 관계 정립의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핵심은 “첫째,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중앙의 총괄적 계획을 인정한다. 둘째, 그에 따른 조정과 지원에 의해 전 국민적으로 다양한 자치 조직이 창조된다. 셋째, 그 자치 조직은 조직 결성

과 운영에서 의사결정과 집행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가정이 현실성을 갖는지 짚어 보는 작업이다.

복지주의와 엘리트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주의

국가(중앙)의 계획, 조정, 지원과 생활 단위의 자율 결정성이 동시에 작동하는 대안 민주주의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서구식 복지국가 모델이나 서구식 시민사회운동은 “국민 주도, 국가 지원”이라는 시스템과 대립한다. 사민주의가 주종인 서구식 복지국가 모델은 기본에서 국가가 자본의 이익 일부를 양도받아 다수 국민에게 각종 사회보장적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것은 ‘다수 대중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곳에 ‘국민 주도성’은 없다. 국민은 단지 시혜의 대상일 뿐이다. 당연히 국민 스스로 사회에 대한 주도력과 지배력을 높이고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대안 사회 창출로 나갈 힘을 조성할 수 없으며 영원한 수동적 시혜 대상으로 묵일 개연성이 높다.

둘째, “국민 주도, 국가 지원의 정치 시스템”은 기존의 모든 엘리트주의 정치 시스템과 충돌한다. 기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대의제 시스템이나 인민민주주의 시스템까지도 국민을 지도의 대상, 교육의 대상, 잘못 판단하여 오도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상으로 취급해 온 게 사실이다.

이런 사고에 근거하여 국민의 직접적 참여를 배제하거나 지연시켜온 것이 현대 정치사이며 이는 한결같이 국민에 대한 불신과 엘리트 전문가 집단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발생시켰다.¹⁴

셋째, “국민 주도성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국가의 뒷받침을 구상하는 대안”이 제대로 적용되어야 국가와 시장 사이를 오가며 갈등하는 현실을 깰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은 국가를 강조하고 시장을 축소하다 보면 권력이 국가로 가고, 반대로 단순히 국가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시장 규제를 풀면 권력이 국민이 아닌 시장(결국은 시장의 지배자인 소수 거대 자본)에게 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떤 경우에도 권력은 국민에게 넘어 오지 않았다는 게 진실이다.¹⁵

국민의 주도성이 현실적, 제도적으로 확고히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고 국가가 이를 조정, 지원하고 필요한 수준에서 시장 메커니즘 역시 매개하는 시스템이 될 때에만 국가와 시장 사이의 딜레마를 극복하게 된다.

또한 국민 주도형 정치 모델은 기존에 진보의 조직 원리로 상징되었던 “민주 집중제”의 새로운 진화 발전을 암시한다. 민주 집중제가 의사결정의 완전한 민주화와 실행의 통일성을 추구했지만, 실제 적

14 국민직접정치를 주장하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이런 점에서 엘리트주의를 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결국 엘리트주의적 정치 체제를 근절하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정권이 국민들에게 있는 직접정치 체제에서 국민들의 정치 참여 동력이 훨씬 더 풍부해 질 것입니다.”(손석춘 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2006. 7.)

15 이런 점에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국가를 강조하는 국가 주도형 모델이나 시장을 강조하는 자본 주도형 모델이 진정한 대안 모델이 될 수 없으며, 이미 한국 사회는 국가 주도형 모델 → 자본 주도형 모델에서 ‘노동 주도형’ 모델로 이동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주장한다.(손석춘 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2006. 7.)

용 과정에서는 민주주의 없는 집중, 엘리트주의적인 발상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¹⁶

‘실행을 통한 학습’ 방식으로 찾아나가는 대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어 둘 대목이 있다.

그것은 차베스가 처음부터 어떤 시스템을 미리 가정해두고 그 구상대로 실현해 나갔다가보다는, 새로 건설하려는 국가의 큰 틀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 실행하는 가운데 민중이 스스로 새 사회의 구체적 실체를 창조하게 했다는 점이다.

이 점이 베네수엘라 혁명의 매우 중대한 특징이다. 즉 차베스는 엘리트 정당이라는 정치 조직을 통해 처음부터 정교한 사회 변혁 노선을 정립하고 이에 근거해 혁명을 지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현실 상황에 대응해 가면서 제기-실험-성장-발전하는 과정을 밟아왔다.¹⁷ 실행을 통한 학습 방식이다.

초기 차베스가 가졌던 생각은 기성 사회주의 이념 체계라기보다는 차라리 남미 독립의 상징인 ‘볼리바리안 정신’, 그리고 기존 정치 구도의 타파, 나아가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국가 건설을 핵심

16 아울러 기존 사회주의 정치 방식으로 대표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인민민주 독재에 대한 진화적 발전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이들 방식이 ‘반혁명 세력에 대한 물리적 제압의 특성’을 강하게 내포한다면, 지금에서는 국민 주도성-국민직접지배 구조 안에서 상당 부분 그 목적을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7 2004년 8월 소환 투표 직전에 타리크 알리와의 인터뷰에서 차베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아주 혁명적이고 정말 순수한 것만을 높이 들고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믿는다. ... 단 1밀리라도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면 유투피아를 꿈꾸지 말고 나아가라.” (Stuart Munckton, “The Venezuelan Revolution and The Need for Solidarity”, 2005.)

으로 했고 이 정도의 개념이 새로 제정된 헌법에 반영된다.¹⁸

그리고 이 원칙에 기초하여 집권 이후 다양한 기존 진보 세력을 규합하고 그들이 과거부터 품어온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한편, 민중과 함께 구체적인 개혁을 실천하면서 대안을 만들거나 찾아나갔다. 차베스가 전국적으로 추진한 개혁 프로그램인 ‘미션’에 대해서도 차베스는 “모든 미션들은 민중과 직접 만나서 도출되고 고안된 것”이라고 말한다.

역점을 두고 새로운 기업 모델로 추진한 공동경영 기업도 차베스는 ‘실행을 통한 학습’ 방식으로 추진했음을 밝혔었다. 공동경영의 전형으로 추진한 인베팔^{Invepal} 기업에 대해서 그는 “이러한 구조(공동경영)는 실험이다. 우리는 필요하다면 그것을 조정하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델을 고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차베스가 98년 처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 7년 만인 2005년 예야 비로서 내걸기 시작한 ‘21세기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차베스는 사회주의가 “미리 규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변화시켜야 하며, 매일 창조되어야 하는 새로운” 것이

18 라파엘 바델 마드리드Rafael Badell Madrid에 따르면 99년 제헌의회는 이데올로기적 도그마를 버리기로 했다고 한다. “99년 제헌의회는 경제에서의 국가와 시장 역할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도그마를 버리기로 했다. 그리고 모든 경제 체제의 사회적 내용에 대해서도 극단적이고 배제적인 비전을 피했다. 그래서 개인적 행동을 존중하는 경제 형성의 기초를 만들었다. 이런 뜻에서 ‘헌법 제정 동기 제안서’가 제기하고 있듯이 지향하는 바는 국가와 시장의 균형이다. 문제의 핵심은 국가 개입 정도가 아니라 그 행동의 질이다. 시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집단의 필요성을 만족시키는 수단이다. 따라서 목표와 주요한 원칙 사이에, 생산성과 연대 사이에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정의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개인의 자유와 주도성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집단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Rafael Badell Madrid, “El sistema economico venezolano hacia la constitucion del socialismo del siglo XXI”.

라고 보았다.¹⁹

한국 사회의 대안 논의 역시 우리 사회 현실의 절박한 문제로부터 도출하려 하지 않고 기존 학계의 이론 구조 안에 현실을 맞추려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는 사실을 감안 한다면, 차베스의 이념적 지향성이 모호하다고 지적할 일만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안을 어떤 방식으로 창조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취지에서 베네수엘라의 정치 실험에 기존 접근법을 무리하게 적용하기보다는, 구체적 현실 특징을 집약하여 ‘국민 주도—국가 지원’ 민주주의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사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런 접근 방식이 비록 세련된 이론 구조나 정치한 정합적 틀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현실을 더 충실히 반영하리라 본다.

베네수엘라의 정치 실험 가운데 이런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지점은, 2002년과 2003년에 눈부신 활동과 놀라운 성장으로 단연 돋보였던 ‘볼리바리안 서클’과 2006년부터 본격화되어 불과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1만 개를 훌쩍 넘어서 전국에 건설 중인 주민자치위원회다.

19 Gregory Wilpert, “The Meaning of 21st Century Socialism for Venezuela”, 2006. 7. 차베스가 생각하는 21세기 사회주의가 기존의 것들과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는 모호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소련이나 동유럽에 존재했던 그리고 현재 쿠바에 존재하는 국가사회주의는 아님을 암시했고, 오히려 좀더 다원적이고 덜 국가중심적인 사회주의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3 ‘볼리바리안 서클’, 베네수엘라의 노사모?

베네수엘라의 반혁명이 정점을 치닫던 2002년과 2003년, 반혁명 공세에 맞서 수십만의 대중을 대통령궁으로 집결시키고, 석유회사 파업과 자본 철시에 맞서 석유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복구하고 긴급 생필품 네트워크를 빠르게 만들어 나감으로써 반혁명을 제압해 나갔던 그 시기, 그 중심에는 항상 볼리바리안 서클이 존재했다.

반혁명 공세가 사그라질 무렵 차베스 정부가 의욕적으로 시작한 각종 사회 개혁 프로그램인 미션 추진 과정에도 볼리바리안 서클의 헌신적인 활동이 숨어 있다. 2004년 대통령 소환 투표에서 차베스의 승리를 가져다 준 배경에도 ‘선거전투단위’^{UBEs}와 함께 서클이 존재한다.

강력한 전위 정당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자발적인 서클에 가까웠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2600만 인구 가운데 220만 명이 회원으로 활동할 만큼 대규모적이며 전국적인 조직, 많은 경우 차베스 지지자로 구성되었지만 차베스 개인보다는 볼리바리안 헌법을 수호한다는 목표가 강력했던 볼리바리안 서클, 그것은 틀림없이 혁명 운동 사상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조직이다.

이처럼 볼리바리안 서클(영문으로는 Bolivarian Circles, 스페인 어로는 Circulos Bolivarianos, 약자로는 CB's)은 다른 사례에서는 비슷한 유형을 찾기 어려운, 베네수엘라 혁명 과정에서 발생하고 성장한 매우 특별한 정치 조직이다.²⁰

볼리바리안 서클은 베네수엘라 혁명이 국가주의 방식이 아니라

20 볼리바리안 서클의 발생, 건설, 발전, 확대 과정을 완전하게 기술한 참고 문헌을 현재 찾기는 어려웠다. 때문에 서클의 과거와 현재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서는 혁명과 반혁명의 갈등이 가장 치열했던 2003년을 전후한 시기가 집중적 검토 대상이다. 미국 주재 볼리바리안 서클 회원이 작성한 다음 글이 과정을 잘 요약해 준다.(Dawn Gable, "Civil Society, Social Movements, and Participation in Venezuela's Fifth Republic", 2004, 2.) 또한 볼리바리안 서클의 조정자인 로드리고 차베스(Rodrigo Chavez)와 시카고 주재 콜롬비아 연대위원회 탐 버크(Tom Burke)의 인터뷰 내용도 상세한 설명이 기술되었다.(Znet/Venezuela, "The Bolivarian Circles by Rodrigo Chaves and Tom Burke", 2003, 7.) 볼리바리안 서클 사이트는 <http://www.circulosbolivarianos.org>다.

자율적 민중 참여 방식으로 전개되었음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징표다. 또한 베네수엘라 혁명이 차베스 개인의 지도력과 자질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게 아니라 거대한 조직적 운동의 뒷받침으로 전개된 혁명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다.

볼리바리안 서클은 어떤 조직인가?

볼리바리안 혁명 과정 8년 동안 가히 조직화의 홍수라고 부를 만큼 베네수엘라에서는 새로운 조직들이 무수히 건설된다. 무엇보다 차베스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정당과 과벌들이 새로 건설되고 명멸해 간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대중 참여와 사회발전부'가 새로 건설되는 등 혁명의 새로운 요구에 맞추어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형태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부 기구와 조직들도 신규로 속속 만들어진다.

물론 과거 변혁 운동에서 보아왔던 낯익은 대중 조직들도 건설된다. 기득권층에 붙어서 반혁명 대열에 가담했던 노동조합 연맹체인 CTV를 대신하여 민주적인 노동자연합 UNT가 2003년 창설되고, 청년 운동을 지도할 전국 청년 조직인 FFM^{Frente Francisco de Miranda} 역시 그해 6월에 조직된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특기할 만한 사항은 각 풀뿌리 단위에서 기초적인 주민 조직, 민중 조직들이 새롭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차베스의 요청에 따라 2002년 1월부터 조직되기 시작한 도시토지위원회(Comites de Tierras Urbanas(CTUs))는 2006년 2월 현재 전국 각지에 5212개가 존재하며 인구 570만을 포괄할 정도로 막대

한 규모로 성장했다. 이외에도 의료위원회, 교육위원회, 수도와 가스 관련 위원회 등 지역의 사회 개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무수한 조직들이 2003년 이후 풀뿌리 수준에서 파상적으로 조직된다.²¹

볼리바리안 서클 역시 풀뿌리 단위, 지역적 단위에서 조직되고 활동하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민중 조직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민중 참여 조직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볼리바리안 서클은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민 참여 조직들, 토지위원회나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협동조합과 달리 ‘정치 조직’이다. 즉, 다른 주민 조직들처럼 별도의 특정 사회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기능적 단위가 아니라, 그들 주민 자치 조직과 협동조합, 노동조합 속에 들어가서 ‘헌법의 정신과 원칙’에 따라 각 기능 조직들이 사회적 개혁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돕는 조직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에 볼리바리안 서클만의 차별성이 존재한다.

이점에 대해 서클 조정자 로드리고 차베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볼리바리안 서클은 베네수엘라의 민주화 과정에서 참여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식이다. 물론 그것만이 유일한 방식은 아니다. 이외에 주민 조직들과 협동조합, 그리고 다른 유형들도 존재한다. 볼리바리안 서클이 이들 주민 조직들과 다른 점은 혁명과 볼리바리안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그들이 표현하는 동의 수준에 있다.”

21 각종 주민 조직 가운데 도시토지위원회CTUs는 최근 조직되기 시작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규모의 조직이다. (Alex Holland-Venezuelanalysis.com, Venezuela's Urban Land Committees and Participatory Democracy, 2006. 2.)

볼리바리안 서클에서는 두 가지 특성이 우선 발견된다. 첫째, 중앙 조직의 지시에 의해 중앙 조직의 말단 단위, 세포로 조직된 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자율적 조직이라는 점, 둘째 자율적 주민 참여 조직이면서도 정치적 통일성을 기초로 하여 움직이는 정치 조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볼리바리안 서클이라는 독자적인 정치 조직은 무엇을 정치적 통일성의 기초로 하는가. 즉 정치 강령이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볼리바리안 서클만의 고유한 정치 강령은 따로 없다. 볼리바리안 서클의 정치 강령은 99년 만들어진 새 헌법, 즉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헌법’이다.

헌법은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정당과 통일전선 조직의 정치 강령 기능을 흡수하는 것처럼 보인다. 베네수엘라 거리 곳곳에는 작은 책자로 된 헌법이 팔린다. 수많은 정치 모임에서 헌법을 읽고 공부한다. 헌법은 총괄적 정치 개혁 프로그램인 동시에 그 수행의 뼈대를 제공한다. 그것은 특수 정치 결사체의 비밀 강령이 아니다. 국민투표에 의해 가결되고 공식적인 국가 운영의 최고 원칙으로 대내외에 공표된 국가의 정체성이다.

임의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직된 정치 조직인 볼리바리안 서클이 국민 누구나 다 공인하고 다 공개된 헌법을 정치적 통일성의 기초로 삼는 점에 베네수엘라 혁명의 큰 특징이 있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해 보면 볼리바리안 서클이 차베스라는 개인과 긴밀히 결부되기는 했지만 단지 ‘차베스 지지자 모임’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볼리바리안 서클 조정자인 로드리고 차베스는

차베스와 볼리바리안 서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핵심적인 문제는 조직화되는 것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공동체가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뛰어난 개인적인 지도자를 가지지 않았으며 그런 지도자를 만들려고 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각 공동체가 그들 자신의 지도자를 가져야 하며 새로운 지도자는 언제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중은 지도자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다. 민중은 그들 자신의 프로젝트를 위해 일하고 그들의 미래를 건설하려 한다.

차베스는 의심할 여지없이 모든 조직들의 지도자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 의지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민적 수준에서 그의 지도력을 수용할 뿐이다.”

이것은 차베스 개인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현재 베네수엘라 혁명을 지지하고 혁명을 지원하려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는 지적에서도 입증된다.²²

단순히 차베스 개인에 대한 지지도를 넘어서 혁명의 정신과 원칙을 집약한 볼리바리안 헌법으로 확고히 통일된 결사체, 그러하기에 지역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통일성을 유지하는 조직이 바로 볼리바리안 서클이다.

22 Federico Fuentes, “Communities Organising Through Communal Council in Venezuela”, 2005. 10.

볼리바리안 서클은 누가 조직했고 왜 만들어졌는가?

서클은 98년 이전에도 단초적인 형태는 존재했지만²³ 직접적으로는 2000년부터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2001년 말부터 본격화되며, 2002년과 2003년에 이르는 반혁명 쿠데타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대규모로 확산된다.²⁴

미국에서 활동하는 서클 회원이 요약하여 기술한 볼리바리안 서클의 건설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²⁵

“볼리바리안 서클은 2000년에 헌법을 공부하는 모임으로 처음 만들어지고 지극히 국지적인 공동체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그 후 이 모임은 의료나 교육과 같은 좀더 큰 문제들을 제기한다. 점차로 이 모임들은 지역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2001년에 차베스 대통령은 이들의 참여 요구에 답하여, 참여 방식으로 볼리바리안 서클 창설을 요청한다.”

그러하여 수많은 자생적인 스터디 모임들이 차베스의 요청에 따

23 로페즈 마야(Lopez Maya)에 따르면, 볼리바리안 서클의 초기적 원형을 MBR-200의 기초 단위에 서 찾는다고 한다. 이 기초 단위 세포가 ‘혁명적 볼리바리안 서클’이라고 지칭되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물론 지금의 볼리바리안 서클과 직접적 관계는 없다.(Dawn Gable, “Civil Society, Social Movements, and Participation in Venezuela’s Fifth Republic”, 2004. 2.)

24 Dawn Gable은 서클 조직화가 처음에는 정부 주도로 시작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25 미국 주재 볼리바리안 서클은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해 6월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존 케리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면서 그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 그 서한의 첨부에 볼리바리안 서클에 대한 개요가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다.(Dawn Gable and Beatriz Pestana-Bolivarian Circles of US, “Open Letter to John Kerry About Venezuela’s Peaceful Revolution”, 2004. 6.)

라 볼리바리안 서클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적이고 전국적 범위로 조직되어 나간 과정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차베스가 공식적으로 볼리바리안 서클을 조직하자고 민중에게 요구한 2001년이라는 시점이다. 2001년 11월은 차베스가 미루어 두었던 49개 개혁 법률을 전격 공표한 시기다. 그리고 법률 통과에 실질적 위협을 느낀 반혁명 세력의 쿠데타 음모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때였다.²⁶

차베스는 사회 개혁이 본격화될 결정적 고비에서 다수 대중을 전국적 규모에서 규합해 널 정치적 지점을 찾으려 했고, 당시에 자생적으로 성장 중이던 헌법 공부 모임을 질적으로 비약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듯싶다.

차베스의 이러한 정치적 판단은 적중하였고, 볼리바리안 서클은 빠르게 조직되어 실제 2002년 4월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차베스 복귀를 요구하는 대중 시위 조직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

나아가 그해 말 무렵인 2002년 12월 자본과업 시기에 볼리바리안 서클 멤버들은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석유 산업 시설을 방어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석유 산업 노동자들을 서클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중대한 진전을 이룬다. 자본과업이 끝날 무렵인 2003년 초에는 서클 회원이 무려 200만을 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며 연이

26 “(반대 세력의 총과업 위협에 맞서—인용자) 차베스는 자기 진영에서 신선한 민중의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볼리바리안 서클’ 운동을 출범시켰다. 차베스 지지자들은 10여 명 단위의 소그룹을 만들어 자기 지역에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캠페인에 착수하라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 주민들에게는 지역에서 자치 조직을 만들고 정부 기관으로부터 소액 용자를 받아 협동조합을 건설하도록 권장했다.”(리처드 고트, 『민중의 호민관 차베스』, 2006, 344쪽.)

어 착수된 다양한 ‘미션’에 참여하는 등 정부의 사회적 프로그램 수행의 심장부 역할을 맡는다.²⁷

볼리바리안 서클은 2003년 중반기 기준으로 220만 회원이 등록되었다. 동등한 권한을 갖는 회원들 7~10인으로 하나의 서클이 구성되며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약 20만 개의 서클이 활동하는 셈이다.

각 서클의 당장의 임무는 자신이 속한 지역의 요구를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서클이 공동체 과제에 참여하는 방식은 각 주민 지역의 인프라 수리, 문화 이벤트, 또는 국가적 규모 프로젝트에의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다.

서클이 발전함에 따라 완전히 개별적인 단위로 머물지 않고 일정한 조직적 계통을 갖게 되는데, 단위 볼리바리안 서클—지역 볼리바리안 조정자—광역 볼리바리안 조정자—전국 지도부라는 체계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 계통은 일반적인 정치 조직의 수직적 계통 체계라기보다는 정치적 내용의 공통성과 전국적인 임무의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한 문자 그대로 조정자 구조로 보인다.

또한 볼리바리안 서클이 반혁명을 제압하고 사회 개혁 미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핵심 역할을 하며 급성장을 거듭하자 이를 체계화하려는 발전적 요구들이 발생한다.

서클이 수십만 개의 규모로 확산됨에 따라 개별적 서클들이 분산적으로 움직이면서 비효율성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런 수준

27 “2003년 이후 서클은 특히 주민 공동체에서 미션 수행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움직이며 정당과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없었다. 그들의 임무는 우선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볼리바리안 혁명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다.”(Stephen Lendman, “Venezuela’s Bolivarian Movement: Its Promise and Perils”, 2006. 1.)

으로는 결코 광범위한 사회적 운동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인지되자 서클은 원래의 서클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간직하면서도 더 나아가 좀더 고도한 수준의 조직적 구조로 발전시킬 필요를 느꼈고 그 결과가 볼리바리안 하우스로 집약되었다.²⁸

그리하여 서클은 2004년부터 ‘볼리바리안 하우스’(영문으로 Bolivarian House, 스페인 어로 Casas Bolivarianos)로 확대 발전된다. 이 새로운 조직은 지역적, 국가적 심지어 국제적인 복잡한 문제들을 풀 목적으로 다른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와 더불어 서클 역량을 통합하면서 모색되었다. 첫 볼리바리안 하우스는 2004년 1월 23일 카라카스 시 구역에서 설립되었다.

서클이 볼리바리안 하우스로 확대 발전되어 가는 2004년 시점은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반대파의 소환운동이 본격화 된 시기다. 베네수엘라 민중은 반대파의 소환 운동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선거전투단위^{Electoral Battle Unit(UBEs)}라는 정치 조직을 새로이 결성한다.

그런데 볼리바리안 하우스는 ‘선거전투단위’와 회원들이 상당부분 겹칠 뿐 아니라 역할도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한 듯싶다. 나중에 볼리바리안 하우스는 집권 여당인 MVR 지역 지부와도 긴장 관계를 발생시키는 등 새로운 정치적 이슈가 제기되는 단계에 이른다.²⁹

볼리바리안 하우스와 선거전투단위, 그리고 MVR 지부 사이의 중

28 서클의 전국 조정자 팀 구성원인 올리시스 카스트로^{Ulisis Castro}의 지적에 따르면, “20만개의 서클 가운데 많은 경우, (상부의-인용자) 지도와 지원 부족 때문에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활동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Dawn Gable, “Civil Society, Social Movements, and Participation in Venezuela’s Fifth Republic”, 2004. 2.)

복과 충돌 소지가 발생한다는 것은, 다시금 사회 변혁 과정에서 이들이 한 단계 더 높은 지향 수준의 조직으로 발전해야 할 내적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의미다. 볼리바리안 하우스 역시 이러한 현실 변화에 부합하여 발전적 진화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³⁰

볼리바리안 서클은 집권 여당(MVR)과 어떤 관계인가?

그렇다면 생각해 볼 또 다른 문제는 볼리바리안 서클이라는 정치 조직과 공식적인 집권 혁명 정당인 MVR은 어떤 관계인가 하는 점이다. 볼리바리안 서클의 건설 과정에서 보았듯 지금까지 서클은 적어도 정당 조직도 아니고 정당의 하부 조직도 아니다.

차베스는 기존 국가 기구의 관료주의에 대해 불신을 가졌던 것처럼 기존의 정당 조직 안에 존재하는 관료주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신했다. 그는 연속되는 사회 변혁 과정에 대중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정당 조직의 하향 확대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와 별도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민중의 정치적 모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율성과 역동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통일성을 부여하는 데 정열을 쏟았다. 바로 볼리바리안 서클이 그 대표적인 예다.

29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불명확하지만, 볼리바리안 하우스와 UBEs의 멤버 가운데 MVR 당원이 아닌 경우, 특정 수준의 정치적 접근이 배제되는 느낌을 갖는 경우도 있었다.(Roberto Jorquera, “Notes on the Bolivarian Revolution”, 2005. 1.)

30 참고로 볼리바리안 서클은 베네수엘라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조직되고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 서유럽 등지에 22개의 볼리바리안 서클이 있다고 한다. 볼리바리안 서클의 문서에 따르면, 국제 서클의 임무는 국제적 협조와 단결을 수행할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공동체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일도 해야 한다.(Dawn Gable, “Civil Society, Social Movements, and Participation in Venezuela’s Fifth Republic”, 2004. 2.)

볼리바리안 서클과 차베스 정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로드리고 차베스는 “주도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나 싸움의 소지 때문에 정치 정당은 민주적 과정에 민중의 참여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차베스 대통령은 특별히 볼리바리안 서클을 구성을 요청했고, 당시 부통령이었던 디오스다도 카벨로(Diosdado Cabello)에게 권한을 주어, 혁명을 지원할 독립된 세포(independent cells)가 되도록 볼리바리안 서클 조직화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³¹

볼리바리안 서클의 이런 성격 때문에 서클은 독립된 실체로서 정부로부터 기금을 지원받거나 하는 따위는 일체 없었다.³²

이렇게 볼 때 적어도 지금까지 차베스가 생각하는 MVR은 국회 운영을 위한 의원단 중심의 정당 조직 이상은 아닌 듯싶다. 그리고 진정 대중 속에서 대중과 함께 정치적 훈련을 할 실체는 정당이 아닌 볼리바리안 서클(또는 특정 국면의 ‘선거전투단위’)처럼, 대중적 친밀도와 자율성, 역동성을 생명으로 건설된 새로운 유형의 정치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듯싶다.

그렇다면 정당과 서클이 분리된 시스템이 계속 유용한가. 이 역시 관료주의를 단번에 넘어설 수 없는 초기 특수 국면에서 사용된 혁명적 방법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31 Znet/Venezuela, The Bolivarian Circles by Rodrigo Chaves and Tom Burke; 2003. 7.

32 반대파들은 볼리바리안 서클이 다른 주민 단체에 비해 특혜를 받았으며 항의했다. 그러나 서클 그 자체로는 기금을 받지 않았다. 국가 조정자는 물론이고 국가 조정팀 스텝 누구도 급여를 받지 않는다. 전국 사무소는 종합적 통제와 조직적 체계, 논리적이고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할 뿐 그 자체로는 (자금과 같은) 그 어떤 별도의 자원도 없다.(Dawn Gable, “Civil Society, Social Movements, and Participation in Venezuela’s Fifth Republic”, 2004. 2.)

차베스는 2006년 9월 9일 연설에서, 베네수엘라 혁명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룹들을 통합하여 “위대한 베네수엘라 혁명 정당”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직은 이 발언이 함축한 의미를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³³ 그것이 기존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볼리바리안 서클과 단지 의회 권력 장악을 위한 선거 조직인 MVR의 새로운 수준의 결합이 될지, 아니면 제3의 방식을 모색하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볼리바리안 서클이 보유한 자율적 활력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그 분산성과 비효율성을 여하히 극복하느냐가 2007년 이후 정치적 동력을 새로운 수준에서 준비하는 열쇠가 된다. 그리고 이것이 집권 2기(2007~2012)의 첫 시기에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혁명의 지도 그룹이 풀어야 할 중요한 정치 조직적 과제의 하나임에는 분명하다.

볼리바리안 서클은 지역 자치 단체와 어떻게 연계되는가?

차베스 집권 기간 동안 베네수엘라 각 지역에서는 참으로 다양하고도 전국적인 민중 참여 조직, 주민 자치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정치 조직이라는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볼리바리안 서클이, 민중 직접 참여 실현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구축된 조직이라는 점은 여타 민중 참여 조직과 다르지

33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차베스가 만든 집권당인 MVR과 차베스를 지지하는 정당인 PODEMOS, PPT와 PCV 등이 융합되는 방식이 제기되었다. 통합 정당이 차베스 지지자 안에서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권력이 집중된다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이 과정이 자발적인 과정이고, 이미 이들 정당 대부분은 효율적 목적 수행을 위해 행동 통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특히 통합 정당 구조는 지도력을 가지고 중간 간부를 만드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한 사람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 대한 운동의 의존성을 감소시키며, 관료주의자와 기회주의자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Jose A. Laguarda Ramirez, After the “Red Tide”: New Challenges for Revolutionary Venezuela, 2006. 12.)



4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정치의 핵심 기초 단위

않다.³⁴

민중이 직접 참여한 자율 조직이라는 공통성을 공유한다면 볼리바리안 서클이 독자적으로 갖는 역할은 정치 조직의 기능이다. 서클의 정치 조직적 기능은 다른 사례의 기능과 같다. 정치 조직은 민중의 교육자, 조직자 그리고 무엇보다 헌신적 복무자이며 개별적 이익을 전체의 이익에 맞게 연결시켜주는 교량자의 역할을 한다.

볼리바리안 서클은 무엇보다도 각 지역과 주민 속에서 헌법을 공부하고 교육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당연히 헌법의 구체적 실행 형태인 국가 정책을 해설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볼리바리안 서클은 해당 지역에서 “주민과 공동체에게 대출 기관에서 신용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고 주민들이 협동조합이나 단체, 비영리 법인 등을 구성하도록 도와주는” 조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나아가 볼리바리안 서클 회원들은 어떠한 공식적인 정부 재정 지원이나 특혜 없이 경제적, 사회적 지원 사업에 출선하여 투입된다. 특히 차베스 정부에서 사회적 개혁 프로그램의 심장이라 할 만한 다양한 미션 수행에 서클 회원들이 참여 중이다. 서클은 공동체와 지역에서 미션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또한 볼리바리안 서클은 노동조합 조합원이나 주민 단체 간부 등을 회원으로 하기 때문에 서클 안에서 각 자치 조직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서로의 소통을 이루는 교량자 구실을 한다.

“세계의 시선이 2006년 12월 3일 베네수엘라 대선에 집중되는 동안, 베네수엘라 폴뿌리 민주주의의 완전히 새롭고도 혁명적인 경험 이 수면 아래에서 진행 중이었다. 그 경험은 이미 1만 2000개 건설을 완료한 주민자치위원회이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자들과 추진자들은 그것이 베네수엘라의 의사결정 방법을 전환시킬 것을 기대했으며, 베네수엘라 정치 시스템의 본질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랐다.”³⁵

이처럼 베네수엘라 분석가들이 대통령 선거에 비길 만큼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베네수엘라 주민자치위원회 실험의 실체는 무엇인

34 서클의 조정자인 로드리고 차베스는 인터뷰에서, 볼리바리안 서클을 만들게 된 취지가 특히 “민중의 실질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35 Michael Fox—Venezuelanalysis.com, Venezuela’s Secret Grassroots Democracy, 2006/11.

가? 2006년 한 해를 통틀어 전국적으로 ‘조용한 열풍’을 불러일으킨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조직인가? 그것은 과거 혁명 역사에 존재했던 코뮌이나 소비에트를 대신할 21세기식의 민중 권력 형태인가? 아니면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급조한 선거운동용 조직으로 사라질 운명인가?³⁶

2002년과 2003년에 가장 주목받던 조직이 볼리바리안 서클이었다면 2006년 한 해 동안 베네수엘라에서 급부상하면서 이목을 끌었던 조직은 바로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자율적 결정 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영문으로 Communal Council, 스페인 어로 Consejos Comunales, 약자로 CCs)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좀더 생생한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4.13주민자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자치위원회를 결성한, 서부 카라카스 남쪽 언덕의 에네로^{Enero} 23구역의 사례를 살펴보자.

2006년 초, 23구역 주민들은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했다. 아파트 45, 46, 47 블록에 사는 주민들은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36 마이클 폭스역시 자신의 글에서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힘을 실어 주어서 베네수엘라 사회 구조를 바꿀 베네수엘라식 참여민주주의를 건설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파들이 말하듯이, 선거의 해 기간 동안에만 유효한 차베스 지지자를 위한 홍보용에 불과한 것인가?” Michael Fox—Venezuelanalysis.com, Venezuela’s Secret Grassroots Democracy, 2006. 11.

이 새로운 자치위원회는 새로운 유형의 풀뿌리 지역 통치기관으로 불리기 시작했으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그들 지역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심지어 공동체와 공공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전에는 지방 정부에 대해 길고도 지루한 싸움을 통해서만 얻었던 기금(재원)을 정부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의료위원회 회원들이 자치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먼저 나섰다. 그들은 (자치위원회)의 의미에 대해 워크숍을 개최한 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만들고 지역의 필요 요건을 도출하기 위해 2006년 3월에 추진 준비팀을 뽑았다. 이어서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선출을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선출한다.

어린이 날인 6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 지역의 520개 아파트에서 온 수백 명의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들을 선출하기 위해 나왔다. “그것은 굉장했다, 줄의 끝이 안보였다.” 헥토 하라크라는 지역 주민이 말했다.

지역 주민들은 자치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5명의 재정 상임위원을, 자치위원회가 처리하는 업무를 감사하기 위한 5명의 사회적 통제 상임위원을, 그리고 지역의 9개의 위원회(의료, 교육 등 기능별 위원회들—인용자) 각각을 대표하는 상임위원을 한명씩 선출했다. 그 달 말까지 취임 선서를 한 19명의 상임위원들과 함께 ‘4.13주민자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에네로 23구역에서 최초다(‘4.13주민자치위원회’는 2002년 반혁명 쿠데타 직후 차베스가 복귀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붙인 명칭이다).³⁷

위에서 인용한 4.13주민자치위원회와 유사한 조직들이 2006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베네수엘라에서 건설되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건설의 역사 과정을 추적해 보자.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혁명의 지도 그룹은 혁명 초창기부터 지역 단위의 자치 조직에 대한 개념을 가진 듯 보인다. 베네수엘라 역시 세계적으로 알려진 주민자치위원회가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 예산 제도나 인도 캘커타의 풀뿌리 참여민주주의의 경험을 모델링했다. 그리고 이런 개념을 일찍이 99년 볼리비아안 헌법에도 반영하였고, 민중이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해 왔다.

그 구체적 첫 시도는, 지역 정부 예산 검토 승인 작업을 지역 정부와 함께할 지역 대표를 선출하여 조직한 2001년의 ‘지역공공계획위원회’ Local Public Planning Council(CLPP)였다. 그런데 불행히도 CLPP의 실험은 실패로 끝난다. 그 주된 이유는 수십만 주민 가운데 대표를 뽑는 등 단위가 너무 컸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기성 정당들이나 관료들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대표로 내보내서 CLPP를 장악하는가 하면, 수십만 명의 단위로 대표가 선출되는 구조에서 진정 주민의 의사와 의지를 대표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지자체 도입 이후 실질적인 주민 대표가 선출되기보다 지역 유지가 지자체를 독식한 사실과 다르지 않다.³⁸

37 Michael Fox—Venezuelanalysis.com, Venezuela’s Secret Grassroots Democracy, 2006. 11.

CLPP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된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설 역시 ‘실행을 통한 학습’의 방식으로, 시행착오(2002~2004) → 실험(2005 말) → 확장(~2006. 4) → 법적 재정적 보증(2006. 4. 10) → 전면 확산(2006. 4. 10~) 경로를 밟은 전형 가운데 하나다.

베네수엘라 혁명 초기에 주민 공동체 단위에서 먼저 조직되기 시작한 위원회는 의료 미션 추진을 위해 조직된 의료위원회였다. 이어서 소외 계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지원 아래 지역별 주민 단체와 도시토지위원회, 가스과 전기 문제 논의 그룹, 수도 관련 논의 그룹 등이 속속 조직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런 조직들은 지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 난관에 봉착한다. 첫째는 기존 체제(4공화국)에서 이어져온 관료적 조직들과 함께 일을 추진하는 데서 나오는 어려움이었다. 기존 관료 조직들은 해당 주민 단체 업무 추진을 통제하고 방해했다. 둘째는 한 지역 공동체 안에 다양한 임무를 가진 주민 단체들이 수없이 생겨나고 각자 자신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난관이었다. 종종 자금과 인력에 대한 상호 경쟁이 발생했다. 셋째, 공동체 내부

38 “그들(CLPP 대표들—인용자)은 선거를 관리하는 시장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전 계획부 장관인 페레즈 마르티는 최근 말했다. 페레즈에 따르면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존재하는 CLPP들은 주민자치위원회 건설로 더욱 ‘쇠약해’졌는데, 그 이유는 주민들이 새로운 유형의 자치위원회 건설을 시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고, 거기서 주민들은 스스로 느끼기에 제대로 발언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이었다. 최근 주민자치위원회법은 CLPP를 능가하는 권한을 주민에게 주었다.(Michael Fox—Venezuelanalysis.com, Venezuela’s Secret Grassroots Democracy, 2006. 11.)

“2002년, 헌법과 CLPP법에 따라 지방 정부 차원에서 시의회 성격을 가진 지방공공계획위원회가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말았는데,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기존 정당에서 선호하는 대표를 뽑아 위원회를 정당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사례가 발생했고 규모도 너무 커서 민중을 제대로 대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Federico Fuentes, “Power to the People: Communal Councils in Venezuela”, 2006. 4.)

를 여전히 지배하는 과거의 관행과 문화 습관이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했다.³⁹

각 지역에서의 개별적 미션 추진 조직들과 기존 관료 조직의 충돌, 개별적 미션 조직들 사이의 긴장 관계 그리고 주민들 내부에 존재하는 기존 관행, 이런 것들이 통합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조직되기 이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차베스는 낡은 관료 조직을 깨고 지역에서 새롭고도 통합적인 개혁 추진 주체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⁴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70년대부터 혁명 운동에 참여해온—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MVR에 참여하는—일군의 그룹들과 볼리바리안 서클 회원들은 스투레 지역의 지역 정부Community Government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해법을 찾는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수크레 시청에 근무하는 프레디 길Freddy Gil이다.

그 아이디어란, 민중이 그들의 권력을 실험하기 쉽도록 ‘지역 공간을 좁힘으로써’ 주민들과 다양한 단체들 전원을 공동체에 함께 참여시키고, 자신들의 지역에 대한 단일한 과제를 가지고 일을 착수하는 것이었다.⁴¹ 일차적인 과제는 공공 의료와 교육 문제를 푸는 것으

39 초기 주민자치위원회 성립의 배경을 요약한 글은 Federico Fuentes, “Communities Organising Through Communal Council in Venezuela”, 2005. 10.

40 2004년 차베스는, “민중은 과거의 완고하고 관료적이며 비효율적인 국가를 폐기하기 위해, 새롭고 참여적이며 사회적인 국가를 건설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램버트는 사회적인 긴급 상황을 처리하는 데에서 과거 국가 기구를 거치지 않고 공동체에 의해 직접 관리되는 ‘미션’ 수행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나아가 2006년 4월 주민자치위원회의 창설은 새로운 국가와 지역 정부의 기초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주장했다.(Renaud Lambert, “Venezuela’s Promising Future”, 2006. 9.)

41 특히 주민 정부가 참여하도록 규모를 줄인 일은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이자 전진이다. 마르타 하네커는 “그렇게 작은 규모가 일반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로 설정되었다.⁴²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 아이디어가, 지금까지 CLPP가 발생시킨 문제를 피하기 위해 광역 단위가 아닌 풀뿌리 단위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이었다.

대중참여와 사회발전부MINPADES가⁴³ 제작한 주민자치위원회 팸플릿에 따르면 그 아이디어는 “집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원리와 같다. 이것은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기초가 튼튼할 때에만 불패의 힘을 가지며 그 기초는 주민자치위원회다”라고 정의한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건설하는 방법은 우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200~400개 가구를 소집해 회합을 한다. 회합에서는 지리적 여건이나 문화적, 전통적 특성에 입각하여 공동체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 범위 안의 주택과 가구 수를 산정한다. 이것이 결정 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결성하는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는 이념이나 정견과 관계없이 모두 초청된다.

회합이 소집되어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이를 추진할 추진팀이 구성된다.

추진팀은 우선 해당 지역에 정확히 누가 살고, 각각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인구 조사를 하는 작업부터 착수한다. 3~6개

그들의 의사를 충분히 표시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한다”고 주장했다.(Coral Wynter & Jim McIlroy-Green Left Weekly, Marta Harnecker: Venezuela’s Experiment in Popular Power, 2006. 12.)

42 일부에서 지역 정부Community Government라는 명칭을 꺼려해서 국가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communal council라고 부른다.(Federico Fuentes, “Communities Organising Through Communal Council in Venezuela”, 2005. 10.)

43 대중 참여와 사회발전부Ministry of Popular Participation and Social Development(MINPADES)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관할하는 중앙 부처다.

월 안에 이루어지는 인구 조사 작업은 해당 지역을 가가호호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기간은 지역 구성원 전원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알고 (자치위원회) 선거를 인지하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다. 그 후 선거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선출하며 상임위원 각각은 교육, 문화, 과학기술, 시민과 공동체 안전 등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⁴⁴

위의 과정을 거쳐 주민자치위원회는 2005년 말 실험적인 시도를 마치면서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6년 4월 10일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합법적이고 공식 기구로 인정을 받고 있다. 앞에서 사례를 든 ‘4.13주민자치위원회’도 그러한 사례의 하나다.

2006년 11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수도 카라카스에서 약 190여 개, 전국적으로는 1만 2000여 개를 넘어서 계속 추진 중이다. 비슷한 규모의 도시토지위원회가 4년 동안 약 5000개를 결성한 것에 비하면 1년이 채 못 되는 기간에 경이로운 조직화 속도를 보였다.⁴⁵

44 프레디 길은 이런 가가호호 방문이 해당 지역 주민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해 줄 뿐 아니라, 어떤 개별적 정당이나 단체도, 해당 지역이 제대로 모르게 (자의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 수는 없도록 해준다는 점을 지적했다. (Federico Fuentes, “Communities Organising Through Communal Council in Venezuela”, 2005. 10.)

마르타 하네커 역시 이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주민자치위원회 추진팀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가가호호 방문을 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경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의 하나다. 그것은 해당 지역의 모든 가정을 방문할 것을 요구한다. 가가호호 방문을 할 능력을 지닌 부지런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Coral Wynter & Jim McIlroy-Green Left Weekly, Marta Hamecker: Venezuela’s Experiment in Popular Power, 2006. 12.)

45 주민자치위원회의 숫자에 대해 분석자들마다 비교적 편차가 크게 추정한다. 적게는 1만 개에서 많게는 5만 개까지 차이가 난다. 이런 차이를 설명해 주는 자료가 있다. 한마디로 공식적인 등록 기관의 통계와 기존 관료 조직의 통계가 다르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몇몇 조직들 사이에서 갈등과 경쟁이라는 문제가 있어 왔다. 2006년 9월에 FUNDACOMUN(공식 등록 조직-인용자)은 카라카스에서 단지 54개의

모든 개별 주민 단체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우산 아래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결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불리바리안 서클 같은 정치 조직이나 도시토지위원회 같은 기능적 사회 개혁 추진 조직과 다른 결정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우선 주민자치위원회는 법률과 국가 재정에 의해 보장되는 법적이고 공식적인 조직이라는 점이다. 이전까지는 다소 임의적인 성격을 띠고 만들어져 왔던⁴⁶ 주민자치위원회는 2006년 4월 10일 주민자치위원회법이 통과되면서⁴⁷ 공식적이고 법적인 지위를 획득한 조직이 된다.⁴⁸

주민자치위원회법 2조에 따르면 “참여적이고 주도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적 틀로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양한 공동체 조직들과

주민자치위원회를 등록시켰는데, 동일한 지역에서 가라카스 시청에서는 약 400개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계산하고 있었다. 시청은 별도의 주민자치위원회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 FUNDACOMUN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FUNDACOMUN이 전국적으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공식 등록 단위로 설정되었는데도 말이다. 11월 중순 FUNDACOMUN의 대표성에 따라 조직들 사이에서 상황이 다소 진정되었고, 해당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숫자는 54개에서 192개로 증가했다. (Michael Fox—Venezuelanalysis.com, Venezuela’s Secret Grassroots Democracy, 2006. 11.)

마르타 하네커 역시 10월 말 인터뷰에서 2006년 6개월 동안 약 1만 6000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수치다. (Coral Wynter & Jim McIlroy-Green Left Weekly, Marta Hamecker: Venezuela’s Experiment in Popular Power, 2006. 12)

참고로 램버트는 “2006년 9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카라카스에서 500개가 넘고 전국적으로는 5만 개를 예상한다”고 기술했는데 위의 착오에 따라 시청의 통계를 인용한 듯싶다. (Renaud Lambert, “Venezuela’s Promising Future”, 2006. 9.)

46 물론 그 이전에도 주민자치위원회의 모태가 된 공공계획위원회(Local Councils of Public Planification (CLPP) 관련 법에 따라 사실상의 합법적 근거는 있었다고 한다. (Renaud Lambert, “Venezuela’s Promising Future”, 2006. 9.)

47 2005년 말부터 정부 기관이 주민자치위원회 건설을 독려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인 주민자치위원회법은 2006년 4월 10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48 2006년 4월 9일 차베스는 「안녕하세요, 대통령」 프로그램에 나와 불리바리안 혁명은 주민자치위원회법 실행으로 새로운 단계에 돌입했다고 강조한다. (Federico Fuentes, “Power to the People: Communal Councils in Venezuela”, 2006. 4.)

사회적 그룹, 시민들 사이에서,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공동체의 필요와 열망에 부응하도록 맞추어진 공공 정책과 프로젝트를, 조직된 민중으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관리할 경험을 허용하는,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존재다.”⁴⁹

법률적 정의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자체적으로 할 권한을 지닌 헌법적 장치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물론이다.⁵⁰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인 정의에 따라 도시에서는 200~400가구, 농촌에서는 약 20가구, 그리고 원주민은 10가구 단위로 조직된다.

주민자치위원회법에 따르면 최고 의사결정은 주민총회^{citizen's assembly}다. 주민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집행 책임을 진다. 해당 지역 주민 가운데 15세 이상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누구나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선거권을 행사한다.⁵¹ 또한 유효한 의사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20퍼센트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출하고 소환할 권력을 가진다. 또한 해당 지역에 필요한 프로젝트와 개발계획을 제안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주민총회를 통해서 선출되는 상임위원은 5명의 재정 담당 상임위원^{financial spokespersons}과 5명의 사회적 통제(감사) 담당 상임위원^{social controllers} 그리고 각 개별 위원회들마다 1명의 상

49 Michael Fox—Venezuelanalysis.com, Venezuela's Secret Grassroots Democracy, 2006, 11.

50 주민자치위원회 법에 따라 정부는 초기 10억 달러의 기금을 편당했다.(Federico Fuentes, “Power to the People: Communal Councils in Venezuela”, 2006, 4.)

51 Renaud Lambert, “Venezuela's Promising Future”, 2006, 9.

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총회는 다양한 유형의 사업 추진위원회 설립을 요구할 수도 있다.⁵²

주민자치위원회가 임의 조직이 아니라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공식적인 국가 재정이 배분되는 조직일 뿐 아니라 좀더 중요한 것은 주민공동체 단위의 자치 대표체이자 통합체라는 사실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건설되면서 그 전까지 지역에 존재해 왔던 특정 임무들 뿐 개별적인 위원회들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하나의 우산 아래 통합된다.

즉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각각 자신의 고유한 업무를 담당했던 토지위원회, 의료위원회, 불리바리안 서클, 선거전투단위 같은 기존 조직들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최대의 계획 단위이자 조직 단위”로서 성격과 역할을 부여받는 것이다.⁵³ 풀뿌리 단위에서 통합적 민중 권력이 세워지게 된 것이고 모든 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한 기능 분야로서 재설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풀뿌리 단위에서 사실상 주민의 생활 일체와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단위가 되었다. 법적 근거와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에 따라 집행 토대를 확보하며 그 이전에 각각 추진된 각종 미션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까지 갖게 되었다.⁵⁴

52 이런 권한 부여는 해당 지역에서 사적 기업이나 정부 관료보다는 공동체 내부의 능력과 자원에 의거하여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을 높이고 협조를 고취시키기 위함이라고 한다.(Federico Fuentes, “Power to the People: Communal Councils in Venezuela”, 2006, 4.)

53 Federico Fuentes, “Power to the People: Communal Councils in Venezuela”, 2006, 4.

54 주민자치위원회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관할하는 업무는 해당 지역의 가장 중요한 문제와 특성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주민 경제, 주택과 인프라 시설, 기타 공동체가 정하는

구체적으로 보면, 주민총회가 최고 의사결정체가 되어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 대한 사회적 구상(주택, 주민, 수입, 인프라,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 기초 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총회에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관련 정부 기관에 보내고, 주민은행과 협동은행을 통해 지원 받은 기금을 관리한다. 각 프로젝트는 1만 5300달러까지 받는다.⁵⁵

그렇다면 이러한 자율 의사결정체, 주민 권력인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중앙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 조정하는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은 포괄적이고 전면적이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법 30조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국가적 수준, 광역 수준, 지역적 수준에서 총괄할 ‘대중권력 국가지도위원회’^{The National Presidential Commission of Popular Power}가 설립된다. 대중 참여와 신뢰발전부^{MINPADES} 장관인 가르시아 카르네이로가 위원회를 총괄하고 다시 이 산하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FUNDACOMUN}, 분권화기금^{FIDES}, 특별경제분담법^{LAEE}, 소액금융개발기금^{FONDEMI}, 대중경제부^{MINEP}, 에너지석유부 등의 중앙 조직들이 합류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공식적인 등록접수 기관인 지역개발기금^{The Foundation for Municipal and Community Development(FUNDACOMUN)}은 주민자치위원회 건설을 위한 훈련과 기술적 지원을 하며 이후 지속적인

업무가 된다. 필요에 따라 (주민위원회 산하에) 다양한 위원회가 조직되기도 한다.

55 더 비용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는 공공계획위원회나 시청 등 상급 기관에 인계된다.(Renaud Lambert, "Venezuela's Promising Future", 2006. 9.)

교육과 지원을 해 주는 정부 공식 조직이다.

분권화기금^{The Intergovernmental Fund for Decentralization(FIDES)}과 특별경제분담법^{The Law of Special Economy Allotments(LAEE)}, 소액금융개발기금^{The Fund for Microfinanced Development(FONDEMI)}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자금을 공급하는 정부 조직이다. FIDES는 판매 세금에서 조성되는 10억 달러 예산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의 30퍼센트를 지원한다. FIDES 총재 리처드 카난은 지역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에 건넨 기금이 9월 중순경 4억 3600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⁵⁶

LAEE는 석유 수입 배당금으로부터 재원을 충당하는데, 2006년 차베스 대통령의 명령으로 10억 달러 가운데 절반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배정했다. 한편 주민자치위원회법(제 4조 10항)에 따라 설립되고 관리되는 재정 단위로서 현재 공식적으로 250개가 설립된 주민은행^{Community Bank}을 통해 사회적 생산 프로젝트에 기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FONDEMI가 한다. FONDEMI는 36개월 거치 6퍼센트 이자율로 1만 4000달러 이하까지 대출 형식으로 지역 협동조합이나 이와 관련된 사회적 생산 프로젝트에 기금을 분배하는데 전국적으로 주민은행에 7000만 달러에 가까운 액수를 대출해왔다.

56 "다른 어떤 나라에서 이만한 자금을 지역에 주는지 나에게 말해 보라. 그 금액은 FIDES 단독으로 제공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9월 당시까지 전국적으로 8000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기금을 받는 절차를 밟았고, 설립 과정에 있는 4000개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아직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추정했다. 그는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1만 5000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건설되리라고 전망했다.(Michael Fox—Venezuelanalysis.com, Venezuela's Secret Grassroots Democracy, 2006. 11.)

주민이 진정 주도적으로 참여하는가?

그렇다면 이처럼 정부의 전폭적인 법적, 재정적 지원 아래 지역 단위에서 건설되는 통합적 의사결정 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에 과연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는가?

주민자치위원회는 대중 권력이자 정치적 집단이 아니다. 예를 들어 볼리바리안 서클은 정치 권력을 목적으로 한 조직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차베스를 지지하는 등 정견이 같은 사람들 뿐 아니라 차베스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괄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문자 그대로 지역의 통합적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선호도나 이념에 관계없이 공동체를 위해 일하려는 모든 사람을 망라해야 한다. 심지어 차베스를 반대하는 중산층 이상의 지역에도 건설을 해야 한다.⁵⁷

분명 주민자치위원회는 “일반적인 대의제 사회”를 넘어서, 좀더 활동적이고 참여적인 접근을 가능케 하기 위한 차베스 정부의 가장 최신의 정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당연히 처음에 주민들의 반응이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았던 듯 싶다. 44년간 지역에 살면서 한번도 참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그러나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상임위원인 한 택시 운전사는 “지역에서 처음에는 냉담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사고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참여 과정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57 Coral Wynter & Jim McIlroy-Green Left Weekly, Marta Hamecker: Venezuela's Experiment in Popular Power, 2006, 12.

또한 지역개발기금 소속인 모랄레스Pedro Morales는 “베네수엘라가 가부장제 아래에서 40여 년을 살아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 진행 중이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참여민주주의로 나가려고 압박하고 있다. 왜냐하면 참여가 공동체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첫 상임위원 선거 이후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주민 참여가 다소 줄었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회원인 마이클 롤록Michel Rollock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동체의 참여와 주도성이 없다면 어떤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다. 우리는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을 공동체가 자각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⁵⁸

개별적 주민들의 참여 여부와 더불어 발생했던 또 다른 문제는 기존에 지역에 존재해온 각종 위원회 조직들이 여하히 주민자치위원회라는 통합구조 안으로 들어오는가 하는 점인데, 이 점이 초반에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가 건설되면서 그 이전까지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조직의 하나였던 도시토지위원회가 상당히 경계한 듯 보인다. 토지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신들의 활동을

58 Michael Fox-Venezuelanalysis.com, Venezuela's Secret Grassroots Democracy, 2006, 11.

위축시키지 않을까 경계했으며 예산 경쟁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고 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되고 수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은
빠르게 호전되었으며 토지위원회는 지역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원활
히 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자치위원회와 결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믿
게 된다.⁵⁹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과연 노동자는 얼마나
참여하고, 지역 단위로 편재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이외에 작업장 단
위에서의 별도의 조직을 검토하지는 않는가 하는 점이다.

마르타 하네커는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에게도 주
민자치위원회가 중심적 조직이 되어야 한다면서, 노동조합원들에게
“당신들은 왜 주민자치위원회에 결합하여 그것을 강화시키려 하지
않는가? 당신들은 노동자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 합류해야 한다” 고
주장하지만, 아직 노동자들은 지역 단위 대중 권력인 자치위원회의
참여에 적극성을 보이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역 단위가 아닌 작업장 단위에서 별도의 대중 권력이 필
요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⁶⁰

59 2006년 11월 초 도시토지위원회 전국회의에서 헤르만 페랄타(Herman Peralta)라는 활동가는 다
음과 같이 발언한다. “도시토지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근본적 기초의 하나로 되어야 한
다. 토지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신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주민자치위원회 자신이 되
려고 해서도 안 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새로운 구조를 건설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결정체
다.” 필자는, 아직 토론의 여지가 남았지만, 각 위원회들 사이의 예상되는 갈등이 거시적 규
모에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Michael Fox-Venezuelanalysis.com, Venezuela's
Secret Grassroots Democracy, 2006. 11.)

60 Coral Wynter & Jim McLroy-Green Left Weekly, Marta Hamecker: Venezuela's Experiment
in Popular Power, 2006. 12.)

주민자치위원회는 새로운 민중 권력이 될까?

주민자치위원회는 가장 최근에 생겼으면서도 그 성장 발전 속도가
협동조합 성장 속도에 비견될 만큼 폭발적이다.⁶¹ 마치 한국의 45년
인민위원회 건설 붐을 연상케 하는 이러한 놀라운 성장 속도는 베네
수엘라 사회 변혁 과정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주민자치위원
회에게 실질적으로 권력을 주었기 때문이다.⁶²

초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비교적 빠르게 성공했던 것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부여했을 뿐 아니라, 각 주민자치위원회로 하여
금 처음에는 스스로 완전한 해결이 가능한 당면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청했던 점에 있다. 그리고 이의 발전 과정에서 더욱 강고한
조직적 기반을 가지고 과거 관료 구조를 더욱 대체해 나가면서 넓어
진 사회화 훈련이 가능하리라고 전망한다.⁶³

그러나 초기에 ‘실제적 권력 부여’와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과

61 주민자치위원회의 열풍은 자치위원회가 민주적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는 이미 공동경영, 자주경영, 협동조합 등에서 고양되어 왔고 주민자치위원회
는 지역 수준에서의 집대성 판이라고 할 수 있다. (Renaud Lambert, “Venezuela's Promising
Future”, 2006. 9.)

62 마이클 레보비츠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극히 중요한데, 그것은 다른 어디에도 없는 어떤 것을
(베네수엘라에서)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만약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들의 프로젝트를 위해 재
원을 조달한다면 모든 곳에서 혁명적 상징에 도달할 것이다.”

“쿠바에도 주민위원회나 지역위원회가 있었지만 그들의 권력은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베네수엘라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 내가 바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쿠바에서 가능성으로만 존
재했던 것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 변증법이며 건강성이다.” (Coral Wynter and Jim
McLroy, Interview with Michael Lebowitz “Challenges for Venezuela's Revolution”, 2006. 11.)

63 “당면한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토론하고 집행하며 감독하는 일은 지역
에서 자치위원회에게 실질적인 권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들이 처음부터 해결되지는
않는다. 몇 개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더 상위의 기관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강고
한 조직적 기반을 가지고 공동체들은 점점 더 많은 권력이 과거 관료 구조가 아니라 자신들에
게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Federico Fuentes, “Communities Organising Through
Communal Council in Venezuela”, 2005. 10.)

제 부여'로 그 동력을 형성하는 데 성공하기는 했지만 그 지속성 여부는 오로지 민중 참여의 확대 여부에 달려 있다.

마이클 레보비츠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그것이 민중으로 하여금 혁명의 피동적 수혜자에서 능동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 것은 혁명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조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혁명 주체(민중)가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했기 때문이다.”⁶⁴

또한 스페인의 정치 분석가인 카를로스 모네데로 Juan Carlos Monedero는 20세기 사회주의가 실패한 주요 원인이 민중 참여의 부족이라고 보고 “민중의 지속적 참여가 보장된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베네수엘라 21세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도구가 된다”고 예측했다.⁶⁵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활동을 하는 마르타 하네커에게 이점은 더욱 절박하다. 그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광범위한 참여가 베네수엘라 혁명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참여는 풀뿌리에서 혁명 과정을 공고히 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확장시키며 혁명을 지지하는 더 많은 동력을 만들어 낸다”고 지적한다. 또한 “참여는 더욱 폭넓어져야 한다”며 “차베스를 지지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도우려 한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⁶⁶고 강조했다.

64 Michael Rebowitz, “Venezuela: Going beyond Survival, Making the Social Economy a Real Alternative”, 2006. 9.

65 Renaud Lambert, “Venezuela’s Promising Future”, 2006. 9.

민중의 참여,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참여, 참여에 의한 직접적인 권력 행사가 얼마나 발전적으로 전개될지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풀뿌리 민중 권력 실험의 성패가 달려 있다.

또 다른 문제의 하나는, 이제 막 건설 중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직은 기존의 지역 관료 조직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치위원회가 비록 법률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중앙 정부의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재정 지원도 받지만 여전히 지역 관료 조직 역시 존재한다는 게 베네수엘라의 현실이다.

이를 고려하여 차베스도 2006년 4월 9일 주민자치위원회법 실행을 선언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이 지역·지방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함께 갈 필요가 있다고 확인했다. 아직은 기존 관료 조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관계 정립이 분명하지 않은 대목이다.⁶⁷

이점과 관련하여 페레스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여 민주주의라는 말을 행동으로 고착시키려는 시도”이고 “국가의 정치적 전환을 위한 지도적 프로젝트”를 수행할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과 과정을 겪어야 할 것임을 암시했다.

특히 그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가장 큰 맹점이, 지역을 넘어 광역과 국가 수준에 이르기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게 권력을 주지

66 마르타 하네커는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부서인 MINPADES에서 일한다.(Federico Fuentes, “Communities Organising Through Communal Council in Venezuela”, 2005. 10.)

67 차베스는 지역 정부와의 협력을 요청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누군가 말하듯이 병행적 권력parallel power이기보다는 혁명적 민주주의 권력 자체다”라고 강조했다.(Federico Fuentes, “Power to the People: Communal Councils in Venezuela”, 2006. 4.) 지역개발기금 소속인 모랄레스Pedro Morales 역시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미 존재하는 권력과 병행하는 권력이 될 수 없으며 그것과 함께 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Michael Fox—Venezuelanalysis.com, Venezuela’s Secret Grassroots Democracy, 2006. 11.)

않고 단지 지역 단위에서만 권력을 준 데 있다고 보았다. 때문에 현재적 수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국가 구조를 변혁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듯하다.⁶⁸

실제로 이런 현실적인 제약 조건 때문에 많은 주민자치위원회 추진 그룹들은, 그렇게 쉽게 주민자치위원회에 권력을 넘기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관료적인 시장^{Mayor}이나 관리, 그리고 관료 조직들의 저항을 느끼고 있다.

더욱이 혁명 반대파들은 2006년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공격하고 나섰는데, 그들의 공격 이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지 “선거운동에서 차베스 지지자를 모으기 위해 조직된 선거용”이라는 것이다.⁶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실질적인 민중 참여 권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차원의 권력 구조를 세우고, 이를 토대로 차베스가 목표하는 “21세기 사회주의”로 나가려는 지향은 상당히 암시되고 있다.⁷⁰

68 주민자치위원회법이 가지는 이런 모순점을 조정할 필요성 때문에 베네수엘라 국회에서 ‘시민 참여와 대중 권력에 관한 법’을 새롭게 심의하고 있다. (Michael Fox—Venezuelanalysis.com, Venezuela’s Secret Grassroots Democracy, 2006, 11.)

69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재원이 직접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게 건네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공포를 느낀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특별히 주민자치위원회의 압도적 다수가 차베스 지지자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말이다.” (Michael Fox—Venezuelanalysis.com, Venezuela’s Secret Grassroots Democracy, 2006, 11.)

70 베네수엘라 공산당 출신 국회의원 데이비드 벨라즈키즈 David Velasquez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볼리바리안 혁명 과정에서 만들어져야 할 새로운 국가 기구들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시청과 시위원회,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재조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만약 우리가 사회주의 사회를 창조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새로운 현실에 부합하는 국가의 상부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Federico Fuentes, “Power to the People: Communal Councils in Venezuela”, 2006, 4.) 나아가 이 글은 베네수엘라 21세기 사회주의의 기초가 될 권력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본질을 규정하며, 이런 움직임이 2005년 12월 총선에

볼리바리안 서클 조정자인 올리시스 카스트로 Ulises Castro 역시 “만약 풀뿌리 권력이 새로운 제도주의와 새로운 국가 건설의 기초가 된다고 믿는다면, 법적으로 국가를 재구성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고 주장한다.⁷¹

확실한 것은 풀뿌리 단위에서 권력의 교체는 시작되었고 민중에게 서서히 권력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권력을 여하히 실질적으로 민중의 것으로 되게 할지와 함께, 풀뿌리의 민중 권력을 토대로 광역과 국가적 규모의 권력을 어떻게 재조직할지가 2007년 이후 집권 2기의 차베스 정권이 풀어야 할 숙제다.

과연 주민자치위원회가 진정 “미래 사회의 기초 세포”로서 하부로부터 실질적인 민중 권력을 형성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집권 2기의 핵심 과제인 관료주의를 해체시켜 나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른바 20세기 방식의 ‘국가 사회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을 향한 진정한 세포가 되는지 주목되는 지점이다.

서 볼리바리안의 완전한 승리 후에 오기 시작했고, 대중들의 자체적인 조직화는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맺는다.

71 Michael Fox—Venezuelanalysis.com, Venezuela’s Secret Grassroots Democracy, 2006, 11.



5 한국 정치의 혁신을 위하여

볼리바리안 서클과 주민자치위원회를 검토하면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 보았다. 양자 공히 아래로부터 자율적으로 조직된 민중의 조직이면서 동시에 볼리바리안 서클은 정치 조직으로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민중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의사결정 조직으로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민주주의를 거시적인 각도에서 보면 몇 가지 추가로 검토할 요소가 있다.

민중 참여를 통한 관료주의의 극복

이와 관련된 첫째 이슈는 바로 관료주의다. 기존 관료 조직의 반개혁적인 저항은 진정한 사회 개혁을 추진하려는 모든 정권들이 당

면하는 문제다. 이점은 과거의 사회주의 국가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과거의 사회주의자들도 “관료주의는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면서 경계를 해 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를 실제로 극복하지 못했다.

20세기 말에서 최근까지 선거를 통해 집권한 자칭 개혁 정부들에게도 개혁 추진 과정에서 발목이 잡혔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 역시 기존 관료주의다. 현재 한미 FTA를 사실상 주도하는 그룹이 경제, 외교 관료 그룹이라고 본다면 ‘참여정부’가 시장에 끌려 다닐 뿐 아니라 관료들에게 의해 끌려 다니면서 개혁이 실종된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베네수엘라는 관료주의를 효율적으로 극복했을까? 물론 차베스는 기성의 관료 구조를 그대로 놔두고서 진정한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했다.

차베스는 집권 1기(2000년~2006년) 기간 동안에는 관료주의를 일거에 해체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기보다는 우회 전략을 사용했다. 사회적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관료주의를 우회했으며, 정당의 관료적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 정당과 무관한 볼리바리안 서클을 조직했고, 지방 정부의 관료주의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조직한 게 그 사례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우회 전략으로 일관했다.

“차베스가 지금까지 이 문제(관료주의-인용자)를 처리하는 방법은 새로운 기구를 건설할 동안 기존 관료 기구를 건너뛰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교육과 의료 등의 사회적 미션을 실행할 때에 실제로 보건부나 교육부를 통해서 실행하지 않았고, 공동체에 직접 들어가 실행하

는 방법을 사용했다. 문제는 노동자와 공동체가 자신들의 입장에서 통제하고 책임질 적절한 구조가 없기 때문에 관료주의가 새로운 조직들의 다양한 측면에서 재생산 된다는 것이다.”⁷²

차베스도 관료주의를 우회하는 방식의 한계를 정확히 인지했다. 차베스는 “국가는 거시적인 수준에서 변화한다. 그러나 미시적인 수준에서는 변하지 않고 남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저항(관료주의)을 패퇴시키기 위해 일련의 새로운 법안을 지금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고 최근 인터뷰에서 밝혔으며 이것이 볼리바리안 혁명이 직면한 주요 위협임을 경고했다. “주요 위협은 내부에 있다. 상시화된 관료주의의 반혁명이 존재한다.”⁷³

마르타 하네커 역시 지금까지 관료주의에 맞서 사회적 개혁 수행을 어렵게 추진한 점을 동일하게 지적한다.

“우리는 사회적 미션의 결과를 보아왔다. 문제를 풀기 위한, 그리고 평화적 틀 안에서 해법을 찾기 위한 정부의 결정인 사회적 미션의 결과를 우리는 보아왔다. 그것들을 매우 관료적인 국가 기구들에 맞서 수행해야 했다. 때문에 미션 수행을 그들 기구의 외부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서 현존하는 국가 기구와 함께 수행하기에 불가

72 Jorge Martin-In Defense of Marxism, Venezuelan Presidential Elections-A Crucial Turning Point for the Revolution, 2006. 11.

73 Jorge Martin-In Defense of Marxism, Venezuelan Presidential Elections-A Crucial Turning Point for the Revolution, 2006. 11.

능한 정책들을 실행하려고 시도했다.”⁷⁴

조지 마틴(Jorge Martin)은 관료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근의 시도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찾는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진 한계 역시 지적한다.

“(주민자치위원회—인용자)는 확실히 새로운 유형의 국가 조직의 기초가 될 수 있으며, 일하는 민중의 통제 아래 확고히 놓여 질 수 있다.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 기구들과 병존하여 존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 집중화된 구조의 구성 부분이 아니며(따라서 진정한 권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베네수엘라가 아직 자본주의 경제를 가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신의 지역에서 경제를 진정으로 계획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현재의 국가 기구가 파괴되고 새로운 형태의 국가 기구로 교체되지 않는다면 관료주의는 스스로 재생산된다.”⁷⁵

집권 2기를 시작한 차베스 정부가 과거처럼 기존 관료 조직을 우회하여 가기는 쉽지 않다. 차베스는 2006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당선 연설에서 “관료적인 반혁명과 부패에 대한 전투”를 선언했다.⁷⁶

74 Coral Wynter & Jim McIlroy-Green Left Weekly, Venezuela's Election a Means of 'Mandating' Revolution, 2006. 12.

75 Jorge Martin-In Defense of Marxism, Venezuelan Presidential Elections-A Crucial Turning Point for the Revolution, 2006. 11.

현재 베네수엘라 정치 담론에서 이것은 부패 관료 제거뿐 아니라, 새로이 건설된 주민자치위원회와 대중 조직들에게로 권력을 이동시킴으로써 참여적 민주주의를 심화하고, 공동경영과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생산 기업'을 확대시키는 일이 된다. 그것은 동시에 더 급진적인 혁명을 바라는 차베스 지지자와, 혁명 과정을 약화시키려는 '관료'와의 불안한 대립을 예고하는 것이다.

집권 2기의 가장 긴급하고 우선적인 혁명 과제, 즉 정당 조직과 국가 행정 조직에 존재하는 관료주의 문제를 풀 단초는 볼리바리안 서클이나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아래로부터 조직된 자율 결정 조직의 활력 확대다.

진정으로 대중을 참여시키고, 대중이 참여한 조직에 실제 권력을 부여하며, 그들에게 의사결정권을 주고, 국가는 이 과정에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것만이 관료주의에 대한 종국적 승리를 보장한다.

한국 정치에서도 진정한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최장집 교수는 참여정부 아래 한국 정치가 재벌-집권 엘리트-경제 관료의 삼각동맹으로 귀결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헌법을 통한 국민의 정치 통제 시스템 상설화

차베스 정부가 지금까지 미시적 수준에서 관료주의와 충돌을 회피하려고 노력했다더라도 국가적 수준에서의 개혁을 신속하고 과감하

76 Jose A. Laguarta Ramirez, *After the "Red Tide": New Challenges for Revolutionary Venezuela*, 2006, 12.

게 추진할 수 있었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큰 틀에서 국가적 정책 추진의 기반을 국민이 직접 제어하도록 헌법적 구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는 정권 교체 한 번으로 끝나는 선거 혁명이 아니라 끊임없이 선거하는 새로운 유형의 혁명을 진행 중이다. 지난 8년간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각종 선거와 국민투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 98년 12월 대통령 선거
- (2) 99년 4월 제헌의회 소집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 (3) 99년 7월 제헌의회 선거
- (4) 99년 12월 새 헌법 동의 국민투표
- (5) 2000년 7월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 동시 선거
- (6) 2004년 8월 대통령 소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 (7) 2004년 8월 지자체 선거
- (8) 2005년 12월 국회의원 선거
- (9) 2006년 12월 대통령 선거

문자 그대로 연이은 선거로 혁명에 박차를 가했으며, 이러한 선거를 거듭할수록 차베스는 더 많은 지지를 얻고 더 많은 권력 기반을 누적해온 것이 지난 8년의 혁명 역사다.

이렇게 선거를 통해 반혁명의 위기를 타개했던 데는 무엇보다 헌법에 따라 국민 주권 실현이 확고히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베네수엘라 신헌법은 국민투표에 대해 유례없이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우선 헌법은 제 70조에서 총괄적으로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강력하게 선언했다.

제70조 : 국민의 직·간접적 참여에 따른 주권 행사는 공무(公務)와 관련하여서는 공직 선출, 국민투표, 여론 수렴, 국민 소환, 입법 청원, 국민 발의, 여러 사람이 결부돼 있는 사안에 대한 공개토론과 시민 집회가 있고 ; 사회·경제 부문과 관련하여서는 민간 서비스 기관, 자주경영, 노사 공동경영, 금융조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협동조합, 상호금고, 공동체 기업, 그 외 상호 협력과 연대의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단체와 조직이 있다.

본 조항에 제시된 참여 수단이 유효하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이후 71조부터 74조에 걸쳐 별도의 국민투표 관련 상세 조항을 두어 국민투표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71조 : 초국가적 중대 사안은 공화국 대통령이 제안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을 때, 또는 다수결 투표를 통한 국회의 결정이 있을 때, 또는 호적과 선거인 명부(the Civil and Electoral Registry)에 등록된 선거권자 10퍼센트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국민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a consultative referendum)에 붙여진다.

주주·자치도시·지방행정구의 특별 중대 사안 역시 주민의 의견

을 묻는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다. 지방행정구 평의회, 자치도시의 회, 주주 입법부의 구성원 2/3가 찬성했을 때, 또는 시장이나 주지사의 제안이 있을 때, 또는 당해 지역 등록 선거권자 10퍼센트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실시된다.

제72조 : 국민투표로 선출된 모든 공무원과 치안 관사는 소환될 수 있다.

선출 이후 임기의 절반이 경과하고, 당해 지역 등록 선거권자 20퍼센트 이상의 의견이 모아지면 해당 공직자에게 위임됐던 권한을 철회하기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청원할 수 있다.

등록된 선거권자의 25퍼센트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 결과 소환에 찬성한 투표자의 수가 애초 해당 공직자를 선출했던 투표자 수와 같거나 많다면, 그 공직자의 권한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며, 즉시 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궐위(闕位)를 충원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

합의제로 운영되는 조직의 권한 철회는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행한다. 공직자 소환 청원은 해당 공직자의 임기 중 한 번 이상 제출될 수 없다.

제73조 : 의회에서 논쟁이 된 법안은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국민투표에 회부될 수 있다. 투표 참여자가 호적과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선거권자의 25퍼센트 이상이 되고 투표 결과가 법안 승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면, 그 법안은 법률로 제정되어 확정된다.

국가의 주권을 양보해야 하거나, 그 권위를 초국가적 기관 *supranational organs*에 이전해야 할지도 모를 국제 조약, 협정, 협약은 공화국 대통령의 제안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원 2/3의 투표 또는 호적과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선거권자 15퍼센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민투표에 붙여진다.

제74조 : 법률은 호적과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선거권자 10퍼센트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또는 공화국 대통령이 제안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을 때, 국민투표에 붙여지며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폐기될 수 있다.

공화국 대통령이 본 헌법 제236조 8항에 명시된 권한을 사용하여 발포한 법률적 효력을 지닌 포고령·법령도 호적과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권자 5퍼센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민투표에 부쳐지며 폐기될 수 있다.

상기 법률 폐기를 위한 국민투표가 유효하려면 그 투표 참여자의 수가 반드시 호적과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권자의 4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예산에 관한 법률, 조세의 신설 또는 조정에 관한 법률, 공적 자금 대출 또는 사면, 인권의 보호·보장·신장과 관련된 법률, 국제 조약 비준에 관한 법률 등은 그 폐기를 묻는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없다.

같은 헌법 시기 안에 동일한 법률 사안에 대해 폐기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는 한 번 이상 실시하지 않는다.

국가 중대 사안,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의 소환, 법률과 조약의 승인, 법률의 폐지에 대해 국민투표 회부가 적용되고, 국민투표 자체가 대통령과 국회에 의해서 상정될 뿐 아니라 일정한 유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국민에 의해 직접 발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국민투표 회부를 할 수 있고 그 조차도 대통령에 의해서만 발의되는 한국 헌법과 극단적으로 대비된다.⁷⁷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국민 주도 시대에서 국민직접정치를 실현하는 한 방법으로서 국민투표 권한의 대폭적인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상당한 정도로 실험되었다고 볼 수 있다.⁷⁸

노무현 정부는 집권과 함께 핵심 화두를 ‘참여’로 잡고 ‘참여정부’라는 이름으로 정권을 출범했다. 그런데 그 참여는 베네수엘라의 그것과 어떤 공통성도 없다. 참여정부의 참여는 서구식의 ‘분권화’였다. 이런 유형의 분권화는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89년 페레스 정권 시기 시도되었다. 시장과 주지사 직선을 도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77 대한민국 헌법은 72조에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과, 130조에서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국민투표에 관한 조항의 전부다.

78 “국민들의 결정이 여과 없이 정책에 반영되는 국민 총투표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국민 총투표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면 선거는 민주주의의 결가지에 불과합니다. 국민 총투표는 국민의 갈라진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기도 합니다.”(손석춘 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2006. 7.)

공동경영 제도 도입과 협동조합의 확산

여경훈

- 1 들어가며 : 21세기 사회주의
- 2 공동경영 제도 :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실험
- 3 협동조합의 대대적 확산
- 4 사회적 생산 기업과 내생적 발전 모형
- 5 사회적 경제의 성과
- 6 사회주의에 대한 새 세기적 해석 : Socialism in Evolution

VENEZUELA

결국 서론에서 언급했던 '21세기 사회주의'의 핵심은 연대성의 개념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진단해 본다. 연대성 경제는 공공재는 시장이나 국가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는 경제학에 기반한다. 그것의 구체적 형태는 공동경영과 협동조합 건설 등 새로운 기업 조직 구축, 소프트웨어와 기술 공유를 지향하는 움직임, 교육, 의료 분야의 사회적 투자를 모두 포괄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중의 참여를 보장해 주지는 않았다.

한국 정치에서도 참여와 분권화는 민중의 참여와 민중에게로의 권력 이동을 실현해 주기보다는 관료들에 의한 권력 통제와 정치 부재 그리고 실질적인 노동자 배제, 국민 배제를 불러왔다.

베네수엘라가 주는 교훈은 참여가 단순한 레토릭을 벗어나 실제화 되기 위해서 국민이 정치를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국민에게 실제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권력을 주어야 하며, 집권 세력이 관료주의와 엘리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 생산 현장에서, 정치 세력 안에서, 주민 지역 단위에서 그리고 국가의 헌법적 정체성 안에서 원칙과 방법으로 확고하게 세워져야 한다.



¹ 들어가며 : 21세기 사회주의

최근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세계무대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다. 물론 2002년 4월, 민중의 힘으로 군부 쿠데타를 저지하고 복귀한 사건도 한몫했지만, 지난해 1월 브라질에서 열린 제5차 세계사회포럼 폐막 연설에서 제기한 참신한 개념, ‘새로운 유형의 사회주의’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을 더욱 촉발시켰다.

차베스의 정치적 수사나 정책 방향은 2005년, 특히 2004년 8월 국민투표 승리를 전환점으로 하여, 이전과 질적으로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그의 언어를 빌리면, 그러한 사회주의는 “모든 것의 전면 에 기계 혹은 국가가 아닌 인간을 우선시하는 휴머니스트 사회주의”라고 정의하지만, 새로운 사회주의가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서는 모호한 채로 남아 있었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자체로부터는 초월될 수 없다. 사회주의, 평등과 정의를 지닌 진실한 사회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주의를 다시 발견해야만 한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보았던 그러한 사회주의 일 수는 없다. 경쟁이 아닌 협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체제를 우리가 발전시킬 때 출현할 것이다.”(2005년 1월 30일 제5회 세계사회포럼에서)

2005년 2월 27일, 「안녕하세요, 대통령」에 출현한 차베스는, “나는 확신한다. 이러한 확신은 내 삶의 나머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데, 더 나으면서도 가능한 새로운 세계의 경로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으며, 5월 1일 노동절 폐막 연설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며 개념을 진화시켰다.

“자본주의를 통한 우리의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고, 중간적 경로 또한 가능하지 않다. 나는 새 세기 사회주의 경로로 진군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전역을 방문하고 있다. 우리는 21세기 새로운 사회주의를 건설해야만 한다.”(2005년 5월 1일 노동절)

2006년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서는 햄릿을 연상하게 하는 “사회주의나 죽음이나”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베네수엘라 특유의 사회주의 건설을 강조했다.

“우리는 모델을 복사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교과서를 따라 모델을 복사하는 것은 20세기 사회주의 시도의 큰 오류들 가운데 하나였다. 자주성, 다양성, 모든 공동체와 대중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경로를 여행할 사회주의 배너를 다시 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후 2006년 3월 비엔나에서 열린 컨퍼런스, 4월 카라카스에서 열린 국제 연대성 컨퍼런스, 5월 노동절 행사 등 모든 공식 연설에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유일한 대안은 사회주의이며, 그것은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사회주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차베스가 말한 사회주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거나 계획되어 있지는 않다. 새로운 경로의 여행은 실험, 오류 수정 그리고 확산을 통해 점점 자신의 길을 스스로 밝혀 나가고 있다.

2006년 8월에는, FFM¹ Frente Francisco de Miranda 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1만 여명의 학생들에게 “경제적 영역에서 사회주의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요구했다.

“경제를 변형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라고 할 수 없다. 사회주의는 정치와 경제를 포괄한다. 그것들을 합하여 전체를 구성한다. 경제적 영역에서 사회주의는 약간 특수하다. 우리는 자본주의 모형의 구조

1 FFM은 Francisco de Miranda의 이름을 딴 청년 운동 조직으로 2003년 창설되었다. Francisco de Miranda는 18세기 후반 베네수엘라 독립을 위해 투쟁한 혁명가로서, “혁명의 경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어렵다”는 말을 청년들에게 남겼다. 다양한 미션을 지원,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며 약 3만 6000여 명의 청년들이 쿠바 아바나에 가서 사회주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도 했다.

를 변형해야만 한다.”

차베스의 발언이 확대될수록 더욱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새로운 사회주의의 경제적 구상이 과연 베네수엘라에 어떻게 구현되느냐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자본 양식의 변형”이라는 차베스의 화려한 언술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구조를 어떻게 변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궁금증은 다음과 같은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

집권 후 차베스 정권이 추구하고자 했던 구체적인 정책들이 ‘21세기 사회주의’라고 명명될 정도로 실제로 사회주의적 가치들을 지녔는가?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진보적 희망이 구체적 현실에서도 의미를 지닌 대안이 되는가?

이상과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차베스의 ‘상상력’이 베네수엘라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냉철히 검토해 보기로 하자.



2. 공동경영 제도: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실험

제도 도입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

1998년 12월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차베스는 1999년 국민투표를 통해 제헌의회를 구성, 국호를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공화국’으로 바꾸고 신헌법을 제정한다. ‘새로운 사회주의’ 혹은 ‘사회적 경제’의 핵심인 공동경영 제도 도입의 법률적 근거는 헌법 70조와 123조를 기반으로 한다.

헌법 123조는 “국민은 호혜성, 연대성 그리고 교환에 근거하여 자신의 경제적 행위를 개선하고 유지할 권리를 지닌다”며 경제 행위 기반이 연대성과 호혜성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헌법 70조는 “모든 국민은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상호 협조와 연대성의 가치들이 가리키는 연합의 형태를 포함한 모든 형태들에서 자주관리, 공

동경영, 협동조합을 통해 참여와 개입의 권리를 지녔음”을 보장한다. 즉 연대성과 호혜성의 구체적 형태가 자주관리, 공동경영, 그리고 협동조합임을 나타냈다.

헌법은 2001년 11월 협동조합 연합에 관한 특별법 등 49개 개혁 입법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에 즈음하여, 그동안 차베스 정권을 관망하던 보수적인 민간 언론, 자본가, 석유 산업 관료들, 대토지 소유자들은 확실히 반대 입장을 취한다. 결국 차베스 정권은 2002년 4월 쿠데타와 그해 겨울 혹독한 자본파업의 시련을 겪게 된다.

석유 파업에서 시작한 기득권층의 전면적인 자본파업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경제는 두 해 동안 9퍼센트에 가까운 마이너스 경제를 기록했다. 파업 결과 PDVSA 4만 6000여 명의 노동자 가운데 파업을 주도한 2000여 명의 경영진 등 1만 8000여 명이 해고되었다. 2003년 2월 파업은 종결되었지만 2004년 8월 국민투표에서 차베스가 59퍼센트의 지지율로 정권의 기반을 다지기 전까지, 자본가들은 자본파업이 끝난 후에도 해외 자본 도피를 시도하여 정권의 붕괴를 노렸다. 이것은 자산 가치를 초과한 담보 대출금을 받아 고정자본의 자산 가치를 고갈시키는 방식과 기업 재투자를 의도적으로 중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2002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의도적인 공장 폐쇄로 인한 기업 파산이 늘었으며 수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하였다. 해외 자본 도피는 베네수엘라 통화인 볼리바르의 시장 가치와 암시장 가치가 10~20퍼센트 차이 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²

2 Sharat G. Lin(2006), Five Worker-Controlled Factories in Venezuela, Venezuelanalysis.com.

정부는 2004년부터 유틸 공장을 복구하여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여 2005년부터는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다. 공동경영 제도 도입을 주도한 정부 부처는 경공업부와 노동부이고 2005년 경공업부, 노동부, 과학기술부, 대중경제부, 재무부 등 5개 부처가 ‘공동 책임 협정’^{Acuerdo Marco Corresponsabilidad}을 맺어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차베스의 공동경영 도입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자본파업을 극복한 이후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05년 노동절 연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모든 산업이 새로운 사회의 일부가 되는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모든 산업이 생산을 확대하도록 돕고,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노동자들이 경영진의 일부가 되는 것이 보장되어야만 한다.”(2005년 노동절 연설)

차베스는 또한 현재 가동을 멈춘 유틸 공장과 토지를 국유화하고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차베스 스스로 2005년은 “혁명적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전환” 시기라고 규정할 정도로 2005년의 변화는 질적인 변화였다.

베네수엘라 공동경영 현황은 2005년 7월 18일, 「안녕하세요, 대통령」에 출현한 차베스가 “공동경영을 통해 700여 폐쇄 공장을 재건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며, 현재 136개 기업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으로 미루어 그 규모가 짐작이 된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올해 3월부터 ‘공장 속으로’^{Fabrica Adentro}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현재 595개 민간 기업이 참여하고 그 가운데 120여 개 기업이 공동경영 기업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정부는 해당 기업에 금융과 기술을 지원해 회사 경영을 정상으로 복구하는 대신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와 지역 공동체와의 연대를 요구한다. 595개 회사에 정부는 총 6000억 볼리바르(약 2억 80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대출하였고,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4~8퍼센트 수준이다. 대출금은 1년간 유예를 두고 최대 세 번에 걸쳐 나누어서 상환토록 하였다.

공동경영 제도는 도입된 지 불과 1~2년밖에 되지 않아 분석과 연구는 초보 상태다. 또한 전국노동자연합^{National Union of Workers(UNT)}이 적극적으로 법률 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관련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공동경영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마르타 하네커^{Marta Hamecker}에 따르면, 사유화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베네수엘라를 혼란에 빠뜨린 90년대에 국영전력회사^{Cadafé}의 상급단체인 산별전력노조^{Federation of Electrical Workers} 간부들이 ‘공동경영’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한다.³ 그러나 당시 공동경영 제안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정도 이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공동경영 제도가 위로부터, 즉 정부에 의한 주도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시위와 노동조합 운동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은

3 Marta Hamecker(2005a), Los desafios de la cogestion, La Burbuda, Caracas, p.6.

중요하다. 전략적 중요성이 큰 국영기업의 매각을 통한 민영화 시도를 국가와 노동자, 지역 공동체가 힘을 합쳐 막아내기 위한 운동으로서 공동경영을 제안하고 실험하게 되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베네수엘라 현대 정치사에서 하나의 분수령이 된 1989년 ‘카라카소’ 사건을 공동경영의 기원으로 보기도 한다. 이 사건 이후 정부가 추진했던 민영화와 구조조정 계획에 대하여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저항하였다. 그러한 운동은 ‘공동경영’ 도입과 깊은 연관을 지닌다. 왜냐하면 정부와 기득권 세력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저항을 노동 운동과 시민 운동의 연계를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식하는 중요한 전환적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앙헬 나바스^{Angel Navas} 산별전력노조 의장은 다음과 같이 당시를 회고한다.

“요금이 오르기 시작하자 전기 서비스 공급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사무실에 진입하여 불을 지르려고 하면서 시위를 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국영기업 직원으로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한다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일반 주민들이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압력으로 다가왔다.”

1998년 차베스 집권 이전, 칼데라 정부 시절 신자유주의 정책은 최고조에 달했는데, 차베스가 집권하자마자 민영화 추진을 백지화시켰고, 유희 공장 복구 과정에서 민영화의 대안으로 노동자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기업을 만들게 되었다. 공동경영의 직접적 계기는 아

무래도 차베스의 이러한 경제 정책과 자본과업 극복 과정이다.

적용 대상 기업과 이행 과정

공동경영 도입의 실험 단계인 현 단계에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알까사^{Alcasa}, 까다페^{Cadafe}, 까델라^{Cadela}, 인베발^{Inveval}, 인베팔^{Invepal}, 인베텍스^{Invetex}를 들 수 있다. 공동경영 도입은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국유기업을 공동경영 기업으로 전환, 다른 하나는 유티 공장 몰수를 통한 전환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기업이 국유전력회사인 까다페다. 2001년 4월, 새로운 이사회가 제안한 '원리 선언'에 따라 국유기업 가운데 최초로 공동경영을 실시하였고 실제로 이사회의 절반은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그것은 명목상의 이사회 참가에 불과하였고, 4월 쿠데타와 겨울의 자본과업에 노동자를 동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실시되었다.⁴ 까다페는 사유화를 계획했던 칼데라 정부에 의해 재투자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고 2002년 자본과업에 경영진이 참가함에 따라 기업 경영은 더욱 어려워졌다.

공장 폐쇄를 실시하기 직전인 2002년 12월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이 직접 기업의 보안 계획을 세우면서 기업 운영에 노동자들이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이 위기를 극복한 이후 2003년 4월부터 까다페의 공동경영이 실질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하였고, 정부의 지원과 노동자들의 적극적 참여로 생산과 투자가 정상

4 Marta Harnecker(2005b), Joint Responsibility and Confidence in Venezuela's Worker Co-Managed Industries, Venezuelanalysis.com.

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2700여 노동자로 구성된 국영기업 알까사의 경우도 80년대 후반부터 비효율적 경영과 부패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었으며, 노동자들은 해고 걱정에 시달리는 상태였다.⁵ 현재 알까사는 2004년부터 공동경영 도입을 위한 정부의 실험 기업으로 선정되어 회사의 기능을 복구하는 중이다. 차베스 정권은 이 회사를 공동경영으로 전환한 국유기업의 모범적 사례로 자주 인용한다.

후자의 대표적인 기업은 인베팔과 인베발이다. 두 회사에서는 경영진들이 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 지급 요구를 거절하여 노동자 파업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밸브를 생산하는 인베발의 경우, 소유주인 쏘사 피에트리^{Sosa Pietri}가 2002년 12월 9일, 석유 회사가 주동이 된 석유 파업에 참여하여 공장 폐쇄 조치를 취하고 체불 임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노동자들은 2003년 3월부터 회사를 점유하고 약 2년 동안 자체적으로 생산을 진행하면서 투쟁했다.⁶ 차베스 정권은 소유주에게 신용을 제공할 테니 공장을 재가동하라고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자 정부는 의회의 만장일치 결의를 통해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주고 2005년 4월 국유화하면서 원래 CNV^{Constructora Nacional de Valvulas}라는 이름을 인베발로 개명하였다. 그 후 정부가 51퍼센트, 노동조합이 49퍼센트의 비율로

5 알까사에서 몇 킬로미터만 가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철강 공장인 SIDOR가 있는데 1997년에 사유화되어 2만 명에 달하는 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현재는 4000여 명만 남고 모두 해고되었다.

6 처음에는 체불 임금 지급을 주로 요구했지만, 2005년 1월 세계사회포럼에서 차베스가 사회주의를 제안하고, Invepal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국유화되는 것에 자극받아, 일자리 회복과 공장 재가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주식을 보유하고 노동자에 대한 채불 임금은 투자 형태로 전환되었으며, 노동자들이 주주가 되어 기존의 노동조합은 사라지게 되었다.

종이를 생산하는 빼네팔^{Venepal}은 90년대 후반부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2002년 자본파업에 빼네팔의 경영자도 참여하여 공장 폐쇄를 단행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유했던 채 공장 운영 재개를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경영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는 가운데 경영진은 2004년 9월에는 공장 설비들을 채권자에게 매각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생산을 완전 중단하고 12월에는 급기야 파산을 선언하였다.

그해 9월 900여 명의 노동자는 직장을 떠나고 남은 350여 명의 노동자들은 석 달 동안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공장 운영 인수를 요구하며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공장 점거를 지속할 것이라며 투쟁한다. 2005년 1월 13일 국회가 “공공적 편익과 사회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선언하고 일주일 만에 정부는 70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 국유화한 후 인빼팔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공동경영 제도를 도입하였다. 노동자들은 2005년 3월부터 생산을 정상화하여 현재 꼬빈과 Covinpa라는 새로운 협동조합을 결성해 49퍼센트의 주식을 자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섬유 회사는 회사 경영진의 공장 폐쇄 이후 10여 년이나 가동이 중단된 회사를 살리기 위해 경영자가 은행에 진 빚을 정부가 떠안는 합의에 따라 국유화되었다. 국가가 51퍼센트 주식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경영자와 노동자들이 정부의 신용 제공을 통해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인베텍스^{Invetex}라는 기업을 새로이 설립

해 공동경영 제도를 도입하였다.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공동경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나는 국유기업이 공동경영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공장 폐쇄를 단행한 사유기업 복구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다. 전자는 전력 회사인 까다페와 까델라의 경우로, 전력 공급 부문의 사유화를 방어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차베스 정권이 회사의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임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후자는 국유기업인 알까사와 사유기업을 모두 포괄하는데, 수년 전부터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경영진들이 자본파업을 지지하면서 의도적으로 공장을 폐쇄하여 실질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국가가 기술과 신용을 지원하여 복구한 후 공동경영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공동경영 도입의 주요한 동력은 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는 점이다. 공동경영 도입을 주도한 노동부의 간부인 호세 그레고리오 빌라로엘^{Jose Gregorio Villaruel} 또한 공동경영 도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동경영 도입) 상황은 노동자 투쟁의 일부로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투쟁에 직면해 소유주에게 노동자들을 재고용하라고 지시하는 전통적인 방식 대신에, 우리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였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개입하고 있다.”⁷

7 Federico Fuentes(2005), Venezuelan Land and Factory Expropriations as seen from the Labor Ministry and the Union Federation, Green Left Weekly.

여기에서 언급한 노동자 투쟁의 목적은 유휴 공장 재가동을 통한 실업 문제 해결이 주요한 것이었지만, 2003년 자본파업을 전후하여 PDVSA와 까다페를 비롯한 많은 기업에서 경영진이 폐쇄한 공장을 노동자 스스로 생산 시설을 복구하고 운영한 경험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유휴 공장을 새로 복구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방식은 저렴한 신용 제공과 부채 탕감을 통한 금융 지원 형태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몰수^{expropriation}의 형태를 띠지만, 보상 없는 사적 자본의 압류와 같은 전통적인 몰수 형태를 취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재산의 권리는 보장한다”는 헌법 115조를 엄격히 따르기 때문이다. 볼리바리안 헌법은 ‘공공적 편익’ 혹은 ‘사회적 이익’의 근거를 지닌 기업에 대한 국회의 의결 과정과 공정한 보상 지불을 통해서만 국가의 사적 자본에 대한 몰수를 정당화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강제 몰수 대신 국가는 자본 이전에 대한 협상 조건을 우선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부채를 국가가 대신 지불하여 소유주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상금의 비중을 낮춘 후에 공동경영 혹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전환한다.

차베스 또한 소유 형태의 합법적 이전을 분명히 하는데, 몰수는 마지막 수단이며, 우선은 사회적 생산 기업으로 재건되도록 기존의 소유주와 합의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기업주가 기업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노동자 참여를 증진시키고, 생산과 편익의 분배에 노동자의 참여와 개입이 보장된다면” 정부가 지원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그러한 합의가 달성되지 못하면 인삿팔과 인삿발의 경우처럼, 국회의 ‘사회적 이익’ 선언

에 따라 몰수가 진행되며, 베네수엘라 법에 따라 몰수된 기업의 소유자에게 시장 가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공동경영 기업의 운영 방식

구체적인 공동경영 운영 방식은 기업별로 상이하다. 소유 구조를 보면 초기에는 국가와 노동자가 51:49의 비율로 주식을 보유하며 경영진은 국가가 파견하는 관리와 노조 대표들로 구성된다. 이후 국가의 소유 비중과 국가 파견 관리의 수를 점차 줄여 나가고 노동자의 소유와 통제의 권한을 확대해 나간다.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직접 선출한 관리위원회가 존재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 합의에 따라 의사결정을 진행하며 생산의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노동자총회를 소집하여 결정한다.

까다페의 공동경영 도입을 주도했던 앙헬 나바스의 공동경영에 대한 설명은 그들이 지향하는 방향을 비교적 정확히 가늠하게 한다.

“이사회에 참여하고 노동자들은 위에서 토론된 사실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수직적으로 구조화된 다른 형태의 공동경영 시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하위 수준의 위원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임기의 제한을 두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물론 예산을 토의하고 행정, 금융 결정을 하기 위해 노동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마주 앉아야 하는 것을 기존의 경영진이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현재 공동경영의 모범 사례로 알려진 까다페의 자회사인 까텔라의 경우 약 80~90퍼센트의 비율로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본사에서 임명하던 경영진들도 노동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 현재 까텔라의 대표이사인 까를로스 썬체스Carlos Sanchez는 산별전력노조의 제안으로 선거에 출마하여 노동자들의 압도적 지지로 선출되었으며, 노동자 고용의 경우에도 노조가 결정권의 75퍼센트를 가지는데, 아직까지는 노조의 부정부패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노조에서는 전기 요금 책정에도 개입하고 싶어 하지만 현재까지는 에너지광산부가 책정한다.

까텔라의 노조위원장인 싸이다 길Zaida Gil에 의하면, 초기에 공동경영을 도입할 때, 노동자들이 우수한 관리자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며 반대하는 경영진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우리 노동자들은 누가 정말로 일을 잘 하는지, 누가 더 나은 기술자이지 잘 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노동 성과에 대해서 항상 관찰하기 때문이다. 자회사에는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서 상층부에만 있는 경영진들이 누가 더 나은 노동자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우리는 매일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잘 안다. 그렇게 관료주의적이고, 기술 중심적이지 않고서도 기업의 경영진이 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준비된 사람을 선출할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까텔라의 경우 노동자와 경영진뿐 아니라 지역

의 협동조합들도 ‘공동경영’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기업의 외주 사업을 민간기업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러한 계약을 현재는 협동조합과 체결한다. 2005년 7월 까텔라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비, 청소, 계량기 확인, 청구서 전달 등 기업의 외주 사업에 약 575개의 협동조합이 참여한다. 그 규모는 2004년에는 320만 달러, 2005년에는 상반기에만 300만 달러의 공급 계약을 협동조합과 체결할 정도로 확대 중이다. 또한 기업은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교육을 위해 인근의 야노스 대학과 연대하여 기술 교육을 제공하며, 이는 기업과 사회의 의사소통 공간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닌다.

이러한 기업과 협동조합의 연대 활동, 정부의 다양한 미션 사업에 기업의 적극적 지원과 참여를 통해 전력 공급 서비스 또한 향상되었다. 이전의 전력 공급 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만은 점차 사라지고 지역 주민에게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이윤 또한 증대되었다.

공동경영 이사회 이사인 이반 까라스Ivan Canas는 까텔라는 “공동체가 자신을 조직하는 것, 자치위원회, 협동조합 자문단, 지역 자문단을 강화하는 것을 도우며,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 준비를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 공동체와 연계를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⁸

알까사의 경우, 2005년 초 차베스가 까를로스 란스Carlos Lanz를 대

8 Michael Fox(2006), 5 Factories-The Voices of Venezuelan Workers, Venezuelanalysis.com.

표이사로 임명하였는데, 그는 게릴라 출신으로서 좌파 지도자로 유명한 사람이다. 까를로스 란스는 알까사의 공동경영이 정치적 상징이자 국가의 중점 실험 대상으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까를로스 란스를 제외한 나머지 간부들은 노동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처음 공동경영을 도입했을 때, “경영진들이 회사를 버리고 도망쳤기 때문에 모든 간부와 이사들을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좌파 간부들도 있었다. 까를로스 란스는, 2000여 명의 경영진들을 일시에 해고하여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던 PDVSA의 사례를 들어 완강한 간부들을 설득했다. 공동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직접 선거를 통해 2700여 명의 노동자 가운데 23명의 간부를 우선 조직하였다. 처음에는 공동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들도 많았다. 그러나 회의, 유인물, 신문 그리고 토론 등을 통해 몇 개월이 지나서는 기업에서 권력을 얻는 게 자신의 이해관계와 부합됨을 깨닫기 시작하였고 점차 공동경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경영 수준에서도 선거를 진행하여 기존의 경영진 가운데 일부와 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이사 가운데 3명을 노동자들이 직접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였다. 노조 대표 트리노 쉴바^{Trino Silva}에 따르면 향후에는 4명의 노조 대표, 2명의 정부 파견단, 1명의 지역 공동체 대표로 각각 할당하여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꾸릴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각각의 팀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 ‘관리위원회’가 부서별로 조직되어 생산의 모든 문제를 계획하고 토론하며 각 부서와 팀에서 4년 임기로 선출한 300여 명의 대표단을 조직하였다. 새로운

관리자로 선출되었어도 특권과 부패를 없애기 위하여 기존의 월급을 그대로 받는다. 생산과 기술적인 문제가 제기될 때에는 부서별 노동자 총회를 개최하며, 중앙 수준에서는 이사회가 노동자 대표단에게 생산 계획과 예산을 제시하면 후자는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공동경영을 하고 있다. 과거처럼 책상에 앉아서 결정만 하는 이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반드시 노동자들의 의지를 고려해야 한다.⁹

지역 공동체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트리노 쉴바는 알까사는 노동자들만의 기업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강조하며, 투명성과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 기업의 지위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알까사 노동자들과 대중 사이의 관계를 공동체가 감독해야 하며 의료, 급식, 수송 등 각종 부대 사업을 지역의 협동조합과 계약 체결하여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¹⁰

인삿팔의 경우를 보면, 초기에 국유화한 이후 국가와 노동자 사이에 각각 51퍼센트와 49퍼센트의 비율로 주식을 배분하였다. 노동부장관이 기업을 운영할 새로운 조직을 발전시키도록 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이후 그것이 공동경영위원회의 형태로 전환하였다. 생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점차 노동자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으며, 국가가 소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형태로 비중을 점차 축소하여 1퍼센트의 상

9 Fabrice Thomas(2005), ‘Co-management’ in Venezuela’s Alcasa Aluminium Factory, International Viewpoint.

10 Marta Hamecker(2005c), Aluminum Workers in Venezuela Choose Their Managers and Increase Production, Venezuelanalysis.com.

징적인 황금주로 남는 형태로 계획 중이다.

인삿팔 역시 사회적 생산 기업으로서 지역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인근 지역의 많은 가난한 학생들을 기업 구내식당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기업과 공동체와의 연대는 생산의 잉여 가치가 유보 이윤의 형태로 전부 전환되는 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복지를 위해서 사회적 사용가치 형태로 일부가 전환되는 구조다.



볼리바리안 협동조합 창조와 전개 과정

베네수엘라의 전통적인 협동조합은 주로 신용과 서비스 제공을 하는 협동조합이 중심이었다. 차베스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협동조합 수는 762개였으며 베네수엘라 협동조합 중앙회CECONVAVE(National Central of Venezuelan Cooperatives)가 주도하였다. 베네수엘라 협동조합 중앙회는 18개 지역 협동조합 센터의 연합체로서 40만 명이 조합원이기는 하나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노동자는 약 2만여 명에 불과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새로운 협동조합과 차별화하기 위해 과거의 협동조합을 전통적인 협동조합이라고 부른다. 2004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볼리바리안 협동조합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자들의 생산 연합체 형태며 매주 수백

도표 4-1 __ 연도별 협동조합 증가 현황

연 도	협동조합 수
1998	762
2001	1,000
2002	2,000
2003	10,000
2004	50,000
2005. 6	74,200
2005. 8	83,769
2005. 12	108,000
2006. 8	153,000

자료 : venezuelanalysis.com

개씩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협동조합 운동 또한 2002~2003년의 자본파업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특히 미션 뉘엘반 까라스(Mission Vuelvan Caras)를 실시하고, 자본파업으로 폐쇄된 유틸 공장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으로 확산되었다. 협동조합 등록에 대한 행정적 서비스와 협동조합 운영 개선을 책임지는 협동조합 감독위원회(National Superintendence of Cooperatives(SUNACOOP))¹¹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5만 3000개의 협동조합에 150만 명의 농민과 노동자가 참여 중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노동력을 1230만 명이라고 할 때, 공식 발표에 따르면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퍼센트를 넘게 된다. 하지만 주요 소득 원천으로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

11 20세기 초 베네수엘라에서 협동조합이 건설되기 시작했지만, 1950년대 마르코스 페레스 지 멘스(Marcos Perez Jimenez) 독재 시절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사라졌다. 58년 독재가 끝나고 1966년 협동조합법이 발효되자 66년 SUNACOOP를 창설하였다.

의 비중은 전체 노동력의 5~7퍼센트로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¹²

협동조합의 폭발적인 증가의 원인은 1999년 신헌법에서 사회적 경제의 주요한 경제적 요소로서 협동조합을 새롭게 인식하고 장려하기 때문이다. 헌법 70조에서 경제적 참여에 협동조합 형태의 도입을 보장하며 국가의 분권화에 관한 헌법 184조가 뒷받침하고 있다. 184조에서는 “국가는 대중적인 경제적 대안을 개선할 이러한 연합체들을 보호하고 강화할” 것을 의무화하며 308조에서는 국가의 지원 형태를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국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공동체 연합체들을 보호하고 강화해야 하며 교육, 기술적 지원 그리고 신용 제공이 보장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방향에 따라 차베스 정권은 2001년 9월 협동조합 연합에 관한 특별법을 채택하였고, 이후 정부의 지원을 받은 협동조합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대적인 협동조합 확산은 2004년 3월 직업 교육인 Mission Vuelvan Caras를 실시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2001년 9월 협동조합 건설에 관한 법률 제정이 제도적 장치 마련이었다면, 2004년 3월 직업 교육은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서 협동조합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확

12 2006년 3월 SUNACOOP 이사인 Carlos Molina는,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은 약 60만 명으로 전체 노동력의 6퍼센트를 차지하며, 협동조합의 99퍼센트는 볼리바리안 협동조합이라고 설명했다.

산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

2004년 3월 “볼리바리안 헌법이 보장하는 내생적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 유지되는 법과 정의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모형을 변화시키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Mission Vuelvan Caras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미션은 ‘자신의 힘으로’ 협동조합을 형성하여 실질적으로 “생산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실업과 소외”의 문제와 직접 투쟁하도록 기획된 직업 교육이다. 미션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부분 실업자이거나 미숙련 임시직 고용자들이다.

직업 교육을 통해 2004년 12월부터 2005년 5월 사이에만 26만 4570명의 학생이 기술, 경영의 주제에 대하여 반년 혹은 1년 단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학생들은 매월 100달러의 장학금을 받고 의료와 주거 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 또한 보장받는다. 직업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자유롭게 직업을 찾거나 기업 운영도 가능하나,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은 우선적인 선호 대상이었다. 2005년 졸업생의 70퍼센트인 19만 5095명이 7592개의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¹³ 평균적으로 25~30명의 직업 교육 이수생들이 한 개의 협동조합을 만들어 일자리를 찾은 셈이다.

2004년 8월 국민투표에서 승리한 이후 차베스 정권은 직업 교육

13 Camila Harnecker(2005), The New Movement In Venezuela's Bolivarian Process, Venezuelanalysis.com.

을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며, 새로 만들어진 중소 규모 신용 기관들의 운영을 서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중경제부^{Ministry of Popular Economy}를 새로 만들었다. 주요한 업무는 소기업, 협동조합, 자영업자들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조정하는 역할이었다. 대중경제부의 공식 문서에 따르면 Mission Vuelvan Caras는 단순한 고용 프로그램이 아니며, 협동조합 또한 직업교육 이수생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된 것도 아니며, “자본 축적보다는 집단적 후생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모형”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강조한다.

11월 정부 각료 회의에서 차베스는 볼리비아 혁명의 후속 단계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로드맵’을 정의하며 10가지 전략적 목표를 언급한다. 그 가운데 ‘새로운 사회적 구조의 형성’ ‘대중 참여의 새로운 민주적 모형’ 그리고 ‘새로운 경제 체제의 형성을 위한 새로운 생산적 모형의 구축을 가속화’할 것을 제시하여 협동조합 건설은 더욱 활성화된다.

2005년 1월 차베스 정권은 폐쇄된 공장들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몰수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중경제부는 유휴 공장이나 농장에 대해서도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며 제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유휴 공장이 ‘공공적 이용’ 단위로 선포되면 보상금에 대해 소유자와 정부는 협상하게 된다. 공동경영 형태로 전환되는 유휴 공장은 이전에 국유기업이었거나 제조업 중심의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인데 반하여,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되는 유휴 공장들은 대부분 농수

산물 가공 형태의 소규모 기업들이다.

2005년 8월 SUNACOOOP 통계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54퍼센트가 상품과 서비스 생산, 30퍼센트가 농업 생산, 9퍼센트가 운송업, 4퍼센트가 공공 서비스 생산, 2퍼센트가 소비, 1퍼센트가 저축과 신용 부문에 각각 분포되었다. 제조업과 농업이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이유는 기본 소비재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게 대중경제부의 주요한 역할이며, 식량 주권과 기본 소비재 수요의 수입 의존도를 축소시키려는 차베스 정권의 의도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대중경제부가 주도하는 협동조합 창출과 지원은 몇 개의 협동조합들을 통합하여 토지, 공장 그리고 설비들을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내생적 발전 지대' Endogenous Development Zones 로 더욱 발전하게 된다. 내생적 발전 지대는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그리고 각종 복지 시설들을 통합하는 곳으로 협동조합 클러스터라고 생각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듯하다. 특히 직업 교육 이수생에게 협동조합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복합적인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2005년 5월 기준으로 960개의 협동조합에 2만 7975명의 직업교육 이수생들이 참여하여 115개의 내생적 발전 지대를 만들었고 11월에는 125개로 확대하였다. 그 가운데 699개의 협동조합에 2만 411명의 미션 이수생들이 참여하는 농업 부문이 73.5퍼센트를 차지하며, 155개 협동조합에 4377명이 참여하는 제조업 부문이 14.8퍼센트, 103개 협동조합에 3063명이 참여하는 관광업이 10.4퍼센트를 차지했다.

2005년 3월에 대중경제부가 주도하여 하부 기관인 SUNACOOOP,

INCE(전국 협동조합 교육 기관; National Institute for Cooperative Education), 그리고 여섯 개의 전문 신용 기관들을 포괄하여 지역기술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개별 지역기술위원회는 SUNACOOOP를 포함하여 대중경제부 산하의 모든 정부 기관을 포괄하는 조직으로 정부의 기능을 분권화하여 관료주의, 비효율성, 부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 개편이었다. 9월에는 직업 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동조합 건설과 운영에 관한 전략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회의를 처음 조직하였고, 그 회의에서는 2006년 1월부터는 약 70만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Vuelvan Caras II를 실시하여 또 다른 2000여 개의 협동조합을 건설할 계획을 합의하였다.

또한 대중경제부는 기술 교육, 사회적 인프라와 신용 제공 등의 지원뿐 아니라 협동조합 생산품들의 시장을 보장하고 국가기관과 협동조합 사이의 계약 체결 또한 지원한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생산 연계 체계 구축, 쌍무적 합의를 통한 외국 바이어와 계약 체결 또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협동조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연방 정부뿐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공동경영 기업 그리고 지방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카라카스 시의 공공 노동 부서 public works division는 지역 노동 회의 cabinet를 조직하여 사회적 인프라 혹은 공공 근로 사업에 협동조합에 업무를 배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스스로 하게 만들었다. 2004년에만 카라카스 시는 공공 프로젝트의 50퍼센트를 협동조합에 배분하였는데, 170개 협동조합에 100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였다.

협동조합의 구체적 사례와 몇 가지 문제점

최근 해설자도 없고, 음악도 없이 오직 공장의 기계 소리와 노동자의 목소리만 나오는, 독특한 다큐멘터리 영화인 「5-Factories (Workers Control in Venezuela)」가 제작되어 소개되었다.¹⁴ 거기에 등장하는 다섯 개 공장 가운데 하나인 까카오 아그로 인더스트리아(Cacao Agro-industria)는 베네수엘라에서 노동자가 직접 통제하는 기업으로 전환한 첫 번째 기업으로 유명하다. 이 회사는 8년 동안 생산을 중단하여 120명의 노동자가 모두 해고되고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협동조합 구성을 권유하고 자주관리 교육을 시킨 후 카카오 공장을 3665명의 카카오를 재배하는 협동조합과 통합하였다. 2005년 7월 이 거대한 협동조합이 최초로 '사회적 생산 기업'으로 등록되었다.¹⁵

원재료와 최종 상품의 질을 시험하는 실험실을 갖추고 초콜릿 원액을 생산하는 카카오 기업은 실제로는 두 개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었다. 하나는 우프로까(Uproca(Cooperative Cacao Union))라는 협동조합으로, 카카오를 재배하는 3600여 농가들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하나는 초코마르(Chocomar)인데 96명의 노동자로 구성되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각각의 협동조합은 16명의 위원회를 선출하여 총 32명이 협동조합 위원회를 구성하며, 각각 4명의 경영진을 선출하여 8명이 일상적인 기업 운영을 조정한다. 모든 노동자들은 부서별 회의에 참

14 미국의 Dario Azzellini와 Oliver Ressler가 2005년에 공동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최근 제 10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에서 해외 최신파로 초청되어 국내에도 소개되었다.

15 Besty Bowman and Bob stone(2006), Venezuela's Cooperative Revolution, Dollar&Sense.

가하여 장기적 계획과 정책을 토론한다. 이 공장은 앞으로는 초콜릿 원액뿐 아니라 초콜릿 상품을 만들 계획이다. 초콜릿 양초와 같은 초콜릿 원액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 생산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등은 공장의 장기적 계획에 해당하므로 모든 노동자들은 토론에 참가한다.

역시 「5-Factories」에서 소개되는 직물 공장인 타치라(Textileros del Tachira)의 기업주는 공장의 토지와 설비를 담보로 대출금을 초과로 인출 받고 공장 경영은 안중에도 없었다. 악성 부채로 공장을 운영하던 타치라는 결국 2004년 파산을 맞이하게 된다. 2005년 3월 정부에서 대출을 받아 노동자들은 협동조합 형태로 공장을 재건했는데, 현재 118명의 노동자가 협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지위와 숙련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들은 동일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공동체의 사회적 편익을 위하여 기업 수입의 일부를 직접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의 규모는 매우 작다. 그러나 2005년 1월 정부가 유휴 공장과 토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규모가 큰 기업의 사례들도 많아지게 된다. 인수 과정은 앞서 설명한 공동경영 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즉 소유주와 보상금을 조건으로 인수 협상이 진행 중이다.

구체적 예를 들면, 모나가스(Monagas)주에 위치한 에인스(Heinz) 토마토 가공 공장이 대표적이다. 공장의 소유주는 처음에는 60만 달러에 공장을 팔겠다고 정부에 제안하였다. 정부는 기업 회계를 검토한 이후 임금 체불금, 세금 미납금, 부채 등을 공제한 후 26만 달러에 공장

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정부는 우대 대출을 통해 합의금을 협동조합에 대출하는 형태로 공장을 인수했다. 다른 예로서 꾸마나코아 Cumanacoa 시의 폐쇄된 설탕 정제 공장인 아쭈까레로 Cenral Azucarero Cumanacoa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유하여 스스로 공장을 재가동하였고, 정부는 2005년 9월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협동조합에 자금을 대출하는 형태로 몰수를 진행했다. 정부의 몰수가 정당화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헌법 115조와 299조에 따라 ‘공공적 편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간부인 Jose Gregorio Villarroel은 유희 토지의 효율적 이용, 식량 자급을 위한 정부의 경제 전략,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보장 등은 보상을 통한 국가의 몰수가 공공적 편익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까이구아 Caigua라는 토마토케첩을 생산하는 소규모 기업이 유명하다. 이 기업은 방만한 회사 경영으로 인해 임금 체불이 이루어진 적이 많았다. 향후 기업 경영 계획이 공장에 재고로 남아 있는 기존 원재료(토마토 과즙)의 처분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을 노동자들이 알고 나서부터 60여 명의 노동자들은 공장 인수를 요구했다. 정부가 노동자들의 공장 인수 요구를 받아들여 법률과 금융 측면에서 지원하면서, 2005년 7월 공장의 소유와 통제는 노동자들이 조직한 협동조합으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 그 기업의 주요 생산물인 토마토케첩은 메르칼 MERCAL이라는 국가적 상품 유통 체계를 통해 빈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지향하는 사회적경제의 축소판이라 부를 만한 곳

이 앞에서 설명한 내생적 발전 센터 혹은 지대다. 그 가운데 2004년 카라카스 서부에 위치한 파브리끼오 오헤다 Fabricio Ojeda¹⁶ 내생적 발전 센터 Endogenous Development Nucleus는 차베스 정권이 외국 관광객들을 주로 안내하는 장소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의류와 신발을 제조하는 협동조합뿐 아니라 도서관, 컴퓨터 센터 등 다양한 문화 복지 시설들이 함께 들어선 복합 자치 공간이다.

“나는 이전에 노점상이었어요, 비가 와도 날씨가 무더워도 항상 일해야 했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지요. 그래서 아반사 Venezuela Avanza 협동조합에 가입했지요. 여기에서 돈은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고 공장 안의 열기는 숨 막힐 듯 답답하지만, 노동 조건이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것이라 희망하고 있지요.”

오헤다 센터를 방문한 움베르토 마르케스 Humberto Marquez 기자에게 7명의 아이를 둔 어머니인 아나 오리츠 Ana Ortiz는 대답했다. 220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설립한 의류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Ortiz는 하루 7시간을 일하며 일주일에 5일 동안 근무하는데 월급은 117달러를 받는다. 같은 센터에 위치한 143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설립한 신발 제조 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은 186달러를 받고 있다.

2000년 이후 최저 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온 차베스 정권은

16 Fabricio Ojeda는 Marco Perez Jimenez 군부독재(1948~1958)를 타도하기 위한 저항 조직 Patriotic Junta를 이끌었던 저널리스트다. 1959~64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지만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포기하고 게릴라 운동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66년에 군대 감옥에서 죽었다.

2006년 5월 노동절을 기념하여 10퍼센트 또 인상하여 9월부터 발효 되기 시작한 최저 임금은 현재 200달러를 상회한다. 대부분의 영세한 협동조합들의 임금은 최저 임금보다 낮은 편이다. 그 원인은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생산성이 낮은 농업, 노동집약적 제조업, 서비스업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지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일부를 적립하기 때문이다. 물론 협동조합의 운영은 노동법에 따르지 않고 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다.

공식적으로는 임금이라 부르지 않고 이윤 선불금(advance on profits or associates advances)이라 부르는데 12월에 결산하여 분배될 배당금을 월급의 형태로 미리 지불한다고 보면 큰 무리가 없다. 또한 협동조합법에 따라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는다.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조합원들이 선출한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를 통해 결정되며 생산 문제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 총회를 통해 결정한다.¹⁷

협동조합 운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내부의 의사소통 문제와 행정적, 경영적 능력의 부족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2005년 300개 이상의 협동조합에 대하여 SUNACOOP가 비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했는데, 50퍼센트의 협동조합이 회계 처리와 행정상의 오류를 범했다. 대중경제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영과 행정 프

17 Humberto Marquez(2005), State-Financed Experiment in Venezuela's Solidarity Economy, IPS.

로그램을 따로 조직하여 교육하지만 참여 인원은 소수라고 한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일반적인 협동조합의 원리인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원칙을 벗어나 정부의 석유 수입 재분배 정책에 주로 의존한다는 점이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즉흥적인 방식으로 조직되는 협동조합도 있다고 한다. 그러한 협동조합을 '유령 협동조합'(phantom cooperatives)이라고 부르는데, 정부의 지원금을 얻기 위하여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협동조합이다.

정부의 신용 제공 과정, 국유기업과의 외주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패의 문제도 발생하며, 대중경제부도 인정하듯, "다른 조합원보다 더 많이 지급받는 사장이 존재하며 임금 노동자 그리고 노동과 소득의 불균등한 분배"가 존재하는 민간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은 협동조합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협동조합법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위장 전환하는 경우에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감독기관인 SUNACOOP도 인정하듯이 뿌리 깊은 관료주의 유산으로 인해 많은 감독상의 문제점들을 표출했으며 초기의 많은 협동조합에서 자주관리 교육이 부족하여 운영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토로한다. 물론 2003년 부패 방지법, 일반 회계 감사를 위한 조직법, 공공 행정 조직법 등 법률을 마련하여 모든 시민들이 국가 자원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실시하고 공무원들이 더욱 책임성을 지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으려는 혹은 그 과정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관료

적 유산을 지닌 공공 기관의 속성은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의 효과를 차단하는 중요한 장애 요인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협동조합에 대한 방문과 감독을 증가시키고, 교육과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위원회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분권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이다.¹⁸

18 2006년 5월 대중경제부는 전국 협동조합 집행위원회(National Executive Cooperative Council-CENCOOP)를 조직했는데, 25개 주 협동조합 위원회에서 각각 5명의 대표를 선출하여 전국에서 약 140여 명의 협동조합 대표들로 구성하였다. 주 협동조합 위원회는 또한 지방 조합원들로 구성된 시 위원회의 선거에 의해 조직되었다. CENCOOP는 또한 전 세계 95개 국가, 7억 명의 협동조합 조합원을 포괄하는 국제 협동조합 동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ICA)에서 베네수엘라를 대표한다.



4 사회적 생산기업과 내생적 발전 모형

“우리가 심는 씨앗,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입을 옷, 우리가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안으로부터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는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기술적 의존성을 깨트려야 한다.”

(미션 뿌엘반 카라스 공식 웹페이지)

사회적 생산 기업 창출

사회적 생산 기업(EPS(Empresas de Produccion Social))이라는 개념은 다소 생소한데, 2005년 중반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공동경영과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보면 크게 무리가 없다.

만약 공유 형태의 소유 구조를 지닌 생산 단위를 창출했다고 해

서, 그러한 소유와 통제가 자본주의 기업처럼 이윤을 극대화하는 원리만을 따른다면 생산관계의 질적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협동조합, 공동경영 그리고 국유기업은 새로운 기업 원리를 따라야 하는데 그러한 기업 원리에 따라 새롭게 창조된 개념이 바로 사회적 생산 기업이다.

“위계 구조에 따라 지위와 관련된 특권이나 사회적 차별 없이 구성원들 사이에 실제적 평등이 존재하고 계획 과정의 참여가 보장되며 국가적, 집단적 혹은 혼합 소유 형태에 따라서 운영되는, 노동이 자신의 의미를 지니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복무하는 경제적 단위”라고 사회적 생산 기업을 정의한다. 즉 공동체의 필요에 복무하는 생산 단위 개념과 노동자의 소유와 통제를 강화하는 조직 운영 원리를 통합하는 개념이다.¹⁹ 따라서 기존 국유기업의 통제력 강화와 새로운 국유기업 창출, 기초 산업에서 공동경영의 도입, 협동조합의 대대적 확산 등은 모두 사회적 생산 기업 개념을 현실에 적용한 예다.

정부에 의해 사회적 생산 기업으로 인정받으면 낮은 이자율로 신용을 제공받고 정부 계약에 대해서 우선적인 협상 대상이 되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데, “수익성의 가치에 앞서, 연대성, 협조, 보완성, 호혜성, 공정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가치” 등의 사회적 기업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²⁰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마이클 레보비츠^{Michael Lebowitz}는 사회

19 현재 국유화되어 노동자 경영 혹은 통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약 20개다. Marie Trigona(2006), Workers in Control: Venezuela's Occupied Factories, Venezuelanalysis.com.

20 Gregory Wilpert(2006a), The Meaning of 21st Century Socialism for Venezuela, Venezuelanalysis.com.

적 생산 기업의 개념은 교환가치로부터 사용가치로 생산 활동의 중심 영역을 변경시키는 것인데, 자본주의 상품 생산에 본질적인 노동의 분리와 소외에서 사회적 연대성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해석한다.²¹

사회적 생산 기업 창출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노동부의 호세 크레고리오 빌라로엘은 사회적 생산 기업의 지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국가의 프로젝트인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탐욕, 개인주의, 연대성의 부족을 강화하는 자본주의 경제와 단절하도록 구축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생산 기업을 통하여 헌법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우리는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기업을 알고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사람들이 노동력의 편익을 자신에게 판매하여 그 편익을 향유해야 한다고 믿는다.”

사회적 생산 기업의 개념과 지향하는 방향은 카카오 협동조합의 개소식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2005년 7월 「안녕하세요, 대통령」에 출현한 차베스의 발언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8년 동안 문을 닫은 상태였으나 정부의 신용 지원으로 다시 문을 연 까까오 Cacao Agro-Industria 협동조합 또한 21세기 사회주의를 선도하도록 도와줄 사회적 생산 기업이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21 Michael Lebowitz(2005), Venezuela: Going Beyond Survival, Making the Social Economy a Real Alternative, Global Research.

이후 카카오 협동조합은 최초로 사회적 생산 기업으로 등록되어 이윤의 일부를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 교육, 거주 문제 해결에 투입하고 있다. 차베스에 따르면 모든 국유기업 또한 사회적 생산 기업으로 전환되며 그것의 목표는 세 종류의 사회적 생산 단위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공동체의 생산, 서비스 그리고 분배이며 연대성, 협조, 보완성, 공정성의 가치가 우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회적 생산 기업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기업의 예들로서는 까다페 Cadafe(전력 회사), 이드로벤 Hidroven(수도 회사), 메트로 Metro(지하철), 콘비아사 Conviasa(항공 회사) 등이며, 국영석유회사인 PDVSA는 이미 자본주의적 기업에서 사회적 생산 기업으로 이행 과정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²²

“국가의 생산 공간이 공동체적 필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차베스의 강조에 따라 2006년 2월, 3억 5000만 달러의 투자를 통하여 국유기업인 꼬니바 Coniba(National Company of Basic Industries) 그룹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꼬니바 그룹은 막대한 해외 수입을 대체할 국내 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알루미늄, 섬유, 종이, 철강, 부품 생산 단위들을 포괄한다.

이러한 투자의 주요 원천 역시 PDVSA의 석유 수입으로 충당되는 국가발전기금 National Development Fund이다. 새로운 기업의 창출로 약 2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으며, 해외 투자와 해외 수입에 직접 의존하지 않고도, 내부로부터 산업의 다각화를 추구한다는 정책과

22 Venezuelanalysis.com, 2005 7. 18.

관련이 있다. 산업광산부 장관인 빅토르 알바레스 Victor Alvarez에 따르면 꼬니바 그룹에 속한 12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형태로만 운영되지는 않으며 사회적 생산 기업의 형태로 건설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생산물은 연대성 가격으로 팔리며, 내생적 발전의 경향을 지닌다”고 한다. 결국 사회적 생산 기업은, 원재료는 베네수엘라에 존재함에도 현재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품들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 구성 요소가 되고 있다.²³

아울러 자본주의 기업 문화와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생산 기업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차베스는 2006년 2월 전략적 산업 육성을 위한 꼬니바 기업 개소식에 참가하여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

“사회적 생산 기업은 작업장에서 위계와 불평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노동의 형태에 따라 차별하는 자본주의와 달리, 우리 모두는 평등하며 작업장에서 위계적 특권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2003년에 통과된 협동조합법 3조와 4조에서는 ‘사회적 책임성’과 ‘공동체와의 약속’을 각각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리라고 강조하며, 공동체의 후생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사회적 생산 기업’ 개념에서 ‘사회적’이라는 수식어는 기업을 단순히 경영자의 것도, 노동자의 것만도 아닌 사회

23 Gregory Wilpert(2006b), Venezuela Launches 12 New State Enterprises to Substitute Imports, Venezuelanalysis.com.

적인 것으로 인식함을 나타낸다. 결국 사회적 생산 기업은 사회적 책무로서 기업의 역할을 또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유티 공장과 토지를 인수하고 이용하는 과정이 사회를 대표하는 정부의 물적, 기술적 지원 아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의 소유, 운영, 수익 또한 일부는 사회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개념에 충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차베스 정권은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협동조합과 공동경영을 도입한 기업들이 사회적 생산 기업으로 이행할 것을 장려했는데, 정부로부터 사회적 생산 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지역발전 기금의 형태로 기업이 소재한 공동체에 이익의 10퍼센트를 제공해야 한다.

내생적 발전 모형

“(경제적) 발전은 재화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사람, 그들의 교육, 조직, 훈육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세 가지가 없다면 모든 자원은 이용되지 않거나, 휴면 상태거나 잠재된 채로 남는다.”(E.F. Schumacher, 『Small is Beautiful』, 1973.)

흔히 빈곤 국가가 경제적 성장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해외 부채를 줄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자본과 투자다. 이러한 경제 성장 동학은 정부로 하여금 투자자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소위 ‘바닥으로부터의 경쟁’^{race to the bottom}이라고 하는 노동, 보건, 환경 기준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강요한다.

이것의 세련된 방식이 IMF를 필두로 한 신자유주의 처방인데 사유화, 정부 지출 축소, 탈규제를 해당 국가의 상황에 관계없이 패키지로 강요하는 게 일반적이다. 88년 대통령에 당선되어 IMF 처방을 받아들인 페레스 정권 아래에서 89년 경제성장률은 8.6퍼센트 하락하였고 빈곤율은 43.9퍼센트에서 66.5퍼센트로 대폭 상승하였다.²⁴

현재 차베스 정권의 공식 문헌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수식어가 바로 ‘내생적’이다. 이것은 스스로 조직하고 관리하며 스스로 유지 가능성을 지향하는 의미인데, 미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독립을 의미하는 정치적 수사이기도 하다. 기업 운영에서 공동경영 제도의 실험, 협동조합의 대대적 확산, 사회적 생산 기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창출 등은 차베스 정권의 장기적 발전 계획인 ‘내생적 발전 모형’의 근간을 이루며 ‘바닥으로부터 경쟁’ 노선에 대한 베네수엘라의 대안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네덜란드 병’이라고 알려진, 석유 또는 자원 부국은 원재료를 낮은 가격에 미국과 초국적 자본에 넘겨주고 한 부문의 집중적 수출을 통해 수입 의존형 발전 경로를 걷게 된다. 그러한 역설적인 발전 경로를 수정하기 위해 내세운 게 바로 내생적 발전 모형이다. 수입 의존형 발전 모형으로 취약해진 국내의 산업 기반, 특히 제조업과 농업 기반을 극복하려는 내생적 발전 모형은 50, 60년대의 수입 대체 모형을 새롭게 해석한 것이다.

내생적 발전 개념은 1993년 칠레 경제학자인 오스발도 선켈^{Oswaldo}

24 C.P. Pandya and Junstin Podur(2004), The Chavez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ZNET.

Sunkel 등 10여 명의 라틴 아메리카 좌파 경제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내부로부터 발전 *Development from within: Toward a neostructuralist approach for Latine America*』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내부로부터 발전’ 전략은 1930년대부터 케인스주의 개발경제학자로 유명한 라울 프레비쉬 Raul Prebisch의 중심-주변부 이론을 발전시킨 종속 이론에 근거한다. 오스발도 순케에 따르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기술 진보이고 그것은 산업 부문에서 주로 일어나는데, 산업 부문은 주로 선진국들에서 발전하고 주변부 국가들은 원재료 공급 부문만 기형적으로 발전한다고 진단한다. 국내의 특수한 조건에 적용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평등과 인간 발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내생적 발전의 공식적 해석은 “지역적, 다각화된,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내부로부터 발전』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노동과 자본 사이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하며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지역의 가용한 자원을 동원하고 사회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관리하는 협동조합 건설 등을 강조하는데 이는 볼리바리안 혁명 과정의 청사진이다. 즉 베네수엘라의 내생적 발전은 생산의 사회적 발전을 우선시하면서 산업화 단계에서 지역 특수성을 강조하며 그러한 발전 경로를 담당할 조직 형태로서 사회적 생산 기업을 필두로 한다.

무엇보다도 2002년 자본과업의 경험이 차베스 정권에게 내생적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국가의 주요 산업 기반인 석유 공급자를 비롯해 수입 농산물의 분배상들이 과업을

지지하여 식량 공급을 전면 중단했을 때 베네수엘라 경제는 자신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차베스 정권은 자신의 정권 기반인 군대의 참여를 통해 슈퍼마켓 체인을 신속히 확대하여, 석 달 만에 1만 4000개의 판매 지점들을 새롭게 구축하고 25~50퍼센트의 할인 가격에 기본 식료품을 공급하여 위기를 극복한 생생한 경험 또한 지니고 있다. 그 기업이 지금은 가장 큰 슈퍼마켓 체인이 되었고 PDVSA 다음으로 큰 기업인 메르칼 MERCAL이다. 현재 ‘식량 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공급 비중을 40퍼센트 이상으로 끌어올렸으며 가능하면 협동조합에 계약 우선권을 준다.²⁵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식량의 64퍼센트를 수입하지만 1998년의 72퍼센트에 비하면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다. 메르칼 창설 2주년을 맞이하여 「안녕하세요, 대통령」에 출연한 차베스는 자본과업 당시의 교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제국주의의 공격, 독점 지배 계급으로부터 그리고 배고픔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했고 우리에게 대항하여 공격을 지지했던 사람들로 부터 우리는 배웠다. 우리는 식량 비축분을 일 그램, 아니 한 톨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어떠한 자연적, 정치적 혹은 사회적 재앙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할) 식량 비축분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다.”²⁶

25 MERCAL을 통한 소비자 가격의 하락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해결과 관련이 있기에 정부는 매달 24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MERCAL의 저가격 공급 정책을 계속 유지했다. MERCAL은 정부 보조금 지원을 점차 축소하고 사회적 생산 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운송 비용과 유통 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간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며, 지방의 중소기업 협동조합과의 계약을 통하여 운송, 유통, 광고 비용을 축소하여 소비자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다.

계획개발부 장관이었던 페레스 마르티^{Perez-Marti}는 ‘네덜란드 병’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부의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아래로부터의 성장을 강조하며 내생적 발전은 공급주의자들의 하방과급^{Trickle-down} 경제학이 아니라 상향과급^{Trickle-up} 경제학이라고 강조한다. 즉 아래로부터의 발전은 토지, 신용, 주택, 교육, 보건, 사회적 보장에 관한 것들을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하여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을 한 축으로 하며 거시 경제적 환경 수준에서는 외부적 안정성과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정부가 제공하는 것을 다른 축으로 하고 있다.²⁷

결국 아래로부터의 인적 자본 형성과 유효 수요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까지도 아래에서 과급되는 경제적 성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구상으로 전통적인 케인스 정책과 맥락을 같이한다.

물론 내생적 발전 모형은 국민 경제 단위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알바^{ALBA}와 같은 지역 경제의 통합 구상을 통해서 더욱 확대되어 구체화될 수 있다. 즉 경쟁성 제고를 위하여 경쟁력 수준이 비슷한 지역 국가들과는 비교우위를 통하여 교역을 확대하지만 초국적 자본과의 교역은 단기적으로 점차 축소하는 구상이다. 이러한 발전 모형이 작동하기 위해서도 역시 사회적 투자를 충족시킬 물적 기반이 필요하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그것을 석유를 통한 정부의 재정 수입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26 Sarah Wagner(2005), Mercial: Reducing Poverty and Creating National Food Sovereignty in Venezuela, Venezuelanalysis.com.

27 Gregory Wilpert(2003), “Cooperatives are the businesses of the Future”, Interview with Felipe Perez Marti, Venezuelanalysis.com.

정부의 2001~2007 개발 계획을 보면 산업 다각화와 국내 산업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며 향후 목표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2, 2013년 이내에 우리는 기본 상품은 100퍼센트 자체적으로 가공하며 자체적인 산업화 국가를 선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사회적 생산 기업과 내생적 발전 모형 개념을 포괄하는 기본 장에서 소개하는 ‘사회적 경제’다. 정부 웹 사이트에 실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는 계획개발부 장관이었던 베리페 페레스^{Felipe Perez}와 지역계획부 차관 로날드 데니스^{Ronald Denis}가 주도하였다. 다음 7가지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데,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를 에둘러 표현한 개념으로 보면 된다.

첫째, 사회적 경제는 대안 경제다.

둘째, 민주적, 자치적 실행이 우위를 차지한다.

셋째, 임금 수입이 아닌 협조에 기반으로 한 노동 형태가 주도한다.

넷째, (소기업의 경우를 제외하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는 집단적이다.

다섯째, 잉여의 평등한 분배에 기반한다.

여섯째, 경제 개발은 환경과 연대적이다.

일곱째, 경제적 혹은 정치적 권력의 독점 앞에서 자주성을 견지한다.²⁸

28 Gregory Wilpert(2003), Venezuela’s Mission to Fight Poverty, Venezuelanalysis.com.



5 사회적 경제의 성과

노동자 참여와 생산성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실시되는 노동자 참여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노조의 협상력 강화나 노조 대표의 이사회 참가와 같은 협소한 개념의 노동자 참여와 수위를 달리한다. 기업 수준에서 노동자 참여는 노동 과정과 기업 경영을 직접적으로 조직하고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들의 역량을 의미하는데, 실질적인 노동자 참여는 권력 개념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자 참여는 불평, 불만의 제기, 단체 협상, 정보와 자문 역할, 거부권 행사, 이사회 의 소수—공동—다수결 참여를 모두 포함하는데 베네수엘라 노동자 참여는 가장 높은 형태의 참여를 지향한다.

7~80년대 서구에서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고 케인

스 복지 정책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을 때 노동자 참여가 노동 소외 현상을 줄이고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이론적, 경험적 근거들을 많이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노동자 참여가 이론적 현실에 부합하는지는 아직 예단하기에 이르다.

노동자 참여에 대한 이론적 기반은 생산이 ‘사회적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현실에 바탕을 둔다. 그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공동경영과 협동조합에서 노동자 참여가 어떠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지니는지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전력 공급 서비스를 담당하는 까텔라의 경우 기업과 공동체 사이에 연대가 강화되면서 요금 징수가 잘 되고 기업 경영진의 부정부패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빈번했던 안전사고 또한 개선되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기업에 불만이 많던 지역 주민들 때문에 요금 징수도 잘 안 되었고 방만한 경영으로 지출은 과다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민영화 매각 논의가 나왔지만 공동경영을 도입한 이후 회사 운영은 정상화되었다.

노동자 참여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경영은 ‘구상과 실행의 분리’라는 자본주의 생산 현장의 본질적 문제점을 극복할 장점을 지닌다. 위계 구조에 따른 외부적 통제와 기계의 부속품처럼 정형화된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의 창의성은 결코 발휘될 수 없다. 특히 기업의 역량 강화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암묵적 지식은 수동적, 위계적 구조에서는 원활히 소통될 수 없다. 의사결정 과정의 노동자 참여와 생산 현장에서 사고와 실행 과정의 결합은 위계적 구조에서는 발휘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역

량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둘째, 노동자 참여는 기업 운영에 있어서 공동 협조를 의미하며, 그것은 기업에 이해관계를 지니는 모든 당사자들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시장 경쟁에서 흔히 발생하는 비협조 게임보다 협조 게임이 우월한 생산성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경영자와 노동자들은 함께 기업을 운영한다. 이것은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새로운 동기를 제공한다”고 『뉴욕타임스』 기자의 취재에 알까사의 꼬메스 Gomez²⁹라는 노동자의 대답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기업의 성공을 공동의 이익으로 간주하는 기업에서 기업의 성공에 따라 임금이 지불되는 구조를 갖춘다면 노동자들은 기업의 성공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기업의 성공과 자신의 성공이 연계되는 체계에서는 노동자들 사이에 연대성이 생긴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까텔라의 노동조합 대표인 싸이다 길리 노동자들에 대한 자긍심을 표현하는 다음과 같은 일화에서도 확인된다.

“산타크루즈에서 전력을 복구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두 달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까를로스 썬체스, 엔지니어 라울 아로차 Arocha, 송신 노동자, 275명의 보선공들이 놀라운 팀워크 역량을 발휘하여 48시간 이내에 전력을 복구하였다. 그것은 노동자의 노력과 공

동체의 지원의 결과였다. 공동체의 목사조차도 그들을 칭찬하지 않은가!”

셋째, 노동자 참여의 내부 조직은 기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계획개발부 장관이었던 Perez-Marti는 노동자 참여의 성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수직적으로 조직된 전통적인 조직은 소유자가 기업의 외부자이거나 노동자와 소유자 사이에 모순을 발생시키는 경영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즉 다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팀제 생산에서 업무 태만 Job shirking을 일으키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굳이 마르크스의 노동과 노동력의 분리를 거론하지 않고서도 이미 경제학의 상식이 된 지 오래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기업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본질상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는 정보를 공유할 때만이, 노동생산성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유자와 경영자, 경영자와 노동자 사이에 존재하는 비대칭적 정보 때문에 발생하는 지주—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경영과 협동조합 형태를 건설하는 것은 정보의 효율적 생산과 분배에서 발생할 생산성 이득을 창출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참여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뿐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경영자를 요구한다. 까다페의 ‘공동경영이사회’의 이사였던 알리리오 게라르도 Alirio Gerardo는 그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29 Brian Ellsworth(2005), Venezuela Tries the Worker-Managed Route, Venezuelanalysis.com.

“공동경영은 사회적 연계를 지닌 새로운 형태의 경영자, 대중들과 대화하고 지식노동과 육체노동 사이의 분리를 신뢰하지 않는 경영자를 요구한다.”

결국 자본주의 기업에서 막대하게 낭비되는 경영 비용을 축소하며, 새로운 유형의 경영자를 창출하기 때문에 연대성은 더욱 강화된다.

공동경영 제도가 도입된 지 불과 1~2년 밖에 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경영 실적이 열악한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노동자 참여의 생산성 효과에 대해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기업에 대한 애정에서부터 조그마한 변화가 감지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회사의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 노동자들에게는 기회”라고 말하는, 최근 선출된 알까사의 주장 공장 관리자인 에스탈린 오르타^{Estalin Orta}는 다음과 같이 자신이 소속한 기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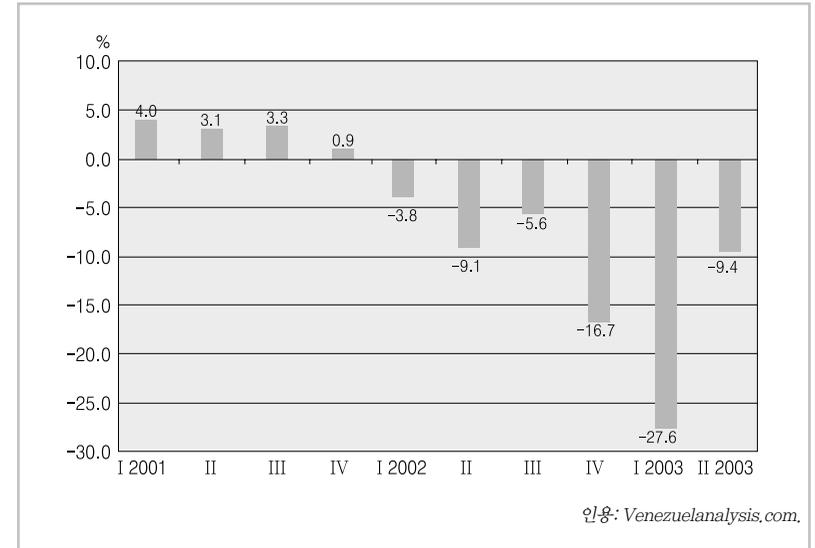
“우리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회사에서 시작하였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걸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다.”³⁰

주요 거시 지표 변화

2002년 자본파업은 석유 산업을 완전 마비시켰으며 <도표 4-2> 처

30 Brian Ellsworth(2005), Venezuela Tries to Labor Managed Routes, The New York Times.

도표 4-2 __ 2001~2003년 GNP 변화



럼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였다. 2000년과 2001년 각각 3.7, 3.4퍼센트의 성장률로 회복세를 보였던 베네수엘라는 2002년 8.9퍼센트 하락하였고, 2003년 1/4분기는 무려 27.6퍼센트 하락하였다. 성장률 하락의 80퍼센트는 석유 산업 부문 손실로 발생하였는데 무려 47.3퍼센트 하락하였다.

2003년 2월 실업률은 20.7퍼센트로 상승했으며, 인플레이션은 무려 38.7퍼센트로 치솟았다. 국회 경제자문위원회의 추정에 따르면 석유 부문에서만 37억 달러, 비석유 부문에서 12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전체적으로 7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 손실을 입었다. 2003년 벽두부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자본의 해외 도피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3주 만에 외환보유고가 9억 달러 이상 감소

하여 1월 20일경에는 11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였다. 결국 자본 도피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2월부터 고정환율제를 실시하여 외환 통제를 단행하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채권을 발행하여 외환위기 상황을 가까스로 극복할 수 있었다. 2/4분기에 9.4퍼센트, 3/4분기에 7.1퍼센트 하락으로 경제적 충격은 점차 완화되어 4/4분기에는 0퍼센트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기에 이른다. 2004년 재무부 장관인 토비아스 노브레가(Tobias Nobrega)는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차베스가 집권한 이후 20년(1978~1998) 동안 계속된 소득 하락이 역전되고, 구매력이 증가했으며, 인플레이션은 점진적 하락을 경험하고 있었다. 쿠데타나 석유 산업 폐쇄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2003년 말 베네수엘라는 지난 20년 동안 잃었던 1인당 소득의 1/3을 회복할 수 있었다.”³¹

〈도표 4-3〉에서 보듯, 2004년에 18퍼센트에 육박하는 놀라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05년에도 상승세는 지속되었다. 물론 생산 능력을 회복하고 경제를 안정화시켰던 주요한 동인은 의심할 것 없이 GDP의 25퍼센트, 재정 수입의 50퍼센트를 차지하는 석유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다. 석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 경제의 회복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제5장을 참고하면 되지만 여기에서는 다음

31 Jonah Gindin(2004), Venezuela's Human Development Index, Venezuelanalysis.com.

도표 4-3 __ 주요 거시 지표

항 목	2005	2004	2003	1995~2004 평균
GDP 증가율*	9.4	17.9	-7.7	
1인당 GDP 증가율	7.5	15.8	-9.4	-1.5**
석유 부문	1.2	11.6	-1.9	
비 석유 부문	10.3	17.8	-7.5	
경상 수지(백만 달러)	24,436	13,830	11,448	
경상수지 흑자/GDP	17.7	11.0	11.7	5.7
외채/GDP	22.7	25.6	29.6	29.5
외환보유고(백만 달러)	29,651	24,208	21,466	
실업률	11.5	14.5	14.6	11.5
인플레이션율(CPI)	15.3	19.2	27.1	35.1
실질 대출이자율	1.4	-1.9	-5.5	6.3
실질 예금이자율	-3.6	-6.5	-12.4	-2.7
명목환율(Bs/\$)	2,150	1,920	1,600	

자료 :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 1997년 불변 가격 기준, ** 1998~2004

을 강조하고 싶다. 70년대에 석유 가격은 현재보다 더 높았고 더 빨리 상승하였지만, 1인당 소득은 실제로 떨어졌다. 1970년부터 1998년 사이에 1인당 소득은 35퍼센트나 하락할 정도로 서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악의 경제적 성과를 기록한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다. 다시 말해, 1976년과 1995년 사이에 석유 수입은 마살 플랜의 20배에 달하는 2700억 달러였지만, 78~82년 사이 해외 부채는 두 배로 증가한 기형적인 경제 구조였다.³² 그것만으로 구체제의 경제 정책들이 얼마나 잘못 운영되었는지를

32 Luciano Severo(2006), In Venezuela, Oil Sows Emancipation, Venezuelanalysi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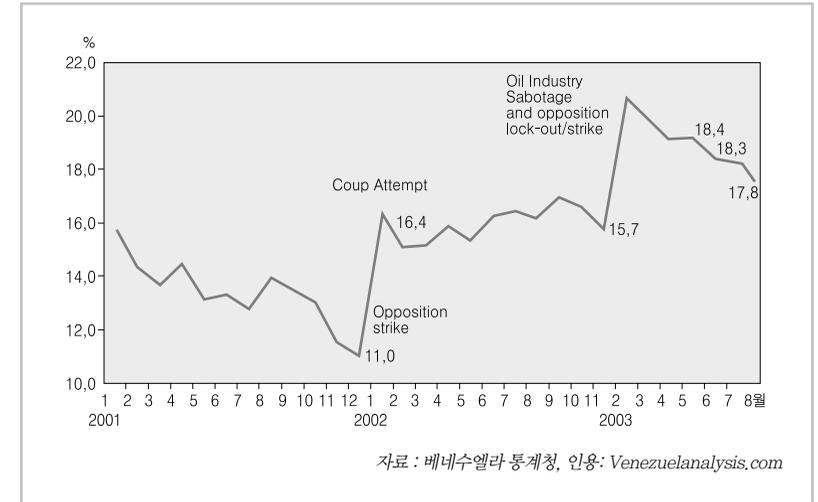
단적으로 보여주며 차베스 정권의 경제적 성과에 인색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해 준다.

국가 통계청 National Institute Statistics(INE)이 200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4, 2/4분기에 GDP 성장률은 각각 9.6퍼센트, 9.2퍼센트를 기록할 정도로 고성장 추세를 유지했다. 중앙은행이 11월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4분기 성장률은 10.2퍼센트이며 대부분의 성장 동력은 비석유 부분이 담당했다.³³ 현재 베네수엘라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양성 순환을 통한 경제 호황기다. 그것의 출발점은 물론 석유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과 재정 수입 증가다. 이것을 사회적 투자에 활용하여 사회적 생산 기업을 창출하면서 산업 기반 시설을 복구하고 제조업 성장률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미션을 통하여 소비 증진과 고용 확대, 생산성 증가를 위한 교육 기회 창출, 공동경영 등 새로운 형태의 조직 운영 원리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담당한다. 결국 석유 수입에 의존하여 빚어지는 고질적인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며, 빈곤에 따른 비공식 경제를 국민경제 내로 흡수할 거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경제적 성과가 아래로 파급된다고 하는 레이건 독트린과는 정반대로 중소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부문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고용과 생산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고용과 수요 창출이 대기업에게도 파급되게 하는 아래

33 석유 부문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구별하여 통계를 산출하는데, 전자는 0.9퍼센트 성장하였고 후자는 11.2퍼센트 하락하였다. 특히 제조업 부문 투자가 11.2퍼센트 증가한 게 부문 성장률(12.3퍼센트)을 주로 견인했으며 통신, 건설, 제조업 부문에서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도표 4-4 _ 2001~2003년 정치적 상황에 따른 실업률 변화



로부터의 성장 노선이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경로를 걷는 셈이다.

국내 고용 상황 변화

자본파업의 정점이었던 2003년 2월 실업률은 20.7퍼센트를 기록하였다. 이는 1967년 이래 가장 높은 실업률로 베네수엘라는 76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경제가 점차 회복되자 2003년 실업률은 18퍼센트로 하락하고 2004년에는 14.5퍼센트, 2005년에는 11.5퍼센트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06년 10월 중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9.5퍼센트로 하락해 작년 9월에 비하여 2퍼센트 하락하였다. 계획개발부 장관 호르헤 끼오르다니 Jorge Giordani에 따르면 연말에는 7퍼센트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실업자는 117만 5308명이며 2006년에만 새로 창

도표 4-5 __ 고용 상태와 실업률

항 목	2005. 9	2004. 9	변화율
총 인구	26,562,642	26,087,842	1.8
경제활동 인구	12,095,365	12,247,300	-1.2
취업자	10,699,625	10,472,578	2.2
공식 부문	5,781,058(54.0)	5,412,090(51.6)	6.8
비공식 부문	4,916,711(45.9)	5,055,242(48.3)	-2.7
민간 부문	8,963,988(83.8)	8,832,206(81.7)	1.5
공공 부문	1,735,637(16.2)	1,640,373(14.3)	5.8
실업자	1,395,740	1,774,722	-21.4
실업률	11.5	14.5	

자료: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출된 일자리가 45만 개에 달한다. 그 가운데 32만 개가 공식적 부문의 고용이며 여성 고용이 19만 개를 상회한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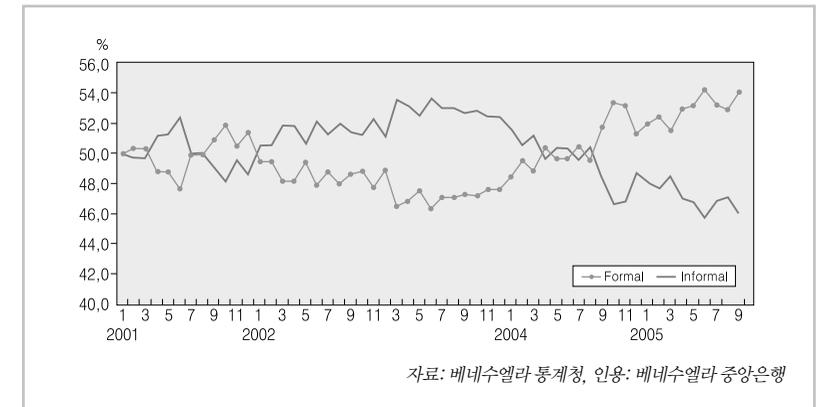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남미 경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앞서도 설명했듯이, 미국과 IMF를 비롯한 국제 금융 기구의 영향력 아래 주로 원자재를 수출하고 대부분의 소비 품목은 수입하는 기형적인 산업 구조를 지녔다는 점이다. 특히 8~9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산업 기반은 거의 붕괴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임금을 받고 비공식 부문에서 생계를 유지한다.

베네수엘라 기업의 90퍼센트 이상이 서비스 부문일 정도로 산업 기반 붕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한 1999년에 베네수엘라에는 1만 2000개의 제조업 부문의 기업이 존재했지만 수익성 하락과

34 Steven Mather(2006), Venezulean Unemployment Drops 2% Points from Last year, Venezuelanalysis.com.

자본과업 결과로 10퍼센트인 1200여 공장이 문을 닫았다. 차베스 정권의 공동경영과 협동조합 건설은 유휴 공장과 토지를 이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고 비공식 부문의 경제를 공식적 부문으로 통합시켜 산업 구조를 회복하려는 의도를 동시에 지녔다는 점이다. 2002년 52퍼센트까지 치솟았던 비공식 부문이 현재 45퍼센트대로 하락한 것은 고용 상태 개선과 산업 구조 회복의 성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공식적 부문의 비중이 2003년 47.3퍼센트에서 2005년에는 54.2퍼센트까지 오른 통계적 수치는 이를 입증한다.

도표 4-6 __ 총 고용 인구에서 공식 부문의 변화



자료: 베네수엘라 통계청, 인용: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다양한 미션을 통한 삶의 질 변화

“신자유주의 때문에 전 세계 어린이들이 실제로는 언제든지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의해 죽어간다. 하루에 3만 명, 1분에 21명, 30초당 열 명씩 죽어간다. 남반구에서 영양실조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의 비

율은 상당수 국가에서 50퍼센트를 상회한다. FAO에 따르면 이에 반해 1세계에 사는 어린이들은 저개발국에서 50명의 어린이들이 평생 동안 소비할 양과 맞먹는 양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2004년 3월 1일 7차 G-15 정상회담 개막식, 차베스 연설)

차베스에 냉소적인 서방의 보수 언론들은 차베스 집권 이후 빈곤율이 상승했다는 근거 없는 보도들을 쏟아냈다. 예를 들어 2006년 5월에 발간된 『Foreign Affairs』의 「라틴 아메리카의 좌파 전환」이라는 글에서는 “차베스가 집권한 1999년 이래 베네수엘라의 빈곤 지수와 인간 발전 지수는 악화되었다”고 혹평했다.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베네수엘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 빈곤율은 1997년 55.6퍼센트에서 그해 6.4퍼센트의 경제 성장을 통해 감소하기 시작해 차베스 정권이 들어선 1999년 1/4분기에는 42.8퍼센트로 하락하였다.

2001년에 가계 빈곤율은 39퍼센트까지 하락했으나 2002년 쿠데타와 자본파업 결과 2003년 하반기에는 55.1퍼센트까지 치솟게 된다. 2001년 4/4분기부터 2003년 1/4분기까지 GDP의 30퍼센트 하락은 빈곤율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빈곤율은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자본파업 후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어 2005년 하반기에는 37.9퍼센트까지 빈곤율이 하락하였다. 결국 차베스 집권 이후 가계 빈곤율은 42.8퍼센트에서 37.9퍼센트로 약 5퍼센트 정도 하락하였으며, 또한

도표 4-7 __ 차베스 집권 이후 빈곤율 변화(1997~2005)

년도	기간	빈곤 가구(%)	빈곤층(%)
1997	전반기	55.6	60.94
	후반기	48.1	54.48
1998	전반기	49.0	55.44
	후반기	43.9	50.40
1999	전반기	42.8	49.99
	후반기	42.0	48.69
2000	전반기	41.6	48.31
	후반기	40.4	46.34
2001	전반기	39.1	45.51
	후반기	49.0	45.38
2002	전반기	41.6	48.13
	후반기	58.6	55.36
2003	전반기	54.0	61.00
	후반기	55.1	62.09
2004	전반기	53.1	60.15
	후반기	47.0	53.90
2005	전반기	42.4	48.80
	후반기	37.9	43.70

자료: 베네수엘라 통계청, 인용: Mark Weisbrot(2006)

빈곤 인수로 보았을 때는 50퍼센트에서 43.7퍼센트로 약 6.3퍼센트 하락하였다. 2006년 11월 초에 발표한 UNDP의 인간 발전 지수^{HDI}를 보아도 베네수엘라의 삶의 질 개선은 뚜렷하다. 자본파업으로 2003년 75위(HDI 지수, 0.772)까지 추락했으나 2004년 기준 72위로 세 단계 상승하여 HDI 지수는 0.784를 기록했다.³⁵

그런데 UNDP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우 빈곤율 지수를 산정할 때

35 UNDP가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6위(2004년 기준)를 기록하였는데 2003년보다 두 단계 상승하였다. 2004년 기준, HDI 지수는 0.912이며 원화 절상 때문에 1인당 GDP(PPP, 구매력 평가)는 2만 달러를 넘어 2만 499달러를 기록하였다.(UNDP(2006), Human Development Report, p. 284.)

가계의 현금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베네수엘라의 최근 몇 년 동안 확대된 사회적 지출을 포함하면 사정은 더욱 달라진다. 마크 와이스브로³⁶ Mark Weisbrot(2006)의 추정에 따르면, 소득에서 의료 서비스 지출 비중이 4~6퍼센트라고 가정할 때 37.9퍼센트인 2005년의 빈곤율은 건강 보험 혜택을 추가하면 35.3~36.2퍼센트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³⁶ 2006년 10퍼센트대에 이르는 경제 성장률과 정부의 지속적인 사회적 지출 확대와 고용 창출에 따라 빈곤율이 더욱 하락했음은 분명하다.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은 차베스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06년 GDP의 40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 정부 지출 규모 확대와 더불어 사회복지 지출도 끊임없이 확대되었는데, 1998년에는 GDP의 8.2퍼센트, 2005년에는 GDP의 11.2퍼센트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교육 부문 증대가 두드러지는데, GDP의 4퍼센트 이상을 초과하는 교육비 지출과 더불어 실질적인 정부 지출 규모는 98년과 2005년 사이 8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다. 2006년 사회적 지출 규모는 GDP의 12.6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³⁷

2006년 10월 18일 재정부 장관 넬슨 메렌테스³⁸ Nelson Merentes가 의회에 제출한 2007년 예산은 전년보다 32퍼센트 증가한 540억 달러에 달하며 11월 27일 의회는 만장일치로 예산안을 승인하였다.³⁸ 재정

36 Mark Weisbrot(2006), Poverty rates in Venezuela: Getting the Numbers right,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p. 6.

37 Pablo Navarrete(2006), Venezuelan GDP to Reach 150 billion Dollars This Year, Venezuelanalysis.com.

38 국회가 승인한 2007년 정부 예산의 44퍼센트는 사회적 지출에 투입된다. 차베스 이전의 17퍼센트에서 160퍼센트 증가한 수치다. Venezuelanalysis.com(2006. 11. 27).

수입의 50퍼센트를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재정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007년 예산은 1배럴에 29달러를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현재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PDVSA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천문학적인데, 2005년 기준 195억 달러의 이윤을 기록하였고, 세금으로 58억 달러, 국가투자기금으로 69억 달러 그리고 남은 것이 순 이윤으로 65억 달러다. 물론 여기에는 비용으로 계산되는 정부에 대한 로열티 지불금 133억 달러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로 들어가는 수입을 모두 합하면 260억 달러에 달한다.³⁹

따라서 PDVSA의 정부 재정 수입 기여도는 2001년 15퍼센트에서 2005년 29퍼센트로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2003년 탄화수소법이 발효됨에 따라 로열티 지불금 두 배 인상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이윤 증가에 기인한다.

베네수엘라의 삶의 질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게 2004년 이후 실시되는 다양한 미션의 사회경제적 성과다. 2006년 9월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UN 연설에서 다양한 미션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의 성과에 대해서 차베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단지 7년 동안의 볼리바리안 혁명에, 베네수엘라 민중들은 중요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선언하게 되었다. 140만 6000명의 사람들이 새로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며칠 후면 베네수엘라는 문맹 탈피

39 Gregory Wilpert(2006), Financial Statement fo Venezuela's State Oil Company Shows Profits Up by 44%, Venezuelanalysis.com.



6 사회주의에 대한 새 세기적 해석: Socialism in Evolution

국가를 선언하게 된다.”

또한 사회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빈곤 때문에 항상 배제되었던 300만의 베네수엘라 민중들이 지금은 교육의 구성원이 되었다. 인구의 70퍼센트를 차지하는 1700만 베네수엘라 인구가 처음으로 건강 보험 혜택⁴⁰을 받았다. 100만 톤 이상의 식량이 원조 가격에 따라 인구의 반에 해당하는 1200만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7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9퍼센트 수준으로 실업률을 낮추었다”고 사회경제적 성과를 자랑했다.

또한 메르칼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구의 40~47퍼센트가 할인 가격으로 식량 보조 혜택을 받았다. 메르칼이 2006년 3월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전체 식량 공급량의 47.3퍼센트를 메르칼이 담당했다.

PDVSA 사장인 알리 로드리게스^{Ali Rodriguez}에 따르면 사회적 투자로 실시되는 다양한 미션들은 ‘지식’에 대한 투자라고 설명하며, 석유 가격 하락에 따라 교육, 주거, 의료에 대한 투자는 다시는 환원될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⁴¹

결국 현재 베네수엘라가 추진하는 사회적 투자는 일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빈곤 혹은 빈곤이 일으키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프로젝트다.

40 ‘Barrio Adentro’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주민들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41 Gregory Wilpert(2004), The Main Obstacle is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of the Venezuelan State, Venezuelanalysis.com.

노동자 주도와 연대성

공산당 선언의 유명한 구절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전체의 자유로운 발전이 되는 사회”, 즉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열망이 현실화된 사례는 많지 않다. ‘소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체’를 지향했던 자치 도시 파리 코뮌은 흔치 않게 유토피아의 상상력에서 해방된 역사로 남았다.

굳이 마르크스를 계승한 좌파 경제학자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은 “노동자들의 연합은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예견했다. 그에 앞서 일찍이 존 스튜어트 밀^{John Stewart Mill}은 『정치경제학원론』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글을 남겼다.

“인류가 계속 진보한다면 결국에는 우세하리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연합의 형태는, 주인으로서 자본가와 경영에 대한 목소리가 없는 노동자 사이가 아니라 평등의 조건, 그들이 운영하는 자본의 집단적 소유 그리고 그들 스스로 선출하고 파면할 수 있는 경영자 아래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연합으로 존재할 수 있다.”⁴²

세기를 넘은 20세기에도 노동자 참여에 대한 인류의 열정은 50, 60년대 유고의 자주관리운동이라는 국가 단위의 실현을 목도했으며, 프랑스 68혁명을 전후해 60년대 서구 지성의 정치경제적 아젠다와 실천의 단골 메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는 그러한 제안의 경제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보다는 도덕적 이상, 소외 극복, 혹은 노동조합 협상력 제고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한계를 지녔다.

알까사의 사장으로 취임한 카를로스 란스^{Carlos Lanz}는 구소련 연방에서 “산업, 농장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국유화되었지만 관리는 노동자에게 이행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녔던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소비에트 모델을 ‘국가 자본주의’ 혹은 ‘관료적 자본주의’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공동경영을 ‘위로부터의 소비에트 모델’과는 다른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모형’이라고 하여 차별화를 시도한다.

2005년 노동절 연설에서 차베스가 ‘21세기 사회주의’를 강조했던 바로 그 시기, 노동절 집회의 주제는 바로 공동경영^{Cogestion}이었다.

42 Geoff Hodgson(1984), *The Democratic Economy*, p. 131.

“노동자 공동경영은 혁명”^{Cogestion es revolucion}이라는 현수막과 구호는 68년 프랑스혁명 당시의 대표적인 구호 ‘자주관리’^{auto cogestion}를 연상하게 만들었다.

마이클 레보비츠는 독일과 베네수엘라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독일에서 공동경영은 자본가들의 프로젝트에 노동자들을 포섭하려는 수단이지만 베네수엘라에서 공동경영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다.”

알까사에서 카를로스 란스와 함께 공동경영을 주도하는 라파엘 로드리게스^{Rafael Rodriguez}에 따르면, 유고식 자주관리를 지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사회민주적이고 개혁주의적인 독일과 같은 공동경영을 실행할 의도를 결코 가지지 않았다. 공동경영이 자주관리로 이행하도록 우리는 기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유기업에서는 현재 실시하는 공동경영 기업들이 유고형의 완전한 노동자 통제 기업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정부도 밝히듯이, “그러한 산업은 베네수엘라에 너무 중요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 지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 기업들은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력을 지녔으며,

상호 보완성의 원리에 따라 국가와 공동체를 통하여 사회도 또한 기업의 운영에 대한 발언권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레보비츠 또한 유고 자주관리의 문제점을 “유고에서는 개별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주된 관심은 자신의 이기심이었지만, 그들이 놓쳤던 문제는 전체로서의 사회에 대한 연대성”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유고 체제는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사회의 연대성을 파괴하여 결국에는 유고 연방 분할의 결과만을 가져오도록” 운영되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 공동경영이 “그러한 특별한 실수를 피하도록 기업이 단순히 노동자들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 사회 전체의 이익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그의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⁴³

노동부 차관 리카르도 도라도 Ricardo Dorado에 따르면 인간에 대한 권리가 재산에 대한 권리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철학에 기반하며 그러한 철학은 이윤에만 배타적이지 않고 사회적 투자 중심의 ‘연대성 경제’를 의미한다고 한다.⁴⁴

결국 서론에서 언급했던 ‘21세기 사회주의’의 핵심은 연대성의 개념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진단해 본다. 연대성 경제는 공공재는 시장이나 국가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는 경제학에 기반한다. 그것의 구체적 형태는 공동경영과 협동조합 건설 등 새로운 기업 조직 구축, 소프트웨어와 기술 공유를 지향하는 움직임, 교육, 의료 부문의 사회적 투자를 모두 포괄한다.

43 Vezuelasolidarity.org, Venezuelan Trade unionist discuss worker's management and factory occupation, 2005. 10. 24.

44 Jonah Gindin(2004), Re-organizing Venezuelan Labor, Venezuelanalysis.com.

사회적 경제 개념을 정의한 페레스 마티에 따르면 2세대 경제 성장 이론이 교육과 보건을 포함하는 개념인 인적 자본에 관심을 지닌다면, 베네수엘라는 발전 경로의 선택에서 연대성이라는 도덕적 자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공공재와 정보 비대칭성과 같은 시장의 결점에 대하여 재화가 연대적으로 생산되는 시장 공간에 주목한다. 물론 사회적 경제는 재산권이 잘 정의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공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효율성 기준에 따라 재산권에 대한 보장 또한 확인하고 있다.⁴⁵

마르크스주의자인 마이클 알버트 Michael Albert 같은 사람들은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적 기업보다 더 생산적일 수도 있으나 문제는 탈시장화 계획이 부재하다면 그것이 사회주의적 목표와 지속적으로 부합할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시장 경쟁에서 자본주의적 기업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과정에 매몰되면 오히려 사회적 경향을 잃고 경영적 관료주의와 경쟁성에 매몰되기 쉽다고 비판한다.

유명한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역사를 통하여 초기에 공동체 서비스를 조합의 의무로 내세우지만, 개별적 협동조합들이 자본주의 기업과 경쟁하도록 환경이 구축될 때, 자본주의적 이기심을 다시 내부화하고 차별성을 잃게 되는 역사적 경험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비에트의 역사적 교훈을 볼 때 비록 교과서에서 예외로 가르치는

45 베네수엘라에서 사적 소유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알카사에서 공동 경영을 기획하고 있는 Rafael Rodriguez에 따르면 국가는 이미 대부분의 토지와 석유 그리고 대기업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의미에서 자원의 배분과 재분배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Fabrice Thomas(2005), 'Co-Management' in Venezuela's Alcasa Aluminium Factory, International Viewpoint.

시장이 완전시장보다 우리의 일상에 더욱 가깝지만, 시장이 전혀 없는 것은 시장이 있는 것보다 불편하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시장을 지닌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시장은 경제적 의사결정의 분권화된 체계를 형성한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⁴⁶

이러한 비판과 위협에 대해서 차베스 정권의 핵심 관료들도 분명하게 인지했다. 대중경제부 차관인 후안 까를로스 로조 Juan Carlos Loyo는 공동체 서비스는 초기부터 협조적 신념의 일부이며 지속적인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왔음을 인정하며, 언제든 신자유주의적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잘 인지하고 있었다.⁴⁷

또한 시장과 상품 교환이 체제를 굴러가게 하는 중요한 조정 기능을 담당한다고 해서, 시장을 너무 보편화하여 시장이 협동조합 혹은 다른 노동자 연합 형태와 적대적인 면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시장이 종종 협조적인 사회 가치와 전통과 상충하더라도 그러한 효과는 강력한 협조적 가치와 신뢰 집약적 문화에 의해서 중화될 수 있다.

덧붙여 메르칼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 협동조합과 연계하는 소비재 상품에 대한 연대적 시장의 경우 전통적인 행정적 계획화도

46 특히 정치경제적 자주성,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장과 재산권의 역할 그리고 중앙 계획과 관련한 고전적 사회주의의 일반적 문제점과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식상의 광장공포증 agoraphobia, 혹은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Hodgson의 지적은 새겨볼 만하다. Geoff Hodgson(1999), Economics & Utopia, p. 61.

47 Humberto Marquez(2005), State-Financed Experiment in Venezuela’s Solidarity Economy, IPS.

아니고 시장력이 지배하지도 않는 중간 영역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생산 기업이 정부, 국유기업과 공급 계약 체결을 할 때 우선적인 협상 대상이 되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고 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경우는 일종의 관계적 계약 relational contract⁴⁸이다. 즉 자원의 배분과 교환은 시장에서 작동하게 하지만, 이윤 중심이 아닌 ‘사회적’ 내용을 지니도록 정부와 공동체가 지원하여 유인을 지니도록 만드는 체계는 더욱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래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과거 국가와 자본, 혹은 계획과 시장의 이분법을 탈피하여, 경제 주체로서 공동체를 주도적으로 포함시켜 계획과 시장의 혼합 형태인 연대적 시장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노동자 참여와 민주주의

다음으로 21세기 사회주의 해석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신헌법의 특징을 한마디로 ‘참여민주주의’라고 정의했을 때,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참여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화가 추진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최소한 지역과 기업 수준에서라도 대중이 스스로 지배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수준의 의회민주주의에서 입법부가 정치적 주권을 대리 집행하듯이 경제적 수준의 자본주의 기업에서는 계약

48 기업들이 자원을 거래할 때 공개적인 시장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이해와 충성의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기업들의 수직적 통합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한다.

관리자가 재산을 집행하는 게 정치와 경제의 통합된 조직 운영 원리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는 소유자가 직접 재산을 관리한다는 의미다. 대중들 스스로 정부 정책을 고안한다면 그러한 정책은 대중의 선호를 반영하기 때문에 분권화의 이익을 가져온다. 의회민주주의는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대중을 대표하지 못하는 이익 그룹과 미디어에 의해 좌우되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분권화 과정에서 대중들이 기업 경영에 대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면 사회적 통제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지니게 된다.

결국 볼리비안 혁명 이행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여민주주의의 선순환’ 과정이다. 왜냐하면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참여가 일반화될 때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상식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참여의 증가는 정치적 민주주의 발전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인간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 영역에서 민주적 참여가 민주주의의 우선적 과제이고 이것은 가정, 공동체, 그리고 정치적 제도로 확장되는 것이 보편적인 학습 과정이다.

또한 참여 사회가 참여적 구조의 일반화를 요구한다고 했을 때 참여적 문화 또한 필수적이다. 따라서 경제적 영역에서 ‘연대성’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는 인간의 이기적 선호를 바꾸는 중요한 공간으로 작용한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말하는 연대적 경제 혹은 사회적 경제는 부유층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벤담주의 경제학을 넘어, 정부가

빈곤층에 관심을 지녀 그들에게 소득을 이전시켜 주어야 한다는 롤스주의 경제학에 기반한다. 결국 그것은 벤담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기적 선호의 고정 불변성을 부정하고, 연대적 경제를 통하여 이타적 선호를 사후적으로 학습한다는 내생적 선호 이론을 함의한다.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선호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불변의 것이 아니라 이타주의를 지향하는 정부에 투표함으로써 정치적 의식이 형성되고, 이타주의를 지향하는 기업의 성과와 공유함으로써 경제적 의식이 형성된다. 인간이 만든 제도 속에서 만족을 느끼고 이해관계를 제도와 공유할 때 이타적 선호는 형성된다는 제도와 선호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결국 공동경영을 통하여 노동자들 사이에 연대성이 구축되고, 이 연대성이 다시 경제적 안정과 신뢰를 강화하는 경제적 양성 순환처럼 이타주의를 지향하는 정부에 유권자가 투표하고 이타적 제도를 통하여 교육하고 이타적 정책을 실시한다면 정치적 양성 순환 또한 지속된다.

결국 상이한 영역에서 민주주의의 동시적 진전은 양성 피드백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 준다. 이러한 양성 순환은 누적적 과정을 거쳐, 상이한 종들의 공존 형태가 지속되더라도 결국에는 재산과 권력 관계에 대한 궁극적인 전환을 가져온다는 메시지를 함유한다. 따라서 비록 현재 베네수엘라 경제에서 여전히 사유 부문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지라도 베네수엘라의 미래가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

혁명에 대한 조심스런 전망

노동자 참여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단순한 부식을 넘는다. 왜냐하면 생산의 민주적 통제와 자본주의 사적 소유의 기업 형태인 위계질서와는 근본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확인하게 만들고 실행을 통한 학습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킨 것은 역설적이게도 계속적인 자본의 자기 파괴적인 행위였다. 1998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만 해도 차베스는 상당히 온건한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기득권층의 계속적인 자기 파괴 행위는 시민과 자본 요구라는 두 가지 모순적 요구 상황에서 전자에 대해 점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정치적 정당 혹은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지 않았던 정치인이 점차 국가 권력 전복에 대한 도전과 직면하면서 실용적인 학습 효과를 경험하게 되고 기존의 교조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실천적 기반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 대중들이 차베스를 인도하는 방향을 인지할 기회를 실천 속에서 찾게 되고 더욱 더 급진적인 정책을 가속화하게 되었다.

개혁에서 혁명까지 모든 변화는 소유, 통제, 분배에서 기존에 형성된 권력 균형의 변화를 가져오기에 충돌이 존재하지 않은 역사란 존재하지 않는다. 볼리비아 혁명이 특이한 점은 혁명의 문제가 아닌 개혁에 대한 기득권층의 반발이 오히려 혁명적 변화를 가속화시킨 아이러니가 누적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볼리비아 혁명 해석에서 주목할 점은 이행을 조금하게 서두르지 않고 ‘실행을 통한 학습’ 전략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의 문

제점들을 스스로 제거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과정이다. 차베스 또한 지난 2005년 2월 인삿팔 기업의 공동경영에 대해서 실행을 통한 학습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구조는 실험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필요하다면 그것을 조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델을 고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추진하는 공동경영기업은 각 지역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인삿팔은 북동 지역 내생적 발전의 중심지이며, 알까사는 남동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상황을 볼 때, 공동경영의 성과가 입증되기만 한다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본다.

다른 한편에서 차베스 정권의 경제 정책은 점진적 개혁이고 재분배 정책이 중심이기 때문에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한다고 규정하기도 한다.⁴⁹

영국의 『가디언』도 2006년 5월 “현재 단계에서 볼리비아 혁명은 전후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

49 James Petras 같은 경우,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 비교하면서, ‘볼리비아 혁명’을 새로운 뉴딜식 사회민주주의 개혁이라고 부른다. Jonah Gindin(2004), Weighing the Revolution, Venezuelanalysis.com. Mark Weisbrot 또한 베네수엘라 정부의 경제 정책을 유럽 사회민주주의와 유사하다고 평가한다. Mark Weisbrot(2005), Economic Growth is a Home Run in Venezuela, Knight-Ridder News Service.

현재 쿠바 대사이면서 차베스의 친형인 아단 차베스(Adan Chavez)도 알란 우즈(Allan Woods)와의 인터뷰에서 차베스 또한 이른바 ‘제3의 길’을 고려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수많은 토론과 검토 끝에 차베스는 볼리바리안 혁명에서 제3의 방식은 가능하지 않으며 사회주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는 사회주의는 ‘인간이 자본 위에 있는 체계’라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사회주의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⁵⁰

베네수엘라 연대성 경제의 청사진을 그린 Perez-Marti에 따르면 제3의 길은 국가와 시장의 결합이라면 제4의 길은 국가, 시장 그리고 연대성의 결합이라고 설명한다. 국가와 시장은 서로의 결점을 보완하는 중립적 요소라기보다는 정치적 요소라 인식하고 연대성을 미래 사회의 본질적 요소라고 규정할 때, ‘인간이 자본 위에 있는 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 또한 연대성이라고 봐야 한다.

과거 모든 혁명 정권에서 연대성을 증진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을 편향적으로 인식한 오류를 지녔었다. 혁명적 엘리트들이 민중을 교육하거나 지도해야 한다는 엘리트주의적 발상은 결국 관료주의 문제로 귀결되었다는 게 현실 사회주의의 생생한 경험이다. 베네수엘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연대성을 실현할 기회를 상실했던 사람들에게 기회, 즉 권력을 주면 그들 스스로 그것을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연대성은 강화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2001~2007년 경제 발전 계획이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인 빈곤 문제와

50 Allan Woods(2005), For the Bolivarian Revolution there is no ‘third way.’ We must choose socialism, Marxist.com.

종속적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그 이후 발전 계획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요소가 더욱 확대된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점을 빼놓을 수는 없다. 사회적 생산 기업들이 석유 가격 상승에 따라 경기 호황기에는 생존할 수 있지만,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포위된 맥락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지니는가의 문제다.

일반적인 교환 규칙은 수요, 공급에 따른 시장력에 따라 추동되며 기술에 대한 접근과 자금 조달 또한 시장력이 지배한다고 했을 때, 사회적 경제 부문은 언제라도 쉽게 침식당한다. 물론 현재 자본주의적 기술과 금융에 대한 평행추의 역할을 차베스 정권의 금융적 지원과 제도적 보장이 담당하지만,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지 여전히 미지수다. 물론 그러한 유보적 판단의 결절 지점은 두 말할 나위 없이 현재 실험의 경제적 성공과 장기적인 경제적 생명력에 달려 있다. 현재 진행되는 실험적 기업에서 생산성 개선과 같은 긍정적인 경제 지표와 노동자들의 만족도와 근로 의욕 증가와 같은 실증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생산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없다는 게 입증된다면 언제라도 석유 가격 동향과 정치적 권력의 향배와 운명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생산 현장에서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려는 차베스 정권의 견지에서 대규모 기업에서 생산관계 전환의 성과, 즉 객관적 ‘입증 지표’ 혹은 모범 사례를 제시해야만 그 확대가 탄력을 받는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사회적 생산 기업들이 과거에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진

한계 기업들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차베스 정권은 사회적 생산 기업이 정부의 지원과 재투자 없이도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한계 기업의 특성상 노동자 참여와 열정을 통한 노동 생산성 증가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낙후된 생산 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⁵¹

마지막으로 사회적 생산 기업의 혁신에 관한 문제인데,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면 노동 현장의 기술적 문제들, 기업 운영에 관한 참신한 의견들은 고려된다. 그러나 노동자 참여는 전략적 의사결정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며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성장과 혁신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판은 소규모 기업에서 노동자 참여 혹은 공동경영이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대규모 기업에는 비효율적이라는 이론적, 실천적 경험에 기반하기에 쉽사리 무시할 수는 없다.

‘대안은 없다’라는 80년대 초 대처^{Thatcher} 수사학이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는 새 세기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메시지는 지구 저편의 에피소드라고 무시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인간’ 그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는 신자유주의적 질서 아래, 인간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 현장에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실험 그 자체만으로도

51 경쟁적인 선별 과정도 주로 경제적 맥락에 의존한다. 자본주의 제도적 맥락에서는 자본주의 기업이 협조적 기업보다 생존과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또 다른 제도적 맥락은 협조적 기업을 선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협조적 은행과 금융제도 구축 등 제도 변형을 통해 협조적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더욱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다. 「5-Factories」에서 알까사의 이사인 엘리오 싸자고^{Elio Sayago}의 다음 멘트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약 서로 이해관계를 지닌 우리들을 위하여, 새로운 인간관계 건설에서 우리의 노동자, 우리의 민중들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 발전의 잠재력을 가로막는 장벽을 차단하는 것을 보장받게 된다.”

차베스는 2006년 9월 9일 카라카스에서 열린 대선 유세에서 12월 재집권에 성공하면 단일한 정당인 ‘볼리바리안 혁명당’을 창당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사회주의는 죽지 않았고 잠들어 있을 뿐이다. 위대한 사회주의적 정당은 다시 일어선다”라며, “전 세계 위대한 혁명적 정당들과 강력한 연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인간 발전의 잠재력을 가로막는 장벽을 차단하여 위대한 사회주의 정당의 야망을 펼칠지, 아니면 실험실의 배아 상태에서 영원히 멈추어 잠들어버릴지 그것의 판가름은 공동경영의 성공 여부라고 선불리 단언해 본다.

“소연방과 공산주의 이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혁명을 규정한 미국을 비롯한 반혁명 세력의 의도를 무력화시키고 볼리비안 혁명이 지속적으로 전진하는 데서 사회적 생산 기업의 경제적 성공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석유, '악마의 배설물' 에서 '축복의 씨앗' 으로

이상동

- 1 들어가며: '네덜란드 병' 에 걸린 베네수엘라
- 2 '석유-국가 체제' 의 역사
- 3 석유 산업 개혁의 내용
- 4 석유 산업과 사회적 경제
- 5 베네수엘라의 상식에서 배운다

VENEZUELA

차베스 정부의 석유 산업 개혁은 석유 산업 그 자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차베스 정부는 석유 산업과 비석유 산업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수많은 기금을 통해 석유 수익을 다른 산업 발전의 종자로 삼고 있다. 대표적인 게 '거시 경제 안정화 기금'과 '사회 경제 발전 기금'이다.



¹ 들어가며: ‘네덜란드 병’에 걸린 베네수엘라

‘네덜란드 병’이라 불리는 경제 용어가 있다. 우리에게 ‘중동 병’이라고도 알려진 이 말은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한 국가의 산업 경쟁력, 특히 제조업 경쟁력이 오히려 뒤처지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1977년 경제학자들이 명명한 용어다. 후속 학자들은 어떤 국가가 특정 상품에 대한 의존이 지나치게 높아 경제 구조가 왜곡되고 결국은 환율 위기를 겪게 되면 이 용어를 적용하곤 했다.

2005년 석유 생산량 세계 8위, 추정 매장량 세계 1위의 베네수엘라 역시 서방 세계에서 붙인 ‘네덜란드 병’의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인구 2600만, 남미 제3의 GDP를 보유한 만만치 않은 경제 규모와 스페인 식민지 독립 투쟁의 자랑스러운 역사 그리고 안정된 민선 정치의 오랜 경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베네수엘라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1988년의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자(〈도표 5-1〉). 당시는 베네수엘라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의 막바지로, IMF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협약을 체결하기 직전이었다.

GDP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인플레이션은 30퍼센트에 육박하였으며 실업률은 약 10퍼센트 수준이다(다음해인 1989년의 84.5퍼센트를 필두로 이후 10년 동안 연 평균 50퍼센트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시작된다). 석유가 벌어들인 막대한 외화에도 불구하고 외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 580억 달러에 달하고 불리바르화의 가치는 급락하였다. 그뿐 아니라 빈곤 가계가 전체의 절반인 50퍼센트를 넘어선 상태였다.

유엔 중남미 경제위원회(ECLAC)는 중남미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정리했는데 예컨대 첫째, 무분별한 천연 자원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 둘째 저임금 구조 온존의 산업 전략, 셋째 협소한 내수시장과 낮은 구매력, 넷째 다국적 기업에 의존한 세계 경제에의 편입 전략 등이 그것이다. 〈도표 5-1〉의 각종 지표는 이들 문제의 필연적인 결과다. 〈도표 5-2〉를 통해 소위 ‘네덜란드 병’의 현상과 ECLAC가 지적한 문제들을 좀더 정확히 알 수 있다.

먼저, GDP에서 석유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19.1퍼센트에 이른

1 사회 경제 지표는 90년대 말에 이르러 더욱 악화되었으나 여기서는 먼저 1988년의 지표들을 보기로 한다. 90년대 말의 결과는 베네수엘라의 구조적 문제와 9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의 합작품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나누어 보기 위해, 즉 구조적 문제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필자의 견해를 보이기 위해 80년대 말의 지표를 먼저 보여주기로 한다.

도표 5-1 __ 1988년 베네수엘라 주요 사회 경제 지표

거시 경제 지표	
GDP 성장률	-3.51% (89년 기준)
인플레이션	29.5%
실업률	9.60% (89년 기준)
외환과 국제수지	
환율가치 상승률	- 140%
외환보유고	70억 달러(전년 대비 40억 달러 감소)
경상수지(무역수지)	- 580억 달러 적자
사회 경제 지표	
지니계수	44.9
빈곤율	53.5%
극빈율	22.0%

출처: 1)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2) 베네수엘라 통계청
3)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05.

도표 5-2 __ 1988년 당시 주요 산업 부문 현황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성장률(표준 가격 기준 전년 대비)	수출 비중
석유 부문	19.1 %	8.03%	74.7%
- 원유와 천연가스	14.3 %	4.09%	-
- 정유 산업	4.8 %	21.67%	-
비석유 부문			-
- 농업	5.6%	4.64%	-
- 제조업(정유 산업 제외)	17.7%	3.43%	-
- 서비스 부문	48.8%	-	-
기타(전기, 수도, 건설 등)	8.8%	-	-

출처: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다. 그 가운데 제조업에 속하는 정유 산업을 제외하면 광업에 속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부문이 전체 GDP의 약 15퍼센트에 해당한다.

특히 석유 부문은 전체 수출의 74퍼센트를 차지한다. 다시 말해 천연 자원 수출이 경제의 중심축인 셈이다. 한국의 경우 광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0.3퍼센트인 것과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일대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석유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과 잠깐 비교해 보자. 1995년 한국의 30대 기업 집단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전체 GDP에서 15퍼센트에 이른다. 그리고 매출액 기준으로 1999년 전체 수출에서 30대 기업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68.9퍼센트다(최승노, 『2000년 한국의 대규모 기업 집단』, 2000.). 비교 연도가 다르고 무엇보다 상품의 특성과 종류가 다르지만,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 수치가 대단히 비슷하다.

베네수엘라 경제의 두 번째 특징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는 점이다.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 48.8퍼센트는 한국의 서비스업 비중 수치와 유사한 값이지만, 문제는 제조업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비스업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생산량 기준으로 보았을 때 베네수엘라는 원유 생산량 세계 8위의 산유국(2005년 기준,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p. 63.)이고 추정 석유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1위를 비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석유에서 벌어들인 부가 생산적 활동과 산업 기반 확충에 재투자되지 않고 왜곡된 분배 과정을 거쳐 서비스업의 불균형적인 확대를 초래했다.

마지막으로 농업 부문의 붕괴다. 석유가 산업화되기 전인 1920년대까지 베네수엘라는 전통적인 농업 국가였다. 당시 GDP의 1/3에 달

하던 농업은 50년대에 이르러 전체 GDP의 1/10 이하로 떨어져 버렸다. 전체 국토의 20퍼센트에 달하는 농지를 보유한 베네수엘라는 도시화와 경제 구조 변화의 와중에 농촌의 노동력을 크게 잃어버렸다. 1975년 전체의 21퍼센트를 차지하던 농촌 노동력은 2005년 현재 약 14퍼센트로 감소했다. 동시에 도시에는 값싼 노동력을 지닌 빈민들을 양산함으로써 <도표 5-1>에서 보듯 높은 빈곤율을 보이게 된다.

베네수엘라 경제의 오랜 구조적 문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석유 위주의 취약한 수익 구조, 생산 기반 시설의 미비와 서비스업의 비대화 그리고 농업 붕괴로 인한 저임금 구조가 악순환의 고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치 구조와 계급 구조가 외화 수익이 국내 수요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분배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과 현재 차베스 정부가 시행하는 '21세기 신사회주의' 정책은 모두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의 시도다. 두 정책, 특히 이 글이 주목하는 차베스 정부의 정책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석유 산업의 역사에 대해 짚어보기로 하자. 석유 산업의 역사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석유-국가 체제'로 일컬어지는 베네수엘라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길잡이다.



2 '석유-국가 체제'의 역사

- 석유는 어떻게 베네수엘라에서 '악마의 배설물'이 되었는가?

석유-국가 체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 번째 의미는 석유 산업이 경제 운영의 중심축이라는 것이고, 좀더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석유 산업이 정치와의 긴밀한 관계를 넘어 민족적 자존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사회와 경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석유 산업의 역사를 이해하는 게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석유-국가 체제의 역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된다. 석유가 발견되고 초기 생산을 시작한 '탄생기'(1912~1943), 석유-국가 체제가 점차 구조화되는 '강화기'(1943~1974), 석유-국가 체제의 천당과 지옥을 연이어 경험하게 된 '1차 국유화 시기'(1974~1998) 그리고 석유 산업의 개혁과 완전한 통제를 위한 '2차 국유화 시기'(1999~현재)다.

석유-국가 체제의 탄생(1912~1943)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은 1912년 영국-네덜란드계 다국적 석유 기업인 로열더치셸(Royal Dutch Shell)(2005년 매출 세계 3위 기업)이 들어오면서 시작된다. 사실 그 이전에도 마라카이보 호 근처에 많은 석유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었고 많은 개인 석유업자와 정유회사가 베네수엘라와 관계 중이었다. 그러나 탐사와 채굴 등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비와 높은 위험도 때문에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던 와중에 로열더치셸과 뒤 이은 미국계 기업 스탠다드 오일(Standard Oil)(현 엑슨모빌Exxon Mobil의 전신, 현재 2005년 세계 1위 기업)의 진출이 전환점을 마련했다.

1917년부터 석유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베네수엘라는 1929년 무렵 세계 2위의 석유 생산국이자 세계 1위의 석유 수출국이 되었다. 동시에 석유가 베네수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는데 1935년에 이르러 91.2퍼센트까지 도달한다. 1920년대와 1930년대 미국의 석유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자 가격 경쟁력에서 앞선 베네수엘라는 경쟁국 멕시코를 멀찌감치 제쳤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은 초기부터 수출 중심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자. 내수 시장이 협소했기 때문이다.

석유-국가 체제의 탄생기는 무자비하고 부패한 독재자 후안 빈센테 고메스 장군(Juan Vicente Gomez)(집권 기간 1908~1935년)의 통치 기간과 많은 부분 겹친다.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석유 탐사와 발굴을 적극 지원했고 외국 자본의 진출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미 1926년에 석유 수출로 정부가 벌어들인 돈은 나머지 수입원을 능가하게 되

었고, 이것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부패를 더욱 가증시켰다. 석유 산업, 특히 이권을 보장받은 외국 자본과 관료 체제와의 결탁이 시작된 셈이다.

석유-국가 체제의 강화(1943~1973)

두 번째 시기의 시점을 1943년으로 잡는 이유는 이해에 '탄화수소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독재자 고메스의 사망 이후 두 번째 대통령이 된 메디나^{Isaias Medina Angarita}(집권 기간 1941-1945)는 외국 자본에 넘어 간 석유 산업의 이권을 회수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수익에 대한 로열티와 세금을 대폭 높이는 탄화수소법을 통과시켰다. 메디나 대통령은 비록 군인 출신이었으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인물로 알려졌다. 메디나 정부는 분출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목소리에 따라 공산당을 합법화하고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헌법 개정에 나섰다.

탄화수소법은 세계적으로 석유 자본 카르텔과 민족주의가 처음 정면 대결한 사건으로 꼽힌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어서 석유회사 측은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회사의 막대한 이익과 유전 지대의 슬럼화를 공격하면서 석유회사 측에 새로운 계약을 요구하였다. 1920년대 멕시코의 석유 국유화 조치에 타격받은 석유회사 측은 대신 계약 기한을 40년으로 연장해주겠다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1950년대와 1960년대를 거치면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은 최초의 위기를 맞게 된다. 세계 석유 시장이

공급 과잉에 직면한 것이다.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자동차 문화로 대표되는 대량 소비 체제로 바뀌고 발전, 가정, 공장용 에너지원으로 석유가 석탄을 대체하면서 석유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수출로 재미를 본 산유국들은 너나없이 생산량을 늘리고 석유 가격은 계속된 인하 압력을 받게 된다.

수요가 늘어남에도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은 산유국들이 보기에 시장을 독점한 거대 석유회사 카르텔의 횡포가 낳은 결과였다. 드디어 1960년 일치단결된 5개 산유국-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베네수엘라-은 석유수출국기구(OPEC(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를 결성한다. 국제 정세도 OPEC의 결성에 일조했다. 1945년 아랍 연맹이 결성된 후 아랍 국가들은 석유 문제에 대해 각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하게 의식했고 1958년 혁명이 일어난 이라크는 아랍 국가들의 정치적 지원이 절실했다. 이란의 국왕은 1959년과 1960년에 엑손이 선두에 서서 실시한 제1, 2차 공시 가격 인하에 분노했다. 석유회사들이 이전의 관례를 깨고 협상이나 예고도 없이 공시 가격 인하를 발표해 버린 것이다.

OPEC의 결성에서 베네수엘라는 큰 역할을 했다. 당시의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현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이며 민주행동당의 설립자라 할 수 있는 베탄쿠르^{Romulo Ernesto Betancourt Bello}(집권 기간 1945~1948, 1959~1964)였고, 에너지부 장관은 세계 석유 시장에 대해 뛰어난 통찰력을 보유했던 경제학자 출신 페레스 알폰소^{Juan Pablo Perez Alfonso}였다.

베네수엘라는 이미 1948년에 소위 이익 반분협정-모든 석유 이

익에 대해 정부가 절반 몫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석유회사 측과 체결한 바 있다. 이 이익 반분의 원칙은 다른 산유국들을 결집시키는 슬로건이 되었다. 이 해에 베네수엘라는 후에 석유 산업 국유화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베네수엘라 석유회사’*Venezuelan Oil Corporation*를 설립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농업의 위기와 도시화가 가속화된다. 1935년 농업 인구는 전체 노동력의 60퍼센트, 농업 생산량은 전체 GDP의 22퍼센트를 차지했으나 1960년 농촌 거주자는 35퍼센트로 감소한다. 이로써 베네수엘라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도시화된 국가가 되었으나 동시에 역내 유일의 농산물 수입국이자, 농업 비율 최하위 국가가 되었다.

1958년 푼토피호협정으로 시작된 양당 협조 체제는 농업의 몰락과 도시의 빈민화를 막지 못했다.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긴 했으나 베네수엘라 지배 계급은 중동과 비슷한 정책적 실패를 범함으로써 국민을 소수의 석유 산업 수혜자와 다수의 빈민으로 양분화시켰다.

석유 산업 1차 국유화(1973~1998)

최초의 국유화로 특징지어지는 이 시기는 크게 둘로 나뉜다. 첫 번째 시기는 70년대의 고유가 호황기로 국부가 늘어나고 재정 지출이 확대된 시기다. 겉으로는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였지만 속으로 정치경제의 병폐가 깊어가고 있었다. 두 번째 시기인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저유가의 어려움에 닥친 정치경제가 그 취약성을 드러낸 시기이다. 호황기에 농업의 황폐화와 사회 양극화 그리고 정

치권의 부패를 방치한 것에 대한 죄과를 톡톡히 받은 셈이다.

1973년, 중동의 석유 감산으로 세계 석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부의 재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1972년에서 1974년 사이에만 4배로 증가하였는데, 정부는 늘어나는 수입에 맞춰 지출도 급속히 늘렸다. 이때 지나치게 확대된 정부 재정은 1980년대 저유가 시대에도 지출 규모를 줄이기 어렵게 만든다.

페레스 *Carlos Andres Perez Rodriguez*(집권 기간 1974-1979, 1989-1993)는 베네수엘라가 몇 년 사이에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자신의 첫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위대한 베네수엘라’ *La Gran Venezuela*라 이름 붙여진 프로젝트에는 물가 통제와 수입 증가를 통한 가난과의 전쟁, 수입 대체를 통한 국가 경제의 다양화가 포함되었다. 페레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석유 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하여 1976년에 이르러 완전히 달성하였다. 그리고 그해 오늘날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국영석유회사를 설립하였다.

OPEC 설립의 주역이었던 페레스 알폰소는 석유가 ‘악마의 배설물’ *devil's excrement*이 될 수 있다고 1960년대에 이미 경고했다. 인기는 없으나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 집행되지 않는 원인을 극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석유가 벌어들인 단기적 부 *wealth*가 정책의 긴급성을 감추어 버리기 때문이다. 스스로 경제학자였던 알폰소야말로 ‘네덜란드 병’이란 단어가 생기기 수십 년 전부터 문제의 핵심이 정치적 차원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간파한 뛰어난 정치가였다.

오일 붐은 오래 가지 않았다. 80년대에 들어서자 석유 가격 하락으로 인해 경제 발전 동력이 상실되고 금융 환경이 변화하여 외환 보유고가 격감한다. 외부 환경이 변화하자 그동안 추진해 온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의 실패가 분명해졌다. 결국 외환 위기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1983년 2월 볼리바르화의 평가절하와 '외환우대제도'—용도에 따라 환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이날의 악몽을 베네수엘라 인들은 '검은 금요일'로 기억한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하이메 루신치 정권(Jaime Lusinchi(1984—1989))이 출범한다. 현란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페레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루신치 대통령의 인기도 높았다. 루신치 대통령은 임기 내내 60퍼센트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포퓰리스트 정권은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역량이 없었다. 당시 유동성 외환 자금은 미화 3억 달러 이하로 떨어지고 베네수엘라 최악의 해 가운데 하나인 1989년을 맞았다.

1980년대의 긴축 정책과 1990년대의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은 저유가로 촉발된 경제 경색을 파멸에 가까울 정도로 몰고 간다.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외채 위기 상황에서 결국 베네수엘라 역시 긴축 정책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긴축 정책은 오히려 자산의 평가절하를 가져오고 거대한 자본 도피를 부채질하였다. 저유가와 동시에 국제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었고 해외로 도피한 자본은 본국 통화 가치의 하락 덕분에 오히려 저가에 본국 자산을 확대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1989년 페레스 2기 정부는 IMF의 구조조정을 적극

도입한다. 사유화, 공공 지출 감소, 자유화와 탈규제를 정부의 기본 정책으로 채택하고 통신, 항만, 석유, 철강, 항공 등 기간산업이 사유화되면서 외국 자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공언했던 인플레이션 차단은 지킬 수 없었고 오히려 빈민층은 더욱 확대되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질 임금이 하락하였으며 중산층은 더욱 줄어들었다. 1988년에서 1998년 사이의 10년간 평균 연간 인플레이션은 50퍼센트가 넘는다.

연이은 은행 위기로 또다시 대량의 자본 도피를 맞이한 베네수엘라는 90년대에 최고 70.8퍼센트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했고 물가와 환율 통제가 또다시 실시되었다. 1976년에서 1995년 사이에 베네수엘라는 거의 27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석유로부터 벌어들였으나 외채는 1978년과 1982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하였다. 이때 얻게 된 불명예스러운 별명은 낭비와 경제적 미개의 상징인 '사우디 베네수엘라'다. 1970년에서 1994년 사이에 외채는 GNP의 9퍼센트에서 53퍼센트로 올랐다. 1인당 소득이 감소하면서 1996년에 베네수엘라는 1인당 소득이 1960년보다 낮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결국 1995년 제협상을 통해 IMF로부터 14억 달러의 차관을 추가로 도입했으나 이는 더 많은 구조조정, 민영화, 외국인 투자와 함께 더 극심한 빈곤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토록 베네수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더욱 빠져들고 빈곤이 심각해지는 동안 정부의 석유 산업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자.

먼저 수십 년간의 석유-국가 체제 속에서 정부와 PDVSA가 더욱

관료화되어 갔다는 점이다. 민주행동당과 기독교사회당 양당은 집권당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득표율만큼의 정치적 지분을 다른 당에 할당해 왔다. PDVSA와 연관된 이권 역시 나뉘가지게 되었고 덕분에 PDVSA의 관리자들과 노동조합은 제어 장치 없이 특권화되어 갔다.

경제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데도 정부는 특권과 석유 이익의 분배 왜곡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기는커녕 PDVSA의 민영화를 통해 난국을 돌파하고자 시도한다. 루신치 정권은 1986~87년에 걸쳐 국영석유회사의 일부 하청을 민영화하는 조치, 소위 '석유 개방'^{Apertura Petrolera}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조치는 오히려 외국 자본의 이익을 확대시켰을 뿐이다. 이때 이권을 챙긴 다국적 기업들은 제대로 소득세와 로열티를 지불하지도 않는 등의 횡포를 부리게 된다.

1992년에 PDVSA의 경영에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조치가 취해지는데 그것은 아웃소싱 전략이었다. 아웃소싱은 핵심적인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 게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PDVSA는 경영과 관계된 중요한 업무까지 외국계 회사에 맡겨 버렸다. 대표적인 외주 업체가 PDVSA의 모든 데이터를 관리한 인테사^{INTESA}²다. 2004년 쿠데타 시기에 이들이 자본에 동조하면서 업무를 거부해 버리는 바람에 PDVSA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새로운 시스템에 이전 데이터들을 이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모든 주문과 선적 서류를 수작업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자본과업 이전에도 이미 인테사를 비롯한 많은

2 PDVSA가 미국계 회사인 SAIC와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 SAIC는 미국 『포춘』 선정 500대 기업 가운데 하나다. SAIC는 미국 국방 산업에도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 이 회사의 간부들은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데 두 명의 미국 국방부 장관과 두 명의 CIA 국장을 비롯해서, 미국 특수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리고 국가 안전국 출신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외주 업체는 결국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더욱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었다.

1980년대와 90년대의 약 20년간은 저유가 상황에 베네수엘라 경제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기간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OPEC 회원국들이 생산 쿼터 준수 약속을 깨면서 석유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1998년이 되어서는 배럴당 3.19달러에까지 도달했다. 1970년대의 석유 가격 호황기에 농업을 비롯한 기본 산업의 개혁에 착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60년에 제정된 토지개혁법(1960년 제정)은 이후 정부들에 의해 종종 무시되었다. 소농과 빈농은 거대한 도시 빈민층을 형성하였고 빈민들은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주는 떡고물에 매달리게 된다. 농업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고 농산물은 수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페레스 집권 2기의 3년 동안 60만의 노동자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업 노동자, 빈농, 중농의 상당수가 감소했다.

이것이 차베스가 물려받은 정치경제의 유산이었다. 차베스는 쿠데타 실패 이후 전국을 돌며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대중들에게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지배 세력은 여전히 사회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한 상태였다. PDVSA의 경영뿐 아니라 입법·사법 권력에서의 동맹관계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독점과 경제인 연합의 지지, 가톨릭과 베네수엘라노총^{CTV}의 연계도 굳건했으며 무엇보다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었다.

신자유주의의 극복, 제2차 국유화(1999~)

1999년 제정된 신헌법은 “경제적, 정치적 지배와 국가 전략의 이유로 인해 국가는 PDVSA의 전체 지분이나 석유 산업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체 전체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차베스 이전 칼데라 Rafael Caldera Rodriguez(1994-1999) 정부가 추진하였던 PDVSA의 민영화, 곧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과의 분명한 단절을 의미했다.

탄화수소법은 석유 산업의 국유화가 의미하는 바를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드러냈다.

“석유 탐사, 생산과 관련된 모든 국가의 활동은 공공의 이해public interest에 헌신”해야 하고 “모든 석유 관련 활동은 유기적, 통합적 그리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맞추어져야 하며 “자원의 합리적 사용과 환경 보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석유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은 대부분 건강, 교육과 거시 경제 안정화, 정부 저축 기금에 쓰여져야” 한다.

즉 신헌법과 탄화수소법에서 드러난 차베스 정부 국유화의 의미는 첫째, 자원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 둘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셋째 이익은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차베스는 여러 연설에서 “재국유화는 PDVSA에 대한 지배력을 재 획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석유 산업 개혁의 성패는 석유-국가 체제의 핵심 축인 PDVSA의 개혁에 있기 때문이다. 1999년 집권 이후 이상의 정책을 둘러싼 국내외의 조건은 점점 더 양호해지는 게 사실이다. 세계 석유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

고 내부의 쿠데타와 자본파업은 차베스의 승리로 돌아갔다. 차베스 정부가 소신 있게 석유-국가 체제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된 셈이다.

지난 7년여의 시간은 아직 차베스 정부의 개혁에 대한 성과를 논하기에는 짧다. 그러나 경제와 사회의 주요 지표들은 가파른 상승을 보였고 이번 대선의 결과는 국민의 높은 지지를 증명해 주었다.



3 석유 산업 개혁의 내용

- 석유를 '혁명의 씨앗'으로 만들기 위해

차베스 정부에서 외무부 장관을 맡은 알리 로드리게스라는 인물이 있다. 로드리게스가 차베스 정부에서 맡았던 네 가지 중요한 직책은 차베스 정부가 추진하는 석유 산업의 개혁 방향을 상징한다. 그는 차베스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 장관으로 일을 시작했고, 임기 중에 OPEC 의장(2000년)과 사무총장(2001년)을 역임했다. 그리고 2002년 중반부터 PDVSA 사장을 맡았다가 현재는 외무부 장관직을 수행 중이다.

이 직책들이 상징하는 석유 산업의 개혁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PDVSA 사장, 에너지 장관 :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의 핵심, PDVSA의 완전한 국유화와 국가에의 복속.

둘째, OPEC 의장, 사무총장 : 다국적 석유회사에 대항하고 안정적인 석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석유 수출국들의 신뢰 구축.

셋째, 외무부 장관 : 에너지 협력을 통한 국제적 연대.

로드리게스는 1960년대에는 게릴라전에도 참여했던 좌파 성향의 법률가이며, 1983년 이후 의회에서 줄곧 석유 정책을 다루어 온 손꼽히는 석유 전문가다. 그가 PDVSA의 사장으로 일할 때 서방의 한 언론과 행한 인터뷰를 보자(2004년 7월 24일, <http://www.venezuelanalysis.com>). 로드리게스와 차베스 정부의 혁명적 사고가 잘 녹아 있다.

“PDVSA가 갖는 사회적 비전은 인류애적이다. ... (중략) ... 우리의 전략은 분명하다. 기업이 지켜가야 할 원칙은 우리의 석유 자원을 좀더 가치 있게 하고 새로운 가치가 천연 자원에 더해지도록 매 단계를 재조정하는 일이다. 이것은 더 큰 의미에서 국가에 기여하고 바꿔 말해서 앞서 말한 문제들(가난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인용자 주)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많은 다른 것들과 함께 결국 우리는 국가의 일부분이며, 하나의 기업으로 존재하는 한에도 물론 그러하다. 즉 우리의 노력은 자연 자원에 단지 부가가치를 더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고 국가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단순히 증진시키는 게 아니며 기업의 수입을 단순히 증가시키는 것 역시 아니다. 인류를 좀더 가치 있게 하는 것이다.”

차베스 정부가 추진한 석유 산업 개혁의 구체적인 조치는 세 가지

정도다—PDVSA 개혁, 세금 개혁, OPEC 강화. 그 의미를 짚어 보자.

PDVSA 개혁

차베스는 1999년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PDVSA에 대한 분명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 중요성을 정확히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4만 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과 당장 맞설 여력이 없었던 것인지 그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대신 석유 산업에서 첫 번째 관심사는 OPEC을 통한 석유 수출국의 카르텔을 다시 강고히 하는 것이었고 취임 초기 2년 차베스와 석유 장관의 가장 중요한 일정은 석유 수출국들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OPEC에 집중하던 차베스 정부에게 PDVSA에 대한 전면적 개혁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오히려 반대 세력이었다. 2002년의 ‘자본 파업’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PDVSA의 “강력한 정치인-관리자-귀족 노동자의 연계”를 확인시켜 준 사건이었다. 차베스는 이 투쟁에서 승리한 이후 석유 산업의 ‘완전한 재국유화’를 주장하게 되었다. PDVSA는 지나치게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있어 마치 “국가 안의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1976년 PDVSA가 국유화된 이후 베네수엘라에서는 국가 소유의 석유회사를 어떻게 통제할지가 논쟁이 되어 왔다. 그리고 좀더 정확히 말해서 1976년의 국유화 조치는 관리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베네수엘라에 있던 외국계 회사들은 형식적으로만 베네수엘라 회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회사의 이름을 바꾸고 관리자들을 베네수엘라 인으로 바꾸었으나 초국적 자본에 대한 의

존성은 여전했고 석유 수익의 해외 유출 또한 여전했다.

당시 국유화에 비판적인 까를로스 멘도사라는 인물에 따르면, 이때의 국유화는 트로이의 목마 이상의 것은 아니라고 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은 반국가주의^{anti-statist}를 유지했고 이사회에는 초국적 자본의 관리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다. 전 소유자—초국적 자본—와 새로운 관리자는 서로 기술 지원 협정과 상품화 협정 등을 통해 연계했고 동시에 전 소유주는 협정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대단히 낮은 가격에 석유를 공급받았다.

차베스는 이사회를 PDVSA 출신이 아닌 석유 전문가로 교체했다. 이전까지의 이사회는 거의 완전히 관리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었다. 이사회의 직책은 관리자들을 감시 감독하는 자리가 아니라 마치 경력 있는 관리자들의 승진 자리와 같았다. 이러한 수십 년의 전통을 차베스는 깨 버렸고 실제로 2002년 4월의 사상 유례없는 자본-노동자 동맹 파업은 고위 노조 간부들이 이러한 전통에 반발한 성격을 일부 지니고 있었다.

2002년과 2003년의 자본파업 기간 동안 PDVSA는 무려 1만 8000명 이상의 인원을 해고한다. 대량 해고는 결코 차베스가 치밀하게 준비한 게 아니었다. PDVSA의 새로운 경영진은 노동자들이 고의적으로 62일 동안이나 연속적으로 업무를 거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다. 4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PDVSA 노동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해고됨에 따라 석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차베스 정부는 PDVSA에 대한 지배력을 확고히 하는 성과를 얻었다. 차베스에 우호

적인 노동자들과 다시 돌아온 퇴직자들의 자발적인 관리를 배경으로 정상화에 성공한 것이다.

PDVSA에 대한 개혁은 관리 구조의 변화뿐 아니라 효율성과 이익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의 개혁을 포함한다. 차베스는 “PDVSA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은 PDVSA에 대한 효율성과 이익성을 높임으로써 더 많은 지분을 국고에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해 왔다.

PDVSA는 지난 25년 동안 효율성이 점점 떨어졌고 동시에 정부 재정에 기여하는 몫도 점점 떨어져 왔다. 1980년대에 PDVSA의 수입 가운데 29퍼센트가 비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를 정부에 납부했으나 1990년대에는 이 비율이 완전히 역전되어 수입의 약 64퍼센트를 비용으로 사용했다. 결국 PDVSA는 2000년에 남미 50대 기업 가운데 규모에서는 가장 크고 효율에서는 가장 낮은 위치에 도달했다. 물론 이 수치는 다른 국영석유회사들인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Petrobras}, 멕시코의 페멕스^{Pemex}, 에콰도르의 페트로에콰도르^{Petroecuador} 등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³

1990년대에 PDVSA의 효율성이 떨어진 데에는 국제화 정책과 회계 방법의 변화에 상당 부분 그 원인이 있다. PDVSA는 1989년에 새로운 회계 방법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해외 비즈니스와 국내 비즈니스의 수입지출 지수를 통합하는 것이었다. 베네수엘라 바깥에서 발생한 비용과 손실을 베네수엘라 내의 재정과 이익에 마이너스가 되게 수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국내와 국외의 계약을 각

3 PDVSA는 자산 수익률에서 24위, 판매 수익률에서 49위, 고정자산 수익률에서 50위.

각 다른 회계로 분리하였다. 회계 통합의 결과, 해외에서 발생한 막대한 비용이 수입되는 결과를 낳는다. 전체 수익과 정부 이전 몫이 줄어든 것이다. 이 회계 방법이 비난받는 또 하나의 결정적 이유는 이것이 고위층의 해외 자산 도피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았나 의심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회사의 경영주는 손쉽게 자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그로 인한 손해는 회사에게 지울 수 있다.

차베스 정부는 효율성과 이익성이 떨어진 근본적인 원인을 관리 구조의 문제에서 찾았다. 먼저 차베스는 이익성이 없는 PDVSA의 하부 업체들을 처분하고 조직을 동서 두 개의 지부를 중심으로 재조직화하였다. 정부의 지배력이 강화되기는 했으나 노동자들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11명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steering committee}에 2명의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면서 공동경영 제도라는 실험을 조심스럽게 시작하기도 한다.

세금 개혁

세금 개혁의 목표는 외국 자본과 국영기업 관리자들에게 흘러가는 이권을 되찾고 정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데 있다. 1943년 이래 정부는 석유 1배럴당 16.6퍼센트의 로열티 지급을 PDVSA와 외국 기업들에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이 로열티는 외국 투자자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1퍼센트까지 낮추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한다. 차베스 정부는 2001년 새로운 석유 개혁과 함께 이 로열티를 1배럴당 판매 가격의 30퍼센트로 조정하였다. 이전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대신 세금에 대해서는 67.6퍼센트

에서 50퍼센트로 감소시켜 주었다.

정부가 처음 이런 변화를 제안하자 반대 진영은 로열티가 두 배로 올라가면 베네수엘라와 외국 투자자들의 협력이 깨지고 외국 직접 투자를 실질적으로 없애버리게 될 것이라면서 울부짖었다. 정부는 로열티가 소득에 비해 추적이 훨씬 쉽다는 점과 기업들이 그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비용을 높이려고 시도해 왔다는 점을 내세웠다. 정부의 주 수입원을 세금에서 로열티로 전환함으로써 정부는 기본적으로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다.

석유 수입 징수 과정의 변화를 추진한 두 번째 이유는 PDVSA의 효율화와 관계된다. 차베스와 그의 지지자들은 PDVSA가 그의 유일한 주주인 중앙 정부에 주는 재정이 지나치게 작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회사를 좀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지출 정도와는 무관하게 정부에 대한 기여를 보이는 것이다. 즉 소득세 중심에서 로열티 중심으로 징수 시스템을 바꾸게 되면, 소득세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그다지 필요 없는 일이 되고 회사를 효율화시켜야 하는 강력한 동기가 발생하게 된다.

OPEC 강화

차베스가 집권하기 전까지 OPEC의 회원국들은 정기적으로 쿼터를 무시했다. 베네수엘라는 특히 회원국들 사이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파트너 가운데 하나였다. 러시아나 멕시코와 같은 비회원국들과 함께 할당된 쿼터를 자주 깨뜨렸고 이것은 석유 가격의 가파른 하락을 가져오는 빌미가 되곤 했다.

차베스는 그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OPEC을 강화하고 석유 국제 가격을 높이는 것에 두었다. 차베스는 즉시 알리 로드리게스를 에너지 석유부 장관에 임명하고 PDVSA와 석유 정책을 관장하게 했다. 새 정부 100일 동안 로드리게스는 대부분의 OPEC과 비OPEC 산유국들로부터 생산을 감소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석유 가격은 즉각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1998년 배럴당 평균 12.28달러에서 1999년 평균 17.47달러까지 올라갔다.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 전쟁과 관련되지 않은 가장 큰 폭의 상승 가운데 하나였다. 차베스와 로드리게스는 OPEC 회원국들이 22~28달러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시스템을 상호 확신하도록 노력하였다.

차베스는 첫 해의 성과에 자신감을 갖고 2000년 9월 27일 카라카스에서 열린 OPEC 정상회담에서 베네수엘라 정부의 여섯 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한다. OPEC 내에서의 대화 건설과 신뢰 회복을 통해 OPEC을 강화하고 석유 가격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베네수엘라의 리더십을 높이고 아랍·이슬람권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제안은 회원국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었고 현재까지 대부분 성취한 것으로 보인다.



4 석유 산업과 사회적 경제

차베스 정부의 석유 산업 개혁은 경제적으로 성공했는가? 아니 그 전에 경제 발전은 무엇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신사회주의 혁명'을 비전으로 채택한 베네수엘라 경제를 평가하기에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통찰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차베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는 '사회적 경제'라 이름 붙여 있다.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자본의 성장이 아니라 인류의 발전, 곧 인간 능력의 성장 그 자체다. 헌법은 이것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20조, 102조와 299조에서 "인류의 발전, 개성 증진의 권리 그리고 개성 실현을 위한 잠재력의 증진"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참여성과 민주성을 더해 사회적 경제의 핵심 가치로 삼는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엄밀한 평가는 여러 연구자와 독자들 그리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몫으로 남기기로 하자. 대신 이 글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실험을 수행하는 베네수엘라 국민과 차베스 정부의 중간 성적은 과연 어떤지 짚어보기로 한다. 특히 석유 산업으로 벌어들인 부가 '인류의 발전'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적절히 사용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베네수엘라의 최근 거시 경제 지표는 양호한 수준 이상이다. 먼저 GDP 성장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 10퍼센트에 가깝다(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가장 최근 수치인 2006년 3분기 성장률이 10.2퍼센트에 달했다). 이처럼 GDP 성장률이 높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게 상례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50퍼센트를 지속적으로 상회 하던 수치가 점차 떨어져 10퍼센트대에 진입하였다.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경제 운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포획한 셈이다.

도표 5-3 __ 최근 5년간 주요 거시 경제 지표

구분	단위	2002	2003	2004	2005	2006(전망)
GDP 성장률	%	-8.9	-7.7	17.9	9.3	9.0
GDP	U\$십 억	95.4	85.5	111.2	145.2	167.1
인구	백만 명	25.1	25.5	26	26.5	27.1
인플레	%	22.4	31.1	21.8	15	14
경상수지	U\$십 억	7.6	11.5	15	14.5	15.3
대외 수입	U\$백만	11,673	8,337	15,160	33,186	30,600
외환보유고(연말 기준)	U\$백만	14,860	21,366	24,208	38,523	-

출처: KOTRA 자료

경상수지와 대외 수입 그리고 외환보유고를 보자. 경상수지는 최근 3년간 안정적인 흑자를 보인다. 대외 수입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

구하고 수출 호조와 서비스 수지의 개선에 힘입어 경상수지는 안정적인 흑자를 보인다. 외환보유고의 성장 속도도 빠르는데, 외채를 상환해서 외환을 저축할 여력이 늘었고 외국인 투자는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 1990년대 외채가 증가하고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자 이것을 메우기 위해 외환이 쓰이고 다시 외환 부족으로 해외 차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악순환에서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들의 삶이 고단해진다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계가 피부로 느끼는 경제 상황, 곧 물가와 고용 통계도 대단히 긍정적이다. <도표 5-4>를 보자. 2005년 들어 소비자 물가가 1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고 실업률도 11퍼센트 대까지 떨어졌다. 임금 상승률은 최근 2년간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훌쩍 넘어 실질 소득의 증가로 이어졌다.

도표 5-4 __ 주요 물가금융 지표와 고용 통계

지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4	12.3	31.2	27.1	19.2	9.8
통화 상승률(M1/%)	31.5	14.2	15.6	42.5	41.4	9.6
정규 고용 인구(%)	47	49.9	48.6	47.3	51.4	54.1
실업률(%)	13.7	13.5	14.8	17	13.9	11.2
월 최저 임금(천 원)	144	158	190	247.1	321.2	405
임금 상승률(%)	20	10	20.4	30	36.5	27.4

출처: KOTRA 자료

베네수엘라 국민과 차베스 정부에 축하의 박수를 건네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는 경제 호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 질문은 산유국 경제는 고유가 상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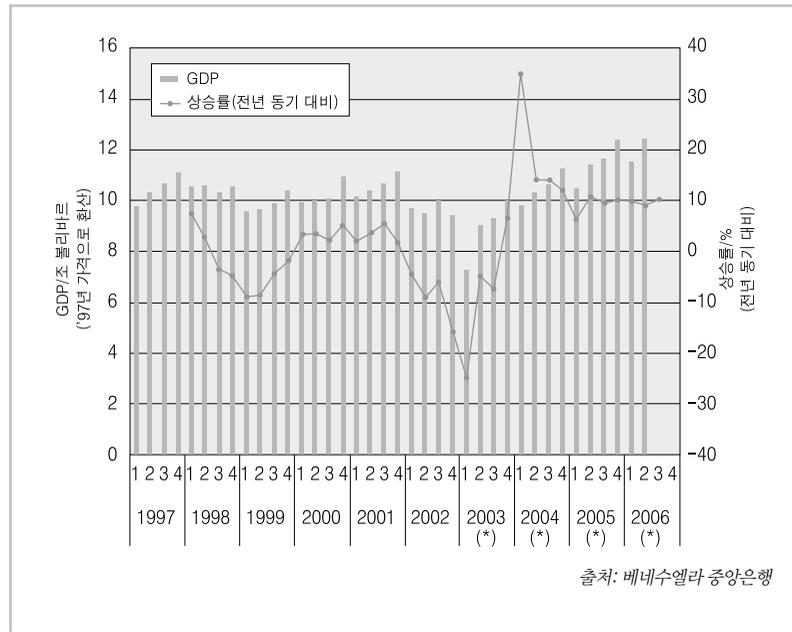
반전되면 다시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예측과 관련된다. 차베스 반대파들의 부정적 평가 또는 해외의 유보적 평가는 이 예측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심하게 얘기하면 현재의 경제 성장은 석유가 만들어 낸 환상일 뿐이고 실제의 추세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리고 단기적인 통계 수치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현재의 호황기는 직전의 불황기에서 회복된 것일 뿐인데도 성장률 수치 자체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엄청난 인플레이션, 치욕스런 IMF 구제금융 그리고 살인적인 실업률 등의 암울한 경험을 한 나라들은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2004년도와 1991년도의 기록적인 GDP 성장률 15퍼센트와 9.7퍼센트는 상당 부분 한 해 또는 두 해 전의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연유한다.

두 번째 질문은 경제 구조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첫째 질문에 대한 답이 긍정적이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경제 구조가 부문간 선순환 관계를 강화시키고 외부 요인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변화해야만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경제 성장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 GDP와 그래프를 보자. 두 개의 그래프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최근 10년간 분기별 GDP를 전년 동기와 대비시킨 그래프고 다른 하나는 최근 약 50년간의 연간 GDP와 전년 대비 성장률 그래프다. 두 그래프의 GDP는 비교를 위해 각각 1997년과 1957년 가격으로 환산하였다.

도표 5-5 __ 분기별 GDP 성장률 : 최근 10년



〈도표 5-5〉에서 차베스 정부 집권 기간 동안의 경제 성장이 안정적이지를 평가해 보자. 집권 전체인 1998년 1분기부터 하락하던 성장률은 급기야 3, 4분기에는 마이너스 값을 보인다. 성장률 감소 경향은 집권 해인 1999년 1분기까지 계속되다가 2분기부터 증가 경향으로 반전되고 2000년 1분기에 가서야 플러스 값이 되었다. 이후 약 2년에 걸쳐 2~5퍼센트의 성장률을 보이던 베네수엘라는 갑자기 2002년과 2003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최저점은 03년 1분기 -24.9퍼센트다.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을 시작하고 2004년에는 1부터 4분기가 모두 10퍼센트를 넘는 고성장을 한다. 그리고 2005년 1분기 이후부터는 10퍼센트 근방에서 상대적으로 일정한 성장률을

지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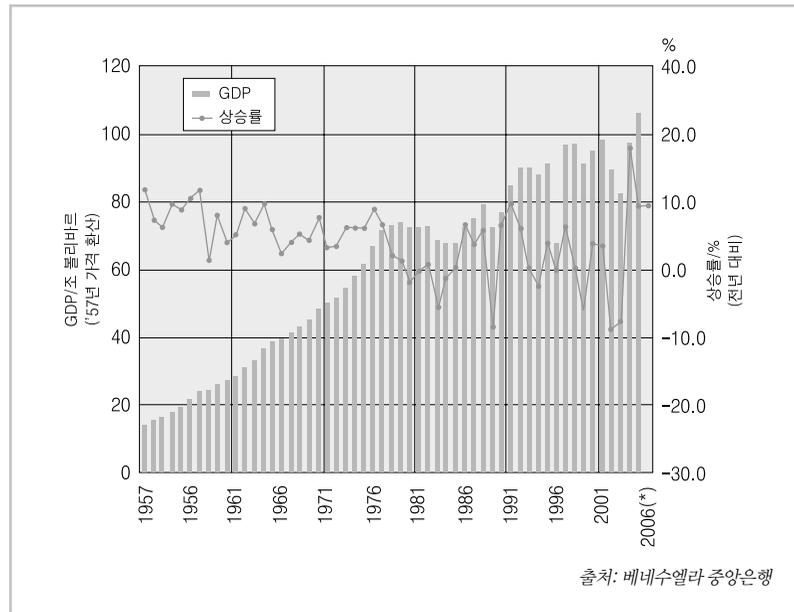
GDP 성장률이 상승/하락 사이에서 상호 전환되는 특정 시기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석유와 관련이 깊다. 먼저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되는 1999년 1, 2분기는 세계 석유 가격 안정화와 관련되며, 다시 안정-하락으로 전환되는 2001년 4분기는 PDVSA 이사의 대량 해고와 관련 있다. 그리고 급락-상승으로 추세가 변하는 2003년 1분기는 자본과업이 종결된 때다.

이번에는 GDP 값을 4분기씩 끊어서 보자. 매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차례대로 GDP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해 이런 추세에서 벗어난 1998년과 2002년이 특이한 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각각의 다음해인 1999년과 2003년의 상승률은 특수한 상황의 특수한 값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GDP 상승률은 전년 대비 값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두 가지 사실로부터 무엇을 유추할 수 있는가? 차베스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예상치 못한 특수한 요인이 작동하지 않는 2000년에서 2001년 사이 그리고 2004년 이후의 실적을 중심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시기는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안정되어 있다. 2000년과 2001년은 약 2~5퍼센트대에서 안정되고 2004년 이후 현재까지는 9~10퍼센트의 고성장 기조에서 안정되어 있다. 안정되었다는 것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을 가능성과 장기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제 〈도표 5-6〉을 보자. 한 나라의 경제 성적표를 볼 때 가장 자주 인용되는 연간 GDP 성장률이며, 역시 전년 대비 값이다. 장기 추세

도표 5-6 __ 연간 GDP 성장률



를 보기 위해 1950년부터 2006년 현재(추정치)까지의 값을 나타냈다. 진실과는 약간 거리가 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약 10년 단위로 호황기와 불황기를 구분해 보자. 이 구분은 국제 석유 시장 환경을 기본으로 한다. 이 표를 참고로 하면서 그래프를 읽어 보자.

먼저 그래프에서 차베스 집권 직전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베네수엘라 경제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알 수 있다. 1979년부터 약 20년 동안 성장률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성장률 고저의 반복이 특별한 현상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대에 자주 돌입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경제 안정에 별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도표 5-7 __ 국제 석유 시장 환경을 기준으로 한 베네수엘라 경제 시기 구분

구분	연도	주요 사항	비고
호황	50년대 초~60년대 초	48년 이억반분합정 이후 석유 수출과 재정 수입 확대 58년 푼토피호합정 체결	석유-국가 체제의 강화
불황	60년대 초~70년대 초	60년 OPEC 결성했으나 석유 생산 과잉으로 인한 저유가 지속	
호황	70년대 초~80경	73년부터 76년까지 1차 국유화 실시, 76년 PDVSA 설립.	신자유주의 정책 시행
불황	80년경~80년대 말	83년 '검은 금요일' (볼리바르화 평가 절하와 외환 규제 선언) 발생, 86년 석유 산업 일부 민영화와 개방, 저유가 재도래.	
	80년대 말~90년대 말	89년 IMF 구조조정 협정 의향서 체결, 96년 긴축 재정과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 전면 도입.	'신사회주의' 혁명
호황	~현재	99년 산유국 결속 강화와 석유 가격 지속 상승, PDVSA의 '완전 국유화' 와 석유 산업 개혁	

신자유주의 정책인 '석유 개방' Apertura Petrolera과 '베네수엘라 아젠다'가 각각 시작된 1986년과 1996년으로 가 보자. 정책의 효과는 시일이 조금 지나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정책의 기능은 최소한 악화를 막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불과 2년여 뒤인 1989년과 1998년에 또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음에는 1970년대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성장률이 증가하는 1976년까지의 전반부와 그것이 둔화되는 1976년 이후의 후반부로 나뉜다. 만약 지나친 단순화를 무릅쓴다면, 1976년을 기준으로 이전 수십 년간의 고속 성장기와 이후 수십 년간의 불안정기로 현대 베네수엘라 경제사를 나누어 쓸 정도다.

1970년대 전반은 베네수엘라가 가장 자신감에 넘쳤던 때이기도 하다. 정치는 안정되고 중동의 석유 감산으로 석유 가격이 폭등했으며, 1차 석유 국유화로 민족주의는 높이 고양되었다. 1974년 당선된

페레스 대통령은 몇 년 안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것임을 공약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감이 최고조에 달한 1976년⁴, 오히려 베네수엘라 경제는 이상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다. GDP 성장률은 1977년 6.7퍼센트, 1978년 2.1퍼센트로 떨어지더니 1979년부터 1982년까지 사실상 0퍼센트 성장을 보이고 드디어 1983년 -5.6퍼센트까지 폭락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좌파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된 배경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지면에서 약간 떨어져 GDP 값의 전체적인 윤곽을 보면, 73년부터 80년 사이의 안쪽이 마치 산비탈에 솟은 작은 봉우리처럼 보인다. 이 시기는 정확히 페레스 대통령의 1차 임기(1974~1979)와 일치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1972년부터 1974년 사이에 정부 재정은 네 배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가했다. 이 기간을 포함해 1970년대 전체에 걸쳐 정부는 ‘위대한 베네수엘라’ 건설을 위해 지출도 덩달아 늘렸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정부 재정과 지출의 증가가 국가 전체 GDP 상승까지 추동한 듯싶다.

이상 1970년대와 90년대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얻는 함의가 무엇인지 추론해 보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결국 8, 9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이 70년대 이전부터 구조화된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 없이 즉자적인 대책에 의존

4 1976년을 상징적인 해로 정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통계 수치로 보아 안팎으로 20여 년, 즉 1965년에서 1990년 사이에 최고 GDP 성장률(8.8퍼센트)을 기록한 해이기 때문이다. 둘째 석유-국가 체제 역사에서 기록에 남을 만한 해이기도 하다. 1차 석유 국유화가 완료되고 PDVSA가 설립되었다. 셋째, 정확히 연수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해이기 때문이다.

했기 때문에 GDP 그래프는 춤을 추었다. 한 발 더 나아가 애초의 질문과 연관시켜 보면 2000년대 차베스 정부는 70년대 후반부터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장기 성장의 가능성을 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다. 이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도 완벽히 내릴 수는 없다. 다만 긍정적인 징조는 보인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근거는 절대적인 수치, 약 10퍼센트라는 성장률이다. 이 수치는 웬만한 충격이 없는 한 반전되기 어려운 값이며 일정 경제 규모 이상의 국가에게는 가까운 미래의 성장을 약속시켜 줄 대단히 높은 값이다. 더구나 국내 기록으로는 40여 년만의 최고치로써—카라카스 봉기 직후인 1991년 제외—그토록 자신감에 넘쳤던 70년대의 호황기 기록을 뛰어 넘었다.

두 번째 근거는 경제 성장을 석유 부문이 아니라 제조업과 건설업이 주도했다는 데 있다. 석유 부문의 성장률은 대단히 낮은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 등은 10퍼센트를 훌쩍 넘는 성장률을 보였다. 석유 부문은 해외 시장 환경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등은 그렇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 성장의 토대가 되는 사회 지표가 좋다는 점이다. 교육과 주거, 문맹과 의료 그리고 빈곤율 등의 지표는 성장과 어떤 관련이 있겠는가? 이들 지표는 국민들의 자기 계발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 성장의 기본이 되는 인적 자원을 풍부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최근 한국은 IMF 이후 경기 호황에도 불구하고 사회 지표가 열악해졌다. 인적 자본과 경제 인프라의 개선 없이 장기적인 성장을 담

보할 수 없음을 명심하자. 베네수엘라의 사회 지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경제 구조 변화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지난 11월 17일 2006년 3분기 경제 성장률을 10.2퍼센트로 발표하면서 성장을 추동하는 힘은 비석유 부문에 있다고 강조했다. 석유 부문은 오히려 축소됐고(전년 동기 대비 1.8퍼센트 감소) 비석유 부문인 통신업, 소매업, 건설업 그리고 제조업이 모두 두 자리 성장세를 보였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민간 부문의 성장률이 12.3퍼센트로써 공공 부문 성장률 2.7퍼센트를 완전히 압도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갖는 베네수엘라 이미지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1998년 이래 석유 가격은 계속 상승해 왔고 최근 계속되는 고유가 때문에 석유 부문의 성장률이 클 것이고 정부가 그 성장을 주도했으리라는 게 많은 이들의 피상적인 예상이다. <도표 5-8>을 보자.

<도표 5-8>에서 가장 먼저 눈이 가는 부분은 석유 부문의 성장률이 전체 성장률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심지어 마이너스 값을 보이기도 한다는 사실은(2004년) 대단히 놀랍다.(실제로 차베스 정부는 석유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의도적으로 석유 부문 성장률을 조정했다.) 그뿐 아니라 전체 산업에서의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는데, 1999년에 19퍼센트를 넘기도 했던 전체 산업에서의 점유율이 2006년 상반기 현재는 15.2퍼센트에 불과하다. 석유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고유가 시대가 끝나면 베네수엘라의 경제 호황도 끝날 것이

도표 5-8 __ 산업부문별 연간 성장률의 변화 추세

부문	'98	'99	'00	'01	'02	'03	'04	'05
전체	-1.2	4.9	5.4	6.3	1.3	18.7	8.7	9.9
석유 부문	-1.5	-2.6	3.0	1.8	0.8	27.6	-1.4	2.4
비석유 부문	-0.7	6.3	5.8	7.0	2.5	14.5	10.5	11.0
광업	-1.3	15.0	-4.4	8.8	8.4	36.6	13.9	10.2
제조업	-7.7	8.3	4.8	6.0	-2.8	28.8	10.3	9.5
전기 및 수도	-3.0	3.6	10.0	5.8	-0.9	4.0	2.6	2.2
건설업	16.2	7.8	21.8	9.6	15.2	23.2	19.1	25.2
소매업	-8.4	11.9	2.4	6.7	-5.5	26.6	20.0	17.5
수송, 저장업	-8.9	6.3	2.9	2.9	-2.5	25.2	20.0	16.4
통신업	14.7	-2.0	8.4	1.2	2.3	-3.1	1.6	6.0
금융업	-9.3	-1.8	3.4	0.0	1.7	19.7	11.8	21.6
부동산, 기업 서비스와 대여업	-1.3	2.7	2.3	5.6	2.4	5.2	-0.4	0.8
비영리 민간 서비스 (공통체, 사회, 개인)	15.8	-2.6	8.5	7.5	-7.4	14.4	10.5	10.9
일반 정부 서비스	5.8	23.2	16.5	30.5	22.4	21.4	29.6	30.3
기타/ 1	-11.4	-16.9	-14.2	-19.2	-6.7	-20.9	-18.6	-16.3
(차감) 금융 중재 서비스/ 2	-12.3	-5.4	3.2	-2.9	0.8	14.8	10.0	23.3
세금	-3.8	10.9	7.7	9.4	-8.0	44.7	14.6	14.5

출처: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이 데이터를 작성한 시점이 달라 <도표 5-6>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라고 폄하하는 주장은 빛을 바랜다.

그렇다면 성장을 이끄는 산업은 무엇인가? 2003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전체 성장률 이상을 웃돈 부문은 광업(석유 제외), 건설업, 소매업, 수송/저장업, 금융업, 정부 서비스 등이다. 이 가운데 전체 산업에서의 비중이 대단히 떨어지는 광업을 제외하고 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과 비영리 민간 서비스 부문을 추가하면 베네수엘라의 성장 산업군을 정리한 셈이 된다.

이 가운데 건설, 소매, 정부 서비스는 베네수엘라 경제 구조에서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중하위 소득계층의 고용 효과가 높은 대표적

도표 5-9 __ 주요 성장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부문	최근 3년 연속해서 전체 성장률을 상회한 부문						최근 3년 중 2년 동안 전체 성장률을 상회한 부문	
	광업	건설업	소매업	수송/저장업	금융업	정부 서비스	제조업	비영리 민간 서비스
GDP 대비 비중 (%)	0.6~0.8	4~7	8~9	3.2~3.7	2.0~2.8	10~13	16~18	4.5~5.3

※ 최근 10년간의 대략적인 비중임.

인 부문이다. 차베스 정부의 경제 개발과 정부 지출 방향이 엮보이는 대목이다.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산업은 역시 제조업이다. 제조업의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약 10퍼센트 낮은 16~18퍼센트에 불과하지만, 고용 안정과 산업 기반을 떠받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차이가 없다. 최근 한국 경제를 두고 고용 창출 효과와 양질의 일자리가 동시에 감소하는 원인으로 ‘제조업의 공동화’를 거론하는 것을 기억하자. 이처럼 중요한 제조업의 성장률이 최근 10퍼센트를 넘나드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가난과의 전쟁 그리고 인간 개발

차베스 정부의 석유 산업 개혁은 석유 산업 그 자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차베스 정부는 석유 산업과 비석유 산업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수많은 기금을 통해 석유 수익을 다른 산업 발전의 종자로 삼고 있다. 대표적인 게 ‘거시 경제 안정화 기금’과 ‘사회 경제 발전 기금’이다. 특히

사회 경제 발전 기금은 PDVSA의 자체 결정을 통해 결성되었으며 사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수많은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PDVSA는 2005년에 수익의 50퍼센트를 상회하는 미화 69억 달러를 이 기금에 출자했다. 또한 로열티와 소득세에 해당하는 191억 달러를 이미 정부에 납부했기 때문에 국내 총 매출의 약 57퍼센트가 비석유 부문에 재투자된 셈이다.

PDVSA의 매출액 규모를 삼성전자와 비교하면 2005년도에 PDVSA는 국내 매출액 456억 달러, 총 매출액 999억 달러를 기록했고, 삼성전자는 단독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약 610억 달러, 연결재무제표(계열사와 해외 법인 포함) 기준 약 9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비슷한 규모, 자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삼성전자는 PDVSA가 다른 산업, 다른 기업의 발전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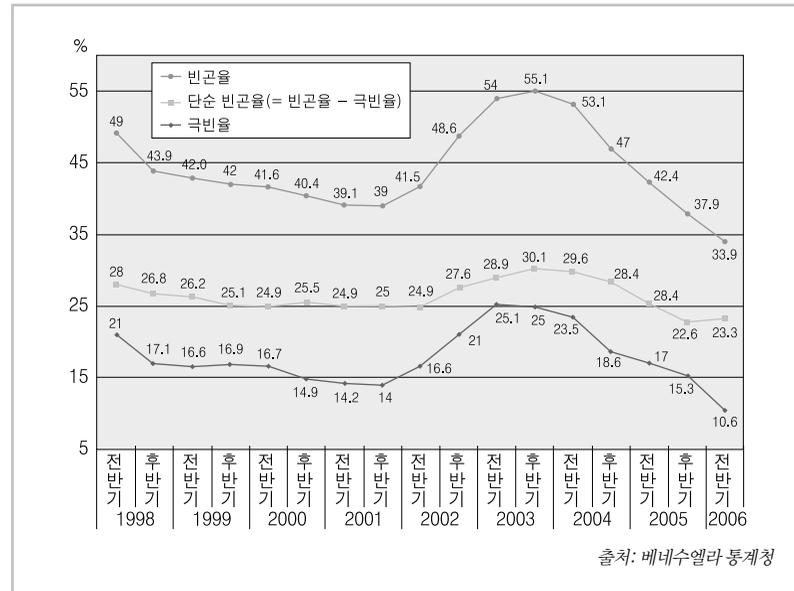
사회 경제 발전 기금은 사회적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수많은 프로젝트에 사용되었으며 PDVSA의 사장은 현재 ‘미션’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프로젝트 총재이기도 하다. 미션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무료 진료 프로그램 ‘동네 속으로’, 무료 교육 프로그램 ‘미션 리버스’, 문맹 퇴치 프로그램 ‘미션 로빈슨’, 맹인 개안 수술 프로그램 ‘미션 밀라그로’ 등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단순한 시혜성 프로그램이 아니다. ‘아래로부터의 발전’이 대안 사회를 만드는 힘이 된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아래로부터의 발전’이 뜻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과 신용, 주택과 교육, 건강과 사회 안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차베스 정

부가 추진하고 이름붙인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자본의 성장이 아니라 인류의 발전, 곧 인간 능력의 성장 그 자체다.

석유 수익의 재투자, 각종 미션의 추진 그리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은 차베스 정부를 '가난과의 전쟁'에서 승리자로 만들고 있다. <도표 5-10>을 보자. 자본과업이 일어났던 2003년 후반기에 정점에 이른 후 빈곤율(최저 생계비 이하 수입)과 극빈율(기초 식료품비 이하 수입)은 3년여 동안 극적으로 감소했다. 현재의 추세로 볼 때 당분간 최저 기록이 계속 갱신되지 않을까 싶다. 자본과업이 일어났던 2002년과 2003년을 제외하면 빈곤율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로 보아 차베스 정부의 빈민 정책이 옳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도표 5-10 _ 빈곤율과 극빈율의 변화 추세 (가계 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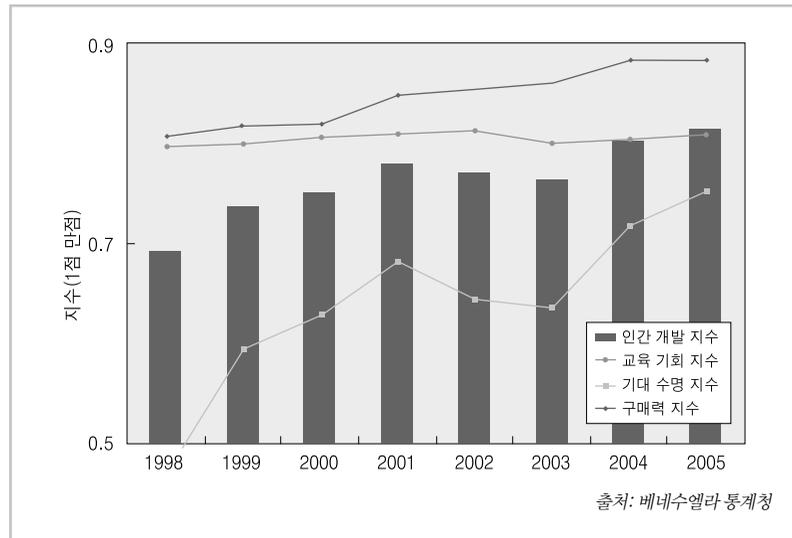


2006년 전반기에 눈여겨보아야 할 한 가지는 단순 빈곤율(극빈 가구를 제외한 빈곤 가구의 비율)이 약간 상승했다는 점이다. 이것의 의미는 극빈 상태에서 탈출해 빈곤 상태에 진입한 가구 수가 빈곤 상태에서 완전히 탈출해 더 높은 소득 수준에 진입한 가구 수보다 많다는 뜻이다. 자본과업 기간에도 단순 빈곤율은 상승한 바 있으나 둘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빈곤 또는 극빈 상태로 하락한 가구 수가 늘어난 것을 반영했고 현재에는 빈곤 또는 극빈 상태에서의 탈출 속도가 높아진 것을 반영했다. 다시 말해서 자본과업 기간에는 위에서 유입되고 현재에는 아래에서 유입되었다. 이상으로부터 알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극빈 상태에서의 탈출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빈곤의 문제는 단순히 소득의 문제가 아니며 교육과 위생, 일자리 등이 결합되어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다. 사회의 구성원은 교육과 위생, 일자리 등의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빈곤에 빠지고 빈곤에 빠짐으로써 더 열악한 교육과 위생, 일자리 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빈곤은 사회가 구조화시킨 인간의 자기 개발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뜻이다.

<도표 5-11>은 인간 개개인의 자기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인간 개발 지수(HDI(Human Development Index))를 나타낸다. 인간 개발 지수는 유엔개발기구(UNDP)의 기준에 따라 교육, 건강, 구매력을 각각 평가한 다음 종합화해서 수치화한다. HDI의 최근 추세 역시 이미 앞에서 본 도표들과 유사하지 않은가? 자본과업이 일어난 2002년과 2003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HDI의 내용은 그것의 하위 지수

도표 5-11 __ 교육 기회, 기대 수명, 구매력 지수와 인간 개발 지수의 추세



들을 검토함으로써 좀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교육 기회 지수는 성인의 비문맹률(literacy)과 (청소년의) 취학률로부터 구해지는데 이 값은 한번도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정치 경제 상황에 무관하게 인적 자본 투자가 계속 증대되어 온 결과다.

다음으로 기대 수명 지수는 의료 시스템과 태아 생존율 등이 결정하는데 거의 일정하거나 약간 증가하는 추세다. 이채로운 것은 2003년에는 기대 수명 지수가 약간 감소했다. 만약 자본과업의 후유증이 인간의 수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실로 놀라운 일이다. 마지막으로 구매력 지수를 보자. 구매력 지수는 일인당 GDP를 소비자 물가, 외환 환율 등과 연동시켜 실질 구매력을 계산한 것이다. 세 가지 하위 지수 가운데 구매력 지수의 상승폭이 가장 크다.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 여력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5 베네수엘라의 상식에서 배운다

한 나라의 경제는 결코 정치, 사회와 무관하게 발전하지 않으며 경제의 한 부문은 결코 다른 부문과의 연관성 없이 발전하지 않는다. 하나의 상품이 크게 성공하더라도 그 이익이 다른 부문의 성장과 고용의 증가 그리고 분배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경제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베네수엘라는 이런 상식을 너무나 분명히 증명한다.

베네수엘라 경제를 해석할 때 석유를 먼저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석유 산업의 발전과 베네수엘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동일시하는 행태는 위험하다. 오히려 베네수엘라는 의도적으로 석유 경제의 발전을 늦추면서 다른 상품, 다른 산업 그리고 비경제 분야의 발전을 높이려고 한다. 원유에서 다양한 정유 상품으로 다양화하고 석

대안적 지역협력체 건설은 가능할까?

유 이익을 제조업과 건설, 민간 서비스업 발전의 근간으로 삼으며
실물 자본보다는 인적 자본의 발전에 주목하면서 국가 전체의 장기
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그리고 이런 노력의 한 가운데에 차베스 정
부가 있다.

우리 경제는 어떠한가? 대기업 집중, 수출 중심, 인적 자본의 발전
지체, 경제 개혁에 있어서 정치의 무능력을 안고 있지 않는가? 특정
부문의 성장은 부의 집중을 낳고 오히려 고용의 불안정,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는가? 수출 3000억 달러 달성에도 불구하고 잠재
성장률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현재의 결과에 안주하거나 맥없이 손을 놓고 점차 고착되는 경제
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베네수엘라가 80년대와 90년대
에 겪었던 어려움이 한국에서 재현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한우림

- 1 대안적 지역협력체 건설은 중남미의 살 길인가?
- 2 중남미 경제 개발 정책과 지역 통합 움직임
- 3 ALBA 구상과 그 내용
- 4 중남미 지역 통합 전망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주는 시사점

VENEZUELA

ALBA는 발상 자체부터 다르다. 일반적 지역 통합 협정의 경우,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의 철폐 등 교역 확산을 중요시하고 무
역 이외에도 투자, 서비스의 확대를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ALBA는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방식을 택하며 인간
삶의 기초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발상에 기초한다.



1 대안적 지역협력체 건설은 중남미의 살 길인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남미 지역 통합의 기운이 높아졌다. 무릇 중남미에서 지역 통합의 모색은 전혀 새로운 움직임이 아니다. 약 200년 전 이미 “중남미의 통합 없이 중남미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한 시몬 볼리바르¹의 꿈이며, 또한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지향한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 등의 지도자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제기한 슬로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느 역대 지도자도 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세기가 바뀌어 차베스 대통령은 시몬 볼리바르의 지역 통합 이념

1 시몬 볼리바르(1789~1830)는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자로 알려져 있고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의 4개국을 스페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하고 중남미를 하나의 국민국가로 통합하려고 했다.



을 좀더 명쾌하고 참신한 지역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화시키려 한다. 이것이 바로 현재 그가 추진하는 ALBA(Alternativa Bolivariana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을 위한 볼리바르 대안, 이하 ALBA로 표기) 구상이다.

ALBA 구상은 카리브 해를 포함한 중남미 지역을 세계 질서에서 유력한 축으로 만들고자 할 뿐 아니라, 동시에 각국의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미국과 명확한 대립을 갖는 강한 정치적인 목적을 지닌다. 즉 현재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미주자유무역지역(Área de Libre Comercio de las Américas or 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미주 각국간의 무역·투자 장벽을 제거하고 쿠바를 제외한 미주 전 지역을 자유무역 지역으로 통합하는 구상, 이하 영문 약자인 FTAA로 표기) 구상에 대응하는 움직임이다.

ALBA 구상의 특징은 에너지를 통한 경제 협력을 그 축으로 삼으며 무엇보다도 정치적 입장의 동일성을 중요시한다. 이 구상에 생기를 주는 대규모 프로젝트, 즉 베네수엘라·브라질·페루·볼리비아·우루과이·아르헨티나·칠레의 7개국을 잇는 약 1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천연가스관 건설이 그 예다. 이 프로젝트를 포함한 차베스의 ALBA 구상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을 줄이고

가난과 사회적 배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중남미에 행사하는 영향력에 비춰본다면 EU를 상회할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역인 ALCA를 구성하겠다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지역 경제 통합 구상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처럼 보인다. 반면 차베스가 내세운 ALBA 구상은 주류를 거스르는 무모한 도전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과연 각국의 주권 혹은 상호 보완성에 비중을 둔 ALBA 구상은 실현 가능할까? 그리하여 신자유주의적 무역 질서나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난 독자적 중남미의 미래 전망이 될 수 있을까?

이상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차베스가 내세운 중남미 지역 통합 구상인 ALBA를 중심으로 현재 중남미의 지역 통합 움직임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차베스의 ALBA 구상이 제기된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중남미 각국의 교역 관계 등 실질적인 조건을 살펴봄으로써 ALBA 구상의 전망에 대해 개관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ALBA 구상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 지역 통합체 건설 움직임이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중남미 경제 개발 정책과 지역 통합 움직임

지역 통합은 중남미 지역에서 경제 개발 전략의 한 접근 방법으로 추진되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남미는 1차 상품 수출 위주의 단순 경제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 주도형 수입 대체 공업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정체된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일국 단위의 수입 대체 공업화 정책의 한계로부터 자연스럽게 지역 협력을 모색하게 되었다. 여기서 간단하게 제2차 대전 이후 중남미의 경제 발전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남미는 제2차 대전 이전까지 사탕·커피·바나나나 동·석유와 같은 단일 농산물이나 공업 원료 등의 제1차 상품 수출에 의존했고 무역 거래도 특정한 수출 대상국에만 집중했다. 1차 상품 의존적인 경제 구조는 교역 조건의 악화나 수출품 가격의 변동, 수출입 동

향에 따라 국내 투자가 좌우되는 대외적으로 취약한 경제 구조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제2차 대전 이후 이 지역의 많은 국가가 1차 상품 수출 일변도를 벗어나 중간재나 자본재를 수입함으로써 국가의 공업화를 도모하는 수입 대체 공업화로 경제 발전 전략을 전환했다.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은 처음에는 성공한 듯이 보였다. 특히 제2차 대전 이후 각국의 경제 성장이 두드러지며 아르헨티나의 공업 생산이 1945년에서 55년 사이에 50퍼센트 상승하고 우루과이에서는 43년에서 55년 사이에 120퍼센트나 상승했다. 중남미 지역의 1950년대 GDP 연평균 성장률은 5.1퍼센트이며 60년대에는 5.7퍼센트에 달했다.

그러나 1955년 이후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은 큰 전환점을 맞는다. 1955년까지 중남미의 연평균 일인당 GDP 성장률은 2.2퍼센트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후 격감하기 시작하여 후퇴 국면에 들어섰다.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의 좌절은 이에 필요한 자본을 1차 상품 수출에 의존해야 하는 딜레마로부터 초래되며 수입 대체라는 일국 수준의 한정된 시장 규모로는 지속적인 발전을 전망할 수 없었다. 나라별로 자체적 공업화를 이루기에는 각국의 국내 시장은 너무 좁았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충분한 국내 시장을 가지지 못한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남미는 방대한 재정 지출을 감안해야 했다. 국내 수요를 증대시키고 적자를 보완함으로써 국영기업을 떠받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국제수지 불균형과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그러나 중남미 경제 개발 프로그램의 좌절을 이 지역의 지도자들만의 잘못으로 여길 수는 없다. 1950년대 이후 외국 자본은 중남미

로 적극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특히 제조업, 금융 부문 진출을 급속히 확대시켜 그 지배력을 확립했다. 미국은 종래부터 중남미의 광업이나 석유 산업 그리고 열대 농산물을 거의 독점 지배해왔고, 중남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기업 진출에 의해 그 경제적 자립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중남미의 발전을 대표해온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의 제조·공업 부문은 196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 다국적 자본과 미국 자본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 중남미 각국에서 군사정권 아래 정부 주도형 경제 발전 전략이 진행되어 대외 차입금에 의존한 적극적 고도성장 정책이 도모되었다. 그러나 차입금을 갚을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1980년대에는 심각한 대외 채무 위기에 빠지게 된다. IMF 관리 정책 아래 많은 나라들이 국내 경제 긴축과 수입 제한에 근거한 경제 조정을 실시했으나 이것은 채무국에게 급격한 투자를 저하와 경제 정체를 초래했다. 1990년대에 들어 정부 주도형 경제 개발 전략에 대한 비판이 전개되며 시장주의에 입각한 개발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도표 6-1>은 제2차 전쟁 이후 중남미의 경제 개발 전략 추이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중남미의 경제 구조에서 특히 수입 대체 공업화에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남미 지역 단위로 시장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역 협력이 모색되기 시작한다. 중남미의 지역 통합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기에 설립된 '라틴 아메리

도표 6-1 __ 중남미에서의 1950-90년대의 경제 개발 전략 추이

1950년 이전	제2차 대전까지 제1차 상품 수출 경제 구조
1950-60년대	정부 주도형 수입 대체 공업화
1970년대	채무 의존형 성장
1980년대	'잃어버린 10년' 채무 위기·구조조정
1990년대	민영화·규제 완화·무역 자유화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 도입

카 자유무역연합' 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LAFTA)과 '중부 아메리카 공동시장'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CACM)으로 이어진다. 이 시기의 지역 통합은 수입 대체 공업화를 강화하면서 이를 지역 수준까지 높일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호주의적 성격을 지닌 지역 공동체였다. 그러므로 지역 밖의 상품에 대한 관세는 높았다. 그러나 이 자유무역연합과 공동시장을 통한 지역 통합 아래에서 수입 대체 공업화를 도모하는 중남미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1960년대 말에는 '안데스 공동체' Comunidad Andina(CAN)와 '카리브 공동시장' Caribbean Common Market(Caricom)이 설립되었다. 1969년에 LAFTA의 틀 속에 설립된 '안데스 협정' Andean Pact이 안데스 공동체 CAN의 전신이며 '카리브 공동시장' Caricom과 더불어 안데스 공동체는 중남미 통합의 제2단계가 되었다.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를 가맹국으로 하여, 지역간 관세 철폐와 대외 공통 관세의 적용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LAFTA 내의 중소 국가인 안데스 그룹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와 같은 LAFTA 내의 대국에 대항하여 그룹의 입장을 개선하고 국내 시장 협소로 인한 불이익을 극복하고자 했다.

중남미 각국은 ‘잃어버린 10년’ 이라고 불린 1980년대 채무 위기를 겪으면서 이전까지의 정부 주도형 경제 개발 모델에서 시장 주도형 경제 개발 모델로 전환하게 되었다. 90년대에 들어 1994년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가 서로 시장을 개방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NAFTA)을 발족시켰다. 1995년에는 ‘메르코수르’ Mercado Común del Sur(Mercosur, 남부공동시장)가 설립되었다. 결과적으로 90년대에는 미주 전체적으로 볼 때 NAFTA, 메르코수르, 중부 아메리카 공동시장과 안데스 공동체가 영향력이 있는 4대 경제 협력체로 대두되었다.

메르코수르는 지역 내 관세 철폐와 무역 자유화를 목적으로 하여 1991년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의 4개국 정부에 의한 ‘아순시온 조약’ Tratado de Asunción 체결로 발족한 관세 동맹이다. 즉 회원 국가간의 관세를 철폐하고 회원 국가 이외의 국가와의 무역에 있어서도 공통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과 같은 공동시장을 지향하고 있으며 역내 인구 2억 명, GDP 1조 달러 규모로 미주 지역에서는 NAFTA 다음 가는 규모다. 메르코수르 내 최대 강대국인 브라질은 대회원국 수출을 증대시켜 국영기업의 민영화 촉진과 경제 안정화에 따른 해외로부터의 자금 유입도 수백억 달러에 달했고 공전의 기업 성장 붐을 맞이했다. 또한 1991년부터 1999년에 걸쳐 회원 국가간 무역도 80억 달러에서 410억 달러까지 증대되었다².

2 Steven Mather, "MERCOSUR: Does It Have a Role in the Fulfillment of Simon Bolivar's Dream?," Jun. 22, 2006(www.venezuelanalysis.com).

그러나 이 회원 국가간 무역 증가는 메르코수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일한 측면이었고, 원래의 불안정한 신자유주의적 지역 통합 전략 아래에서 메르코수르의 역사는 성공보다 혼돈의 연속이었다. 첫째로 역내 최대 강대국인 브라질이 제일 이익이 크고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외에 작은 나라들인 우루과이, 파라과이 두 나라는 역내 통합의 이익을 별로 볼 수 없었다. 더군다나 지역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몰락했다.

최악의 사태는 1999년 브라질 중앙은행이 통화가치를 절하한 것에서 발생했다. 브라질 국내의 상품 가격이 폭락하면서 좀더 많은 외국인 바이어와 자본가를 끌어당겼으나 역으로 회원국이자 브라질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아르헨티나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아르헨티나의 브라질에 대한 원래의 투자 조건 상실을 의미하고, 그뿐 아니라 아르헨티나 상품은 브라질에게는 갑자기 비싸졌다. 2000년 아르헨티나 자동차 수출은 58퍼센트나 감축되었고, 2001년에는 이 지역에서도 최악의 채무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는 이미 진행 중이던 아르헨티나의 경기 후퇴에 박차를 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시기 메르코수르의 문제점은 회원 국가가 내포하는 사회 문제나 사회적 불균등 문제에 대면하는 아무 실질적 합의가 회원 국가 사이에 없었다는 점이다³. 1999년까지 4개 회원 국가의 실업률은 거의 두 배로 늘어났으나, 메르코수르는 민중의 복지에 어떠한 답도 주지 못했다.

3 Steven Mather, "MERCOSUR: Does It Have a Role in the Fulfillment of Simon Bolivar's Dream?," Jun. 22, 2006(www.venezuelanalysis.com).

〈도표 6-2〉는 제2차 대전 이후의 중남미 지역 통합 움직임에 대한 정리다.

도표 6-2 _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중남미의 지역 통합 움직임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기	라틴 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 중부 아메리카 공동시장
1960년대 말	안데스 공동체 카리브 공동시장
1990년대 이후	북미자유무역협정 남부 공동시장 or 메르코수르
2000년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을 위한 볼리바르 대안 구상 대두, 베네수엘라·쿠바·볼리비아가 협정에 조인

벽에 부딪힌 미국의 구상

90년대에 들어 정부 주도형 경제 개발 정책으로부터 시장주의로 전환한 중남미 지역에서는 시장 개방형 지역 통합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즉 신자유주의적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미국의 FTAA 구상이 미주 전역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 중남미의 정치 상황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을 비롯하여 브라질의 룰라 정권, 아르헨티나의 키르치네르 정권 등 좌파 정권이 잇달아 생겨났다. 이들이 저항 세력이 되자 미국의 FTAA 구상은 벽에 부딪혔다.

예를 들면 2001년에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제3회 미주 정상회담에서는 2005년까지 FTAA를 출범시킬 것을 합의했으나 2003년 브라질 룰라 정권이 탄생한 후 미국 정부와 브라질 정부의 대립이 심화되고 협상이 완전히 암초에 걸렸다. 2005년에 아르헨티나의 마르 델

플라타^{Mar del Plata}에서 열린 제4회 미주 정상회담에서는 쿠바를 제외한 남북미 대륙과 카리브 해 지역 34개국의 정상이 모여 FTAA 구상과 그 협상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 결과 미국과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29개국은 FTAA 건설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으나 아르헨티나·브라질·우루과이·파라과이의 메르코수르 가맹국과 베네수엘라 정부가 FTAA 협상 재개에 반대하는 자세를 끝까지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회담이 폐막되었다.

미국의 FTAA 구상이 혼선을 빚으면서 중남미에는 미국의 FTAA 구상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세력과의 충돌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FTAA 구상을 둘러싸고 중남미의 지역 통합 움직임도 더욱 복잡해졌다. 1976년에는 외자 규제에 반대하여 이미 칠레가 안데스 공동체를 탈퇴했었는데, 2006년에는 콜롬비아와 페루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을 이유로 베네수엘라가 안데스 공동체를 탈퇴했다. 차베스의 시각에서 볼 때 이와 같은 미국과의 FTA 체결은 안데스 공동체의 탄생 정신인 지역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데스 공동체를 탈퇴한 베네수엘라는 2006년 7월에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공식적으로 메르코수르에 가입했다. 이로써 메르코수르는 회원국이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5개국으로 늘어났다. 또한 산유국 베네수엘라의 가입으로 중남미 전체 국내 총생산에서 메르코수르의 비중은 54퍼센트에서 73.8퍼센트(약 1조 달러)로 늘었고, 그 시장 규모도 2500만 명



◀ 베네수엘라의 공식적인 메르코수르 가입안에 서명하는 차베스. © Silvia Leindecker(www.venezuelanalysis.com)



◀ 2006년 7월에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서 열린 제30차 메르코수르 정상 회담에 참석한 차베스 대통령과 아르헨티나의 키르치네르 대통령(오른쪽). © Silvia Leindecker (www.venezuelanalysis.com)

이 증가해 총 2억 5000만 명의 시장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키르치네르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가입은 '브라질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더욱 경사시키고 있는 현재 지역간 위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가 된다'며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중남미 최대의 경제 협력체이자 관세 동맹인 메르코수르는 앞으로 세계 유력 시장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녔고 회원국간의 상호 의존도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메르코수르는 회원국 가운데 경제 규모 2대 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양국 간 교역이 전체 교역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브라질은 메르코수르 내 무역을 활성화시켜 무역수지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아르헨티나가 그 다음으로 큰 역할을 한다. 2004년에는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의 수출

도 각자 33퍼센트와 31퍼센트로 늘어났고 브라질에 대한 수출 지수도 높아졌다.

현재 브라질에게 아르헨티나는 미국 다음 제2의 수출 대상국이며 아르헨티나에게 브라질은 미국을 상회하는 제1의 수출 대상국이다. 메르코수르 회원국인 파라과이, 우루과이에 있어서는 전체 수출에서 메르코수르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를 넘는다. 메르코수르 내부에는 이미 상부상조적인 관계가 구축되었다.

2006년 7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Cordoba}에서 열린 제30차 메르코수르 정상 회담은 매우 중요했다. 단지 베네수엘라가 메르코수르로의 참여를 확대한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새롭고 다양한 열림이 모색되었다. 그것은 메르코수르가 단순한 경제 협력만이 아닌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지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관세 면제는 2014년에 가서야 완전히 적용되지만 베네수엘라의 가입은 메르코수르의 방향을 시장 개방에서 회원국들 상호간의 사회경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크게 선회하게 만들었다. 이는 단지 베네수엘라가 에너지 강국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최근 메르코수르가 정체와 위기 상황에 처한 가운데 사회경제를 증진하고 민중,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리안 혁명이 가지는 민중, 대중 지향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메르코수르의 비회원 국가 정상들도 공감을 표한다. 키르치네르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메르코수르는 민중, 대중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의사를 표현했다. 이것은 그동안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었던 메르코수르의 입장 변화를 의미한다.

한편 미국은 1994년에는 NAFTA를 통해 멕시코와 FTA를 체결했고, 2003년에는 칠레, 2005년에 페루와 FTA를 체결했으며, 같은 해에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중미 5개국과 ‘중미자유무역협정’ 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CAFTA)을 맺었다. 그러므로 현재 중남미에서는 FTAA에 반대하는 메르코수르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미국이 배후에서 영향력을 펼치는 남미 북부의 안데스 공동체 회원국 사이에 충돌이 생기게 되었다. 즉 중남미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의 편입을 거부하는 메르코수르를 중심으로 한 지역 협력체와 미국 주도형 신자유주의적 지역 통합을 받아들인 세력의 블록이 대두하게 되었다.

그러나 메르코수르를 FTAA에 저항하는 반미 세력으로 완전히 규정하기에는 이르다. 현재 메르코수르에서 영향력을 가진 회원 국가 대통령이 반미적인 성향과 FTAA에 저항하는 분명한 태도를 나타내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메르코수르는 느슨한 지역 경제 향상을 위한 협력체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주요 회원 국가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그 성격도 변모할 수 있는 유동성을 내포한다.

또 다른 한편에는 현재 중남미에는 다양한 지역 협력체가 존재하며 이러한 협력체를 반미 세력과 친미 세력으로 뚜렷하게 구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측면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2004년에는 안데스 공동체 가맹국(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과 메르코수르 가맹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그리고 칠레, 가이아나, 수리남 등의 12개국의 연합체인 ‘남미국가공동

도표 6-3 __ FTAA와 ALBA의 비교

FTAA	ALB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국적 자본이나 다국적기업의 기업 활동과 자본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함. • 관세의 완전 철폐와 규제 완화, 자유화의 실시. • 미국 기업의 투자, 경제 지원과 북미 시장 접근권 보장을 통해 체결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국가의 주권을 존중해 상호 이익을 위한 경제적 보완성을 중시. • 국내 사업의 진흥과 국내 시장의 민감한 영역을 보호. • 사회적 공공 서비스의 국가 개입을 중시. • 반곤, 문맹 퇴치 등의 사회 통합 프로그램 중시. • 원주민이나 중소기업, 환경보호에도 초점을 맞춤.

체’ Comunidad Sudamericana de Naciones(CSN)⁴가 출범하여 광범위한 지역 협력을 추진 중이다. 반미의 메르코수르, 친미의 안데스 공동체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교차하고 연대하는 여러 기구와 방식들이 존재한다. 이처럼 중남미 자체의 지역 협력 체계가 여러 양식으로 존재한다는 점 또한 미국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장벽이 된다.

차베스의 최종 목적은 볼리바르주의에 근거한 중남미의 통합이며 메르코수르는 중남미 지역 통합으로 가는 여러 동시 병행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로 해석하는 게 적확하다. 칠두칠미 볼리바르주의에 근거한 중남미 지역 통합의 핵심은 ALBA 구상에 있다. 그러면 이제 차베스가 볼리바르주의에 근거해 내세운 ALBA구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4 2004년 12월에 열린 제3회 남미정상회담에서 쿠스코 선언(Cuzco Declaration)에 12개 국가의 정상이 조인해 발족된 지역 공동체다. 남미국가공동체는 메르코수르와 안데스 공동체를 포괄하는 중남미 대륙 규모의 지역 공동체이며 2014년까지는 민감하지 않은 분야의 관세 철폐, 2019년까지는 민감한 분야의 관세 철폐를 도모하고 최종적으로는 EU와 같은 동일한 화폐와 정치 조직을 갖춘 공동체를 지향한다. 가맹국은 안데스 공동체의 4개국과 메르코수르의 5개국, 그리고 칠레, 가이아나, 수리남의 12개국이다.



3 ALBA 구상과 그 내용

ALBA 구상의 배경과 이념

애초부터 중남미의 해방자로 불린 시몬 볼리바르의 사상에 근거한 혁명을 전개해 온 차베스가 중남미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은 아주



◀ 쿠바 아바나에서 FTA에 반대하는 서명과 ALBA 구상에 대한 협정을 맺은 카스트로와 차베스 © EPA연합뉴스

자연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FTAA 구상을 통해 미주 전토를 신자유주의와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할 것을 도모하는 미국에 맞서기 위한 대안적 지역 공동체 구상이 중남미에서 긴급하게 필요했던 것이다.

FTAA에 반대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메르코수르와 ALBA의 차이점은 메르코수르가 통상을 확대시키고 회원국간의 경제적 이익을 서로 높이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는 데 비해 ALBA는 FTAA에 대한 강력한 거부 자세와 정치적 입장을 공유하는 동맹이라는 점이다.

차베스는 2001년 12월에 베네수엘라의 이슬라 마르가리타^{Isla Margarita}에서 열린 제3회 카리브국가연합^{Association of Caribbean States} 정상 회담에서 처음으로 ALBA 구상에 대해서 언급했다. 2004년 말에는 카라카스에서 쿠바 대통령인 카스트로가 공식적으로 ALBA에 합 의하고 양국은 ALBA가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동맹국에 대한 특별한 대응’ ‘협력과 연대’ ‘에너지의 통합’ 등의 원칙에 근거한다는 협정을 확인했다. 2006년 4월에는 쿠바의 아바나에서 열린 정상 회담에서 차베스와 카스트로 그리고 2006년 1월에 볼리비아 대통령으로 선출된 에보 모랄레스가 새로 ALBA에 조인해 ALBA 동맹국이 3개국으로 늘어났다.

ALBA는 발상 자체부터 다르다. 일반적 지역 통합 협정의 경우,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의 철폐 등 교역 확산을 중요시하고 무역 이외에도 투자, 서비스의 확대를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ALBA는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방식을 택하며 인간 삶의 기초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발상에 기초한다. 즉

시장 만능주의와 국가의 역할 축소를 거부하고 국내 산업 진흥과 국내 시장의 민감한 영역의 보호를 중요시하며 사회적 공공 서비스의 국가 개입을 중요시한다. 빈곤층 대책이나 약자 보호와 같은 사회적 관심사에 많은 힘을 기울이지 않았던 메르코수르와 비교해 이들의 차별성이 눈에 띈다.

이 협정은 가격을 중요시하는 시장 거래 대신 독특한 연대 거래를 실시한다. 한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제공하는 대신 협정을 맺은 다른 회원 국가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베네수엘라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ALBA의 기본 원칙을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 이익을 위한 경제적 보완성, 둘째 상대적으로 동등한 경쟁력을 지키는 조건 아래 국내 시장의 확대와 심화, 셋째 대중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대중 소비재의 생산과 소비의 증대, 넷째 미국의 압력과 중남미 무역 상대국의 적대적 조치에 대한 공동 대처, 다섯째 외채의 경감, 재협상, 거부, 조사를 위한 강력한 협상 블록의 구축, 여섯째 향후 중남미 통합의 초석을 다짐, 일곱째 유럽



◀ 아르헨티나 키르치네르 대통령과 차베스 대통령 © ABN (www.venezuelanalysis.com)

연합, 나프타, 아세안^{ASEAN} 등 세계 지역 블록과 동등한 협상이 가능한 기반 구축이다.

2006년 말 현재, ALBA에 공식적으로 가입한 국가는 아직 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3개 국가뿐이지만, 중남미 지역의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비회원 국가와의 협력을 이끌어 내면서 장기적으로 회원 국가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차베스는 메르코수르의 틀을 활용해 ALBA와 병행한 협력 체계 구축에도 애쓴다. 2005년 12월, 아르헨티나의 키르치네르 대통령과 차베스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24억 달러의 아르헨티나의 채무를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매입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중남미가 IMF(국제통화기금) 체제로부터 멀어지고 지역 통합으로 향하는 한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해석한다.

1980년부터 2000년의 20년 동안 아르헨티나 경제는 IMF 통제 아래 있었다. IMF는 아르헨티나를 ‘좋은 경제 통치’^{good economic governance}를 이룬 ‘IMF 성공 사례’^{poster-child of IMF} 국가로 내세우기도 했으나 2001년 말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도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⁵. 차베스는 아르헨티나가 IMF 체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결정을 지지하면서 이를 도와주겠다고 선언했다⁶.

이와 같이 채무 위기에 빠지게 된 나라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서로의 고통을 나누는 형태로 지역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차베스의 아

5 Simone Baribeau, “Venezuela to Buy Argentine Bonds, Backs IMF Payoff”, Dec.21, 2005. “Venezuela Buys More Argentine Debt”, Feb.15, 2006 (www.venezuelanalysis.com).
6 아르헨티나에 이어 브라질도 IMF 채무를 조기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아르헨티나의 키르치네르가 과거 20년간의 IMF 주도형 경제개발 모델을 비판하면서 당선된 데 이어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도 IMF로부터의 독립을 내세우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주 독특한 전법 가운데 하나다. 이는 경제 개발 전략에 실패하고 막대한 빚을 짊어지게 된 국가에게 더욱 냉엄한 조건^{conditionality}을 부과하는 IMF와 분명한 차별성을 드러낸다.

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의 세 동맹국이 이미 대안적 지역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 금융, 무역, 교육, 의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제휴를 강화하고 협력을 약속했듯이 최종적으로는 ALBA 자체가 중남미 전반의 빈곤과 문맹 퇴치 등 사회적 통합 과제를 통해 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한다. ALBA가 교역의 확대를 최종 목적으로 삼는 기존의 지역 통합 논의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지점이다.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

ALBA 구상의 핵심이 중남미 국가들의 연대와 통합에 있다고 할 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의 중심에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가 놓인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5위의 산유국이고, 미국에 석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다. 그리고 매장량도 세



◀ 2005년 6월에 열린 카리브 해 국가 에너지 정상 회담에 참석한 차베스 대통령. 이 회담에서 '페트로 카리브'가 제안되었다.
© VTV(www.venezuelanalysis.com)



▲ 2006년 1월 차베스, 룰라, 키르치네르 메르코수르 3인방이 브라질리아 대통령 관저에서 단합을 과시하고 있는 모습. © 프레스시안(www.pressian.com)

계 최고 수준으로 추정된다. 베네수엘라 수출 총액의 80퍼센트는 바로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⁷가 차지한다. 차베스는 이러한 석유나 천연가스를 도구로 한 외교 정책을 ALBA 구상의 축으로 삼았다.

우선 중남미 통합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즉 '남미 대형 가스관^{Gran Gasoducto del Sur}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를 잇는 약 1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대형 가스관 공사다.

차베스는 2006년 1월 19일에 메르코수르의 3인방, 즉 룰라 브라질

7 차베스는 대통령 취임 이후, 바로 석유의 국유화에 착수했다. 국유화 이전에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은 대부분의 지분을 미국과 유럽의 초국적 자본이 소유해 석유 생산 이익의 상당 부분은 이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대통령, 키르치네르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과 3개국 정상 회담을 갖고 이 사업을 같은 해 7월부터 착공하자고 합의했다. 또한 차베스는 '중남미 역사를 바꿀 이 대역사는 오는 2012년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파이프라인은 하루 1억 5000만 평방킬로미터의 천연가스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차베스는 남미에서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보유한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⁸가 앞으로 천연가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재정 지원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으로 차베스의 석유를 통한 ALBA 구상에 대해 조금 더 정리하고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차베스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외국계 자본가가 장악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관료들 부패의 온상이 되어 온 국유회사의 개혁에 착수했다. 동시에 OPEC와의 협력도 강화시켰다.

차베스 이전의 국영석유회사는 그동안 OPEC의 석유할당제를 지키지 않으면서 미국의 요구에 맞추어 산유량을 확대시켜왔다. 차베스는 1999년 대통령 취임 직후 베네수엘라에서의 OPEC의 생산 쿼터를 엄격히 적용시켜나갔다. 그리고 OPEC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2000년에 OPEC 국가 순방에 나섰고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혹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공식 방문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의 결과로 차베스는 2000년 OPEC의 의장에 취임했고, 미

8 2006년 1월에 탄생한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당선 전 자신의 공약대로 국내 가스·석유 산업의 국유화에 착수했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약 1억 달러를 투자해 볼리비아 내에 천연가스의 공업화를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국이 추진하던 자유 가격 정책에 대항해 석유 감산 쿼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석유 수출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수익을 중남미 민중의 건강, 교육, 복지 등에 환원시키기 위해 차베스는 중남미에서 OPEC와 같은 일원적 에너지 정책 블록의 건설, 심지어 단일한 지역 에너지 회사인 '페트로 아메리카'^{Petro America}의 창설을 도모하고 있다. 차베스는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다국간 협력 체제를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제안해 왔다. '페트로 수르'^{Petro sur}, '페트로 카리브'^{Petro Carib} 그리고 '페트로 안디나'^{Petro Andina} 등이다.

페트로 수르는 다국간 국영 에너지 기업을 총괄하는 공동 회사 건설을 지향하며, 그 주된 목적은 에너지 정책의 협조와 회원국 기업에 의한 공동 벤처 프로젝트의 공동 입안 등에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회원국의 협력체로 기능한다. 현재 이 협력체의 참여 주체들은 베네수엘라의 국영석유회사인 PDVSA, 아르헨티나의 ENARSA,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 Petrobras이며 앞으로 볼리비아의 YPF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페트로 수르의 회원국은 각자 석유 수입을 교육·의료 등의 사회 프로젝트에 사용한다고 동의함으로써 차베스의 자세를 채용했다.

2004년 7월에 차베스 대통령과 아르헨티나의 키르치네르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 협조를 선언한 각서에 서명하고, 이것을 페트로 수르의 이름 아래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2005년 5월에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정부가 페트로 수르 설립을 위한 공식 합의 문서에 서명했다. 이후 우루과이, 파라과이도 가입하고 볼리비아

에 대해서도 참여를 요청했다. 현재 페트로 수르 협력체 속에서 합의된 주된 공동 프로젝트는 첫째, 베네수엘라 오리노코 벨트의 공동 개발, 둘째 브라질 북동부에서의 정유 공장 건설, 셋째 아르헨티나의 해안 천연가스 개발 등이다. 베네수엘라는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에 대해 석유를 우대 조건으로 하루에 약 10만 배럴 판매를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로 석유 판매량은 예정보다 적다고 한다.

차베스는 카리브 지역의 소국들과도 에너지 협력체를 내세웠다. 이것은 페트로 카리브이며, 2005년 6월 베네수엘라의 뿌에르토 라 크루스^{Puerto La Cruz}에서 열린 카리브 해 국가 에너지 정상 회담에서 '카리브 공동 시장'^{Caribbean Common Market(Caricom)} 15개 국가에 페트로 카리브 에너지 협정이 제안되었고 쿠바와 카리브 공동 시장의 회원 13개 국가가 이에 합의했다⁹. 협정의 내용은 베네수엘라 주도로 카리브 지역의 에너지 부문 통합을 도모하며, 관광 산업 이외는 아무 국내 산업이 없고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가난한 카리브 국가들을 석유 가격 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을 경제 분야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국가들에게 우대 조건으로 하루에 총 18만 5700배럴의 석유를 판매할 계획이며, 석유 가격은 1배럴당 시장 가격보다 약 6달러 싸게 설정될 예정이다. 한편 석유뿐 아니라 석유 상품, 가스 및 전기 등의 에너지 전반을 포함한다.

페트로 카리브 체계에 근거한 값싼 석유 공급의 전면적 개시에 앞

9 베네수엘라와 안티구아, 비류다, 바하마, 벨리제, 그레나다, 기아나, 자메이카, 도미니카 공화국, 생 빈센트, 생 루시아, 산 키츠 네비스, 그레나딘, 수리남 등의 13개 회원국 사이에 에너지 정책을 둘러싸고 상호 조정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협정이 맺어졌다. 나머지 바베이도스와 트리니다드토바고는 가입을 거절했다.

서, PDVSA에 의한 고액의 투자와 인재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2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예상한다. 또한 우대 조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회원 국가들의 석유회사 국유화가 필수 조건이 되며, 페트로 카리브 회원 국가 사이의 강한 정치적 결합이 요구된다. 일부 회원국에 대해서는 이미 우대 조건 아래에서 석유가 판매되고 있으며, 쿠바에게는 하루에 약 10만 배럴이 공급되고, 자메이카는 개별 협력 협정 체결에 따라 하루에 약 2만 1000배럴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한 공급은 현재 하루에 2만 5000배럴에서 5만 배럴로 증가할 예정이다. 중남미 전체로 보면 현재 페트로 카리브 구상이 제일 앞서가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는 2005년 7월에 페루의 리마에서 열린 안데스 공동체 제16회 정상회담에서 차베스가 제안한 페트로 안디나다. 이것은 페트로 카리브의 안데스 각국 판이며 안데스 각국의 석유회사로 구성된 페트로 안디나가 석유·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의 탐사·개발과 대체 에너지 개발을 공동으로 실행함으로써 각국의 협력 관계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 2006년 4월에 차베스가 안데스 공동체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이 페트로 안디나 구상은 암초에 얽혔다.

위에서 보았듯이 페트로 수르와 페트로 카리브에서는 현실적으로 석유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흥미로운 것은 우대 조건 아래에서 석유 판매 대가는 꼭 현금만이 아닌 상품으로도 지불이 가능한 점이다. 실제로 베네수엘라는 몇 나라와의 석유 거래를 물물교환 방식으로 진행했다.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는 매일 9만 배

럴의 석유를 쿠바에 제공하는 대신, 쿠바는 2만여 명이 넘는 의사들을 베네수엘라 빈민가에 파견하고 무료 건강 진료를 제공했다. 또한 교사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10만 명의 쿠바인 교사들이 투입되었고 교육받은 자원 교사들은 빈민가와 농민의 주거 지역에서 성인 문맹 퇴치에 나섰다. 쿠바의 교육 프로그램인 '나는 할 수 있다' Si se puede 또한 베네수엘라에서 제 몫을 해내고 있다.

아르헨티나와는 쇠고기 교환으로 석유를 제공한다. 2005년 3월 현재,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의 5퍼센트 상당은 물물교환으로 판매된다. 또 2005년 12월 기준으로 페트로 카리브와 페트로 수르 체제 아래 약속된 석유 공급량이 베네수엘라의 1일 석유 생산량의 10퍼센트 이상인 약 30만 배럴 수준이다. 베네수엘라 에너지 석유 협력은 이후 중남미의 상황에 따라 30~40퍼센트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차베스가 전개하는 석유를 통한 중남미 통합 프로그램은 석유 자원의 관리·경영면에서 지속가능성 여부가 문제시되지만, 차베스의 의도는 무엇보다도 미국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입장 표시다. 카리브해 국가들과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대 베네수엘라 제압 전략에 이들 소국들이 동조하지 않게 만드는 효과를 거둔다. 가난하고 힘없는 카리브 소국들은 국제 원유 가격의 변동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 베네수엘라의 안정적인 자원 공급은 카리브해 국가들의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하면 차베스의 석유를 통한 중남미 통합 프로그램은 결국에는 제3세계 국가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맹 문제와 에너지 자원 부족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러한 에

너지 협력 구축은 주변화된 제3세계 국가들의 힘을 모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중남미 민중을 위한 대안적 통상협정

차베스의 ALBA 구상에 좀더 기세를 줄 뿐 아니라 이것에 현실성을 가하는 한 시도로서 'TCP' Tratado de Comercio de los Pueblos(민중무역협정, 이하 TCP로 표기)가 있다. TCP는 원래 볼리비아의 시민사회 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볼리비아 민중운동 Bolivian Movement against Free Trade'이 2005년 4월에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 La Paz에서 열었던 대회에서 제안한 미국 주도형 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하는 좀더 정의로운 무역 대안에 기초를 둔다.¹⁰

이러한 농부들이나 협동조합 그리고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정의로운 무역을 바라는 목소리는 미국과 안데스 공동체와의 자유무역협정인 '안데스 무역협정' Andean Free Trade Agreement(AFTA)에 볼리비아가 참가 강요를 받으면서 커지게 되었다. 2006년 2월 콜롬비아가 안데스 경제 공동체에 가입했을 때, 콜롬비아와 미국 간의 협정으로 인하여 볼리비아는 그동안 수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콜롬비아로의 콩 수출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 왜냐하면 볼리비아의 콩은 엄청난 보조금을 받던 미국산 콩에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콜롬비아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희생을 당하게

10 닉 벅스틴, 김천직·조두영 역, 「민중무역협정,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라」, 미디어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print.php?board=news&id=36424>.



◀ 볼리비아 대통령 모랄레스와 자리를 함께한 차베스.
© VTV(www.venezuelanalysis.com)

된 볼리비아의 모랄레스는 “우리에게는 자유무역협정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민중무역협정이다”라고 밝히며 TCP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했다.

TCP의 기본 방향은 무역과 투자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민중과 개발을 위한 수단이며, 해외 투자자와 초국적 자본에는 제약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중이 스스로 식량과 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해야 하며, 공공 서비스는 시장화가 될 수 없다. 또한 소규모 생산자와 협동조합을 양성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하며, 체결 국가간 차이를 감안하고 공동체적 원칙 아래 상호 원조를 위한 무역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TCP는 단지 시장을 개방하는 게 아니며, 변덕스러운 세계 경제에 개발도상국을 완전히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조정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보장하는 상품의 구매를 책임지는 것이다¹¹.

볼리비아의 민중들의 운동으로부터 태어난 TCP는 주변 국가의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차베스, 볼리비아

11 닉 백스틴 위의 기사.

대통령 모랄레스, 쿠바 대통령 카스트로는 2006년 4월 28일과 29일에 쿠바의 아바나 시에 모여 3개국 간 TCP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볼리비아는 이 자리에서 ALBA 협정에 공식적으로 조인했다.

이 TCP에 따라 2006년 5월 26일부터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볼리비아를 방문하고 총 11개의 협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볼리비아 대통령인 모랄레스는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의 연대를 ‘선한의 축’¹²the axis of the good¹²이라고 표현하고, 나중에 예측될 위협에 대비하여 양국 간 군사 협력을 높이지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차베스의 볼리비아 방문 의도는 양국 간 군사력 강화와 협력 촉진뿐이 아니었다. 차베스가 볼리비아를 방문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나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 구축이었다.

에너지 협력 가운데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약 1억 달러를 투자하여 볼리비아 내 천연가스의 공업화를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볼리비아 국영석유회사^{YPFB}가 합작회사 주식의 51퍼센트 이상을 소유할 예정이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매월 20만 배럴의 디젤유를 볼리비아에 공급하고 대신 볼리비아는 대두유를 공급한다. 베네수엘라는 또 아스팔트와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할 계획이며 ‘남부 광업회사’^{Mineral del Sur} 설립을 제안했다. 베네수엘라는 전기·통신·군사 협력 분야에서 인력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제안했다. 그리고 양국 사이의 교육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과 농업의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12 부시 정부가 미국의 국가 정책에 반하는 국가들을 ‘악의 축’^{the axis of the evils}이라고 부르는 데 대응한 말이다.

TCP 협정을 통해 볼리비아는 콜롬비아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때문에 수출이 격감한 콩을 비롯한 볼리비아 농산물을 나머지 두 국가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TCP의 특징은 상품의 대가가 꼭 현금이 아니라 또 다른 상품으로 지불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신에 현금은 공동 기금으로 저축하게 된다. 차베스는 장기적으로는 ‘남부 은행’ Banco del Sur; Bank of the South¹³ 설립을 내세웠다. 이 은행은 국제 통화기금의 대안이며 이제까지 IMF 체제 아래 기금을 받은 약소국 가들은 워싱턴에서 결정된 경제 정책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으나 남부은행이 발족되면 IMF에 의존하지 않은 경제 체제를 피하게 된다.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가 출선하여 기금을 마련할 것으로 합의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은행은 일반 농민도 이용 가능하다. 농민은 대부분 현금이나 상품으로 상환한다. 은행 대출은 이자 수익보다 질 좋은 농산물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점점 화폐의 가치보다 상품의 가치를 높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촉진할 수 있다. 이윤을 위한 경제활동이라는 자본주의 신앙을 깨뜨리고 연대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게 차베스의 강조이기도 하다.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대두, 우유, 차, 커피 그리고 고카(남미에 생식하는 약초의 일종) 생산의 산업화에 합의했다. 동시에 모랄레스는 볼리비아에서의 농지 개혁에 착수했다. 베

13 차베스는 2006년 7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공화국인 감비아(Gambia)의 수도 반주르(Banjul)에서 열린 제7회 아프리카 공동체 정상회담(AU Summit)에 참석하고 남미은행을 중남미뿐 아니라 아프리카, 카리브 해 국가들을 위한 ‘남남 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을 위해 활용할 것을 연설했다(Teo Ballvé, “Hugo Chávez: The Mouth of the South”, Jul. 13, 2006, www.venezuelanalysis.com).

네수엘라와 볼리비아는 경작지의 약 90퍼센트가 10퍼센트 미만의 인구에 의해 소유되어 온 대토지 소유제이며, 차베스는 2005년에 이미 농지 개혁을 시작했다. 모랄레스의 농지 개혁은 차베스의 ‘대토지 소유제와의 전쟁’ war on latifundismo을 본받은 것이다.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양국 관계는 이미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쿠바는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볼리비아 민중의 건강과 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도 기여한다. 지금 볼리비아는 2005년에 베네수엘라가 쿠바에서 온 의사나 교사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똑같은 수준의 혜택을 누린다. 즉 쿠바에서 온 교사가 문맹 퇴치를 위해 활약하고, 쿠바에서 온 의사가 베네수엘라의 빈민가에서 수행한 ‘미션 바리오 아덴트로’ Mission Barrio Adentro 활동을 볼리비아의 빈민에게도 실시한다.

문화·교육·의료의 연대 매개

ALBA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은 각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차별성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의 문화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중남미에서의 문화적 연대라는 측면을 구체화시킨 시도는 시몬 볼리바르의 탄생 222주년인 2005년 7월 24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첫 방송을 시작한 남미판 알자지라(Al Jazeera) 방송 ‘텔레수르’(남쪽의 텔레비전, Televisora del Sur 혹은 Telesur)가 대표적이다. 텔레수르는 쿠바와 베네수엘라가 브라질과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와 협정을 맺어 설립한 최초의 중남미 위성방송국 합병회사다. 위성방송의 방송 범위는 중남미에만 그치지 않고 북미, 서유럽, 북유럽, 북아

프리카 등으로 넓혀지고 있으며 또 하나의 '남쪽'인 아시아를 포함 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와 기술 협력을 둘러싼 협상에도 들어갔다¹⁴.

텔레수르는 그동안 중남미권 뉴스를 독점해온 미국과 유럽의 국제 뉴스 방송에 맞서 지역의 목소리를 독자적인 시각으로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즉 '중남미의 현실을 자기 스스로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고 전달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 방송국은 미국의 CNN에 대응하는 대체가 될 수 있도록 계획되며 아르헨티나 예술가 아델포 페레스 에스키발^{Adolfo Perez Esquivel}이나 우루과이 작가 에드워드 갈레아노^{Eduardo Galeano} 등 약 20명의 저명한 좌파 지식인으로 구성된 '고문심의회' ^{Consejo Asesor}를 두었다. 이 심의회에는 반세계화운동을 견인해온 주요 미디어 가운데 하나인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Le Monde diplomatique}의 편집인 이그나시오 라모네^{Ignacio Ramonet}도 참여한다¹⁵.

텔레수르는 또한 차베스나 카스트로, 모랄레스 등이 추진하는 ALBA 구상을 미디어를 통해 확산해 나가는 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래 지역 공동체에 뿌리를 둔 대안적 미디어 운동은 중남미에서는 40년 이상의 역사가 있으며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에서는 1980년대부터 공동체 수준의 자율적 미디어 운동이 전개되어 왔다. 오랜 대안 미디어 운동 역사 속에 제3세계의 연대를 위한 독자적인 국제 미디어를 건설하자는 제기도 있었으나 그 구상을 현실화해낸 것은 텔레수르가 처음이다.

14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다.(www.telesurtv.net)

15 히로세 준廣潮純, 『투쟁의 최소 회로 闘争の最小回路』, 2006, 177쪽.

또한 문화 프로그램 이외도 ALBA는 대중의 일상적 삶에 가까이 가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여 교육 또는 의료 분야의 협력에도 주력한다. 우선 '남부 대학' ^{University of the South}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학은 지역 공통의 지식인 양성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까지 쿠바의 의사나 교사를 베네수엘라로 파견하고 빈민가의 건강 상태 개선이나 문맹 퇴치에 나섰던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해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또한 이 대학은 중남미의 지식인 양성에만 그치지 않고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카리브 등 제3세계의 학자·연구자와의 교류도 도모하는 등 '남남 협력'의 학문적 중심이 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또 다른 교육 분야의 중남미 연대 사업으로는 2006년 베네수엘라의 바리나스 시에 설립되는 '파올로 프레이레 중남미 생태농업연구소' 등을 들 수 있다.

의료를 매개로 한 중남미 각국들 사이의 연대 움직임도 활발하다.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주의에 입각한 '중남미 의과대학'이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2005년 8월 쿠바에서 열린 차베스와 카스트로의 협정에 중남미 최대 농민 운동 단체들의 연합체인 '라 비아 캄페시나' ^{La via campesina}가 지원해서 설립되었다. 2006년 10월에 개교한 이 학교는 앞으로 10년 안에 약 20만 명의 의사를 배출하게 될 예정이며 이들에게는 '총체적 공동체 의사'라는 칭호가 주어진다.

명칭에서 시사하듯이 이들은 졸업하면 가난한 농민과 원주민들이 사는 시골로 배치된다. 1기 신입생 1500명 가운데 볼리비아 학생들이 1000명을 차지할 예정이다. 이 의과대학에는 베네수엘라의 가

난한 대중들을 위한 '미션 바리오 아덴트로'^{Mission Barrio Adentro}에 참여하는 의사들이 학생들과 숙식을 함께하며 경험을 공유한다.

국제주의를 지향하는 ALBA와 남남 협력

신자유주의적 미주 지역 통합체인 FTAA를 강요하는 미국과 그것을 거부하고 대안적 중남미 지역 통합을 지향하는 ALBA를 도모하는 베네수엘라의 힘겨루기는 점점 첨예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전략적 움직임은 중남미에만 머물지 않는다. 미국이 '악의 축'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압력에 대한 전략적 연대를 아주 폭넓게 이끌고 있다.

예를 들어 차베스는 미국의 무기 부품 금수 조치 이후 2006년 7월 동안 이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제 무기 구입과 전략적 협력을 위한 러시아 방문을 비롯해 벨로루시, 카타르, 이란, 베트남, 말리 방문을



▲ 2005년 1월 브라질의 수도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서 연설하는 차베스 대통령. © Agencia Bolivariana de Noticias (www.venezuelanalysis.com)

마친 바 있다. 차베스는 모든 방문 국가들과 에너지 협력 협정을 맺었다.

2006년 8월 차베스는 6일간의 중국 방문으로 양국 사이에 28개의 협력 협정을 맺었고, 중요한 것은 에너지 협력으로 베네수엘라의 미래의 원유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오리노코 강 유역 개발에 중국과 합작회사를 설립할 것을 합의했다. 기타 정치, 농업, 광업, 인프라, 문화, 언론 정보 교류, 기자 교류, 인터넷 협력, 관광, 사회, 교육,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이 합의되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향후 6년 동안 약 50억 달러의 석유 부문 투자를 할 예정이다. 반차베스 진영이 항상 목청을 높이던 “노동 유연화와 신자유주의적 정책 노선만이 외국인 투자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무색하게 되었다. 베네수엘라는 또한 중국으로부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후보 선출을 밀어주기로 약속을 받는 정치적 성과도 올렸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ALBA가 유럽의 지식인들로부터 적극적 지지와 연대를 얻고 있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유럽의 지식인들과 인권 단체는 중남미의 사회정의 확산에 적극 노력해왔다. 1960, 70, 80년대를 거치면서 중남미의 젊은 지식인들, 예술가들, 정치적 망명자들이 유럽을 안전한 이주지로 택하면서 양 대륙 사이에는 서로 정치적·문화적 공감대가 깊어졌다. 특히 군부독재 치하의 아르헨티나와 칠레 젊은이들이 유럽으로 많이 망명했다.

이미 유럽은 1930년대와 40년대를 통해 파시즘의 고통을 겪었고, 이에 중남미에서 온 지식인들이 70, 80년대를 통해 체험한 또 다른 파시즘의 좌절을 독특한 미학적 스타일로 표현해내는 것에 쉽게 공

감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국제적 지지는 ALBA가 단순히 중남미 민중을 위한 민족주의적 성향의 구상이 아니며 외국 자본 유치만을 위한 외교 정책이 아닌 국제 연대적 성향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차베스의 국제 연대 자세는 2005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의 폐막식 연설에도 잘 나타난다. 그는 연설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태도가 현재 지구촌의 한계를 야기하며, 신자유주의적 지역 통합은 세계를 정복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정의와 평등을 축으로 한 새로운 사회주의가 세계 민중의 행복을 약속한다고 주장했다.

차베스의 중남미 지역의 대안적 지역 통합 움직임은 ‘남남 협력’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지녔다. 차베스는 2006년 7월 2일 감비아의 수도 반줄(Banjul)에서 열린 제7회 아프리카 공동체(African Union(AU)) 정상 회담에 참석해 남남 협력의 정신에 근거한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국가들의 민중 협력 구축을 주장했다. 차베스가 내세운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은 중남미의 대안적 지역 통합 체계 안에서도 축이 된 공동 석유회사인 Petrosouth와 공동 방송회사인 Telesouth, 지역 공동 개발은행인 남부은행 그리고 지역 공동 대학인 남부 대학이다¹⁶.

차베스뿐 아니라 중남미 전반에서도 남남 협력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다.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이틀에 걸쳐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Abuja)에서는 ‘남미-아

프리카 정상회담’South America-Africa Summit이 열려, 아프리카 대륙 54개국과 남미 12개국의 지도자가 한 자리에 모였다.¹⁷ 두 대륙의 남남 협력이 본격적으로 모색된 자리다. 아부자에서 열린 정상 회담에서는 남미국가공동체와 아프리카공동체와의 관계 강화뿐 아니라 경제, 정치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이들이 공동으로 안고 있는 빈곤 퇴치나 에이즈(HIV/AIDS) 등의 난해한 전염병에 대한 의료 협력 등이 모색되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다른 개발도상국가와의 협력 구도를 처음으로 제기한 주체는 2004년에 결성된 ‘남미국가공동체’Comunidad Sudamericana de Naciones(CSN)다. 이 남미국가공동체는 개발도상국가간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한 걸음으로서 2005년에는 ‘남미-아랍 연맹 정상회담’(South America-Arab League Summit)을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개최한 바 있다.

차베스의 ALBA를 중심으로 한 대안적 지역 통합 구상은 중남미 민족의 자율성을 지키는 반미운동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자본을 매개로 하지 않는 글로벌한 수준에서의 정치적인 이념의 공유, 세계 개발도상국의 대안적 삶의 구축을 위한 광대한 연대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ALBA는 세계사회포럼에서 내건 슬로건,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를 구체화시키는 걸음을 이미 시작한 것이다.

16 Angola Press, “Chavez Proposes South-South Cooperation at African Union Summit”, Jul. 3, 2006, www.venezuelanalysis.com.

17 Odeen Ishnael, “South America-Africa Summit to Advance South-South Cooperation”, Oct. 30, 2006, www.venezuelanalysis.com.



4 중남미 지역 통합 전망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주는 시사점

ALBA 구상은 아직 시작 단계이며 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의 3개국만이 가입했으며 여기에 볼리비아, 에콰도르가 참여 의사를 타전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이 구상은 중남미에서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첫째로 ALBA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공함으로써 여러 나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천연가스관 건설은 중남미를 횡단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며 이를 통해 ALBA의 필요성과 협력 정신이 전파·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중남미가 공유하는 역사적·정치적 경험과 문화적 유사성이다.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 지배를 경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미국에 의한 정치적·경제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정치적 혹은 경제 위기에 처해 왔다. 특히 20

세기 말엽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의해 매우 큰 희생을 치른 공통의 역사를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은 이들 나라 사이에 대안적인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브라질이 공식적으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면¹⁸ 중남미의 많은 국가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한다. 모든 사상이나 정보의 매개가 될 언어가 같다는 것은 지역 통합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강점이 된다. 또 메르코수르를 중심으로 한 중남미 국가 간 교역 관계의 높은 상호 의존도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러한 점은 ALBA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낙관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동시에 FTAA가 중남미에서 빠르게 퍼지는 듯 보여도, 현실로서는 그렇게 쉽지도 않다. 왜냐하면 중남미에서의 지역 공동체는 아주 밀접하게 서로 교차하고 연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정치적 입장을 받아들이는데 외줄기 길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미국이 주도적으로 세계 각국과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시장의 완전 개방을 통해 각국 정부의 역할을 빼앗음으로써 다국적 기업의 힘을 증대시켜 가난하고 힘을 못 가진 사람들을 더욱 빈곤한 상대에 쫓아내는 폭력적인 통합이다. 이러한 가운데 ALBA로 구체화한 차베스의 도전은 이제까지 미국의 ‘뒷마당’으로 주권을 빼앗기고 미국의 신식민지주의적^{neo-colonial} 정책에 무력화되어 가장 혹독한 아픔을 겪어 온 남미 민중들이 신자유주의에 내리는 경고이자 신자유주의 질서를 넘어서는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희망의 제시이

18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는 아주 유사한 언어다.

기도 하다.

NAFTA, FTAA(ALCA) 그리고 EU와 다른 성향을 지니는 ALBA는 국제 사회에서 힘을 빼앗기며 주변화 되어 온 국가의 연대를 지향하는 것으로, 차베스가 지향하는 개발도상국가들의 연대인 남남 협력을 구체화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앞으로의 ALBA의 과제로서는 지역 통합이라는 국가의 틀과 시민 사회의 조화가 큰 쟁점이 된다. 즉 얼마나 민중의 참여와 자율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가, 국민국가의 울타리를 넘어 차베스가 내걸은 '제3세계의 연대'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논의거리가 된다. ALBA가 남남 협력체 혹은 제3세계 연대체로서 그 영향력을 세계에서 어느 정도 발휘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중남미라는 특수한 정치, 경제, 역사, 문화적 조건에서 배태되고 차베스의 강력한 리더십과 비전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ALBA에서 한국이 배울 점은 무엇인가? 또 한국이 몸담고 있는 동아시아는 ALBA라는 공동체 구상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ALBA에서 하나의 축이 되는 에너지 협력은 동아시아에서도 역시 주요한 협력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러시아 극동 지역과 동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한 석유 개발이 동아시아 경제 협력의 중요한 기축이 될 것으로 주변 국가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아직 러시아, 중국, 일본을 둘러싼 에너지 주권 다툼이 존재한다. 동아시아 역내의 경제 의존도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ALBA와 같은 일관하고 보편적인 이념의 결여와 국가간 신뢰 관계의 결여는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큰 장애 요인이다.

또 현재까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는 ALBA와 같은 민중의 복지나 기본적인 삶의 조건 향상에 비중을 둔 사회 통합적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그리 활발하지 않다. 동아시아 지역 내에 존재하는 심각한 빈부 격차에 대한 논의는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지역 통합의 중요한 과제로 씌름하려는 자세는 아직 안 보인다.

ALBA 구상은 이러한 동아시아 현실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경제 협력에만 편중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지역 사회 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편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의 권리만을 확대시키는 현재의 무역 체제와는 다른 길, 연대, 상호보완성, 호혜주의와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철학이 진정한 지역 공동체에 필수적임을 ALBA 구상은 제시한다. ALBA에 일관되고 있는 지역 공동 발전의 철학을 동아시아도 적극적으로 배우고 끌어들이야 할 시기가 아니겠는가.

21세기 혁명은 어떻게 가능한가?

(베네수엘라 혁명의 시사점)

새사연 연구센터

- 1 베네수엘라는 '21세기 방식의 최초의 혁명' 인가?
- 2 무장 투쟁보다 단호한 선거 혁명
- 3 몰수 없는 혁명
- 4 민중 헤게모니로 추진되는 혁명
- 5 파괴보다 창조가 중심인 혁명
- 6 국민의 지배 강화로 관료주의를 넘는 혁명
- 7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한국의 미래

VENEZUELA

차베스와 베네수엘라의 대답은 '민중 참여' 다. 베네수엘라는 관료주의를 극복할 유일한 대안이 기존 관료 조직의 단순한 해체도, 혁명 정당의 윤리 도덕적 호소도 아닌 민중 참여임을 잘 보여주었다. 단지 지난 8년간은 민중 참여가 초기적으로 조성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곧바로 민중 참여 조직을 통한 관료 조직의 해체를 선불리 추진하지 않고 (민중 참여 조직이 성숙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관료주의를 우회하여 간다"는 매우 독특한, 그러면서도 아주 현실적인 방식을 도입했다.



¹ 베네수엘라는 ‘21세기 방식의 최초의 혁명’ 인가?

지금까지 베네수엘라가 정치적으로 이행해온 과정, 아래로부터의 민중의 실질적 참여가 실현되어 온 형태, 연대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를 향해 추진하는 경제 개혁, 석유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시도 그리고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남미 민중의 공동 이익을 위한 대안적 공동체 구상과 그 실천을 짚어 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8년간 이어온 숨 가쁜 이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21세기 혁명의 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1세기라는 특정한 조건은 지난 시기 혁명의 일반성에 더하여 시대사적인 새로운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 과제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반신자유주의

무엇보다 21세기 혁명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신자유주의를 뛰어넘어야 할 과제와 직면한다. 진정 21세기 방식의 혁명이 되려면 현재 지구를 덮는 신자유주의 질서를 극복해야 한다. 이는 또한 미국의 세계 지배 구조에 대해 실질적인 파괴력을 갖는 일이다.

세계의 진보 운동이 진정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고 공언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다른 세계란 무엇보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세계를 의미해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일찍이 신자유주의를 전형적으로 겪어온 나라이고 그 그늘에서 시작된 혁명이다. 베네수엘라 혁명이 ‘21세기 사회주의’를 선언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견지해 온 특징은 바로 ‘반신자유주의’였다.

둘째, 구체제의 법적·제도적 극복

한 사회가 진정한 변화를 찾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시스템에서 더 이상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국민이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안 사회를 여는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자면 기존의 정치사회 제도와 그 제도 아래 특권적 이익을 향유해 온 기득권 세력의 헤게모니 구조를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어떤 개혁도 반드시 좌절해온 게 최근세사의 역사적 진실이다.

베네수엘라 혁명은 ‘과거 체제와의 완전한 단절’ ‘새로운 공화국의 수립’으로 출발했다. 기존 시스템의 법적, 제도적, 물리적, 인적 청산이 점진적이지만 확고하게 그리고 타협 없이 일관되게 추진되

었기에 베네수엘라는 새로운 나라를 향해 나갈 수 있었다. 과거의 체제는 헌법에 의해 부정되고 연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개혁 법률에 의해 부정되었다. 새로운 세기의 혁명에는 국민이 요구하는 법률과 제도로 기존 체제를 확실하게 극복하는 법적·제도적 전진이 필수적이다.

셋째, 대안경제 혁명

21세기 혁명은 ‘주주 가치’와 ‘시장의 지배력’만을 용인하는 경제 시스템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경제 구조를 만드는 혁명이다.

지금까지 ‘주주 가치 극대화’와 승자 독식만을 인정하는 ‘시장 법칙’을 극복할 가치로 공인된 것은 ‘연대성’의 가치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이외의 나라들에서 주창된 ‘연대성’ 또는 ‘사회적 연대’는 시장의 실패에 대한 보완 내지는 생산 과정에서의 시장 원리와 분배 과정에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실로 생산 과정에서의 연대성의 가치는 실종되었다. 더욱이 연대성의 가치는 국가에 의한 보장이 아니라 민중의 주도성이 실현되고 민중이 생산과 소비에서 적자생존의 경쟁이 아닌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움직이는 구조 아래서만 가능하다.

베네수엘라는 자신의 경제가 ‘시장 지상주의 가치’가 아닌 ‘연대성’을 핵심 가치로 한 사회적 경제’ 추구임을 헌법에서부터 명문화했다. 사적 소유와 시장의 운동 자체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경제를 기본 가치로 놓고 그 현실화를 향해 경제 구조를 부단히

변화시켜 온 것이 베네수엘라 경제 혁명의 본질이다.

넷째, 진정한 참여 정치의 구현

21세기 혁명이 20세기 혁명과 확연히 구분되자면 혁명 과정에서 민중이 수행하는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즉 민중의 실질적인 역할 측면에서 질적인 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정당의 역할이나 국가의 역할, 시장의 역할도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민중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만 진정 21세기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측면은 베네수엘라 혁명 과정 안에 국가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통제가 구체화되고, 풀뿌리 단위에서의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확대되는 모습에서 그리고 자율적인 정치 조직을 건설해 가는 등, 수년간 자율적 민중 조직이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새로운 지역 공동체와 국제 관계의 건설

세계화 시대에 일국 단위의 자급 자족적 사회 경제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일은 21세기 방식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지구촌이 한층 가까워지고 국제 관계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증대된 현실에서 20세기식의 자족적인 자립 경제 모델은 국수주의나 폐쇄적 고립을 자초한다.

따라서 현 시대에는 세계 사회와의 소통을 유지하면서도 미국 주도의 패권적 국제 질서와 선을 긋고 상호 호혜적인 대안적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새로운 유형의 국제적 관계를 수립해야만 개별 국

가의 혁명이 지속성을 갖는다. 이에 대한 가장 참신한 시도가 베네수엘라와 남미에서 나타났다. 물론 남미에는 미국의 다양한 간섭 행위와 나라 사이의 엄청난 편차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건설하려는 WTO나 NAFTA와는 전혀 다른 철학과 방식의 실험이 남미에서 진행 중이다. 남미를 위한 볼리바리안 대안이라 부르는 ALBA가 그 전형이다.

여섯째, 20세기 국가사회주의의 극복

21세기의 모든 혁명은 ‘반신자유주의’로부터 출발한다. 그것은 20세기 혁명이 대체로 ‘민족해방운동’에서부터 출발한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진정 인류가 원하는 대안 사회 혁명이라고 할 수 없다. 20세기 민족해방운동은 ‘20세기식의 사회주의’로 나갔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 부분 역사의 과거형이 되어 버렸고 세계의 진보 운동이 지금 현재 차용하거나 지향할 수 없는 모델임이 분명하다. 또한 20세기 사회주의는 민중의 자율적 영역마저도 국가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버린, 모든 국민이 공무원이라고 비유할 정도의 국가사회주의임을 부정할 수 없다.

20세기 변혁이 추구했던 거시적인 가치와 목표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명제, 경로, 주체는 달라야 한다. 그런 면에서 21세기 혁명이 무조건적으로 넘어야 할 첫 관문은 20세기 사회주의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었던 국가주의이고 관료주의이며 엘리트주의다.



2 무장 투쟁보다 단호한 선거 혁명

베네수엘라 혁명의 첫 시작은 민족적 관점이 강한 ‘볼리바리안 혁명’이었다. 그리고 그 혁명은 볼리바리안 정신 아래 민중 스스로 자기 창조, 자기 발전하여 왔고 혁명 7년이 경과하면서 ‘21세기 방식의 사회주의’로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베네수엘라가 다시금 깃발로 올린 사회주의는 기존 ‘국가 사회주의’와 분명한 경계선을 긋고 시작했다. 20세기 방식이 아니라 21세기가 요구하는 제반 과제를 현실에서 검증하고 민중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베네수엘라 혁명은 21세기 혁명이 충족시켜야 할 주요한 과제와 필요조건에 두루 닿아 있다. 베네수엘라 혁명은 지난 시기 혁명 일반의 보편적 과제 외에 21세기가 당면한 문제를 전진적으로 풀어나간 첫 사례로 기록되기에 충분하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베네수엘라 혁명이 21세기가 요구하는 과제에 도전하면서 거둔 성과, 그 실천적인 시사점은 무엇인가?

20세기 혁명 방식을 넘어선 새로운 유형의 대안 사회 모델 건설과 그 실현 방도에 대해 베네수엘라의 실험은 몇 가지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우선 20세기 혁명이 무장봉기에 따른 권력 접수와 이후 국가 권력에 의한 일방적인 사회 변혁 추진 과정이었다고 단순화시킨다면, 21세기 혁명은 연속적인 선거와 연속적인 국민적 투표에 의한 혁명, 즉 ‘끊임없이 선거하는 혁명’이다. 그것을 베네수엘라의 정치 혁명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물론 선거 혁명을 한다는 게 과거의 정치사회 질서를 수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선거보이콧=과거 질서 부정, 선거 참여=과거 질서 인정’이라는 도식이 성립하지 않음을 베네수엘라는 보여주었다. 선거 혁명이 일회적 선거 승리에 의한 집권만을 의미하지 않음

며 국민의 대대적인 참여와 주도성을 수용하는 혁명의 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차베스가 98년 이전의 선거 보이콧 방법을 접고 선거 참여를 결정했을 때에도 의연히 “과거의 낡은 정치 질서 타파” “새로운 공화국의 수립”이라는 목표를 철회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보통선거와 시민민주주의적 절차를 승인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시민민주주의적 절차와 보통선거를 정치적 권리로 보장하는 가운데, 기득권 세력의 청산과 구 시스템의 개편을 선거와 투표라는 방식으로 추진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기존 틀에 의해 주어지거나 투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과거 선거 혁명의 제한성을 넘을 수 없다. 제한성을 넘기 위해서는 기존 선거 혁명과 달리 적어도 두 가지를 근본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첫째, 선거와 투표 행위가 진정 국민의 확고한 의사와 의지를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 시스템은 기득권층의 이익이 계속 유지되고 국민의 의사가 적절히 제한되도록 묶어두는 기제가 제도적으로 굳혀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을 돌파하기 위해 차베스와 베네수엘라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선거 혁명 후 즉각적으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차베스는 선거 혁명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자마자 즉시 제한의회 소집을 하겠다고 공언했고, 취임 후 두 달 만에 제한의회 소집의 정당성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 제한의회 소집, 새 헌법 제정 작업,

새헌법의 동의를 묻는 국민투표를 1년 이내에 모두 치러낸다. 이렇게 해서 베네수엘라 혁명의 첫 해에 그 유명한 350조항에 이르는 장문의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헌법’이 탄생했다. 진정한 선거 혁명은 98년 차베스를 당선시킨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새 헌법을 탄생시킨 세 번의 국민투표와 구질서를 전면 대체해버린 일련의 선거였다. 여기에 베네수엘라 선거 혁명의 백미가 있다.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자 헌법은 낡은 질서의 최종적 수호자, 진정한 개혁 저지의 버팀목이라는 과거의 허물을 벗고 혁명의 강력함도 구이자 수호자로 전변되었다. 새 헌법이 21세기와 더불어 효력을 발생시키자마자 즉각적으로 권력 교체와 제도 변혁 그리고 사회 개혁의 파괴력을 발휘한다. 기존의 모든 헌법 기관들은 무효화되고 대법원을 비롯한 기존 의회 등이 공식 해산되며 2000년 7월 베네수엘라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주지사 선거를 한꺼번에 다시 치루고 행정부에 이어 입법, 사법, 지방에 이르기까지 중앙 권력의 완전한 교체를 합법적이고도 신속하게 수행해 낸다.

나아가 새 헌법은 기존 보수 양당 체제를 지탱해온 모든 정치 제도적 기반을 단번에 파기시키고, 막강한 기능을 국민투표에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정치 통제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 시장 가치를 제일 원칙으로 내세우는 대신 석유회사의 재국유화 원칙을 포함하여, 연대성을 중심으로 노동자 공동경영과 협동조합을 장려하는 ‘사회적 경제’를 헌법에 명기함으로써 헌법의 힘을 빌려 경제개혁을 추진할 기초를 세운다. 그리고 이는 1년 후에 입법 발효한 49개 개혁 법률로 현실화된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새로운 유형의 선거 혁명이 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위로부터의 혁명 방식을 규정짓는 특징에 불과했다.

베네수엘라 선거 혁명의 두 번째 특징은, 아래로부터 사회 개혁 성과를 선거와 법률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선거와 투표가 점점 더 사회 변혁과 민중의 권력 지배를 고착화시키는 데 응용된다는 점이다. 이제는 국민이 선거나 투표에 동원되는 피동적 대상이 아니라, 선거와 투표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의지를 부단히 합법화시키고 제도화시키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합법화, 제도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선거 혁명이었다.

이런 과정을 반영하여 초기의 탄화수소법과 토지법, 협동조합법은 계속 수정되고 발전되며 주민자치위원회법 등 새로운 민중 참여와 요구를 반영한 법률들이 속속 만들어진다. 또한 선거가 반복될수록 혁명 추진 세력은 득표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 세 번의 대통령 선거는 매번 3퍼센트 이상씩 차베스 지지율을 상승시켰으며 국회의원 선거와 주지사 선거 역시, 선거가 반복되면서 더 많은 차베스 지지자를 당선시켜 간다. 이 과정은 혁명이 계속 합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대하는 과정이며 반혁명 세력이 합법적으로 부정당하는 과정이었고, 선거를 하면 할수록 혁명 세력은 강화되고 반혁명 세력은 약화되는 과정이었다.

그 결과, 반혁명 세력이 “선거를 보이콧하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혁명 세력은 “선거가 있게 하라. 그러면 민중은 자신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된다”라는 단순한 명제를 연속하여 입증시키며 ‘선거 불패’의 신화를 이어가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병행해 살펴볼 점은 이와 같은 선거 혁명이 물리력에 의한 ‘혁명의 수호’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선거 혁명은 가장 평화적 혁명이기도 하지만 그 평화를 가능케 하는 물리력을 담보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선거 혁명은 가장 신속하고 단호한 혁명이어야 한다.

베네수엘라 혁명은 차베스 정권이 군대 등의 물리력을 확고히 장악했다는 점과, 부단히 확대되는 거대한 민중의 조직화 기반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반혁명 쿠데타로 허망하게 무너진 70년대 칠레의 아옌데 정권과 다르다.

결론적으로 베네수엘라 선거 혁명이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이렇다. 보통선거와 국민투표를 국민의 정치 참여 방식으로 인정한다. 동시에 그 제한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고의 합법적 장치인 헌법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제한 없는 국민 의사 표시가 가능하도록 최우선적으로 선거와 투표를 민중의 것으로 전환시킨다.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민중 참여와 사회 개혁을 연속적인 법률 제정과 선거, 투표로 합법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진정 ‘끊임없이 선거하는 혁명’을 실현했다. 한국의 진보 역시 베네수엘라 실험을 참조하여 진정한 선거 혁명의 성격과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선거 혁명이 새롭게 규정될 때 단지 전술적 차원의 활용을 넘어 사회 정치 제도를 개혁시키는 전략적 이행 방법으로 격상될 수 있다.

아울러 현대 변혁에서 헌법이 수행하는 새로운 역할과 함의에 대해서도 폭넓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차베스는 그간 사회 혁명 과



정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헌법’에 대해 새로운 혁명적 의의를 부여한 사실상의 첫 지도자다. 무엇보다 베네수엘라 신헌법은 기존 혁명 정당들과 통일전선 조직의 혁명 강령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헌법은 베네수엘라 민중들에게 최고의 혁명 강령이자 혁명 교과서다. 볼리바리안 서클을 포함한 수많은 정치 조직들은 신헌법을 교과서로 삼아 베네수엘라의 미래를 공부하고 연구한다.

나아가 헌법은 특정 정당이나 전선 조직의 강령을 넘어서 합법적으로 전 국민적 동의를 취득한 훨씬 강력한 정당성을 가진 국민적 정치 강령이 되었다. 또한 헌법은 모든 사회 개혁 법률과 사회 개혁 추진의 모태가 되었다. 베네수엘라의 모든 개혁 법률과 개혁 미션은 헌법의 이름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으며 헌법의 지원 아래 추진된다.(현재 차베스 역시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12월 3일 선거에서 패배한 로살레스가 즉각 신헌법을 과거로 돌리기 위한 개혁 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바로 헌법이 수행하는 혁명적 위력을 정확히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참여정부 아래에서 헌법은 정반대의 기능을 하게 되었는데 노무현 정부의 초기 개혁들이 위헌 소송에 휘말리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갑자기 부상하게 된 게 그 사례다.

차베스에 의해 헌법은 ‘21세기 혁명의 새로운 도구’로 거듭 태어난 셈이다.

베네수엘라 혁명의 새로운 특징들은 정치 혁명 영역에서만 부각된 게 아니다. 경제 개혁에서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과 방식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우선, 베네수엘라 경제 개혁은 ‘부도덕하지 않게 취득된 사적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원칙을 현재까지 관철하고 있다. 즉 “재산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헌법 115조를 엄격히 따르고 소유의 ‘합법적 이전’을 고수한다. 이것이 베네수엘라 혁명의 특징인데 정당한 개인 재산권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적어도 국내적으로 소자산 계급을 포함한 다양한 중산층과의 적대적 대립이 극단화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외국 자본의 극단적 철수와 기피를 차단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러면 기존 생산 수단의 강제적 몰수 없이, 자본에 대한 물리적 수탈 없이 어떻게 기존 소유 구조와 경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경제 혁명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첫째, 경제의 총적 지향을 '사회적 경제'로 확고히 세워 두고 그 실현을 단계적으로 계속 확산시킴으로써 사적 자본주의를 극복해 간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헌법 299조는 베네수엘라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경제 체제는 사회정의, 민주주의, 효율성, 자유 경쟁, 환경보호, 생산성과 연대의 원칙 아래 총체적인 개인 발전과 공동체를 위한 존엄 있고 유익한 실존을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즉 시장 지상주의 또는 자본 우위가 아닌 새로운 가치 체계를 중심에 내세우는데, 그것은 '연대성의 원칙'이며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다.

베네수엘라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생산 기업 EPS^{EPS}으로 구체화된다. 사회적 생산 기업이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실제적 평등이 존재하고 계획 과정에의 참여가 보장되며 국가적·집단적 혹은 혼합적 소유 형태에 따라서 운영되며 노동이 자신의 의미를 지니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복무하는 경제적 단위"로 정의된다. 사회적 생산 기업은 단선적인 국유 형태 또는 협동조합 형태로만 제한되지 않는다.

국유기업, 공동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나아가 다양한 사적 기업을 포괄하면서 사회화라는 통일된 방향으로 진화 발전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시장 지상주의에 대해 적절한 사회적 통제나 조절을 수행하는 경제 시스템, 즉 시장 실패 보완 정책이나 국가에 의한 시장 규제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둘째, 소유의 다양화 틀을 기반으로 하여 재산권의 보장과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생산 기업을 용인하면서도, 동시에 핵심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공공성 확대를 원칙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간산업이자 주도적 부분은 말할 것 없이 석유 부문이다. 베네수엘라 석유회사는 한국과 굳이 비교한다면 삼성과 엘지, 현대의 주력 기업을 합친 경제적 위상을 가졌다. 차베스는 집권 초기부터 석유 기업의 확고한 국유화를 선언한다. 이는 핵심 기간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공공적 부분의 주도성 아래 사회적 경제를 향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물론 석유회사^{PDVSA}가 일거에 완전 국유화 조치를 밟지는 않았다. 99년 헌법에 국유화 원칙을 우선 명문화 한 후, 2001년 탄화수소법을 제정하여 로열티를 기존 16퍼센트 미만에서 30퍼센트대로 인상하고 국가 지분율을 51퍼센트로 올리는 법적 조치를 취한다. 기존 관료적 임원을 교체하려는 과정에서 2002년 말 자본과업이 발생하자 자본과업에 참여한 임원과 직원에 대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약 1만 8000여 명을 해고하는 대응 조치가 이어진다. 그리고 이후 2006년에 접어들어 로열티를 다시 34퍼센트로 인상하고 지분율을 60퍼센트로 끌어올리는 등 부단히 단계적 조치를 취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했다.

이처럼 핵심 기간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사회적 경제의 근간으로

삼겹다는 원칙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견지함으로써 베네수엘라 경제가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뛰어넘을 뿐 아니라 사회적 성격을 지향할 기초를 갖게 해주었다.

세 번째, 베네수엘라 경제 혁명의 중대한 특징은 기존의 일반 국유기업이나 사적 기업에 대한 ‘사회화’를 민중의 요구 수준에 조응하여 단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절차를 멈추지 않고 추진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 기업들에 대한 일방적 국가 귀속과 국영화가 아니라 ‘민중의 자발적 요구에 기초하고’ ‘시장을 통한 자발적 사회화’ 과정 경로를 따라 사회적 경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일반 기업에서의 공동경영 제도의 도입 과정이 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

베네수엘라 혁명 과정에서 일반 기업의 공동경영 전환은 주로 경영진들이 자본과업으로 의도적인 공장 폐쇄를 감행하거나 기업 경영의 한계에 부딪히거나 체불을 누적시킨 곳에서 노동자들의 강력한 자주관리 요구가 있을 때에 시도한다. 그조차도 보상 없는 사적 자본의 압류나 민간은행 대부에 대한 부채 동결과 같은 전통적인 몰수 형태를 취하지 않았다. 철저히 ‘공공적 편익’과 ‘사회적 이익’의 근거를 지닌 기업에 대해서 그것도 국회의 의결 과정을 밟고 공정한 보상 지불을 통해서 사적 자본의 소유 이전을 실행한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업을 곧바로 국가로 귀속시키지 않고 노동자가 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차베스는 “우리는 모든 산업이 새로운 사회의 일부가 될 것을 바란다” “우리는 모든 산업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렇게 되도록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노동자들이 경영진의 일부가 되는 것이 보장되어야만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 주요 5개 기업에서 공동경영이 실험 중이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136개 공장으로 확대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는 토지개혁에서도 동일하다. 국가의 미사용 토지를 우선적으로 농민에게 배분하는 가운데, 개인 토지의 수용도 그 범위를 5000헥타르 이상의 토지 소유자로 범위를 매우 좁혔다. 이 조차도 주로 미경작지와 휴경지에 대해 시가 보상을 전제로 유상 수용하여 농민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당연히 농민에게 분배한 토지는 점유권과 상속권을 보장하지만 재산 증식 수단의 매매는 허용하지 않았다. 수용한 토지의 분배 방법도 국가의 일률적인 행정 처리가 아니라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토지위원회에 의해 시행된다.

단순화 하면, 재산권 인정 → 노동자의 자주관리 요구 → 법적 의결 → 시가 보상 → 노동자 참여 기업으로 전환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기업의 소유와 경영 전환이 실험되고 있으며 노동자가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도 획일적이고 교조적 방식보다는 ‘실행을 통한 학습’ 전략에 따라 다양한 창조적 형태가 현장의 조건에 맞게 모색된다.

넷째, 국영기업, 공동경영 기업 방식으로 기존 기업의 전환을 시도할 뿐 아니라, 이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영역의 경제 구조를 창출하는 경제 창조 혁명이 병행적으로 진행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협동조합 건설이다.

“새로운 경제 체제 형성을 위한 새로운 생산 모형 구축”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협동조합은 기존의 막대한 실업자와 이른바 비공식 부문 종사자로 불리는 노점상들을 기존 시스템에 편입시키지 않고, 새로운 생산 영역과 형식을 창출하면서 소화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되었다. 때문에 그것은 전통적인 협동조합과 달리 상품과 서비스 생산, 농업 생산, 운송, 공공 서비스, 소비, 저축과 신용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조합으로 건설되며, 2006년 현재 15만여 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전체 노동력의 10퍼센트에 이르는 150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자발적 협동조합 건설은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과 함께 (사회적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직업 교육의 지원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몰수 없는 혁명은 위로부터 사회적 경제에 대한 확고한 지향과 핵심 기간산업의 공공화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노동자의 자발적 참여의 가속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현실화되는 경제 혁명의 새로운 방식이다.

이런 특징을 잘 이해해야만, 한쪽에서 국영기업과 공동경영 기업,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주식시장 시가 총액이 상승하고 외국인 투자가 계속 늘어나는 혁명, 외채를 계속 갚아나가는 혁명의 모습을 보이는 베네수엘라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현재의 한국 경제가 해방 직후인 1945년처럼 단선적이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주식시장의 40퍼센트 이상이 이미

외국 자본의 수중에 넘어간 세계화 시대라는 현실 때문에, 여하히 복잡한 국내 경제 구조에 현실적으로 대처하면서도 외국 자본의 일방적 철수 압력에 견딜 수 있겠는가 하는 진보의 고민에 대한 적지 않은 시사점이 된다.

나아가 일각에서 계속 주장하듯이 재벌들과의 ‘사회적 빅딜’ 또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고용과 성장을 하는 게 가장 현실 가능한 대안이라고 여기는 흐름에 대해, 어떻게 민중의 힘에 의해 경제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국가 경제 시스템 자체를 재편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제 혁명은 기본에서 ‘반신자유주의적 대안 경제’ 수립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되지만, 그 내부에 이미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21세기 유형의 경제 시스템을 건설하는 사회주의적 혁명의 내용성을 받아시키게 된다.



4 민중 헤게모니로 추진되는 혁명

좌와 우를 막론하고 분석가들이 베네수엘라 혁명의 가장 큰 특징으로 공통적으로 꼽는 대목이 바로 ‘민중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다.

그것은 단지 시민 민주적 정치 결사와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서구식의 다양한 NGO 결성과 행정 관료 기구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자유를 넘어선다. 또한 그것은 현대 민주주의가 도달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제한성을 극복하려는 시도까지 포함한다.

베네수엘라의 민중 참여는 단지 정치적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와 사회 영역에 이르기까지 확대되며, 민중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주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베네수엘라 민중은 현재 국가의 지원 아래 가히 조직화의 홍수를 이룰 만큼 아래로부터 다양한 조직을

결성하고 조직을 통해 참여를 구조적으로 실천하며 조직을 통해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려고 시도한다.

경제 분야에서 베네수엘라는 사기업을 국가 자신에게로 강제 수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기업이 노동자에게 참여를 허용하라고 국가가 요구하고 그것을 지원한다. 차베스는 기존 경영이 부진한 사기업들에 대해 “기업주가 기업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생산과 이익의 분배에서 노동자의 참여와 개입을 보장”한다면 정부가 기업의 회생과 발전을 지원해 주겠다고 선언했다. 베네수엘라의 공동경영 기업들은 이렇게 해서 현재 실험중이다.

국가가 기업을 수용하여 직접 관리하는 단계를 밟기보다는 기업에서 노동자의 주도성을 보장하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추구한다.

정치 분야에서 집권 여당을 포함한 각 정치 정당들은 99년 이후 헌법에 의해 일체의 특권을 폐지함으로써 일차적으로 민중의 참여와 지지 없이는 존립하기 어렵게 구조화했다. 또한 정치 조직의 하향 확대를 통해 정치적 세력을 확대하지 않고 불리바리안 서클과 같은 주민 단위의 자율적 정치 조직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정당 정치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두 가지의 국민 주도성을 보장한다. 첫째는 헌법적 조치에 따라 주요 중앙 권력 기구에 대한 국민의 직접 통제력을 상설화시켰다. 국가적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물론 주요 중앙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권, 주요 법률의 승인과 폐지 권한까지 가졌다. 더 나아가 국민투표에 회부할

권한을 대통령과 국회뿐 아니라 일정 숫자의 유권자들도 동등하게 가졌다. 이는 극히 제한된 국가 안위 사항에 대해서만 국민투표를 하고 그조차도 대통령에 의해서만 발의될 수 있는 한국과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둘째로는, 일상적으로 국민은 2006년 전격적으로 건설 중인 주민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의 생활적 문제들에 대해 직접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국가는 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주민총회를 통해 대표를 뽑고 주요 계획을 의결하는 주민자치 위원회는 일상적으로 국민이 의사결정에서 주도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며, 진정 '21세기 사회주의를 건설할 미래 사회의 기초 세포'로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생산 현장에서 노동 주도성이 확대되고 국가와 지역 현장에서 국민 주도성이 높아지는 혁명 과정은 필연적으로 기존의 엘리트 정당 중심, 국가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혁명의 주체 구도 전환을 요구한다.

즉, 생산과 생활의 현장에서 노동 주도성, 국민 주도성이 우선적으로 관철되는 가운데 정당과 국가가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며 따르는 새로운 시스템의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혁명 과정에서 정당 헤게모니를 중심으로 민중이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민중 헤게모니를 우선으로 정당이 함께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아가 노동 주도, 국민 주도 없이 엘리트 정당과 국가가 이들을

대신하여 사회 개혁을 하는 구조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었던 물리적인 일당 지배와 인민독재와 같은 위로부터의 무리한 인위적 탄압 방식은 약화된다. 보통선거에 기초한 다당제를 허용하면서도 민중의 직접 참여에 의해 민중의 이해와 이익을 관철시키는 정치 방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민중의 실질적이고 직접적 참여에 의한 노동 주도, 국민 주도 사회 시스템은 20세기 방식의 국가사회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수준의 사회주의를 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세기 사회주의가 국가 사회주의로 전변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민중 참여의 부족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중의 실질적 참여의 확대 발전은 아래로부터 새로운 21세기 유형의 민중 권력의 창출을 암시하고, 새로운 유형의 국가 기구를 예견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진정 '미래 사회의 기초 세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존 시민 민주주의나 대의제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민주주의'도 아니고, 20세기식의 '인민민주주의'도 아닌 21세기식의 진정한 '참여민주주의'다. 국민의 자율성과 직접성에 바탕을 둔 실질적 국민 참여야말로 기득권층에 대한 가장 파괴적인 힘이 되고 가장 강력한 민중 권력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5 파괴보다 창조가 중심인 혁명

과거 역사에서 나타난 혁명, 체제 전환은 주로 구시스템의 파괴와 재구조화를 상당 기간 우선하였다. 기존 기업을 인수하여 소유 구조와 경영 구조를 전환시키고, 기존 토지를 전환시켰다. 기존 보수 정당과 정치 시스템을 파괴하고 혁명 주체들에 의한 교체를 추진하였다. 즉 기존 체제에 대한 '파괴 후 재구조화, 또는 창조'라는 도식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선 현대 사회는 경제와 산업 시스템으로 보나 국민의 다양한 욕구와 이를 반영한 정치와 생활 문화 시스템으로 보나 20세기처럼 그렇게 단선적인 경로를 밟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 주체의 다양한 계급 구성으로 보아도 마찬가지다.

21세기는 기존 시스템의 재구조화와 동시에 새로운 시스템의 창

조가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된다고 평가하는 게 옳바르다. 혁명과 함께 단지 기존 산업을 인수해야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기존의 정치사회 조직과 기구들뿐 아니라 새로운 조직과 기구를 발전시켜야 할 요구도 발생한다.

더 나아가 혁명과 함께 새로운 시스템을 창조하는 것을 우선에 두고 기존 시스템의 전환을 수반시켜 나가는 게 평화적이고 국민적인 단결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참여를 보장한다. 물론 이것은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민중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새로운 시스템의 창출이 구시스템의 단계적 전환을 압도하려면 엄청난 민중의 참여와 창의적 에너지의 확산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 주도, 국민 주도형의 21세기 혁명은 '새로운 시스템 창조를 우선적 동력으로 구 시스템의 전환을 동반하는 혁명'이 되어야 한다.

기존 기업의 인수와 재구조화보다는 새로운 유형의 창출에 집중하는 것은 '혁신을 축으로 한 21세기 경제'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물론 베네수엘라의 경우 협동조합과 같은 기초적인 사회 경제 영역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에 비중을 두었다면, 한국은 좀더 혁신적이고 첨단적인 산업에서 새로운 경제 영역을 창출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기조 아래에서 축소되어 온 사회적 공공 서비스를 대폭 신규 창출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6 국민지배강화로 관료주의를 넘는 혁명

진정한 사회 개혁을 추진하려는 모든 사회 세력과 정권들이 당면하는 첫째 문제는 기존 관료 조직의 반개혁적인 저항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단지 선거 혁명으로 정권 교체를 이룬 나라들에서 뿐만 아니라 붕괴된 국가사회주의 나라들도 그랬다. 관료주의의 관성과 반국민적 행보 그리고 부패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도정에서 필연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공공의 적이다. 어찌 보면 국가주의는 관료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고 엘리트주의 역시 유사한 궤도에 있다.

차베스는 기존 공화국의 관료 집단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가지지 않았다.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전개된 지난 8년간의 혁명은 철저히 기존 관료 구조를 배제했다. 문제는 역사적으로 공인된 사실을 어느 나라의 여부가 아니라 이를 어떤 기제를 동원하여 극복하는가다.

차베스와 베네수엘라의 대답은 ‘민중 참여’다. 베네수엘라는 관료주의를 극복할 유일한 대안이 기존 관료 조직의 단순한 해체도, 혁명 정당의 윤리 도덕적 호소도 아닌 민중 참여임을 잘 보여주었다. 단지 지난 8년간은 민중 참여가 초기적으로 조성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곧바로 민중 참여 조직을 통한 관료 조직의 해체를 선불리 추진하지 않고 (민중 참여 조직이 성숙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관료주의를 우회하여 간다”는 매우 독특한, 그러면서도 아주 현실적인 방식을 도입했다.

정당의 관료주의를 우회하고자 불리바리안 서클이라는 민중 참여 정치 조직에 의지해왔고, 국가 기구의 관료주의를 피하기 위해 각종 사회 개혁 프로그램을 기존 국가 기구와 무관하게 민중의 자발적 조직에게 일임했으며, 사회 개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주민 참여 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어느 경우에도 혁명 정부가 관리를 파견하여 직접 개혁을 지시하거나 통제하지 않았다.

물론 베네수엘라에서 관료주의 극복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차베스 자신이 주장했듯이 ‘관료적인 반혁명과 부패에 대한 전투’가 이제 제대로 시작이 된다. 지금까지의 역사 과정만 본다면 승패의 관건은 민중의 직접적 참여와 직접적 의사결정을 얼마나 혁명 과정에 깊이 끌어들이는가에 달렸다.

그리고 그것은 적어도 관료 조직과 관료적 행태를 용인하거나 또 다른 관료 조직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님을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도 베네수엘라는 충분히 보여주었다.



7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한국의 미래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혁명은 현재, 목표 지점에 접근했다기보다는 진정한 시작점에 서 있다고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 2007년~2012년까지를 망라할 차베스의 집권 2기는 베네수엘라 방식의 혁명을 본격화하기 위해 다음의 숙제를 풀어야 한다.

첫째, 이제 막 건설하기 시작한 주민자치위원회를 기반으로 민중의 자율적이고 직접적 참여가 구현된 새로운 국가 구조를 제대로 건설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풀뿌리에서조차 기존 관료 조직을 아직 완전하게 대체하지 못했다. 차베스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새로운 국가 기구의 ‘기초 세포’로 발전시켜 지금까지 우회하기만 했던 관료주의를 종국적으로 해소하고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국가 구조

를 짜야만 한다. 한마디로 국가의 지원 아래 더 수준 높은 국민 직접 참여가 계속될지 여부가 베네수엘라 혁명 발전의 일차적인 열쇠가 된다.

둘째, 경제 분야에서 새롭게 실험되는 공동경영 기업과 협동조합을 확대 발전시켜 ‘사회적 생산 기업’의 비중을 지배적 경제 시스템으로 확장시키고 명실상부한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할 뿐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비해 우월한 능력을 갖추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고비를 넘어야 한다.

셋째, 차베스 자신이 집권 2기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꼽는 새로운 ‘통합 혁명 정당’ ‘베네수엘라 통합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새로운 수준에서 시도하고 성공시켜야 한다. 그것은 기존 차베스 지지 정당의 단순한 양적 합이 되어서도 안 되며, 20세기 방식의 엘리트 정당이 되어서도 실패한다.

볼리바리안 서클이 가진 자율적 참여와 활력이 융해되면서도 차베스 개인이 아닌 조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치 조직을 창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한 이 과정은 차베스에 대한 개인적 의존을 심화시키는 연임 제한 철폐라고 하는 개헌 추진과 결부되기에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넷째, 국민의 자율적이고도 직접적인 참여, 관료주의 극복, 참여

와 연대를 기본으로 한 사회적 경제 시스템의 확대, 새로운 정당 건설이 '21세기 사회주의'라는 이념으로 통합되고 방향 지어져야 하는 과제가 집권 2기 차베스 정부의 숙제가 될 것이다.

다섯째, 국내적 변혁 추진 과정이 국제적인 신자유주의 공세를 이겨내고, 차베스가 원하는 진정한 대안적 남미 공동체 구성과 새로운 세계 질서를 조성하는 대외적 과정과 함께 갈 수 있을지도 관심 사항이다.

한국의 참여정부가 주창한 '노사모' '참여 정치' '수평적 외교'라는 초기적 문제 의식은 베네수엘라와 동일했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 개혁 추진 결과만 놓고 보면 정반대의 입각점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반신자유주의의 대척점에서 다시금 '21세기 사회주의'로 나아갈 준비를 한다. 참여정부는 국민 다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한미 FTA 추진'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중심부로 더욱 밀착하려고 한다.

이러한 시점에 베네수엘라 혁명에 대한 진단을 결산하면서, 연구자들은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과제 앞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

“베네수엘라가 단초를 열었듯이 역사의 박물관으로 들어간 '진보'와 '사회주의'를 넘어 21세기에 부활하는 '새로운 진보와 새로운 사회주의'가 가능한 시대가 오지 않았을까.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세계화 추세, 그리고 시민적 정치 경험 축적이라는 변화된 환경을 적극 끌어안은 새로운 대안에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어야 하지 않을까.

어떤 도식이나 권위적 이론에서가 아니라 늘 일하고 창조하는 국민의 현실과 경험 그리고 지혜에서 새로운 길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

모색하고 실험하고 착오를 조정하여 다시 도전하고 성과가 나면 종합해 확대발전시키는 방식으로 부단히 전진해야 하지 않을까.

베네수엘라 혁명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은 바로 이러한 열린 상상력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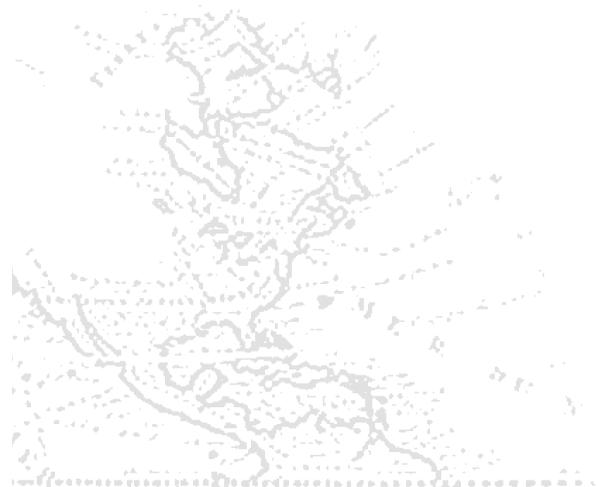


부
록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헌법

안태환 · 이아정 · 한병채(번역)

- ▶ 전문
- ▶ 제1장 근본 원칙
- ▶ 제2장 지리적 범위와 정치행정 구역
- ▶ 제3장 인권과 보장 권리 및 의무
- ▶ 제4장 공권력
- ▶ 제5장 국가 공공기관
- ▶ 제6장 사회 경제 체제
- ▶ 제7장 국가 안보
- ▶ 제8장 이 헌법의 보호
- ▶ 제9장 헌법 개정
폐기 조치
임시 규정



VENEZUELA

민주적이고 참여적이고 국민이 주인이 되고 다인종적이고 다문화적인 사회와, 정의롭고 연방제이고 분권적인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공화국을 다시 창설할 고귀한 목적을 가진다. 이 국가는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자유의 가치들, 독립, 평화, 연대, 공공선, 국토의 보존, 공생, 법의 지배를 강화할 것이다.

-전 문-

베네수엘라 국민은 주권을 행사하며, 신의 보호를 빌며, 우리의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의 역사적 사례와, 우리 원주민 선조와 자유롭고 주권 있는 조국의 선구자들과 건설자들의 영웅적 희생을 기린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이고 국민이 주인이 되고 다인종적이고 다문화적인 사회와 정의롭고 연방제이고 분권적인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공화국을 다시 창설할 고귀한 목적을 가진다. 이 국가는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자유의 가치들, 독립, 평화, 연대, 공공선, 국토의 보존, 공생, 법의 지배를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생활권, 노동, 문화, 교육, 사회정의, 평등을 보장한다. 국가들 사이의 평화적 협력을 증진시키고 불개입과 민족자결권의 원칙 아래 중남미 통합을 강화한다. 그리고 인권의 보편적 분리 불가능한 보장과 국제 사회의 민주화, 비핵화, 생태의 균형과 인류의 포기할 수 없는 공동의 유산으로서 환경의 법적 재산을 강화한다.

제헌의회에서 위임된 권한에 따른 투표와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거쳐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제1장 기본 원칙 FUNDAMENTAL PRINCIPLES

제1조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은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Simón Bolívar)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자유, 평등, 정의, 국제 평화의 정신적 자산과 가치관에 입각한 자유 독립국이다. 독립, 자유, 주권, 보위, 영토 보전, 자결은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권리다.

제2조 베네수엘라는 법과 정의에 기초한 민주적 사회 국가(a Democratic and Social State)로서 생명, 자유, 정의, 평등, 연대, 민주주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인권과 윤리, 정치적 다원주의의 보편적 실현을 법질서와 집행의 최고 가치로 삼는다.

제3조 국가는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며, 개인의 존엄 존중, 국민 의지의 민주적 실행, 정의롭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회의 건설, 국민들의 번영과 복지의 진작, 본 헌법에 적시된 원리·권리와 의무의 책임완수를 그 근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은 지방분권적 연방 공화국으로, 본 헌법의 규정과 영토 보전, 협력, 연대, 보조와 책임 분담의 원칙에 따라 통치된다.

제5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양도될

수 없다. 국민 주권은 본 헌법과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직접적으로, 또 공권력을 가진 기관에 대한 참정권 행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된다. 국가의 모든 기관은 국민 주권에 따라 성립하며 그에 복속한다.

제6조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의 정부와 각급 정치 기구들은 항상 민주적이고 참여적이며, 선거에 기초하고 분권적이며, 대안을 허용하고 책임성 있게, 다원주의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그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회수될 수 있다.

제7조 헌법은 최상위 법으로 법질서의 근본이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개인과 기관은 헌법에 따른다.

제8조 황색, 청색, 적색 줄로 구성된 국기, 국가 “용맹한 자에게 영광을”(Gloria al bravo pueblo), 공화국 문장(紋章)을 우리나라의 상징으로 한다. 그 특징과 의미, 사용에 관하여서는 법률로 정한다.

제9조 스페인어를 공식어로 한다. 원주민이 사용하는 토속어 또한 원주민에게 공식어의 지위를 가지며 우리가 물려받은 문화와 인류 유산의 일부로서 공화국 전 영토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제2장 지리적 범위와 정치행정 구역 GEOGRAPHICAL SPACES AND POLITICAL DIVISION

제1절 영토와 지리적 범위

제10조 공화국의 영토와 지리적 범위는 1810년 4월 19일 정변¹ 이전에 the Captaincy-General of Venezuela²에 속했던 곳으로 하며, 유효한 조약과 중재 판정에 따른 수정 사항을 적용한다.

제11조 공화국은 (상기 영토 내의) 대륙과 도서(島嶼)지역, 호수와 강역(江域), 영해(領海)와 역사적이고 중대한 의미를 지닌 내해(內海) 지역³; 공화국이 채택했거나 이후 채택할 수 있는 직선기선(直線基線, straight baselines) 내에 놓인 상기 지역들; 상기 지역들의 해저와 해저 퇴적층; 대륙과 도서 및 연해 지역의 상공; 상기 공간 내에 있는 유전

자원(genetic resources), 이주성(移住性) 생물 종(種, species), 그로부터 파생돼 나온 제 산물과 자연 섭리에 의해 상기 지역 내에 현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미개발 물질 등을 비롯한 일체 자원에 대해 모든 주권을 행사한다.

공화국의 도서 지역에는 Los Monjes 군도, Las Aves 군도, Los Roques 군도, La Orchila 섬, La Tortuga 섬, La Blanquilla 섬, Los Hermanos 군도, Margarita와 Cubagua, Coche 제도, Los Frailes 군도, La Sola 섬, Los Testigos 군도, Patos 섬, Aves 섬이 포함되며, 영해, 나아가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내에 현재 존재하거나 장래에 출현할 수 있는 섬과 작은 섬들, 모래톱과 산호초, 해퇴(海堆),

- 1 1810년 4월 19일 Captaincy-General of Venezuela에서 일어난 쿠데타를 말함. 이 정변 이후 베네수엘라 지역은 스페인 식민 정부로부터 일부 자치권을 얻어냈고, 1811년 7월 5일 독립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그 이후 시몬 볼리바르의 독립 해방 투쟁이 본격화되면서 1819년 제헌의회의 에국 국회를 통해 현재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파나마 대부분 지역과 페루, 가이아나 등의 일부 지역을 포괄하는 그란콜롬비아Gran Colombia 공화국이 선포되었다(1819~1830).
- 2 스페인의 남미 식민지 지배 형태인 총독령viceroyalty이 세분되어 분가한 형태. 오늘날 베네수엘라에 해당하는 지역은 누에바그라나다 총독령(1717년 성립) 관할 아래 있다가 1777년 Captaincy-General of Venezuela로 정치와 행정 관할이 분리되었다.
- 3 원문 “historic, vital and inland sea areas”. 남미에서 가장 큰 호수인 마라카이보Maracaibo 호와 그 주변 저지대로 구성된 마라카이보 저지(低地)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라카이보 Maracaibo 호는 가로 121킬로미터, 세로 209킬로미터, 넓이 5만 2000평방미터에 달하는 반담 수호로 카리브 해 쪽으로 열려 있어 보기에 따라서는 만퐁에 가깝다. ‘작은 베니스’라는 뜻의 베네수엘라 국명은 스페인 초기 식민주의자들이 이 호수 주변 저지에 기둥을 세운 수상 가옥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보고 베니스를 연상하여 이름 붙인 데서 유래했다. 20세기 이후 석유 개발로 그 중요성이 대단히 커진 지역이다.

bank) 등이 포함된다.

공화국은 연안(沿岸) 연해 지역과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구성되는 해수 공간에 관하여 공표된 국제법·국내법이 정한 내용과 조건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주권과 관할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한다.

공화국은 공표된 국제 협정 및 국내 법령이 정한 내용과 조건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우주 공간과 인류의 공동 자산 또는 그렇게 간주되는 영역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공화국 영내, 영해의 해저, 배타적 경제수역 내, 대륙붕 등에 존재하는 일체의 광물과 탄화수소 퇴적물은 공화국의 재산이자 공공의 소유이며, 따라서 양도되거나 이전될 수 없다. 해안(海岸)은 공공의 소유다.

제13조 영토는 외국 또는 여타 국제법상의 주체(international law subject)에게 임시적이거나 부분적으로라도 할양, 이전, 임차 등 어떠한 형태로든 절대 양도될 수 없다.

베네수엘라에 속하는 지리적 공간은 평화 구역이다. 어떤 군대 또는 군대의 연합체라 할지라도 이 공간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군사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군대의 기지 또는 시설을 세우지 못한다.

외국 또는 여타 국제법상의 주체는 대사 또는 영사 관저로 쓸 경우에 한하여 호혜주의에 따른 양해와 규정 아래, 법률로 정한 한도 내에서 공화국 영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들 영역도 공화국의 주권 아래 있다.

연방 자치령, 그리고 강과 호수 내 섬들에 있는 공지(空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은 있을 수 없으며,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소유권 이전이 결부되지 않는 방식에 한해 그 사용을 보장한다.

제14조 특정 지역의 공화국 영토 내 편입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 체계를 제정하여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거쳐 국회(the National Assembly)의 승인을 받는다.

제15조 국가는 육지와 도서 및 해안 국경 지대에 관하여 그 영토 보전, 주권, 안전, 방위, 국가 정체성과 환경을 경제·문화·사회적 발전과 통합의 원칙 아래 보존하고, 그를 위한 전반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국경에 관한 기본법(an Organic Law on Borders)을 제정하여 그 책임의 내용과 의무를 정하고, 특별 재정을 할당하여 각 국경 지역의 고유한 특징을 살려나가도록 한다.

제2절 정치행정 구역

제16조 공화국의 유기적 정치행정을 위해 영토를 복수의 주(州, the States), 연방 직할구(the Capital District), 연방자치령(federal dependencies), 준 연방주(federal territories)로 나누며 그 편제는 지방자치체로 한다.

정치행정 구역은 자치체의 자율권과

정치·행정상의 분권을 보장하는 기본법을 가지며, 그 법에 의거하여 운영된다.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주(州) 내의 특정 영역에 준 연방주(federal territorial)의 신설이 제안될 수 있으며, 그 실시 여부는 해당 자치체 주민의 국민투표로 정한다. 준 연방주(federal territory)는 별도의 특별법에 따라 해당 점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받아 주(州, State)로 승격될 수 있다.

제17조 연방자치령은 주(州)로 편입되지 않은 연안 도서 지방의 섬들로 구성되며, 영해 또는 대륙붕 지역에 새로이 형성 또는 발견되는 섬들 또한 이에 포함된다. 그 법제도와 행정 체계는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8조 카라카스(the city of Caracas)는 공

화국의 수도이며 국가 권력 기관들의 소재지다.

본 조항의 규정은 카라카스 외 공화국 영토에서 국가 권력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카라카스는 특별법에 의거, 독자적 영역을 갖는 정치·행정 단위를 이루며, 카라카스 시라는 하나의 지방자치 정부 내에 연방 직할 자치체와 미란다 주에 속하는 자치체들이 2단 체계로 결합, 편성된다.⁴ 그 정부, 행정 조직, 각급 기관의 구성과 소관 업무, 시 자원의 운용 등에 관하여서는 시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관점 아래 동 특별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법률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시정(市政)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카라카스 Distrito Metropolitano de Caracas는 리베르타도르 Libertador, 차카오 Chacao, 수크레 Sucre, 바루타 Baruta, 엘 아틸로 El Hatillo 등 5개 지방자치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리베르타도르가 연방 직할, 나머지 4지방은 행정 구역상으로는 미란다 주에 속한다.

제3장 인권과 보장 권리 및 의무 DUTIES, HUMAN RIGHTS AND GUARANTEES

제1절 일반 규정

제19조 국가는 진보적 규범에 입각하여 일체의 차별 없이, 모든 개인의 인권이 포기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으며 상호 의존적으로 향유되고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모든 공권력 기관은 헌법과 공화국이 서명하고 승인한(국제) 인권 조약과 관련 법률들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0조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개발할 권리를 가지며, 타인의 권리와 사회 공공 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아닌 한 제한받지 않는다.

제21조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따라서 :

(1) 인종, 성별, 신념,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하는 어떠한 차별도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개인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받고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차별도 허용되지 않는다.

(2) 법은 법 앞의 평등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법적·행정적 장치를 마련하고 ; 차별받고 무시 받는 모든 소외·취약 계층들을 위하여 확고한 수단을 강구하며 ; 특히 위에 언급한 상황 하에서 명백히 약자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유린 또는 학대한 사람들을 처벌한다.

(3) 사람들에게 대한 공식 호칭은 외교용 서식(diplomatic forms)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공민, Citizens)으로 통일한다.

(4) 귀족 또는 세습적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22조 본 헌법과 인권 관련 국제기구가 이 권리 보장을 명시한 것이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각 개인의 여타 천부적 권리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권리를 규정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 그 권리의 행사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23조 베네수엘라가 비준·발효한 인권 관련 조약, 협정, 협약은 헌법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며, 해당 권리의 향유와 행사에 대해 본 헌법과 공화국 법률이 제정한 내용보다 더 유리한 규정을 가진 경우에 한해 국내 법률에 우선하며, 공화국의 법원과 각급 공권력 기관에 의해 즉각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제24조 어떠한 법률 조항도 형량 축소를 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소급 적용될 수 없다. 절차법(procedural laws)은 발효되는 순간 적용되기 시작하며 이미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 다만 형사 소송의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이 피고 측에 유리할 경우에 한해 이미 채택된 증거는 그 증거가 채택될

당시의 법률에 비취 평가토록 한다.

적용 법규의 선택이 애매한 경우에는 피고 측에 가장 유리한 쪽을 우선토록 한다.

제25조 본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권리를 손상 또는 침해하는 공권력 측의 모든 법령과 조례는 원천 무효이며, 이를 지시 또는 실행한 공공 부문 종사자(the public employees)는 해당 사안에 대한 형사·민사상과 행정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바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구실은 통용되지 않는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상기 언급한 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안에 상응하는 신속한 판결을 끌어내는 등 자신의 권리와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집단 또는 개별적으로 각급 사법 기관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재판이 부당한 지연, 불필요한 형식 절차, 무익한 재개 등을 겪지 않고 누구나 무료로 접근 가능하며, 공명정대하고 타당하며 투명하게,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이고 책임성 있게 또한 공평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상의 권리와 보장을 누리는데 있어 법원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 헌법 또는 인권 관련 국제기구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개인의 천부적 권리 역시 이에 포함된다.

헌법상 권리의 보호 청구는 형식 절차

상의 구애 없이 무료로 구두에 의해 간단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소관 판사는 침해된 법리 상황을 즉각적으로 원상 복구 또는 최대한 그에 가까운 상황으로 시정할 권한을 가진다. 법원은 이들 헌법상 권리의 보호 청구에 언제라도 응하며, 모든 사안에 앞서 우선적으로 다룬다.

자유와 안전을 위한 조치는 당사자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취할 수 있으며 ; 인신상의 구속 또는 구류 상태(detainee)에 놓인 사람은 지체 없이 즉각 법원의 보호 아래 들어간다.

본 권리의 행사는 국가 비상사태 또는 비상계엄 아래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 받지 않는다.

제2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적 또는 사적 기록에 포함돼 있는 자신 또는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권리, 또 그것의 사용 목적과 용도를 알 권리를 가지며, 잘못되었거나 자신의 인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모든 기록에 대해 갱신 또는 정정 또는 파기 신청을 해당 권한을 가진 법원에 낼 수 있다. 또한 단체·공동체의 이해와 상관되는 정보가 담긴 모든 종류의 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언론인이 받은 정보 출처의 비밀 유지 또는 법이 정하는 여타 직업상의 비밀 유지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제29조 국가는 국가 기관이 범한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응분의 처벌을

내릴 의무를 진다.

반인륜 범죄 행위, 중대한 인권 유린, 전쟁 범죄 등을 처벌하기 위한 소송에는 소송 제기 시효(statute of limitation)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권 침해와 인권에 반하는 위법 행위는 일반 관할 법원에서 조사, 판결한다. 이들 범죄 행위에 관하여서는 특별 사면과 대사면을 포함하여 범죄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모든 면제 조치를 배제한다.

제30조 국가는 인권 침해 피해자들과 그 법적 상속인들에게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하여 피해 배상을 포함한 일체의 보상을 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본 조항이 규정한 보상과 피해 배상의 실행에 필요한 법적 수단과 여타 영역의 수단을 채택할 수 있다. 국가는 일상 범죄(ordinary crime)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죄가 있는 측에서 보상을 치르게끔 만전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31조 모든 국민은 공화국이 비준한 모든 인권 관련 조약, 협정,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기구에 자신의 인권 보호를 요청하는 탄원과 소장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본 조항에서 언급한 국제기구의 의결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제반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제2절 국적과 시민권

제1부 국적

제32조 다음 항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베네수엘라 국적을 갖는다.

- (1)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사람.
- (2) 외국에서 태어난 자로서, 양친이 베네수엘라 국민인 사람.
- (3) 외국에서 태어난 자로서, 양친 가운데 어느 한쪽이 베네수엘라 국민이고 베네수엘라 영토 내에 거주하거나 베네수엘라 국적 취득 신청을 낸 사람.
- (4) 외국에서 태어난 자로서, 양친 가운데 어느 한쪽이 베네수엘라로 귀화하였고 18세 이전부터 베네수엘라 영토 내에 거주하였으며 25세 이전에 베네수엘라 국적 취득 신청을 낸 사람.

제33조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 베네수엘라로 귀화한 것으로 간주된다.

- (1) 귀화 증서를 가진 외국인. 이를 위해서는 귀화 신청일 이전 10년 이상을 계속하여 베네수엘라에 거주해야 한다.
- (2)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남미와 카리브 연안국 국적 소지자들은 귀화에 필요한 필수 연속 거주 기간을 5년으로 한다.
- (3) 베네수엘라 인과 혼인한 자로서, 귀화 의사를 밝혔고, 혼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 (4) 친권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 베네수엘라로 귀화한 날 현재 미성년인 외국인으로, 21세 이전에 베네수엘라 귀화

의사를 밝히고, 귀화 신청일 이전 5년 이상을 계속해서 베네수엘라 내에 거주한 사람.

제34조 베네수엘라 국적은 다른 국적의 선택 또는 취득에 의해 상실되지 않는다.

제35조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취득된 베네수엘라 국적(Venezuelans by birth)은 박탈할 수 없으며, 귀화에 의해 취득된 국적은 법률에 의거한 법원 판결에 의해서만 취소될 수 있다.

제36조 베네수엘라 국적은 포기할 수 있다. 선천적으로 취득된 베네수엘라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베네수엘라 공화국 내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국적 재취득 의사를 밝히면 그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귀화에 의해 취득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본 헌법 33조가 정한 요건을 다시 충족시켜야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제37조 국가는 국적 관련 국제 조약, 특히 국경 인접국과 본 헌법 33조 2항에 언급된 국가들과의 국적 관련 조약을 추진한다.

제38조 베네수엘라 국적의 취득·선택·포기·회복과 귀화의 무효화와 철회에 관한 실체법과 절차법상의 규정은 상기 제 조항에 부합하는 법률로 정한다.

제2부 시민권

제39조 정치적 능력 상실자(political disablement)와 민사상 금지산자(civil interdiction)가 아닌 베네수엘라 국민은 본 헌법이 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헌법이 정한 정치적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제40조 본 헌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정치적 권리가 부여된다. 귀화인으로서, 7세 이전에 베네수엘라에 입국하여 그때로부터 법정 나이에 이르기까지 베네수엘라에 상시 거주해 온 사람은 선천적 국적 취득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제41조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의 대통령과 행정부통령(Executive Vice President), 국회 의장과 부의장, 대법원 판사, 국가선거위원회(National Board of Election)의 위원장, 검찰총장(Attorney General), 감사원장, 검찰총장, 민중수호자(People Defender), 국방·재무·에너지자원·교육성 등의 장관(Ministers), 국경 지대 주(州)·지방자치체의 주지사, 시장, 국군에 대한 기본법에 의거한 상기 지위에 준하는 직위 등은 베네수엘라 국적을 선천적(by birth)으로 취득한 자로서 이중 국적 소지자가 아닌 사람만이 맡을 수 있다. 귀화에 의해 베네수엘라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 취득 이후 15년 이상

베네수엘라에 거주한 사람은 국회의원과 국경 지대가 아닌 주(州)와 지방자치체의 주지사·장관·시장 직위를 맡을 수 있다.

제42조 국적을 상실했거나 포기한 사람은 시민권을 상실한다. 시민권과 모든 정치적 권리의 행사에 대한 정지 처분은 오직 법률에 따라 내려진 최종 판결을 거친 연후에만 내려질 수 있다.

제3절 시민의 기본권

제43조 생명권은 불가침의 권리다. 어떠한 법률도 사형(death penalty) 규정을 둘 수 없으며 어떠한 공권력도 사형의 적용을 시도할 수 없다. 국가는 군대나 민간 공공 복무, 또는 여타 당국의 구속을 받아 자유를 빼앗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4조 신체의 자유(Personal liberty)는 불가침의 권리다. 따라서 :

- (1) 현행범(in fraganti)이 아닌 한 누구든지 법원의 명령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은 반드시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재판 중에는 자유롭게 해주어야 하며, 판사의 사안별 판단에 따라 또 법이 인정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
- (2) 구금자의 석방을 위해 요구하는 법

정 보석금은 어떤 경우에도 부담 능력 이상 과도하게 책정되어서는 안 된다.

(3)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은 누구든지 가족, 변호인, 여타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즉시 접견·대화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그 가족과 변호인 등은 구금자의 구치 장소와 구치 사유를 즉시 통보받을 권리가 있으며, 직접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구금자의 육체·정신적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사건 서류에 첨가시킬 권리가 있다. 관계 당국은 모든 체포·구금 행위에 대해 공식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 기록에는 피의자의 신원, 체포 장소와 시간, 체포 당시의 상황, 체포 담당자의 이름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4) 외국인의 체포는 영사관 통보 등 해당 국제 조약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처벌은 유죄로 인정된 개인에 한하며 그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종신형 또는 굴욕·수치심을 주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⁵ 형벌은 30년 이하로 한다.

(6) 신체의 자유 박탈이 포함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당국자는 반드시 자신의 관동 성명을 밝혀야 한다.

(7) 누구든지 관계 당국으로부터 석방 명령을 받은 후, 또는 형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더 이상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는다.

제45조 국가 비상사태 또는 비상계엄 하

에서도 군부(軍部)든 민간이든 공공 기관이 국민들의 강제 실종(disappearance of persons)을 집행, 허용 또는 묵인하는 것을 금한다. 이 같은 일을 지시 또는 명령받은 공무원은 그 지시 또는 명령의 수행을 거부하고 관계 기관에 고발할 의무가 있다. 강제 실종에 가담하거나 공모·은닉한 자는 물론 이를 도모하려 의도한 자는 모두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제46조 모든 국민은 자신의 육체적·정신적 완전함과 도덕적 청렴을 손상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

- (1)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고문이나 가혹 행위를 당하지 않으며, 비인간적이거나 인격 모독적인 대우를 받지 않는다. 국가 기관이 실행하거나 묵인한 고문, 가혹 행위, 비인간적 또는 인격 모독 행위의 피해자들은 모두 그 피해에 대한 복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2) 체포, 구금 등 여타 이유로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은 누구든지 인간으로서 타고난 존엄성에 근거하여 대우받는다.
- (3)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또는 여타 법률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 없이 과학·의학 실험과 여타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히고 학대하거나, 이를 조장·묵인한 공무원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제47조 개인의 가정과 모든 개인 소유

공간은 침범할 수 없다. 법원의 명령 없이는 강제 침입할 수 없으며, 범죄 발생 예방 또는 법원 결정의 집행을 위해 법원의 명령을 받아 하는 경우에도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여 행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행하는 보건·위생 조사는 이를 명령 또는 실행코자 하는 공무원의 사전 통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제48조 모든 형태의 사적인 통신은 침해받지 아니하며 비밀이 보장된다. 관찰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경우, 간섭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적법한 법률 규정에 따라 행하며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적 내용은 비밀이 엄수된다.

제49조 모든 사법·행정 조치는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따라서 :

- (1) 조사·심문과 소송 중의 모든 단계와 수준에서 법률적 도움과 변호를 받을 권리는 불가침의 권리다. 모든 국민은 자신이 조사 받는 혐의와 이유에 대해 고지(告知)받고, 그 증거에 대해 알며,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시간과 수단을 확보할 권리를 가진다.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확보한 모든 증거는 원천 무효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본 헌법과 법률에서 예외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상소(appeal)할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3) 모든 사람은 적법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게 구성된 법정에서, 제반 권리가 충족되는 환경 아래, 법이 인정한

5 추방, 거주 제한, 금고, 징역, 구류 등

시간 동안 자신의 주장이 청취될 권리를 가진다. 스페인어를 하지 못하거나 구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통역인을 가질 권리가 있다.

(4) 모든 사람은 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보장 아래, 일반과 특별 권한을 가진 법정(法定) 관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떠한 사람도 재판 주재자의 소속·신분·이름을 알지 못한 채 재판받지 않으며, 법의 특별 재판 또는 그와 유사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위원회에 의해 재판받지 않는다.

(5) 모든 국민은 자기 자신이나 법적 또는 사실혼상의 배우자, 또는 자신의 4촌 이내 친족과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에 대한 유죄 여부에 관하여 불리한 진술이나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어떠한 종류라도 강압에 의한 진술은 무효다.

(6) 누구든지 기존의 법률에서 범죄 행위 또는 위반·범법 행위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처벌받지 않는다.

(7) 누구든지 이전에 이미 한번 판결 받은 것과 동일한 일로 다시 재판받지 않는다.

(8) 모든 국민은 부당한 사법 오류와 정당한 사유 없는 지체 또는 태만에 의해 손상된 법리 상황에 대해 그 복구 또는 시정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 개인은 당해 치안 판사 또는 판사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응분의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제50조 모든 국민은 공화국 영토 내 어

디든지,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든지,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와 주소·거주지를 변경할 권리, 출국·입국할 권리를 가지며 개인 소유 재화·물자의 국내 이동과 국내 반입, 국외 반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 한계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도로에 대한 사용 허가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으로써 대체 도로를 확보하도록 한다. 베네수엘라 국민은 아무런 허가 절차 없이 입국한다.

어떠한 공권력도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하여 국외 추방 조치를 내릴 수 없다.

제51조 모든 국민은 모든 공공 기관과 공무원에 대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청원 또는 진정을 낼 권리를 가지며 제때에 적절한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직위 해제 등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제52조 모든 국민은 법에 따라 합법적 목적의 회합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 권리가 원활히 행사되도록 할 의무를 가진다.

제53조 모든 국민은 그 목적이 법률에 부합하고 무장하지 않는 한, 사전 허가 없이 사적으로나 공개적으로 집회를 열 권리를 가진다. 공공 장소에서의 집회는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54조 어떠한 사람도 노예에 처해지지 않으며 강제 노역을 당하지 않는다. 인

신 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청소년 인신 매매는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제55조 모든 국민은 개인의 신체·재산의 안전과 권리 행사·의무 이행이 위협, 손상 받거나 위협에 빠졌을 때 법에 규정된 국민 안전 관련 공공 기관을 통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방역, 국민 안전, 위기관리 프로그램에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법으로 정한다.

국가의 보안대(The State's security corps)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한다. 경찰과 안전 관련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무기 또는 독성 물질은 필요성과 편의성, 기회와 비례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

제56조 모든 국민에게는 자기 고유의 이름을 가질 권리, 양친의 성(姓)을 쓸 권리, 양친의 신원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국가는 생모와 생부에 관하여 조사할 권리를 보장한다.

모든 국민은 출생 후 무료로 국민 등록 사무소(the Civil Registry Office)에 등록될 권리를 가지며, 법에 의거하여 자신의 생물학적 신원을 증빙하는 공식 서류를 입수할 권리를 가진다. 이 서류에는 육친(肉親) 관계에 의한 분류 정보는 일절 포함되지 않는다.

제57조 모든 국민은 자신의 생각과 사상·의견을 말이나 글 또는 여타 형태의 매개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와 각종 수단을 통해 전달·유포할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검열도 받지 않는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모든 개인은 자신이 표현한 바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본다. 익명은 용납되지 않으며 전쟁 선전, 차별적 메시지의 전달, 종교 대립을 조장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관 업무상의 문제를 보고·고발하는 공무원 본연의 기능에 제약을 가하기 위한 검열은 금한다.

제58조 방송·통신은 자유와 다양성이 보장되며, 법이 정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모든 국민은 본 헌법이 명시한 원칙에 따라 일체의 검열 없이 진실하고 공정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얻을 권리를 가지며, 나아가 부정확한 정보나 공격성 정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답변과 정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들의 전반 발전에 적합한 제반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59조 국가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모든 국민은 사회의 윤리와 미풍양속, 공공 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신앙을 밝힐 권리를 가지며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교육 또는 여타 실천 행위를 통해 그 믿음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본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제한 이외에는 교회와 교해(告解)의 독립성과 익명성 역시 보장한다. 부모는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종교 교육을 자녀에게 받게 할 권리

가 있다.
어떠한 사람도 종교적 신념 또는 계율을 동원하여 법망(法網)을 피하거나 다른 사람의 종교·신앙적 권리를 방해할 수 없다.

제60조 모든 국민은 자신의 명예와 사생활, 친분 관계와 자기 이미지, 비밀과 평판 등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법률은 개인·가족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고 제반 권리의 완전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전자정보통신의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61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그것의 실행이 자신의 인격을 해치거나 범법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양심의 자유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양심에 따른 거부권(Objections of conscience)은 법망(法網)을 피하거나 다른 사람의 법률 이행 또는 권리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동원해서는 안 된다.

제4절 정치적 권리와 국민투표

제1부 정치적 권리

제62조 모든 국민은 공무(public affairs)에 직접적으로든지 선출된 대표자들을 통하여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공무의 기획·수행·관리 감독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시민이 개인으로서나 집단으로서 완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정

이다. 이를 위해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다.

제63조 투표(suffrage)는 권리다. 자유·보통·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행사된다. 법률은 투표의 개인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personalization)과 비례 대표성(proportional representation)의 원칙을 보장한다.

제64조 베네수엘라 국민으로서 18세 이상의 사람은 정치적 능력 상실자 또는 민사상의 금치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투표권이 있다.

주(州), 자치도시, 지방행정구 선거에서는 베네수엘라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정치적 능력 상실자 또는 민사상의 금치산자가 아니며 본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제한 규정에 부합하는 사람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된다.

제65조 공무 집행 중의 범죄 행위 또는 여타 공공 재산에 대한 위해 행위로 형을 받은 자로서, 형 집행이 완료된 후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법률이 정해놓은 경과 시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일체의 선출직을 맡을 수 없다.

제66조 투표권자들은 선출된 대표자들로부터 제시된 일정에 따라 정기적이고 투명한 업무결산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67조 모든 국민은 민주적 방식에 따른

조직, 운영, 관리를 통해 정치 단체를 결사할 권리를 가진다. 그 지도부와 선출직 성원들은 당해 단체의 조직원들이 참여하는 내부 투표로 선임한다. 어떠한 정치 단체의 자금도 국가 기금을 통해 조달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적(私的)으로 조성되는 정치 단체의 기부금은 법이 정한 규정에 따르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자금의 출처와 운용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감시 기구를 둔다. 또한 정치·선거 캠페인이 민주적 진행을 피하기 위해 그 기간과 비용에 법률이 정한 제한을 둔다.

시민·정치 단체는 자신의 자유의사로 선거 과정에 참여하고, 후보로 나서거나 후보를 내세울 수 있다. 정치 광고와 선거 캠페인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조달에 관하여서는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정치 단체의 간부들은 공공 부문 기관·단체와 계약을 맺을 수 없다.

제68조 국민들은 법이 정한 요건 이외의 다른 제약 없이, 비무장 평화 시위를 할 권리를 가진다. 평화 시위를 단속하기 위해 화기(火器)와 독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경찰과 보안대(security corps)의 공공 질서 유지 활동은 법 규정에 따른다.

제69조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은 망명과 난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한다.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범인 해외 인도는 금한다.

제70조 국민의 직·간접적 참여에 따른

주권 행사는 공무(公務)와 관련하여서는 공직 선출, 국민투표, 여론 수렴, 국민 소환, 입법 청원, 국민 발의, 여러 사람이 결부돼 있는 사안에 대한 공개 토론과 시민 집회가 있고; 사회·경제 부문과 관련하여서는 민간 서비스 기관, 자주경영, 노사 공동경영, 금융조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협동조합, 상호금고, 공동체 기업, 그 외 상호 협력과 연대의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단체와 조직이 있다.

본 조항에 제시된 참여 수단이 유효하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법률로 정한다.

제2부 국민투표(Popular Referendum)

제71조 초국가적 중대 사안은 공화국 대통령이 제안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을 때, 또는 다수결 투표를 통한 국회의 결정이 있을 때, 또는 호적과 선거인 명부(the Civil and Electoral Registry)에 등록된 선거권자 10퍼센트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국민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a consultative referendum)에 붙여진다.

주(州)·자치도시·지방행정구의 특별 중대 사안 역시 주민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다. 지방행정구 평의회, 자치도시의회, 주(州) 입법부의 구성원 2/3가 찬성했을 때, 또는 시장이나 주지사의 제안이 있을 때, 또는 당해 지역 등록 선거권자 10퍼센트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실시된다.

제72조 국민투표로 선출된 모든 공무원과 치안 판사는 소환될 수 있다. 선출 이후 임기의 절반이 경과하고, 당해 지역 등록 선거권자 20퍼센트 이상의 의견이 모아지면 해당 공직자에게 위임됐던 권한을 철회하기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청원할 수 있다. 등록된 선거권자의 25퍼센트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 결과 소환에 찬성한 투표자의 수가 애초 해당 공직자를 선출했던 투표자 수와 같거나 많다면, 그 공직자의 권한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며, 즉시 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궐위(闕位)를 충원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 합의제로 운영되는 조직⁶의 권한 철회는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행한다. 공직자 소환 청원은 해당 공직자의 임기 중 한 번 이상 제출될 수 없다.

제73조 의회에서 논쟁이 된 법안은 국회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국민투표에 회부될 수 있다. 투표 참여자가 호적과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선거권자의 25퍼센트 이상이 되고 투표 결과가 법안 승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면, 그 법안은 법률로 제정되어 확정된다. 국가의 주권을 양보해야 하거나, 그 권위를 초국가적 기관(supranational organs)에 이전해야 할지도 모를 국제 조약, 협정, 협약은 공화국 대통령의 제안과 국무회의의 의견을 거쳐, 국회의원 2/3

6 정확하지는 않으나 여러 자료를 참조한 결과 교육·의료 등 각종 평의회, 의회 내 소위원회 등을 총칭하는 말로 보임.

의 투표 또는 호적과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선거권자 15퍼센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민투표에 붙여진다.

제74조 법률은 호적과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선거권자 10퍼센트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또는 공화국 대통령이 제안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을 때, 국민투표에 붙여지며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폐기될 수 있다. 공화국 대통령이 본 헌법 제236조 8항에 명시된 권한을 사용하여 발표한 법률적 효력을 지닌 포고령·법령도 호적과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권자 5퍼센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민투표에 부쳐지며 폐기될 수 있다. 상기 법률 폐기를 위한 국민투표가 유효하려면 그 투표 참여자의 수가 반드시 호적과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권자의 4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예산에 관한 법률, 조세의 신설 또는 조정에 관한 법률, 공적 자금 대출 또는 사면, 인권의 보호·보장·신장과 관련된 법률, 국제 조약 비준에 관한 법률 등은 그 폐기를 묻는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없다. 같은 헌법 시기 안에 동일한 법률 사안에 대해 폐기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는 한 번 이상 실시하지 않는다.

제5절 사회와 가족

제75조 국가는 개인의 전반 발전을 위한 근본 터전으로서, 또한 사회의 기본 조직으로서, 가족을 보호한다. 가족 관계는 가족 구성원간의 평등한 권리와 의무, 상호 결속, 공동 노력, 상호 이해와 존중에 기반한다. 국가는 어머니, 아버지, 또는 여타 가정(家長)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보장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자신의 본래 가족의 품에서 살며 양육되고 성장해나갈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그들 자신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법률이 정한 바에 부합되는 대체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입양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에 따라 피입양자의 이익을 위해 이뤄지며, 친자 관계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국내 입양은 해외 입양에 우선한다.

제76조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혼인 상태(marital status)와 상관없이 모성과 부성은 전적으로 보호받는다. 부부는 몇 명의 자녀를 둘 것인지 자유롭고 책임 있게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그것에 필요한 정보와 수단을 입수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성에 대하여 임신 순간부터 임신 기간, 출산, 산후 조리 시기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전반적 지원과 보호를 보장하며,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가족 계획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보장한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 훈육하고 교육시키며 부양하고 돌볼 피할 수 없는

공동의 의무가 있고, 자녀에게는 그 부모가 스스로를 돌보아야 하는 피할 수 없을 때 보살펴 줄 의무가 있다.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요구되는 제반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들을 법률로 정해 확립한다.

제77조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와 권리·의무의 완전한 평등에 기초한 혼인을 보호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상의 혼인은 법정(法定)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법적 혼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78조 아동과 청소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지닌 완전한 법적 주체(full legal persons)이며 본 헌법과 법률 그리고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Children's Rights)과 공화국이 가입·비준한 여타 아동·청소년 관련 국제 조약의 내용을 존중하고 보장,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특별 법원과 기관, 법령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와 가족과 사회는 아동·청소년에 관한 제반 조치와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이 그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전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국가는 그들의 진보적 결사(progressive incorporation)를 독려하여 능동적 시민성(active citizenship)을 함양시켜 나가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총체적 보호를 담당할 국가 차원의 지도시스템을 창설한다.

제79조 청년은 성장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가족·사회와 연계하여 그들이 생산적 이행과정을 거쳐 성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무하며, 특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첫 취업의 기회와 그를 위한 직업 훈련의 기회를 창출한다.

제80조 국가는 노인이 그 권리와 보장을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국가는 가족·사회와 연계하여 노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자주성을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그 삶의 질을 보장·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보장·보호를 완전히 보장할 의무를 진다. 사회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연금과 퇴직금은 도시 최저 임금보다 낮을 수 없다. 일하기를 희망하고 그럴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알맞은 일자리를 가질 권리를 보장한다.

제81조 장애나 건강상의 특별한 요구를 가진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완전하고 자주적으로 행사하며, 가족과 공동체 속에 어울려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가족·사회와 연계하여 그들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기회의 평등, 만족스러운 노동 조건을 보장하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들의 상황에 적합한 교육·훈련과 고용 창출을 촉진한다. 청각 장애인들은 베네수엘라 수화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비장애인들의 공식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제82조 모든 국민은 인간적인 가족·이

웃·공동체 관계가 가능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등, 필수 기본 시설이 구비된 안전하고 편안하며 위생적인 주택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 같은 필요를 점진적으로 충족시켜나가기 위해 국가와 시민은 모든 영역에서 책임을 분담하여 노력한다.

국가는 주택의 구입, 건축, 확장을 위한 사회 공공 정책과 용자의 우선권을 가족(단위)에 주며, 특히 경제 기반이 빈약한 가족들의 활용 기회를 널리 보장한다.

제83조 건강은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의 하나이며 국가의 의무인 바, 국가는 이를 생명권의 일부로서 보장한다. 국가는 삶의 질과 공공 복리를 향상시키고 제반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해나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그것의 유지·증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고, 공화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 조약에 부합하고 법률로써 정해놓은 보건·위생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84조 국가는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문간 경계를 넘나들면서 분권적이고 참여적으로 움직이는 국가 차원의 공중 보건 시스템을 사회보장제도 내에 구축하고 지도, 운영해나간다. 이 공중 보건 시스템은 무상(無償)의 원칙, 일괄의 원칙, 보편성과 공평함의 원칙, 사회적 통합과 연대의 원칙 아래 운영되며, 그 우선순위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두고, 신속한 치료와 충실한 재활 과정을 보장토록 한다. 공중 보건 자산과 서비스는 국가가 소유하며 민영화하지 않는다. 지역 사회(organized community)는 공중 보건 당국들의 정책입안, 집행,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85조 공중 보건 시스템의 재정은 국가가 책임지며, 국고 세입(稅入)과 사회보장 의무 분담금, 여타 법률이 정한 재정 재원(財源)들로 충당한다. 국가는 보건 정책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 만큼 보건 예산을 확보한다. 대학·연구소와 협력하여 국립 전문·기술인 양성 체제와 국영 보건용품 산업을 일으키고 발전시킨다. 또한 국가는 공중 보건 기관과 민간 보건 기관 양방 모두를 통제한다.

제86조 모든 국민은 비영리 공공 서비스를 통해 아이의 출산, 가정을 꾸립, 질병, 불치병, 중병, 장애와 불구, 특별한 의료적 관리, 직업상의 위험, 실직, 실업, 노화, 배우자의 사망, 양친의 죽음, 주택 문제, 가정생활상의 각종 부담 등 장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건강상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국민이 다같이 직·간접적으로 재정 분담에 참여하는 효율적이고 단일한 범국민적 사회보장제도(the Social Security system)를 수립함으로써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행사되게끔 보장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분담금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이유로 사회보장제도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사회보장 관련 기금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의료·보건 서비스와 여타 사회보장 혜택을 위해 납입하는 의무 분담금은 국가의 지도 아래 오직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만 집행된다. 보건·교육·사회보장에 할당되어 쓰고 남은 모든 이월금은 보건·교육·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재분배와 재투자용 자금으로 비축한다. 사회보장제도에 관해서는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87조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생산적 일자리를 얻고 노동의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고용 증진은 국가 목표 가운데 하나다. 자영업자(self-employed persons)의 노동권 행사에 관한 보장책들을 법률로 정한다. 노동의 자유는 오직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만 제한받는다.

모든 고용주는 노동자들에게 일터의 안전과 위생, 적절한 노동 환경을 보장한다. 국가는 이를 관리감독하고 향상시켜나갈 기관들을 설립하고 필요한 수단들을 강구한다.

제88조 국가는 노동권 행사에 있어 양성(兩性) 평등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 국가는 가사 노동이 부가가치를 창출

하고 사회적 부와 번영을 만들어내는 경제활동임을 인정한다. 가정주부들은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89조 노동은 사회적 사실(a social fact)⁷ 이고 국가의 보호를 누리며, 노동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지적 조건을 개선시키는 데 필요한 규정들을 법률로써 정한다. 국가는 다음 원칙들 위에서 이 의무를 수행한다. :

- (1) 어떠한 법률도 노동자 권리(Labor rights)와 급부(benefits)에 관하여 그 불가침성과 향상성(向上性)을 손상시키는 조항을 제정할 수 없다. 노사 관계(labor relations)는 그 형식 또는 외형보다는 실재(reality)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
- (2) 노동자 권리는 포기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권리를 잠식하거나 포기시키려는 모든 결정, 협약, 협정은 원천 무효다. 오직 법정(法定) 요건에 부합하는 노사 협의의 결과로 도출된 양보와 타협만이 가능하다.
- (3) 여러 법 규정이 상호 충돌하거나 무엇을 적용해야할지 애매할 때, 또는 특정 법규의 해석에 의문이 제기될 때에는, 노동자에게 가장 유리한 쪽을 적용한다. 이때 선택한 법규는 일부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 되고 선택한 법규 전체를 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4) 사용자 측이 본 헌법을 위배하여

택한 수단 또는 조치는 모두 원천 무효이며 효력을 상실한다.

(5) 연령, 인종, 신앙, 성별, 정치적 이유 또는 여타 개인의 특성에 기초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한다.

(6) 업무 특성상 청소년의 전반 발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노동을 청소년에게 시키는 것을 금한다. 국가는 청소년을 모든 형태의 경제·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한다.

제90조 노동 시간은 일일 8시간, 주당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야간 노동은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 하며, 일일 7시간, 주당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어떠한 고용주에게도 피고용인들에게 초과 근무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 사회의 이익을 위한 분야와 여타 그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노동 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해나가며, 노동자들이 여가 시간을 신체·정신·문화적 발전을 위해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돕는 적절한 방안들을 채택한다. 노동자들은 근로일과 동일한 조건을 보장받는 유급 주휴일과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제91조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이 기초적인 물질적·사회적·지적 욕구를 충족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에 충분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보장되며,

자격을 가진 노동자들에게는 일정량의 회사 이익이 분배되도록 정한다. 급여는 채권 압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식비수당(the food allowance)을 제외하고는 법정 화폐(法定, legal tender)로 법률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체 없이 지급한다.

국가는 민간·공공 분야 노동자 모두에게 장바구니 물가 등을 참조하여 매년 조정·산출되는 최저 생계 임금을 보장한다. 이에 수반되는 형식과 절차에 관하여서는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모든 노동자는 해직 시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근속 연한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 급부(benefits, 給付)에 대한 권리가 있다. 봉급과 제반 급부는 당해 기일에 즉시 지불하지 않으면 이자가 적용되는 노동 채권(labor obligations)이다. 그 지급을 연체했을 때는 연체 이자가 붙게 되며, 연체 이자는 총 채무액에 합산되어 채무 원금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제93조 고용 안정은 법률에 의해 보장되며 모든 형태의 부당 해고는 해당 법규에 따라 제한된다. 본 헌법에 위배되는 해고는 무효이며 효력을 상실한다.

제94조 중개인 또는 청부업자를 통해 급부 서비스를 대행시키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법적 책임에 관하여서는 법률로 정하며, 그 중개인 또는 청부업자가 업무와 계약 해지 등과 관련하여 지게 되는 공동 책임은 별도로 한다. 국가는 노동법 적용을 왜곡시키거나 무시, 방

해하려는 목적에서 거짓 정보로 사람들을 시험하거나 기만하는 고용주 측 일반에 대하여 소관 관계 관청을 통해 그 법적 책임을 확증토록 한다.

제95조 노동자들은 어떠한 차별이나 사전 허가의 필요 없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익 보호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조직을 설립할 권리를 가지며, 그에 가입할 또는 가입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들 조직은 행정 기관의 개입, 정치, 해산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이 권리의 행사에 반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 또는 간섭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조합의 설립 발기인과 지도부 성원들은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과 임기 동안 자신의 직장 내 일자리에서 해직되지 않을 특권을 누린다.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보통·직접·비밀 선거에 의한 조합 임원과 대표자의 교체 규정을 조합의 정관과 내규에 둔다. 조합이 누리는 특권에서 파생된 혜택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수익 또는 이득을 챙기는 조합 임원과 대표자는 누구든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된다. 조합의 지도부 성원들은 재산 신고를 의무 요건으로 한다.

제96조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모든 노동자들은 법정 요건에 부합하는 한 아무 제약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단체 협상을 하고 단체 협약을 맺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그 과정을 보장하며,

7 사회를 구성하는 개별 인간들에게 외재하여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구속하고 있는 모든 행위 양식들.

단체 교섭과 분쟁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적절한 방안들을 법규로써 정한다. 단체 협약은 체결 당시 현업에 있던 모든 노동자들과 체결 이후 고용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제97조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모든 노동자들은 법률이 정하는 조건 아래 파업할 권리를 가진다.

제6절 문화와 교육에 관한 권리

제98조 문화 창작은 자유다. 이 자유에는 작품에 대한 작가의 법적 권리 보호는 물론 창작·과학·기술·인문적 작업에 대한 투자, 생산, 유포의 권리도 포함된다. 국가는 이 분야와 관련해 공화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 조약과 법률의 단서 조항에 따라 과학과 문학·예술 작품과 발명·신기술·상품명·특허·상표·표어 등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한다.

제99조 : 문화적 가치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포기할 수 없는 자산이며 국가에 의해 장려되고 보장되어야 할 근본 권리인 바 국가는 그에 필요한 조건, 수단, 법적 장치,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한다. 공공 문화 행정은 자율성이 인정되며, 그 조건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국가는 유형·무형 문화재와 역사적 유물·유적의 보호, 보존과 내실화, 유지·복원을 보장한다. 국가 문화유산에 속하는 자산은 양도될 수 없

으며, 압류 시효 또는 공소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자산에 피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벌금과 형벌을 법률로 정한다.

제100조 베네수엘라의 국가 정체성을 이루는 민속 문화를 문화의 동등성 원칙 아래 문화간 관계(intercultural relation)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속에서 특별히 배려한다. 국내와 해외에서 베네수엘라의 문화와 관련된 기획, 프로그램, 활동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고 발전 시키거나 재정적 후원을 하는 개인, 기관, 공동체에 관하여서는 법률이 정한 혜택과 장려책을 제공한다. 국가는 문화 작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위에서 법률에 따라 문화 부문 일꾼들이 사회 보장제도 내에 편입되어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01조 국가는 문화 정보의 발행과 송출, 수신, 유통을 보장한다. 대중매체는 민중의 전통적 가치관을 전파하며 국가의 예술가, 작가, 작곡가, 동영상물 감독, 과학자와 여타 창작자들의 작업을 돕고 보급할 의무를 가진다. 텔레비전 매체들은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문자 자막 방송과 수화 방송을 한다. 이들 의무와 관련된 조건과 양식(樣式)들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2조 교육은 기본 인권이자 사회의 근본 의무인 바, 민주적인 무상(無償)의 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수준, 모든 형식의 교육을 국가가 최대의 관

심을 쏟아야 할 국가의 근본 기능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과학, 인문, 기술 지식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한다. 교육은 공공 서비스로서, 모든 종류의 사상 흐름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고, 모든 국민이 한 사람의 라틴 아메리카 인이자 인류로서의 보편적 비전을 가지고 국가 고유의 가치관을 구현시켜나가는 사회 변화 과정에 능동적이고 의식적으로 공동 참여하며 노동 윤리가 중시되는 그러한 민주사회 속에서 자신의 개성을 온전히 발휘하고 창조적 잠재력을 개발시켜 나감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가족·사회와 연계하여 본 헌법과 법률이 담고 있는 원칙에 따라 시민 교육 과정을 추진한다.

제103조 모든 사람은 각자의 적성과 소질, 희망 사항으로 인한 제약 외에는 모든 것이 동등한 조건과 상황에서 전인적이고 항상적(ongoing)인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머니 품에서부터 다양한 중등 교육 과정까지 각급 수준의 교육은 모두 의무 무상 교육으로 한다. 국립 교육 기관의 교육은 대학 학부 과정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유엔 권장 사항에 따른 우선 투자를 실시한다. 국가는 입학, 교육 과정, 수료 등을 교육 제도 내에서 공인받기에 충분한 준비를 갖춘 교육 기관과 서비스를 설치하고 유지한다. 법률은 장애나 건강상의 특별한 요구를 가진 사람과 여러 이유로 신체적 구속을 받고 있는 사람 등 정규 교육

과정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할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동등한 배려를 보장한다.

개인이 사적으로 중등 교육과 대학 수준의 공공 교육 과정에 기부를 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는다.

제104조 교육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도덕적 품성이 인정되고 학문적 수준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한다. 국가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최신 관련 정보와 지식을 얻도록 독려하며, 국립·사립 소속에 상관없이 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책무의 중요성에 걸맞은 노동 조건과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등 교원의 직무 수행에 안정성을 보장한다. 교원의 임용, 승진, 신분 보장과 유지는 일체의 정치·정파적 이해 또는 비학문적 개입을 배제하고 법률이 정한 바와 공과에 기초한 평가 기준에 따라 행한다.

제105조 업무 수행상 특정 학위와 전문 자격 등의 조건을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는 직업군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모든 자연인과 법인은 윤리·학문·과학·재정·시설 측면에서의 법정 요건과 기타 법이 정한 요건을 항상적으로 충족시키고 그에 대한 능력을 입증하는 한 국가의 사전 승인 허가를 받아 사립 교육 기관을 설립, 유지할 수 있으며 국가의 엄격한 감독과 감찰을 받는다.

제107조 환경 교육은 각급 수준과 형식의 정규 교육 과정만이 아니라 비공식적 시민 교육에서도 필수 교과로 다룬다. 공립·사립 교육 기관은 각기 다양한 학제에 맞춰 스페인 어, 베네수엘라 역사, 베네수엘라 지리, 볼리바르 혁명 정신의 원칙을 필수 교과로 가르친다.

제108조 공영·민영 대중매체는 시민 교육에 기여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 라디오와 텔레비전 서비스·공공 도서관과 정보 통신망을 보장한다. 국민 교육 센터들은 이 목적을 위해 법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그로부터 결과한 혁신들을 통합적으로 적용, 구현하여야 한다.

제109조 국가는 대학 공동체의 성원인 교수, 학생, 졸업생들이 과학·인문학·공학 분야의 연구를 통해 지식을 추구함으로써 국가의 정신적·물질적 이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학의 자치권을 하나의 원칙이자 지위로서 인정한다. 이를 위해 자치 대학들은 법률이 정한 관리·감독 아래 행정과 운영, 자산의 효율적 관리 등에 대한 그들 자신의 규범을 스스로 채택한다. 연구 계획의 기획과 조직, 그 결과의 작성과 갱신, 교수(教授) 과정, 공개 강좌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의 자치권을 확립한다. 대학 교정에 대한 불가침성을 확립한다. 전국의 국립 실험 대학들은 법률에 의거, 자치권을 획득한다.

제110조 국가는 과학, 공학, 지식, 혁신과 그 응용, 필수 정보 서비스 분야가 국가의 경제·사회·정치 발전상의 기본 도구이자 나아가 국가 주권과 안위를 담보하는 근본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공익성을 인정한다. 국가는 이들 분야의 활동을 촉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자원을 할당하며 법률에 따라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시스템을 창설한다. 이를 위해 민간 부문 역시 자원을 내어 기여해야 한다. 국가는 과학, 인문학, 공학 분야의 연구 활동을 통할하는 윤리적·법적 원칙을 세워 시행하며, 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법률로써 정한다.

제111조 모든 국민은 개인·집단적 삶의 질 향상에 유익한 활동으로서 운동과 오락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운동과 오락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교육·공중 보건 정책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그 증진을 위한 자원을 보장한다. 체육 교육과 운동은 아동·청소년들의 전인 교육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 법률이 정하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한, 각급 수준의 모든 공립·사립 교육은 각기 다양한 학제에 따라 체육과 운동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국가는 법률에 따라 운동선수들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총체적 배려를 보장하며, 높은 경쟁력을 가진 운동을 지원하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스포츠 조직을 통해 심사와 규제를 받도록 보장한다. 국내에서 운동선수들을 육성하고 운동

과 관련된 활동과 기획, 프로그램 등을 발전시키거나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사람, 기관, 공동체에게는 혜택과 장려책을 제공한다.

제7절 경제적 권리

제112조 모든 국민은 인간 개발, 안전, 보건, 환경보호 또는 여타 사회 이익을 위한 이유로 본 헌법과 법률이 정해놓은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제활동이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전념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가 경제의 전반 발전을 추동하고 그에 대한 계획안, 합리화 방안, 규제 방안 등을 공표하는 국가의 권능을 침해하지 않는 한, 민간 부문의 주도권을 장려하며 그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해냄으로써 대중의 필요와 일자리에 대한 요구, 기업·상업·공업 분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보장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부의 창출과 정당한 분배를 보장한다.

제113조 독점은 허용되지 않는다. 독점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또는 결과적으로 사실상 독점과 같은 효과를 야기하는 개인의 행위·활동·지휘·합의는 관련자들의 애초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또 형식상 어떻게 포착되든지 간에, 모두 본 헌법의 근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한 개인이나 몇몇 개인이, 또는 한 회사나 몇몇 회사가 특정 재화와 서비스 시장에서 과거

로부터 확보해왔거나 현재 확보하고 있는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또한 그 지배적 지위의 애초 근거가 무엇이든지 간에 본 헌법의 근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며, 수요의 집중이 발생하는 경우 역시 그러하다. 상기 지적한 모든 경우에 국가는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고 경제활동에 진정한 의미의 경쟁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 독점·지배적 지위의 남용·수요의 집중 등이 야기한 제약과 유해한 영향을 차단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조치를 강구한다. 국가의 천연자원 채굴권과 공공 서비스 제공권에 관하여서는 그 공익성에 대한 투철한 배려와 충분한 대가를 확인·보장하는 위에서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 독점권 또는 여타 방식의 권리를 양여한다.

제114조 경제 범죄와 투기, 매점매석, 고리대금, 카르텔 형성과 여타 관련 위법행위는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

제115조 재산권을 보장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재산에 대해 이용 권리를 가지며 사용, 향유,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이들 재산에는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부담, 제한, 의무가 따른다. 어떠한 종류의 재산이든지 오직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을 이유로 한 사법 기관의 최종 판결이 있고, 적시에 공정한 보상이 지불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 수용될 수 있다.

제116조 재산에 대한 몰수는 본 헌법이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집행되지 않는다. 예외적인 조치로써, 공공 재산 침해 범죄에 책임이 있는 국내와 국외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의 재산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권력의 비호 아래 불법 축재한 자의 재산과 마약·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거래와 연관된 사업, 자금, 여타 연관 활동에서 얻어진 재산 역시 몰수될 수 있다.

제117조 모든 사람은 좋은 품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얻을 권리를 가지며, 자신이 소비하는 재화·서비스의 내용과 특징에 관해 충분하고 속임수 없는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지고, 선택의 자유와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들 권리 보장에 필요한 장치·재화와 서비스의 양적·질적 기준, 소비자 보호 절차, 상기 권리를 침해한 데 따르는 손해 보상과 응분의 처벌 내용 등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118조 노동자들과 공동체가 조합, 저축금고, 상호신용금고, 그 외 여러 형태의 사회적이고 참여적인 성격의 단체를 발전시켜나갈 권리를 인정한다. 이들 단체들은 법률에 부합하는 한 어떤 종류의 경제활동이든 전개해나갈 수 있다. 법률은 이들 조직들이 갖는 특성, 특히 협동조합, 협동 노동, 공동 이익의 창출 등과 관련된 특성을 인정한다. 국가는 서민 대중의 경제 대안 체제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 단체들을 장려하고 보호한다.

제8절 원주민의 권리

제119조 국가는 여러 원주민족들과 그 공동체의 존재를 인정하며 이들의 사회·정치·경제 조직과 문화, 관습, 언어, 종교를 인정하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아 점유해왔을 뿐 아니라 고유의 생활 방식을 발전시키고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거주 지역을 인정하며 그 땅에 대한 원천적 권리를 인정한다. 국가의 행정부는 원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속에서 본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 땅의 경계를 정하고, 그 땅에 대해 양도할 수 없고 이전될 수 없으며 시효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집단적 소유권을 보장한다.

제120조 국가가 원주민 거주 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천연자원 개발은 이들 지역 본연의 문화·사회·경제를 해치지 않으며, 관련 원주민 공동체들에 각각 사전 통지를 하고 상의를 거친다. 원주민들이 이들 개발에 의해 얻는 이익에 관하여서는 본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1조 원주민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인종적·문화적 정체성과 세계관, 가치관, 영성, 성지(聖地)와 예배소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원주민 문화가 널리 표현되고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바, 원주민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사회적·문화적 특색과 가치관·전통을 반영한 자신들 고유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2개 언어를 병용하는 이중(異種)문화적 교육 제도를 시행할 권리를 가진다.

제122조 원주민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관습과 문화가 반영된 완전한 형태의 보건 시스템을 가질 권리가 있다. 국가는 그것이 생명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이들의 전통 의학과 보완적 치료법을 인정한다.

제123조 원주민들은 저마다 전통적인 생산 활동을 하거나 전체 국가 경제에 참여할 때에, 또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호혜주의·연대 책임·교환 등에 기초를 두는 자기 고유의 경제 관행을 지키고 장려할 권리를 가진다. 원주민들은 직업 교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틀 내에서 자신들의 경제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술·금융 지원 서비스와 특수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 수행, 관리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원주민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입법상의 권리 향유를 보장한다.

제124조 원주민들의 지식, 기술, 혁신에 대하여 집단 공동의 지적 재산권을 보장하고 보호한다. 원주민들의 유전자원(genetic, 遺傳資源)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지식은 집단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온 지식과 자원에 대한 특허 등록은 금한다.

제125조 원주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법률에 의거하여 국회와 원주민 인구가 있는 연방과 지방 자치체의 심의기관 내에 원주민 대표제를 보장한다.

제126조 원주민들은 저마다 고유한 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분할할 수 없는 하나의 자주 독립체인 우리 국민, 국가, 베네수엘라 민중을 이루는 일부다. 이들은 본 헌법에 따라 나라의 존엄과 주권을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 본 헌법에서 [원주민들(Native peoples)을 일컬을 때 사용한] 민족(peoples)이라는 용어는 국제법상 동(同) 용어에 부여되는 함의와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쓰였으며, 어떤 식으로든 그와 연관지어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9절 환경권

제127조 자기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환경을 보호, 유지하는 것은 매 세대의 권리이자 의무다.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며 생태적으로 균형 잡힌 삶과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환경과 생물·유전자 다양성(biological and genetic diversity), 생태학적 과정(ecological processes), 국립공원, 천연기념물, 여타 특별히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을 보호한다. 생물의 게놈(genome)은 특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관련 분야는 생명윤리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 아래 공기, 물, 토양, 해안, 기후, 오존층과 생물종(種)에 대한 특별 보호를 시행하여 서민 대중이 오염 없는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다.

제128조 국가가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대전제에 의거하여, 남녀 국민들의 참여와 국민들과의 협의, 국민들에게서 나온 정보에 근거하고 모든 생태학적·지리적·인구학적, 사회·문화·정치·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지역 발전의 원칙과 기준에 관하여서는 기본법으로 정하여 규정한다.

제129조 생태계 파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경·사회 문화 영향 평가를 선행하도록 한다. 국가는 독성과 유해 폐기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며, 핵무기와 화학 무기·생물 무기의 국내 제작과 사용을 막는다. 독성과 유해 물질의 보관, 운송, 사용, 처리에 관하여서는 특별법으로 정하여 규정한다.

공화국이 국내·국외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과 맺는 계약, 또는 천연자원과 관련해 내어주는 각종 허가권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내용상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생태 환경의 균형을 보전할 의무, 상호 합의한 약정에 한 해서만 생태 환경에 접근하고 기술 이전을 허용할 의무, 만일 환경에 어떤 변화라도 초래되었을 경우 이를

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원상 복구시켜놓을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절 제반 의무

제130조 베네수엘라 국민은 조국과 조국의 상징물과 문화 가치를 존중하고 지켜낼 의무가 있으며, 나라의 주권과 자주독립성·영토의 보전, 자결권과 국가 이익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제131조 모든 국민은 본 헌법과 법률·여타 공권력 기관에 의해 발효된 공공 명령을 따르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132조 모든 국민은 인권을 민주적 공존과 사회 평화의 근본으로 받아들여 이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국가의 정치 생활·시민 생활·공동체 생활에 동참하고,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제133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각종 세금과 분담금을 냄으로써 공공을 위한 비용 지출에 공헌할 의무가 있다.

제134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거하여 나라의 방위와 보존·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또는 사회적 재난 상황 대처에 요구되는 민간 사역(使役) 또는 병역(兵役)을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어떠한 사람도 강제로 징집되지 않는다. 선거가 실시될 때에 모든 국민은 법률

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할 의무를 가진다.

제135조 국가가 전체 사회의 안녕을 위해 본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져야하는 말은 바 책무와는 별도로, 각 개인에게도 사회적 결속감과 책임 의식에 의해 또 인도주의의 발로로 전체 사회

에 대하여 져야하는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적 의무에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률에 따라 그 이행을 강제하는 규정을 법령화한다. 전문 직종에 진출할 포부를 가진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기간 동안, 법률이 정하는 근무처에서, 법정 조건 아래 공익을 위하여 일할 의무를 가진다.

제4장 공권력 PUBLIC POWER

제1절 총칙

제1부 일반 규정

제136조 공권력은 지방자치체 권력과 주(州)의 권력, 국가 권력으로 배분된다. 국가 공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 시민, 선거 부문으로 분립된다.

분립된 공권력은 저마다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바, 그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들은 기능이 각기 달라도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 일한다.

제137조 각 공권력 행사 조직들의 권한은 본 헌법과 법률로써 규정하며, 그들이 수행하는 소관 업무 역시 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8조 찬탈로 얻은 권한은 무효이며, 그로부터 나온 제 조치는 원천 무효다.

제139조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권력을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또는 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문책이 따른다.

제140조 공공 행정이 직무 수행 중 끼친 피해로 인해 민간의 개인(들)이 재산 또는 권리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 국가는 그 개인(들)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 재정적인 책임을 진다.

제2부 공공 행정

제141조 공공 행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법률과 시민의 권리를 섬기며, 정직·참여 보장·신속성·유효성·효율성·투명성, 일에 대한 책임감과 결과에 대한 책임성 원칙에 기초하여 그 공적 직무를 수행한다.

제142조 자율권을 가지는 독립적 성격의 공공 기관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서만 창설될 수 있다. 이들 기관과 사회 재단 등 공익이 개입되는 기관들은 모두 법률이 정하는 일정 방식에 따라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제143조 국민은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 업무의 진행 상황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정직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당해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려진 모든 결정 사항들을 통고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행정 문서와 기록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는 바, 국내외 안보, 범죄 수사, 개인 사생활 등 민주사회일지라도 수용되어야 하는 제한 사항들은 예외로 하며 이 제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외비 또는 기밀 서류 분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공무원이 자신이 책임 맡은 사안에 대해 (상부에) 제출하는 보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열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3부 공직

제144조 공공 직무를 통할하는 법령은 법률에 따라 법제화하며, 그에 의거하여 공공 행정 종사자의 채용, 승진, 전보, 정직, 해임에 관한 규정과 사회보장 편입 규정 등을 정한다.

공직 종사자들이 직무상 이행해야 할 의무와 갖춰야 할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45조 공무원 또는 공공 행정 종사자는 국가에 봉사하는 존재이며, 특정 집단에 봉사하지 않는다. 그 임명과 면직은 정치적 연줄이나 성향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지방자치체와 주(州), 공화국 또는 여타 국가에 속한 사법인(私法人)과 공법인(公法人)에 봉직하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예외 조항이 아닌 한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와 관련된 계약에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중개인 또는 제3의 대리인을 통한 계약 체결도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제146조 공공 행정 기관의 보직에는 직업 공무원들을 기용한다. 선출직, 자유 임용직(自由任用職), 계약직, 공공 부문 종사 노동자, 그 외의 여타 법률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직업 공무원의 임용은 정직성·재능과 능력에 기초하는 공개 경쟁을 통한다. 승진은 자격 임용제(the merit system)에 근거한 방식에 따라 엄정히 결정되며, 전보와 정직, 해임은 직무 수행 결과에 따라 행한다.

제147조 유급 공직은 예상되는 급료 지출액을 관련 예산에 계상(計上)한 연수에 채용한다.

공공 행정의 급료 체계는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국가와 주(州), 지방자치체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관하여서는 관련 법규를 통해 적정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국가와 주(州), 지방자치체 공무원들을 위한 연금 또는 퇴직 연금 제도에 관하여서는 국법(國法)으로 정한다.

제148조 어떠한 사람도 법률이 정하는 학문 연구 관련직, 임시직, 사회복지 도움 활동(care giving), 교직 등을 제외하고는 한 개 이상의 유급 공직을 겸임할 수 없다. 유급 공직에 있는 자가 상기 언급한 예외에 들지 않는 또 다른 직책에 채용됨을 수락할 경우, 먼저 맡고 있던 직책을 사직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임시적으로 궐위를 대행하기만 할 뿐 상시적인 정규 직위를 차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어떠한 사람도 법률에 명시된 경우가 아닌 한 한 개 이상의 연금 또는 퇴직 연금 급부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제149조 공무원은 국회의 공인 허가 없이 외국 정부에 고용되거나 외국 정부로부터 서훈(敍勳) 또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

제4부 공익 관련 계약

제150조 국가 차원의 공익 관련 계약은

법을 정한 요건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한다.

지방자치체, 주(州) 또는 국가의 공익과 관련된 계약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외국이나 외국의 공공 기관, 또는 재외 베네수엘라 기업과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 관계의 명의를 상기 상대들로 변경하는 일도 허용되지 않는다.

공익 관련 계약에 관하여서는 법률로써 계약 상대자의 국적, 주소지 등 여타사항에 대해 특정 조건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 보장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1조 모든 공익 관련 계약은 계약 자체의 성격상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만일 계약과 관련하여 어떤 의혹 또는 논쟁이 일어나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없을 시에는 계약 문안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에 따라 공화국의 소관 법원이 내리는 판결에 따를 것이며 이 문제를 어떠한 해외 소송의 근거 또는 이유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부 국제 관계

제152조 공화국의 국제 관계는 국가가 존립하는 목적인 주권과 국민 이익 실현에 충실히 복무하며, 자주 독립과 나라 사이의 평등, 자유로운 자결권과 내

정 불간섭,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협력, 인권 존중·인류의 해방과 복된 삶을 위해 싸우는 민중간의 연대를 원칙으로 삼는다. 우리 공화국은 가장 굳세고 결연하게 이 원칙들을 지켜나갈 것이며 모든 국제 기구와 기관 속에서 민주적 실천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제153조 공화국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연안 지역의 통합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한편, 이들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정치·환경상의 이익을 지켜나감으로써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연안 지역 국가들의 공동체 창설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한다. 공화국은 이들 우리 국가들이 도모하는 공동 발전 추진 계획들을 이행하고 조정하기 위한 국제 조약, 각국 국민들의 안녕과 전체 주민들의 집단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조약에 서명·가입할 권능을 가진다. 공화국은 상기 목적들을 위해 그 통합 과정 이행에 요구되는 집행 권한을 국제 조약을 통해 초국가 기구들에 양도할 수 있다. 공화국은 이와 같은 통합과 연합 정책 내에서 이 정책이 라틴 아메리카 전 지역의 공동 정책이 되도록 분투하며, 이베로 아메리카(Ibero America)⁸와의 관계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한다. 통합과 연합 협정의 일환으로 채택된 규범들은 현행 법률 체계의 일부로 간주되며, 국내법에 우선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8 라틴 아메리카를 일컫는 명칭 가운데 하나로 이베리아 반도(스페인,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았다는 역사·문화적 공동 배경을 강조하는 이름. 지리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에 속하지만 예컨대 도미니카 연방처럼 영어와 불어를 쓰거나 수리남처럼 네덜란드어를 쓰는 나라 등은 제외되는 감이 있다.

제154조 공화국이 가입에 동의한 조약은 대통령의 재가를 얻기 전에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만 이미 이전 조약에 의해 공화국에 부여되었던 의무의 이행 또는 완수를 위해 체결되는 조약, 공화국 스스로 명시적으로 표명한 원칙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조약, 국제 관례상 통상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조약, 행정부가 체결 권한을 가지도록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사항 등에 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55조 공화국이 가입하는 국제 조약, 협정·협약에는 그 조약, 협정·협약에 부수되는 절차상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하지 않는 한, 당해 조약의 이행 또는 해석과 관련하여 조약 당사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의견 충돌을 국제법이 인정하는 평화적 방법 또는 조약 당사자들이 사전에 합의해 놓은 방법을 통해 해결한다는 조항을 삽입토록 한다.

제2절 국가 공권력의 권능

제156조 국가 공권력은 다음과 같은 권능을 가진다.

- (1) 공화국의 대외 국제 정책과 활동
- (2) 공화국의 일반 이익에 대한 방어와 최고 상태의 경계 유지, 공공의 평화 유지, 국토 전체에 걸친 적절한 법 집행.
- (3) 국기와 국가문장(紋章)·국가(國歌), 국경일, 국가 훈장 등 영전 수여
- (4) 외국인의 귀화, 입국 허가, 범죄인 인도, 추방

- (5) 신원 증명 관련 서비스
- (6) 국가 경찰
- (7) 국가 안보와 방위·발전
- (8) 국군의 조직과 운영
- (9) 재난과 위기 관리
- (10) 연방직할구(the Capital District)와 연방자치령(federal dependencies)의 조직 편성·운영
- (11) 중앙은행, 통화 제도, 외화 관리, 금융·자본시장, 화폐 주조·발행 등에 대한 규제·조정
- (12) 소득, 상속, 증여·기부, 금융 자산, 상품 생산, 부가가치, 석유와 광산 채굴 등에 대한 조세, 상품·용역의 수출입 관세, 주류와 담배 소비세, 그 외에 본 헌법과 법률이 주(州)와 지방자치체의 몫으로 명시하지 않은 여타 조세와 세입원·분담금 등의 신설과 편성, 징수와 운영, 관리와 감독
- (13) 조세권을 가진 다양한 권력간의 조정과 조화를 보장하고, 특별히 지방자치체와 주(州) 조세의 몫과 그 세율 결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한도를 정하며, 조세 권역간의 결속을 보장하는 특정 기금을 창설하는 등의 입법 활동.
- (14) 토지, 임야,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세의 신설과 편성. 단, 이 조세에 대한 징수와 관리 감독 책임은 본 헌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체가 맡는다.
- (15) 해외 통상 전반에 관한 관리 감독, 통관 조직의 편성과 관리 감독
- (16) 석유와 광산의 운용과 관리 감독, 공지(空地)와 자연보호지구의 관리 감독, 삼림과 토양, 수자원과 여타 국가 천연자원의 개발과 이용

국가 행정부가 광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는 그 기간을 정하며 무기한 양도는 하지 않는다. 본 조에서 상기 언급한 자산들을 그 권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州)들에 관하여서는 법률로써 특별 재정 할당을 정하여 당해 주(州)들의 이익을 도모해주며, 그 외 주(州)들에 대하여서도 별도의 특별 충당금을 편성할 수 있다.

(17) 법정 계량 체계와 품질 관리 체계의 관리 감독

(18) 국가의 인구와 통계 조사

(19) 토목, 건축, 도시 개발에 관한 기술 표준과 절차의 마련·조정·통합, 도시개발계획 입법

(20) 국가적 차원의 공공 사업

(21) 공화국의 거시 경제와 금융·재정 정책

(22) 사회보장제도의 편성과 관리 감독

(23) 보건, 주택, 식품안전, 환경, 수자원, 관광, 국토 개발과 운송 전반에 관한 국가 정책 수립과 입법

(24) 교육·보건에 관한 국가 정책 수립과 서비스 제공

(25) 농업, 축산업, 어업, 임업 생산에 관한 국가 정책 수립

(26) 전국 교통과 운송 시스템, 국가 차원의 항공 운송·육상 운재(運材)·바다와 내륙 호수·하천을 이용한 수상 운재 시스템과 항구·공항 등 전반 인프라

(27) 전국 도로·철도 시스템

(28) 우편·통신 서비스의 관리 감독, 전자기와 주파수 대역의 운용과 관리 감독

(29) 전기, 음용수, 가스 등 주택용 공

익 설비 전반에 관한 관리 감독

(30) 국가의 전반 발전 전망에 기초하여, 베네수엘라의 영토와 주권을 지키고 국가로서의 현존을 보장하기 위한 국경 정책의 운용

(31) 국가 사법부와 검찰총장실, 민원조사관실의 조직·편성과 관리

(32) 헌법상의 보장과 권리·의무에 관한 입법; 민법, 상법, 형법, 행정법(行刑法), 소송법, 국제 사법(私法); 선거법; 공익 또는 사회 이익 위한 자산 수용; 개인 신용; 예술 저작권, 산업 소유권과 지적 재산권; 문화와 고고학상의 유산; 농업; 이민과 인구; 원주민과 그 거주 지역; 노동·복지·사회보장; 동식물 위생과 검역; 공중 사무소와 공공 기록 보관소; 은행과 보험; 복권과 경마·도박 일반; 국가 공권력 기관과 국가 차원의 기관·기구에 관한 조직·편성과 운영; 그 외 일반 국가 소관 업무

(33) 그 외 현행 헌법이 국가 공권력에 부과한 여타 사안, 또는 사안의 유형이나 성격상 국가 공권력의 소관 사항인 사안

제157조 국회는 분권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소관하고 있는 특정 사안을 과반수(다수결) 투표를 통해 주(州) 또는 지방자치체로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158조 분권화는 국가 정책의 하나로서, 반드시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권력을 국민 대중에 좀더 가까이 가져가는 데

기여해야 하며 민주주의와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통치 양쪽 모두에게 최상의 실현 조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제3절 주(州) 공권력

제159조 주(州)는 정치적으로 동등하며 자율권을 가진 완전한 법인격(juridical personality) 조직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주권, 존엄을 유지하고 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집행할 의무가 있다.

제160조 각 주(州)의 정치와 행정은 주지사의 소관으로 한다. 주지사는 25세 이상의 베네수엘라 인으로서 성직 신분이 아닌 자이어야 하며, 4년 임기로 주민들의 과반수(다수결) 투표로 선출된다. 주지사는 연임에 한하여 1회 재임할 수 있다.

제161조 주지사는 매년 주지사 사무실의 회계 결산을 주(州) 감사관에게 해야 하며, 이를 주(州)입법회의(the Legislative Council)와 공공 정책 계획·조정평의회(the Public Policy Planning and Coordination Council)에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제162조 : 각 주(州)의 입법 권한은 당해 주(州)와 지방자치체 인구에 비례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주 입법회의가 행사한다. 이들 입법회의의 권능은 다음과 같다.

(1) 주 소관 사안에 관한 입법

(2) 주 예산 법안 승인

(3) 그 외 본 헌법과 법률이 권한을 부여한 여타 사안

주 입법회의 의원의 요건과 연례 회계 결산 의무, 당해 사법관할권 내에서 보장받는 특권 등에 관하여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헌법이 국회(the National Assembly) 의원에 대하여 정한 규정에 준하여 따른다. 주 입법회의 의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되며, 최대 2회까지 재선될 수 있다. 주 입법회의의 기능과 조직편성은 국법(國法)을 통해 정한다.

제163조 각 주(州)에는 조직 구성과 운영상의 자율권을 가지는 주(州) 감사관실(the State Comptroller's Office)을 설치한다. 주 감사관실은 본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연방 감사원(the Office of the General Comptroller of the Republic)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州)의 세입, 지출, 자산에 대한 관리 감독과 회계감사 권한을 행사한다. 주 감사관실은 감사관의 지도와 책임 아래 활동하며, 감사관직은 법률로 정한 자격 요건에 따라 공개 경쟁을 통해 임용함으로써 임용에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임용자의 직무 능력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164조 각 주(州)가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권능은 다음과 같다.

(1) 본 헌법의 규정에 의거, 주(州) 공권력을 조직·편성하기 위한 주(州) 헌법을 공포한다.

(2) 본 헌법과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체와 여타 지방 기관을 조직·편성하고 그들간의 영역과 행정 구획을 분할한다.

(3) 주(州)의 자산을 관리하고 주(州) 자원의 투자와 운영 관리를 맡는다. 주의 자산과 자원에는 국가 재정 수입 중 주(州)에 배분되는 몫과 국가 공권력이 양도하거나 교부금 또는 특별 충당금 형식으로 부여한 자산과 자원이 포함된다.

(4) 국법(國法)과 주법(州法)의 규정에 의거, 주(州)에 귀속되는 조세를 편성, 징수, 관리 감독·운용한다.

(5) 법률에 의거, 국가 공권력에 귀속되지 않는 비철금속, 염전, 굴 양식장을 개발, 관리 감독하며 관할권 내의 공지(空地)를 관리 감독한다.

(6) 국가의 관련 법령에 의거, 경찰을 조직·편성하고 그 관할 구역 내의 지서·파출소 등을 확정한다.

(7) 납세 증지와 인지를 신설, 편성, 징수, 관리 감독한다.

(8) 주(州)의 공공 서비스를 창설, 편성, 운용한다.

(9) 주(州) 내의 육상 교통로를 개발, 건설, 보존, 이용, 관리 감독한다.

(10) 국가 행정부와 협조하여 국가의 고속도로·간선도로와 민간용 항구와 공항을 보존, 이용, 관리 감독한다.

(11) 본 헌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의 관할권에 들지 않는 여타 사안

제165조 관할권이 겹치는 사안에 관하여서는 국가 공권력이 제정한 법률 규정과 주(州)가 승인한 시행법에 따른다. 이러한 입법 조치는 상호 의존, 관계의

동등성, 협력, 공동 책임과 양보의 원칙을 따라 진행한다.

주(州)와 지방자치체 공권력 간에 관할권이 겹치는 영역에 관하여서는 주(州)가 자기 소관 서비스와 권한 가운데 지방자치체들이 실행 능력을 갖춘 서비스와 권한을 지방자치체에 이전시켜 분권화하며, 공동 자원에 대한 관리 운영도 이에 준한다. 그 이전 절차에 관하여서는 당해 주의 법률 제도 규정에 따른다.

제166조 각 주(州)에는 주지사가 의장을 맡고 주 소속 지방자치체장들과 주 정부 부처 장관들, 주(州) 대표로 선출되어 국회에 진출한 의원들, 주 입법회의와 시의회들의 대표, 원주민 공동체를 비롯한 조직화된 공동체들의 대표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공공 정책 계획·조정평의회(the Public Policy Planning and Coordination Council)를 설치한다. 평의회의 기능과 조직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7조 주(州)의 재정 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 (1) 주 자산의 관리와 보유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 (2) 주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벌금과 과태료, 주(州)가 주관하는 그 외 공과금
- (3) 소유권이 주(州)에 있는 물품 판매 대금
- (4) 헌법상(situado constitutional)의 공공 자원 분배 몫에 따라 얻어지는 자원(財

源). 이 분배 몫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연간 총 일반 재정 수입의 최대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주(州)와 연방직할구에 다음과 같은 비율로 배분한다. : 상기 금액 중 30퍼센트는 각각 똑같이 나누어 배정하며, 남은 70퍼센트는 각각의 인구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각 주(州)는 매 회계연도마다 이 분배 몫의 최소 50퍼센트를 반드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각 주(州)에 소속된 지방자치체들은 주(州)가 받은 분배 몫의 20퍼센트 이상과 주(州) 일반 재정 수입의 20퍼센트 이상을 매 회계연도마다 배분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고 수입에 변화가 있어 국가 예산을 수정 집행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그에 비례하여 헌법상의 공공 자원 분배 몫도 조정된다.

주(州)와 주 소속 지방자치체들이 헌법상의 공공 자원 분배 몫으로 얻은 재원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원칙 및 규범과 절차를 법률로 정한다.

(5) 주(州)의 재정 상황을 돕기 위해 국법(國法)으로 주에 할당하는 모든 조세, 부과금과 특별 의연금, 법률로써 주(州)에 특정 세입을 신설 또는 양도해줄 때에는 이렇게 하여 생기는 추가 할당액을 본 조항에서 적시한 주(州)의 재정수입원 가운데 다른 부문의 재원과 교체·변경시켜 상쇄함으로써 지역간 공평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국가의 일반 공공재원 가운데 헌법상의 공공 자원 분배 몫으로 산입되는 비율은 국가 재

정 상태와 건전성을 고려하고 각 주(州) 행정부처의 업무 수행 능력을 저하시키지 않을 선을 고려하여 그 최저치를 일반 재정수입의 15퍼센트로 한다.

(6) 법률에 의거한 역내 보상 기금과 국가 공권력의 양도, 교부 또는 특별 충당을 통해 얻어진 재원과 국가 세입 중 주(州)에 할당된 몫

제4절 지방자치체 공권력

제168조 지방자치체는 국가 행정 조직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정 단위이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 법인격체로서의 자율권을 향유한다. 자치체의 자율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지방자치체 대표의 선임
 - (2) 관할 범위 내 업무의 관리, 운영
 - (3) 지방자치체 재정 수입의 신설, 징수, 투자
- 관할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지방자치체의 활동은 시민들과 하나 되어 수행하며, 시민들이 법률에 의거하여 공무(公務)의 기획·운영,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감시 등 활동 과정에 적시에 충분하고도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

지방자치체의 활동을 둘러싼 논쟁과 다툼은 본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관할지의 소관 범정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

제169조 지방자치체와 여타 지역 기관의 조직·편성은 본 헌법과 본 헌법상의 원칙 구현을 위해 제정되는 국가 기

본법의 규정과 상기 법률들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주(州)의 법령에 따른다. 지방자치체·여타 지방 기관들과 관련하여 헌법상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률은 이들 주체들의 권한과 재정 수입원, 조직·편성, 관리 감독, 운영 등을 위한 체계를 인구, 경제 발전도, 자체적으로 조세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의 여부, 지리적 위치, 역사·문화적 특성, 그 외 여타 관련 요소 등을 감안하여 각기 다양하게 확립한다. 특히, 원주민 인구가 포함된 지방자치체에 채택될 지방 정부와 행정 시스템에 관하여서는 취사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조직·편성안을 확립한다. 이들 자치 체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적이며 지방 정부마다의 고유 특성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170조 지방자치체들은 공통 이익에 기초한 연합체를 구성하거나, 자기 관할권 내 사안에 관련된 공공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체들끼리 또는 타 행정 단위들과 합의하여 정부간 연합을 창설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체들이 연합하여 광역 지자체(district)를 형성하는 방식에 관하여서는 법률로 정한다.

제171조 동일한 연방 기관에 소속된 2개 이상의 지방자치체들이 경제·사회·물리적 관계를 맺어나감으로써 그 그룹 전체가 하나의 광역 도시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체들은 광역 지자체로 전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여 광역 지자체 정부의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성격을 보장하고 그 기능과 권한·조세, 재정, 관리 감독 등의 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광역 지자체 정부 구성에 각 지방자치체들이 적절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며 광역 지자체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체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공공 협의 방식과 절차를 제시한다.

광역 지자체의 조직·편성과 관리 행정에 관하여서는 인구 상황, 경제·사회적 발전도, 지리적 위치, 여타 주요 요소 등을 감안하여 각기 다양한 체계를 법률로 정한다. 각 광역 지자체 구성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 조건들을 고려토록 한다.

제172조 주(州) 입법회의가 당해 주민들의 공공 협의에 따라 찬성 결정이 내려진 연후에 광역 지자체의 경계를 확정하고, 국가 기본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이를 편제하며, 새로이 구성되는 광역 지자체 정부 산하 기관들이 각각 떠맡게 될 광역 지자체의 권능들을 정한다. 서로 다른 연방 조직에 속해 있는 지방자치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광역 지자체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회가 그 창설과 조직·편성에 관한 책임을 맡는다.

제173조 지방자치체는 법정(法定) 조건에 따라 동(洞)단위 행정구(parish)들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체의 조직·편성과 관련하여 헌법상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률은 지방자치체 관할권 내에 여타 지방 기관들을 창설하는 데 필요한 전제와 조건을 정하며, 그 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정하는 바, 이 재원은 각 기관의 맡은 바 기능에 따라 달리 편성되며 지방자치체의 자체 재정 수입에서 배분받는 몫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기관의 창설은 지방자치체 행정의 분권화, 시민 참여 확대, 좀더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인근 주민 또는 공동체의 발의를 참작하여 진행한다. 지방자치체 관할권에 하위 행정 단위를 구획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동(洞) 단위 행정구(parish)가 유일한 형태인 양 일괄 적용되거나,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제174조 지방자치체의 장(Mayor)은 시민 정부(civil government)의 수장으로서 지방자치체의 정치와 행정을 책임진다. 지방자치체장은 25세 이상의 베네수엘라 인으로 성직 신분이 아닌 자여야 하며, 4년 임기로 과반수(다수결) 투표로 선출된다. 연임에 한 해 1회 재선이 가능하다.

제175조 지방자치체의 입법 권한은 본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지방의회(the Council)가 가진다. 지방의회 의원의 수와 피선거권 자격 조건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6조 지방자치체 감사실(the Office of the Municipal Comptroller)은 지방자치체

감사관이 주관하며, 연방 감사원(the Office of the General Comptroller of the Republic)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체의 세입, 지출, 자산에 대한 관리 감독과 회계감사를 맡아 보고 그에 관한 보고서 제출 책임을 진다. 지방자치체 감사관은 법률로 정한 조건에 따라 직무 수행상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는 공개 경쟁을 통해 지방 의회가 임명한다.

제177조 지방자치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도의(道義), 거주 요건과 조건, 금지 사항, 입후보 과정과 실격 근거, 수행 직무 등에 관하여서는 국법(國法)으로 정한다.

제178조 지방자치체는 지방자치체 자신의 이익을 경영·관리하고, 본 헌법과 국법(國法)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하여 지방자치체의 일로 부여한 사안들을 처리할 권능을 가진다. 특히 경제·사회 개발을 안배, 추진하고 일반 가정을 위한 공익 설비 서비스를 설치, 제공하며 이들 정책들을 형평성·정당성·공익성에 기초하여 집행할 권능을 가지는 바, 관련법에 따라 부여된 위임 권한에 의거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영역에서 공동체 내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전반 생활 조건을 개선한다.

- (1) 지역과 도시 개발 계획; 역사 유산; 공공 주택; 지역 관광; 공원과 유원지; 시장(市場); 수욕(水浴) 시설과 휴양지; 일반 건축; 명명 체계와 공공 장식
- (2) 도시 도로; 주요 도로 내 차량·보

행자 통행 체계와 순환 체계 ; 도시 대중 교통 서비스

(3) 지방자치체의 특정 이익과 목적에 따른 공공 축제와 상업성 광고

(4) 환경보호와 환경 개선 협력 ; 청소, 쓰레기 수거·처리 등 도시와 주택 위생 ; 시민 보호

(5) 보건 위생과 일차 보건 의료, 영·유아와 청소년·노인 보호 서비스, 취학전 교육, 장애인들의 공동체 내 편입을 돕는 가족 서비스, 문화·스포츠 활동과 편의시설 ; 지방자치체 관할 소유물의 안전 예방과 보호·관련 활동에 대한 감시·감독

(6) 음용수, 가정용 전기·가스, 하·배수 시설 ; 묘지와 장례 서비스

(7) 관련 국법(國法)에 의거한 소액 청구 법원, 주민 안전과 보호, 경찰 서비스

(8)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체에 맡겨진 여타 사안.

지방자치체가 자신의 관할 범위 내의 사안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펼치는 활동들은 헌법에 따라 법률이 정한 국가와 주(州)의 권능을 저해하지 않는다.

제179조 지방자치체의 재정 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1) 공유 토지와 재산 등 지방자치체가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2) 지방자치체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 면허 또는 인허가 관련 수수료 ; 본 헌법이 정한 규제를 받는 산업·상업·서비스 또는 유사 분야 경제활동에 대한 조세 ; 도시 부동산, 차량, 대중 공연, 각종 경기, 합법적 도박,

상업 광고와 선전에 부과하는 조세 ; 도시 개발 계획에 의해 그 용도 또는 개발 강도가 변화함에 따라 발생된 자산 가치 증식분에 부과하는 특별 조세

(3) 농촌 지역 토지 또는 농지에 부과하는 조세 ; 조세 신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주(州)가 신설하는 조세와 조세 개선에 참여하여 배당받는 몫

(4) 헌법상의 공공 자원 분배 몫과 그 외에 국가 또는 주(州)에서 양도 또는 교부한 자원

(5) 지방자치체의 관할 범위 내에 들거나 지방자치체에 귀속되도록 정해진 벌금과 과태료 수익

(6) 그 외 법률이 정하는 수입

제180조 지방자치체에 부여되는 과세 권한은 본 헌법 또는 법률이 특정 분야나 활동에 관련하여 국가 또는 주(州) 당국에 부여하는 관리 권한과는 구별되며, 그로부터 독립적이다.

지방자치체가 타 행정 구역에 대해 허용하는 과세 면제는 당해 행정 구역이 직접 설립한 공공 부문 법인에 한하며, 그 중에서도 특별 면허 소지자나 연방 또는 주(州)정부의 행정 부처와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81조 지방자치체의 공유지는 양도할 수 없으며 시효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않는다. 공유지에 관한 권리는 오직 본 헌법과 헌법상의 원칙 구현을 위해 반포된 법률들에 의거하여 지방자치체의 조례가 정하는 조건과 절차에 따라 승인되는 경우에만 양도될 수 있다.

지방자치체 내 도시 도심에 위치하는 주인 없는 땅은 지방자치체의 공유지로 하며, 소유권과는 별개로 적법하고 유효하게 인정되는 제3자의 권리는 인정한다. 도시 내의 공지(空地) 역시 공유지가 된다. 단, 원주민 공동체에 귀속되는 땅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여타 공공 토지를 공유지로 전환하는 데 관하여서는 법률로 정한다.

제182조 법정(法定)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체장이 주재하고 지방의회 의원들과 동(洞) 단위 평의회장들(Chairpersons of Parish Boards), 주민 조직과 여타 조직화된 사회 집단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지역 공공 정책 계획 평의회(the Local Public Policy Planning Council)를 설치한다.

제183조 주(州)와 지방자치체는 다음과 같은 일에는 권한이 없다.

(1) 세관을 창설하거나 국내의 물품들에 대해 수입·수출·통관세를 부과하는 일, 또는 국가의 권능이 미치는 재정수입원에 대해 과세하는 일

(2) 소비재가 관할권 내 시장에서 거래되기도 전에 당해 물품에 대해 과세하는 일

(3) 관할권 밖에서 생산된 물자의 소비를 금지시키거나, 그에 대한 세금을 관할권 내에서 생산된 물자와 차별하여 부과하는 일.

농업, 축산업, 어업, 임업 생산에 대해서는 주(州)와 지방자치체 양쪽 모두 오직 국법(國法)이 허용하는 방식과 한도 내에서만 과세 권한을 가진다.

제184조 주(州)와 지방자치체들은 조직화된 주민 공동체와 집단들이 관리하면서 추진·운영 능력을 입증한 서비스들에 관하여 그 권한을 이전시켜 분권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법률에 의거하여 개방적이고 유연한 시스템을 마련한다.

(1) 보건, 교육, 주택, 스포츠, 문화, 사회 프로그램, 환경, 공업지구 유지·관리, 도시 지역의 유지·관리, 주민 안전 예방과 보호, 공공 사업 공사, 여타 공공 서비스의 제공 등 분야의 서비스를 이양한다. 이를 위해 상호 의존, 조정, 협력, 책임 분담의 원칙에 기초하는 내용들로 구성된 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 공공 사업, 사회 프로그램, 공공 서비스 등에 대한 시민과 공동체들의 참여는 주민 단체와 NGO를 통하며, 당해 사업에 관하여 투자 계획의 수립, 집행에서의 시민 참여, 진행 상황에 대한 평가·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주(州) 또는 지방자치체의 소관 관청에 당해 사업에 관한 투자 제안서를 정식으로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는 협동조합, 저축금고, 상호신용금고, 그 외 여타 단체 등 사회적 경제 활동을 장려한다.

(4) 공공 부문 기업체 운영에 대한 노동자들과 그 공동체들의 참여는 자주경영 또는 공동경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5)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복지를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공동체 서비스 분야에 종사할 기업, 조직,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며, 그 전제 조건으로서 이들이 자기 관련 분야에 기여할 만한 수단과 능력, 정책 구상 등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토록 한다.

(6) 공공 행정 분야에서 주(州) 정부와 지방자치체 정부의 책임 분담 원칙을 보장하고, 주(州)와 지방자치체 공공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감독에서 자주경영·공동경영 과정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동(洞), 구(區), 공동체, 마을 수준의 분권(分權) 기관들을 새로이 창설한다.

(7) 각종 수형(受刑) 시설과의 결연 활동에 공동체들이 참여함으로써 수형자들과 일반 주민 간에 좀더 밀접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절 연방 행정조정위원회

제185조 연방 행정조정위원회(the Federal Council on Government)는 주(州)와 지방자치체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이전과

분권화 과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정책과 조치를 입안·조정하는 기관으로, 행정부통령(Executive Vice President)이 주재하며, 국가 행정 부처 각료들과 각 주(州) 주지사들, 각 주(州)와 법정(法定) 사회 단체에서 각각 1인씩 파견하는 대표들로 구성된다.

연방 행정조정위원회는 산하에 행정부통령과 각료 2인, 주지사 3인, 지방자치체장 3인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설치하며, 지역 균형 발전 증진·개발 계획 정책과 관련된 지역 주체들간의 업무협조와 보완, 특히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 지역이나 공동체에 대한 공공 사업과 공공서비스 지원 등에 소요되는 공공투자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간 보상기금(the Interterritorial Compensation Fund)을 부속기관으로 가진다. 연방 행정조정위원회는 지역 불균형 해소에 근거하여, 매년 지역간 보상기금에 할당될 재원과 그 재원이 쓰일 우선 투자 대상을 논의하여 승인한다.

제5장 국가 공공 기관

ORGANIZATION OF NATIONAL PUBLIC AUTHORITY

제1절 입법 기관

제1부 일반 규정

제186조 국회(the National Assembly)는 연방의 각 자치체에서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로 선출되는 대표들로 구성되며, 그 선거구는 국가 총인구의 1.1퍼센트를 기본으로 하여 획정한다.⁹ 여기에 연방 자치체별로 각각 3인씩의 대표를 추가로 선출한다. 공화국 소속 원주민 자치체들 역시 선거법과 그들 고유의 전통과 관습이 반영된 대표 선출 규정에 따라 3인씩의 대표를 선출한다. 이들 대표들마다 각각 1인씩 동일한 방식에 의해 선출된 예비 후보를 둔다.

제187조 의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국가적 사안과 여러 국가 공권력 기관의 임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입법한다.
- (2) 본 헌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헌법의 개정과 수정을 제안한다.
- (3) 본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정부와 행정 기관에 대한 감독 기능을 행한다. 감독 업무 중 입수된 증거와 증언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거 가치(probative value)를 가진다.
- (4) 소관 사안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참

여를 조직하고 증진한다.

- (5) 사면(赦免)을 명한다.
- (6) 국가 예산과 과세 제도·공공 채권(債權) 관련 법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승인한다.
- (7) 추가 예산의 지출을 승인한다.
- (8) 행정부가 법정 임기 첫 해의 3/4분기에 제출하는 국가 사회·경제 발전 계획에 대하여 일반 방침을 승인한다.
- (9) 법률이 정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부가 체결하는 국익 관련 계약을 승인한다. 지방자치체, 주(州), 국가 공익 기관이 외국이나 외국의 공식 기관 또는 재외 베네수엘라 법인들과 맺는 계약에 관하여 인가한다.
- (10) 행정부통령(the Executive Vice-President)과 정부 부처 장관들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한다. 불신임안은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일이 경과한 후부터 표결 토의에 부처지며, 재적 의원 3/5의 찬성이 있는 경우 결정 효력을 가지며 그에 따라 행정부통령 또는 당해 장관은 해임된다.
- (11) 베네수엘라 군대의 해외 작전 또는 외국 군대의 베네수엘라 영내 작전을 승인한다.
- (12) 국가 소유 부동산 중 법률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비공익성 부동산에 대한 행정부의 처분을 승인한다.

⁹ 선거구당 1인씩 선출한다고 함.

- (13)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받는 직책, 서훈 또는 보수에 대하여 승인한다.
- (14) 공화국 법무총장(the General Attorney)과 해외 대표부·공관장의 임명을 승인한다.
- (15) 공화국에 뛰어난 공을 세워 베네수엘라를 빛낸 사람들에 대하여 사후 25년이 경과한 후에 국가 명예의 전당(the National Pantheon)에 모셔 기리는 영예를 수여한다. 수여 대상자는 대통령 또는 전체 주지사의 2/3 또는 국립대학 총장 전원의 추천을 받아 결정한다.
- (16) 주(州)들의 이익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감독한다.
- (17) 대통령이 연속 5일 이상 국의 체제를 필요로 하는 출국을 할 경우 이를 승인한다.
- (18) 헌행 헌법이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행정부가 맺는 모든 국제 조약 및 협정에 대하여 법률로써 승인한다.
- (19) 내부 규칙을 제정하고 그에 의거한 징계 규정을 적용한다.
- (20) 의원의 자격 유지와 자격 상실에 대하여 논하고 확인한다. 의원의 일시적인 자격 정지는 출석 의원 2/3의 찬성이 있어야만 결정된다.
- (21) 자체의 안전과 경호 체계를 조직한다.
- (22) 국가 재정 능력 범위 안에서 자체 지출 경비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한다.
- (23) 내부 조직의 관리 행정과 업무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결의하고 집행한다.
- (24) 그 외 본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여타 사안.

제188조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출생과 함께 선천적으로 베네수엘라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고 베네수엘라 영토 내에 15년 이상 거주한 자.
- (2) 21세 이상인 자.
- (3) 선거일 이전 4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해 온 자.

제189조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다.

- (1) 공화국의 대통령, 행정부통령, 정부 부처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자치권을 가진 독립 기관과 국영기업의 장 등의 직위에 있었던 자로서 해당 직책에서 물러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자.
- (2) 주지사, 주(州) 정부 또는 연방직할 구 정부의 장관 등의 직위에 있었던 자로서 해당 직책에서 완전히 물러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자.
- (3) 지방 자치체, 주(州), 연방 정부 공무원이거나 자치권을 가진 독립 기관과 국영기업의 직원인 자로서 자신의 업무 관할 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단, 임시직, 사회복지 보조직, 교직, 학문 연구직 등의 종사자는 예외로 한다.

그 외 공무원과 관련된 피선거권 부적격 사항은 관련 기본법을 통해 정한다.

제190조 국회의원은 공공 부문 법인과 계약을 맺는 기업의 소유주나 경영인 또는 임원이 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계약 관계로부터 일체의 사적 이득을 취

하지 않는다. 재정(財政)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의견 불일치로 논쟁이 일어나는 경우, 쟁점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국회의원은 당해 사안과 관련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1조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내놓지 않고는 공직에 임용되거나 공직을 유지할 수 없다. 단 교직, 학문 연구직, 임시직, 사회복지 보조직 등에 한 해 상근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連任)으로 3선까지만 가능하다.

제2부 국회의 조직

제193조 국회는 일반·특별 상임위원회를 둔다. 상임위원회는 여러 국무(國務)분야별로 구성하며 위원은 최대 15명으로 한다. 또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조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성격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임위원회의 신설 또는 폐지는 국회 재적 의원 2/3의 찬성 결정한다.

제194조 국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원내(員內)에서, 국회 사무처장 1인과 부처장 1인을 원외(員外)에서 각각 선임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일시 또는 상시 결원 보충 방식에 관하여서는 내부 규정에 따른다.

제195조 국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국회의장과 부의장·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들로 구성되는 위임위원회(Delegated Committee)가 활동을 맡는다.

제196조 위임위원회의 권능은 다음과 같다.

- (1) 중대 사안 발생 시, 국회의 특별 회기를 소집한다.
- (2) 대통령의 출국을 승인한다.
- (3) 정부의 추가 예산안을 승인한다.
- (4)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임시 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한다.
- (5) 국회에 부여된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 (6) 긴급 사태 발생이 확인될 시, 공공 서비스의 신설, 변경, 중단 등에 관한 대통령의 명령을 재적 의원 2/3의 찬성으로 승인한다.
- (7) 그 외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하는 여타 사안

제3부 국회의원

제197조 국회의원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전임하여 일할 의무가 있으며, 선거구 주민들과 항상 접촉하여 의견과 제안에 귀 기울이고, 그에 대한 의원 개인과 국회 차원의 활동 경과를 지속적으로 알려줄 의무가 있다. 매년 자신이 선출된 관할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의정 활동 보고를 하며, 본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한 국민 소환에 처해질 수 있다.

제198조 소환된 국회의원은 어떠한 선출직 공직이든 소환 이후 1회 임기 동안에는 출마할 수 없다.

제199조 : 국회의원이 직무 수행 중 피력한 표결과 의견은 면책되며, 국회의원은 오직 유권자와 국회에 대하여 헌법과 국회 내규가 정한 바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00조 국회의원은 그 임기의 시작부터 종료 또는 사임 시까지 불체포특권을 누린다. 국회의원에게 걸린 모든 범죄 혐의는 오직 대법원의 소관으로서 내밀하게 다루어지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와 기소 역시 대법원만이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명할 수 있다. 현행 범인인 경우, 소관 수사 당국은 당해 국회의원을 가택에 연금하고, 즉시 그 사실을 대법원에 알려야 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침범한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고 처벌된다.

제201조 국회의원은 국민과 주(州)를 일괄하는 대표자로서 어느 누구의 명령 또는 지시도 받지 아니하며 오직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한다. 국회에서의 표결은 개인의 판단에 따른다.

제4부 법률 제정

제202조 법률은 입법 회기 중에 국회에 의해 제정되는 법령(act)을 말한다. 특정 분야에 관한 일련의 규범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법률들은 법전(code)이라고도 부른다.

제203조 본 헌법에 의해 제안되거나, 공

권력의 조직화 또는 헌법상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제정되는 법률, 또는 타 법률에 기준틀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률 등을 기본법이라 한다.

기본법 제정을 위해 제출되는 모든 법안은 본 헌법에서 특별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의에 부쳐지기 전에 반드시 출석 의원 2/3의 찬성에 의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법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의결정족수를 적용한다.

국회가 기본법으로 의결한 법률들은 공포(公布)에 앞서 법률 지위상의 합헌성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대법원 헌법재판부로 회부된다. 헌법재판부의 판결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내려지며, 헌법재판부가 당해 법률에 대하여 부적합 판결을 내리는 경우 동 법률은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대통령에게 위임된 사안들에 관하여 그에 필요한 지침, 목적, 기본틀을 정하기 위해 국회 재적의원 3/5의 찬성으로 제정되는 것을 수권법(授權法, Enabling laws)이라 하며 법률에 준하는 지위와 효력을 가진다. 수권법(Enabling laws)에는 시행 기간을 설정한다.

제204조 법률 발의는 다음 각항에 의한다.

- (1) 대통령
- (2) 국회 위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 (3) 3인 이상의 국회의원
- (4) 사법 절차와 조직에 관련된 법률일 경우, 대법원
- (5) 시민권력 기관과 관련된 법률일 경우, 시민권력

(6) 선거 관련 법률일 경우, 선거성(選舉省, Electoral Power)

(7) 상시 선거인 명부 등록 인원의 최소 0.1퍼센트에 해당하는 유권자

(8) 주(州) 관련 법률일 경우, 각 주(州) 입법회의

제205조 전 조(條)의 유권자 발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법률안의 국회 심의는 법안 접수 후 처음 열리는 정기 회기가 넘어가기 전에 개시되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법안에 대한 심의가 개시되지 않을 시, 동 법안은 법률에 따라 찬반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제206조 : 각 주(州)에서 주(州) 관련 사안으로 판단하여 입법 상정하는 법률안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당해 주(州)의 입법회의를 통해 국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상기 법안과 관련하여 주(州) 입법회의가 시민사회와 여타 기관들과 벌이는 협의 절차에 관하여서는 법률로 정한다.

제207조 모든 법안은 법률로 제정되기 이전에 각기 다른 날짜에 두 차례에 걸쳐 본 헌법과 관련 법규가 정한 절차에 따른 심사를 거친다. 법안 통과 이후에는 국회의장이 법률의 제정을 선언한다.

제208조 1차 심의에서는 법안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법 취지와 법안의 대상, 범위, 실행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법률 조항에 대해 토의한다. 1차 심사를 통과한 법안은 당해 법안과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다수의 상임위원회와 연관된 법안인 경우에는 합동위원회를 선정하여 법안 심사와 보고서 제출을 일임한다. 법안 심사를 맡은 위원회들은 연속하여 30일 이내에 동 법안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209조 당해 상임위원회의 보고를 거친 후, 법안에 대한 2차 심의가 개시되며, 이 때에는 각 조항별로 축조심의(逐條審議)한다. 수정 없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법률로서 제정된다,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상임위원회로 환부되며 당해 상임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수정 사항들이 반영된 수정안을 제출한다.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 독회(讀會, reading)에 회부되어 이견이 제기되는 조항과 그 관련 조항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과반수 찬성 표결로 의결한다. 수정안 의결 절차가 끝나면 국회의장이 동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었음을 선언한다.

제210조 회기 말에 걸려 미결된 법안의 심의는 차기 정기 회기 또는 특별 회기에서 계속한다.

제211조 법안 심의와 통과 기간 동안, 국회나 상임위원회는 여러 관련 국가 기관과 시민·사회 단체들과 당해 법안에 관해 협의하며 의견을 청취한다. 심사 중인 법안에 대하여 국회 내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발언할 권리를 가지는 주체들은 다음과 같다. 행정부를 대표하

여 각 부처 장관들 ; 사법부를 대표하여 대법원이 지명한 대법원 판사 ; 국가 윤리위원회(the Republican Ethic Council)가 지명한 시민권력 대표 ; 선거 관리 당국의 대표 ; 각 주(州)들, 이 경우에는 각 주 입법회의 대표자를 통한 다 ; 조직화된 공동체 집단의 대표.

제212조 모든 법률의 본문 앞머리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은 이에 공포한다”는 말로 시작하도록 한다.

제213조 국회에서 제정이 선언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승인된 자구(字句)대로 최종안 2부를 작성한다. 2부 모두에 국회의장, 부의장 2인, 국회 사무처장이 서명하고 법안의 최종 통과 일자를 적시한다. 국회의장은 그 중 1부를 대통령에게 이송하여 공포토록 한다.

제214조 대통령은 이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공포한다. 이 기간 동안에 대통령은 당해 법률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수정 또는 폐기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 사유를 첨부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에 대하여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표결로 의결한 후, 의결된 법률안을 대통령에게 이송하여 공포토록 한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은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접수 후 5일 이내에 반드시 공포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 판단하는 경우

에는 법률 공포를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처음 10일간의 기간 내에 대법원 헌법재판부에 위헌 여부 심판을 요청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요청을 접수 한 후 15일 이내에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이 위헌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주어진 기간 내에 판결을 내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대법원 결정이 있은 후 5일 이내에 또는 대법원 심사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당해 법률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215조 법률의 공포는 국가 공식 관보에 “이행” 명령을 게재함으로써 이뤄진다.

제216조 대통령이 상기 기간과 형식에 따라 법률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과 부의장 2인이 법률 공포를 속행하며, 이렇게 법률이 공포되었다고 해서 법률 공포를 태만히 한 대통령의 책임이 상쇄되지는 않는다.

제217조 국제 조약과 협정, 협약에 대한 승인을 공포하는 시점은 행정부가 국제 관례와 공화국의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에 맡긴다.

제218조 법률들은 본 헌법이 정한 예외를 들지 않는 한, 다른 법률에 의해 폐지되거나 국민투표에 의해 철폐될 수 있다. 또한 전체 또는 부분 개정이 있을 수 있다. 부분 개정된 법률은 개정 통과된 내용을 별도 부기하지 않고 하나의 본문 안에 반영시켜 공포한다.

제5부 의사 절차

제219조 국회의 1차 정기 입법 회기는 사전 통지 없이 매년 1월 5일 또는 공휴일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후 날짜 중 가장 가까운 날에 시작하여 8월 15일까지 계속한다. 2차 정기 회기는 9월 15일 또는 이후 가장 가까운 날에 시작하여 12월 15일에 종료한다.

제220조 국회는 회의 소집 요구서에 명시된 의제와 관련 사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 회기를 열어 회합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긴급 사안 발생 시 재적 의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 특별 회기를 열 수 있다.

제221조 국회의 의사(議事)와 회기,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 등에 관한 요건과 절차는 국회 내규에 따라 결정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이하가 될 수 없다.

제222조 국회는 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와 조사, 동의와 승인 등의 기제를 통해, 또한 법률과 국회 내규의 관련 조항이 보장하는 기제들을 통해, 국가 운영에 관하여 견제·감독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국회는 이 같은 견제·감독 직무 수행 중에 공무원들의 정치적 책임 소재를 밝혀내고 시민권력에 그에 합당한 처벌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제223조 국회 또는 그 상임위원회는 국

회 내규에 의거하여 자신의 소관 사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사를 지휘할 권한을 가진다. 모든 공무원은 법률이 정한 강제 규정에 따라 상기 위원회 앞에 출석하여 각 위원회들이 소기의 직무 완수를 위해 요구하는 모든 정보와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개별 시민에게도 적용되며, 이것이 본 헌법에 상술된 권리와 보장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제224조 국회의 조사권 행사는 여타 국가 공공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들은 국회와 상임위원회가 위촉한 증언과 증거를 확보할 의무를 진다.

제2절 행정부

제1부 대통령

제225조 행정부의 권능은 대통령, 부통령, 장관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기타 공무원에 의해 수행된다.

제226조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元帥)이자 행정부의 대표이며 군사 행동(the Action of the Government)의 최종 지휘자다.

제227조 대통령에 선출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 태생으로 기타 국적을 갖지 않은 자여야 하며, 30세 이상의 성인(俗人)이어야 하며, 확정 판결(final

judgment)에 의한 형벌을 받은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밖에 헌법이 규정하는 다른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228조 대통령의 선출은 법률에 따라 보통·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이루어진다. 대통령 후보가 유효 투표(the valid votes)의 과반수(majority)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에 선출된 것으로 공포된다.

제229조 후보 등록 시 또는 등록일과 선거일 사이의 기간에 부통령직에 있거나 각료, 주(州)지사, 시장직에 있었던 사람은 대통령에 선출될 수 없다.

제230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다. 한 번에 한하여 연임 될 수 있다.

제231조 선출된 후보는 헌법적 임기의 첫째 1월 10일 의회에서 선서를 통해 대통령직에 취임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대통령이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할 수 없다면 대법원 앞에서 하게 된다.

제232조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하며 자신의 직책에 따른 고유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공화국의 독립(independence), 통합(integrity), 영토 주권(sovcreignty)과 안보(defense) 등 베네수엘라 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계엄령이 선포되는 경우에도 대통령 자신, 부통령, 각료의 책임의 원칙은 바꾸지 못한다.

제233조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영구(永久) 해임 될 수 있다: 사망, 사임,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에 의해 임명된 의사 위원회에 의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항구(恒久的) 불능의 인정, 의회의 승인에 의한 해임, 대통령 스스로의 직무에 대한 일방적 포기, 국민투표에 따른 국민 소환 등.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이와 같은 공석(空席)이 발생했을 때는 30일 이내에 보통·직접·비밀 선거에 의거한 재선을 치르도록 한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에는 국회의장이 대통령직을 대리하도록 한다. 대통령의 공석이 헌법상 임기의 첫 4년 이내에 발생했을 때에도 보통·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30일 이내에 재선을 치르도록 한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리하도록 한다.

전기(前期)의 경우, 새로운 대통령은 헌법상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된다. 절대적 공석이 헌법상 임기의 마지막 2년 동안에 발생한다면 부통령이 그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제234조 대통령의 일시적 공석(Temporary Unavailability)은 최장 90일까지 부통령에 의해 대행된다. 이 기간은 의회에 의해 90일 더 연장될 수 있다. 만약 일시적 공석이 추가적으로 연장된 90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면 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직을 절대적 공석(Permanent Unavailability)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235조 대통령이 연속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베네수엘라 영토를 떠나게 될 경우에는 의회 또는 위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부 대통령의 권능

제236조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헌법과 법률을 스스로 이행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행케 한다.
- (2) 정부 행정권을 지휘한다.
- (3) 부통령과 각료를 임명한다.
- (4) 공화국의 대외 관계를 통제하고 국제 조약, 협약, 협정들을 체결하거나 승인한다.
- (5) 국군 총사령관(Commander in Chief)으로서 국군을 지휘하며 국군의 최고 지위를 행사하며 그 지휘부를 임명한다.
- (6) 국군 최고 사령관의 권한을 행사하고 대령, 함장 이상 급의 지휘관을 승진시키거나 적합한 직책에 임명한다.
- (7) 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에 규정된 경우에 따라 권리 보장의 제한을 공포한다.
- (8) 위임 법률의 사전 동의에 의해 법률과 동등한 법령을 공포한다.
- (9) 국회의 특별 회의를 소집한다.
- (10) 법률의 전체 정신이나 목적, 사유를 변경함이 없이 법률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응용할 수 있다.
- (11) 국가의 공공 재정을 집행한다.
- (12) 국채(國債)를 발행할 수 있다.
- (13) 국회 또는 위임위원회의 사전 동의와 함께 추가 경정 예산을 공포할 수

있다.
(14)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이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5) 국회 또는 위임위원회의 사전 동의와 함께 검찰총장(the Attorney-General of the Republic)과 해외 공관장(the heads of the permanent diplomatic missions)을 임명한다.

(16)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任免)한다.

(17) 의회에 직접 또는 부통령을 통해서 보고(Reports) 또는 특별 전언(Special Message)을 발표한다.

(18)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국가 발전 계획을 만들고 그 집행을 지휘한다.

(19) 사면권(赦免權)을 부여한다.

(20) 관련 법률의 원칙과 방침에 따라, 각료 회의(the Cabinet Ministers)의 조직과 기능을 결정하고 각 부처와 행정부서를 구성하는 기관의 숫자, 조직, 권한을 정의한다.

(21) 헌법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22) 헌법에 규정하는 조건 아래 권리를 위임한다.

(23) 국가 안보회의를 소집하고 통솔한다.

(24) 그 밖에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바를 집행한다.

위 조항 중 (7),(8),(9),(10),(12),(13),(14),(18),(20),(21),(22)번 조항에 열거된 권한은 법률에 의해 대통령이 각료회의를 통해 부여받은 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의 행위에 있어 (3), (5)번 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통령과 해당 각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237조 매년 국회 정기 회의 개시 이후 10일 이내에 대통령은 의회에 전년도에 있었던 자신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 행정 등 각 사항에 대한 결산을 개인적인 연두교서(年頭敎書)로 보내야 한다.

제3부 부통령

제238조 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首長)으로서 대통령 바로 아래의 직접적 협력 기관으로 대통령의 측근이다. 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로, 대통령과 친인척 관계가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제239조 부통령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대통령이 정부 행동을 지휘하는데 협력한다.
- (2)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방 정부를 조정한다.
- (3) 대통령에게 각료의 임면(任免)을 제청한다.
- (4) 대통령의 사전 동의에 따라 각료 회의(the Cabinet)를 주재한다.
- (5)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를 조정한다.
- (6) 정부 연방위원회(Federal Government Council)를 주재한다.
- (7) 법률에 따라, 다른 부서에 권한이 없는 공무원을 임명한다.

- (8) 대통령의 임시 공석을 대행한다.
- (9) 공화국의 대통령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한다.
- (10) 기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일을 수행한다.

제240조 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가 있을 시, 의회 재적 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부통령은 자동으로 해임된다. 해임된 부통령은 대통령 잔여 임기 동안 부통령, 각료에 임명될 수 없다. 국회 탄핵 동의안 통과에 의한 부통령 해임이 동일 임기 내에 3번 이상 반복되면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의회가 해산되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국회는 자신들의 임기 마지막 해에는 해산될 수 없다.

제241조 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

제4부 각료와 각료회의

제242조 각료는 대통령의 직접적 복속 기관이며 대통령, 부통령과 함께 모여 각료 회의(the Cabinet of Ministers)를 구성한다. 대통령은 각료 회의를 주재한다. 자신이 불참할 경우에는 부통령으로 하여금 대신 주재하게 할 수 있다. 회의 때 결정된 사안은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만 유효하다. 각료 회의의 결정에 대해서는 함께한

부통령, 각료들 연대적 책임을 진다. 단, 그 결정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표를 던진 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3조 대통령은 각료를 임명할 수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관련 분야에 대해 대통령과 부통령에 조언하고 각료 회의에 참석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244조 헌법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베네수엘라 국적을 가지고 25세 이상이 된 사람만이 각료가 될 수 있다. 각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 그리고 법률에 따라 매년 연초(年初) 60일 이내에 의회에 자신의 전년도 행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45조 각료들은 의회와 각 상임위에서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각료는 의회의 심의에도 참여할 수 있지만 이때 투표권은 갖지 않는다.

제246조 의회 재적 의원 3/5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각료 해임 건의안의 승인이 결정되면 해당 각료는 해임된다. 그렇게 해임된 각료는 대통령 잔여 임기 동안 각료와 부통령에 임명될 수 없다.

제5부 검찰 총장(General Attorney of the Republic)

제247조 검찰청(the Office of the General Attorney)은 사법적 또는 사법외적으로

공화국의 재산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언을 하고 법을 수호하며 공화국을 대표한다. 검찰청은 또한 국가의 공공 이익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위한 자문(諮問)에 응해야하며 관련 법률에 의해 그 조직과 권한, 기능이 규정된다.

제248조 검찰총장은 관련 법률이 정한 기타 공무원의 협력을 받아 검찰청의 지휘를 담당한다.

제249조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대법관의 그것과 동일하며, 의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제250조 검찰총장은 투표권 없이 발언 권한을 가지고 각료 회의에 참석한다.

제6부 국가위원회

제251조 국가위원회(the Council of State)는 정부와 연방 행정부의 최고 자문 기관이다. 국가위원회의 역할은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필요로 할 경우 국가적 관심사에 대한 정책을 추천하는 것이다. 그 권한과 기능은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제252조 국가위원회는 부통령이 주재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5인, 의회가 임명한 대표 1인, 대법원이 임명한 1인, 전국 주(州)지사들의 대표 주지사 1인으로 이뤄진다.

제3절 사법부와 사법 체계

제1부 총칙

제253조 사법을 한정(限定)하는 권력은 시민에게서 나오며 사법의 실행은 법률의 권위에 의해 공화국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사법 기관은 법률이 정한 절차를 통해 자기 권한 내의 사안(cases)과 사정(matters)을 처리하고 자신의 판결을 집행하는 권능을 갖는다.

사법 체계는 대법원과 법률이 인정한 모든 법정, 검찰, 인권위원회, 형사 수사 기관, 사법부 공무원, 교정 체계(the penitentiary system), 대체 사법 수단, 법률에 따라 사법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들, 권한이 인정된 변호사 등에 의해 구성된다.

제254조 사법부는 독립적인 기관이며 대법원은 기능적, 재정적, 행정적 자율권을 향유한다. 그리하여 사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법 체계에는 매년 국가 예산 가운데 통상 예산의 2퍼센트 이상에 상응하는 예산이 주어진다. 이 몫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가감(加減)되지 않는다. 사법부는 자신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 관세와 기타 어떠한 지불도 요구할 수 없다.

제255조 사법부의 임용(任用)과 판사의 승진은 참가자의 능력과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공개 경쟁(public competition)을 통해 이뤄지며 법률이 정한 바에 따

라 범조계의 심사위원단에 의해 선발된다. 판사의 임명과 선서는 대법원에 그 권한이 있다. 법률은 판사의 선발 절차와 임명에 있어 시민의 참여권을 보장한다. 판사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만 해임되거나 정직(停職)될 수 있다.

법률은 판사의 전문화를 장려하고 대학은 이 목적에 협력한다. 대학은 법과 대학의 교과 과정(law schools' pensas)을 해당 사법의 특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판사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체(遲延) 정당하지 못한 실수, 지체(delay)나 과실, 소송 절차의 실질적 부주의, 불공정한 판결, 편파성, 배임죄(背任罪)와 공범의 범죄 등에 대해 법률이 정한 조항에 따라 개인적 책임을 진다.

제256조 공명정대(公明正大)하고 독립적인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 판사와 기타 판사들, 검찰청의 검사, 인권위원회 위원 등은 임명일로부터 직책을 다할 때까지 투표 행위를 제한하고 정당 활동, 노조, 직업조합(professional association) 또는 이와 비슷한 성격의 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자신의 공적 임무와 상충하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적 활동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연루될 수 없다. 또한, 교직(敎職)을 제외한 다른 어떤 공적 기능도 수행할 수 없다.

판사들은 자신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제257조 재판은 정의의 실현을 위한 가장 근본적 토대다. 소송 관련 법률은 법적 절차의 단순화, 통일화와 효율성을 지향하며 신속하고 구술적이며(oral) 공개적인 절차를 채택한다. 사소한 형식의 생각이 정의의 희생을 불러와서는 아니된다.

제258조 사법부의 치안 판사(Justice of Peace) 조직은 법률에 의해 편제된다. 치안 판사들은 법에 의해 직접, 보통, 비밀 선거로 선출된다.

법률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조정(arbitration), 화해(conciliation), 중개(mediation)와 기타 모든 대체적 수단의 이용을 장려한다.

제259조 : 소송행정법(contentious administrative law proceedings)에 대한 권능은 대법원과 법률이 인정하는 기타 법원에 있다. 소송행정법을 관장하는 기관은 권력의 탈선을 포함, 기본권을 해치는 일반적 또는 개인적 행정 행위를 무효화시키고 행정의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와 피해를 보상하며 공공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배상금 지불을 명령하고 행정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 받은 법률적 상황의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것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260조 원주민의 합법적인 당국(Legitimate Authority)은 그들 자신의 규범과 절차에 따라, 그리고 헌법과 법률·공공 질서에 반(反)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전통

에 기반을 두어 오직 그들 구성원에게만 권한을 갖는 관습적 사법 심판을 적용할 수 있다. 법률은 이 특별한 사법 권한과 전국적인 사법 체계와의 적정 선을 조정한다.

제261조 군사 형법 재판은 사법부의 중요한 일부이며 해당 판사들은 공개 채용한다. 그 권한과 조직의 범위, 시행 방식 등은 고발 체계와 군사 재판 법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일반 범죄, 인권 침해, 인류에 반(反)하는 범죄 등은 일반 법정에서 심판한다. 군사 법정의 권한은 군사적 성격의 범죄에만 국한된다.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별한 형태의 법정의 권한과 조직, 그리고 기능에 대한 것들은 법률에 따라 규정한다.

제2부 대법원

제262조 대법원(The Supreme Tribunal of Justice)은 전원합의회(Plenary Session)와 헌법재판부, 정치행정부, 선거재판부, 민사재판부, 형사재판부, 그리고 사회재판부로 이뤄지며 그 조직과 권한은 타당한 관련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사회재판부는 농업, 노동, 미성년자에 대한 사건을 다룬다.

제263조 대법원의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하다.

- (1) 출생에 의한 베네수엘라 국적을 가진 자
- (2) 명예가 인정되는 시민

(3) 능력이 인정된 법관으로 주위의 평판이 좋고 최소 15년 이상 변호사직을 수행해 온 사람으로, 법학 대학원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최소 15년 이상 법학 교수직에 있었던 자, 정교수직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해당 전공의 재판 분야에서 15년 이상 부장판사로 있었던 자 또는 그 기능 수행에 있어 권위가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4) 법률이 정하는 기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264조 대법원의 대법관은 단임으로 12년 동안 재직할 수 있다. 그 선발 절차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누구나 자발적으로 또는 사법 활동과 연관된 단체에 의해 사법 인선위원회에 후보자로 신청 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공동체의 의견을 듣고 나서 시민권력에 사전 선발을 제청하게 된다. 시민권력을 통한 두 번의 사전 선발을 거친 후 후보 명단이 의회로 넘어가면 의회에서 최종 선발을 한다.

제265조 시민들은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사법 인선위원회나 의회에 후보자들 모두에 대해서 근거 있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민권력에 의해 이미 치명적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된 후보자의 경우에 대법관은 당사자가 사전 반론을 하도록 한 뒤에 재적의원 2/3의 동의를 얻어 의회를 통해 해임한다.

제266조 : 대법원의 권능은 다음과 같다.

- (1) 이 헌법의 제8장('이 헌법의 보호')에 따라 헌법적 사법권을 행사한다.
- (2) 대통령과 그 대행자에 대한 탄핵재판에 대한 개정(開政) 여부를 선언한다. 개정의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와 함께 기소에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재판을 진행시킨다.
- (3) 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각료, 검찰총장, 검사, 감사원장, 인권위원장, 주(州)지사, 장교, 장군, 제독, 외교공관장 등에 대한 탄핵 재판의 개정 여부를 선언한다. 개정의 경우에는 검찰총장 또는 다른 대리인에 사건을 회부하여 기소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심리하게 한다. 범죄 요건이 구성되면 기소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재판을 진행시킨다.
- (4) 공화국의 어느 주(州), 시나 다른 기관 사이에 벌어진 행정적 불일치를 조정한다. 같은 주 내에 있는 다른 시들 사이의 불일치가 아닌 경우, 법률에 의해 타 법원으로 그 재판 권한을 이양한다.
- (5) 행정 부서의 규정이나 개인적 또는 일반적 행정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임을 선언할 수 있다.
- (6)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법률 문서의 내용과 그 범위에 대한 해석의 상고(上告)에 대해 확인 판결을 내릴 권한이 있다.
- (7) 상위의 다른 법정이 없을 경우엔 보통 법정, 특별 법정을 마련하고 모든 법정 사이의 권한 분쟁을 해결한다.
- (8) 상고심을 확인한다.
- (9) 그 외에 법률이 정한 사안에 대해 권능을 가진다.

(1)항에 규정된 권한은 헌법재판부 소관이며 (2), (3)항의 것은 전원합의부(Plenary Session), (4),(5)항의 것은 정치행정부, 기타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 부에 배정된다.

제3부 사법부와 사법 행정

제267조 대법원은 사법부의 지휘, 행정과 공화국 각 급(級) 법원, 인권위원회의 감독, 통제 등을 포함한 권능을 가진다. 또한 자신의 예산과 사법부 예산의 작성, 집행 등을 담당한다. 사법부의 규율은 법률이 정하는 징계 법정(Disciplinary Courts)이 관할한다. 대법관과 판사의 규율 체계는 의회가 임명하는 베네수엘라 판사의 윤리 규범에 근거한다. 징계 절차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과 규정에 따라 공개적이고 구술적(oral)이며 신속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권한의 행사를 위해 대법원은 지방사무소와 함께 법관 집행위원회(Executive Department of the Judiciary)를 함께 둔다.

제268조 상기 법률 체계의 효율성과 인권위원의 경력상 이익(career benefit)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의 조직, 자구성, 기능, 규율과 자격 등은 법률에 의해 규정한다.

제269조 사법부의 행정적, 법률적 분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법 관할 구역의 조직과 지방법원의 창설과 권한은 법률에 의해 규정한다.

제270조 사법인선위원회(The Committee on Judicial Nominations)는 대법관 후보의 선출을 위한 사법부의 자문 기구다. 또한 징계 법원 판사의 선출을 위한 사법적 선거인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사법인선위원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의 각계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제271조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국가의 공공 재산이나 인권에 대해 행해진 자본 횡령(capital delegitimization), 마약 거래, 국제 조직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범인의 인도(引渡)를 거부할 수 없다. 인권이나 공공 재산, 또는 마약 불법 거래에 대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사법 행위에는 시효(時效)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공공 재산이나 마약 거래에 대한 범죄와 연관되는 활동에서 얻어진 재산은 법원의 사전(事前) 결정에 따라 몰수한다. 전기(前記)의 범죄에 대한 소송은 해당 절차를 존중하면서 공개적, 구술적인 방식으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피고 또는 대리인의 민법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의 재산에 대한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할 시, 이에 적합한 사법적 권위를 인정한다.

제272조 국가는 죄수들의 갱생(更生)과 인권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교도 행정 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교도소의 건립은 물론 노동, 학습, 스포츠, 오락을 위한 시설이 확보되어야 하며 상기 시설은 대학 교육을 받은 전문적인 교도관들의 지도 아래 기능하도록 한다.

덧붙여 민영화의 형태까지 포함하여 주(州) 정부 또는 시 정부의 책임 아래 분권화된 행정으로 관리되며, 일반적으로 개방적 체제와 농업공동체 관리의 형식을 선호한다. 모든 경우에 격리의 성격을 가진 형벌보다는 자유를 박탈하지 않는 형벌의 이행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국가는 출소자의 사회적 복귀를 실현케 할 도움을 주는 필수 기관을 창설하고 자주적 성격과 순수한 기술적 인력만을 갖춘 교도소의 창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절 시민권력

제1부 총칙

제273조 시민권력(Citizen Power)은 민중의 수호자, 검찰총장, 감사원장으로 이뤄진 공화국 윤리위원회(Ethics Council)에 의해 행사된다. 시민권력의 기관은 민중수호청, 검찰, 감사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 기관들의 장(長)은 공화국 윤리위원회에 의해 1년의 임기를 가지며 재선이 가능한 조건으로 임명된다.

시민권력은 독립적 기관이며, 기능적, 재정적, 행정적 자치권을 향유한다. 그런 목적을 위해 일반 국가 예산 가운데 매년 가변적(可變的)인 일정액이 시민권력에 배정된다. 기관의 조직과 기능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274조 시민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공 윤리와 행정적 도덕을 침해하는 사건을 예방, 조사, 처벌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시민권력은 건설한 행정과 공공 재산 사용의 적법성, 모든 국가의 행정 활동에서 준법성의 원칙의 이행과 적용을 감독하고 단결, 자유, 민주, 사회적 책임과 노동 등 시민 정신의 창의적 과정으로서의 교육을 증진한다.

제275조 공화국 윤리위원회의 대표들은 공공 행정 기관, 공무원들에게 그들의 법적 의무 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경고를 무시할 경우에 공화국 윤리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경고에 불순종할 경우, 공화국 윤리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이 속한 기관에 법률이 정한 처벌을 저해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276조 공화국 윤리위원회 의장과 시민권력 기관의 장(長)은 의회 정기 총회 개최 전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의회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모든 보고서는 보통, 특별한 구별 없이 정식 출간하는 것으로 한다.

제277조 공공 행정 부서의 모든 공무원들은 공화국 윤리위원회 대표의 조사에 우선적으로 신속히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법률이 정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윤리위원

회는 그들의 임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법률에 따라 기밀 사항으로 분류된 서류를 포함한 모든 증언과 관련 서류의 제출을 공공 행정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시민권력은 오직 법률에 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비밀 서류에 포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78조 공화국 윤리위원회는 이 헌법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기여하는 조국애, 시민적, 민주적 덕행, 공화국의 전통적 가치와 인권의 존중과 감시에 대한 교육 등 모든 교육적 활동을 증진시킨다.

제279조 공화국 윤리위원회는 사회의 다양한 부문의 대표들로 구성된 시민권력의 선출 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권력 각 기관 장(長) 후보의 3배수를 선출하는 공개적 절차를 거친 후 이들의 명단을 의회에 송부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한다. 의회는 재적 의원 수 2/3 이상의 동의로 30일 이내에 시민권력 기관의 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의회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자를 국민투표에 부친다. 시민권력 선출 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의회는 법률이 정하는 기간 안에 해당 시민권력 기관의 장을 임명한다.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시민권력의 장(長)들은 대법원의 사전 발표와 함께 의회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제2부 민중수호청

제 280조 민중수호청(The People Defender's Office)에서는 정당하고도 광범위한 공동 이익의 수호와 이 헌법과 국제인권 조약에 규정된 권리와 보장의 증진, 수호, 감독의 책임이 있다. 민중수호청은 민중수호자의 지휘와 책임 아래 활동한다. 민중수호자는 한 번의 임기 당 7년 동안 임명된다. 민중수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30세 이상으로, 출생에 의한 베네수엘라 인 국적을 가진 자라야 하며 인권의 분야에서 검증된 능력이 갖추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정직성, 윤리성, 도덕성의 자질을 두루 충족시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민중수호자의 항구적(恒久的), 일시적 결원이 있을 경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의 대행인(代行人)을 정하도록 한다.

제281조 민중수호자의 권능은 다음과 같다.

- (1) 이 헌법이나 국제 조약, 협정, 협약에 기록된 인권이 효율적으로 존중되며 보장되는가를 감독하며, 자발적으로, 혹은 접수된 고발 내역을 통해 상기의 내용을 조사한다.
- (2) 공공 사업이 적절히 기능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공공 행정의 업무 수행 중 벌어진 독단 행위, 권력 남용, 과실 등에 의해 개인의 합법적이며 집합적(collective), 광범위적(diffuse)인 모든 이익과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한다. 개인이 공공 서비스의 수행

시 행해진 손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국가에 요구할 때에는 필요한 행동의 전례를 참고하여 증제한다.

(3) 상기의 조항에 지적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위헌 심판 청구, 보호, 인신 보호(habeas corpus), 정보 보호(habeas data), 기소와 기타 필요한 행동을 취한다.

(4) 인권을 침해한 공무원에 대해 검찰총장이 행동이나 기소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5) 인권 침해 공무원과 관련하여 공화국 윤리위원회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6) 소비 대중과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교정과 처벌 조치의 적용을 관계 당국에 요구한다.

(7) 연방, 주(州), 시 입법 기관에 인권의 점진적 보호를 위한 법안 또는 다른 대안을 제출한다.

(8) 원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권리의 보장과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실천에 옮긴다.

(9) 인권 보호와 보장을 목적으로 국가 기관의 시설과 기관을 방문하고 검열한다.

(10) 최상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권고와 관찰 사항을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의 방어와 보호에 관한 국내외 공·사립 기관과 항상적인 연락망을 발전시킨다.

(11) 인권의 유효한 보호와 중요성의 홍보를 위한 정책을 증진하고 집행한다.

(12)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타 사안을 실행한다.

제282조 민중수호자는 자신의 기능 수행에 있어 불체포 특권(the Immunity)을 누린다. 따라서 자신의 임무 수행과 관련한 수사, 체포,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대법원의 배타적인 보호를 받는다.

제283조 시, 주(州), 연방, 특별 범위의 민중수호청의 조직과 기능에 관련된 사항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민중수호청의 활동은 무보수, 접근성, 신속성, 비관료성의 원칙 아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3부 검찰청

제284조 검찰청(the Office of Public Prosecution)은 검찰총장의 지휘와 책임 아래 있으며 검찰총장은 법률이 인정한 공무원들의 도움으로 직접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다.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대법관이 되기 위한 조건과 동일한 자격이 요구된다. 검찰총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는 7년이다.

제285조 검찰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사법 소송을 통해 공화국이 체결한 국제 조약, 협정, 협약과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보장한다.

(2) 사법행정의 신속성과 올바른 운용, 사전 수사와 적합한 절차를 보장한다.

(3) 능동적, 수동적으로 범행에 관련된 자를 수감하고 범인과 그 공범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현장과 범

행 상황에 대한 형사상 수사를 지휘 명령한다.

(4) 법률이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범죄에 대한 형(刑) 집행 시 어느 일방의 고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의 이름으로 해당 범죄에 대한 형(刑) 집행을 수행한다.

(5) 공무 수행 중 일어난 민법, 노동법, 군법, 형법, 행정법, 규율법적인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해당 공무원을 구속하여 수사한다.

(6)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타 사안을 실행한다.

상기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개인과 다른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권리와 행위의 이행을 저해(沮害)하지 않아야 한다.

제286조 법률은 시, 주(州), 연방 차원에서 검찰의 조직과 기능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며, 검찰청 검사들의 능력, 성실성,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구성원의 임무 실행을 위한 체계를 보장하기 위한 규범을 마련한다.

제4부 감사원

제287조 감사원(the Office of the General Comptroller)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 공공·국가 재산의 통제, 감시, 회계감사와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을 하는 기관이다. 감사원은 또한 기능적, 행정적, 조직적인 자율권을 가지며, 자신의 통

제를 받는 기관과 조직의 감사 기능을 수행한다.

제288조 감사원은 감사원장의 지휘와 책임 아래 있다. 감사원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출생에 의한 베네수엘라 인어야 하고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직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능력과 경험이 증명되어야 한다. 감사원장의 임기는 임기 당 7년으로 한다.

제289조 감사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법률에 따라 공공 수입, 지출, 공공 재산의 통제, 감시, 회계감사를 실행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담당한다. 주(州)와 시 당국을 감사(監事)할 때는 다른 기관에 주어지는 권한을 저해함이 없이 임해야 한다.

(2) 시와 주(州)의 경우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에 주어지는 권한을 저해함이 없이 공공 채무의 통제를 이행한다.

(3) 자신의 통제 아래 있는 공공 부문의 기관, 조직, 범인을 검열하고 회계감사를 실행하며, 세습 재산의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명령한다. 그리고 법률에 따라 대책을 공포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적 처벌을 적용할 수 있다.

(4) 공직 수행 중 알게 된 공공 재산에 대해 저질러진 범죄와 위반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사법적 행동을 취하고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 수입, 지출, 재산과 관련하여, 자신의 관할 아래 있는 공공 기관, 조직, 범

인에 대한 경영 통제를 행사하고 공공 정책과 결정의 이행과 결과를 특별 감사한다.

(6)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타 사안을 실행한다.

제290조 감사원을 비롯한 전국적인 회계 통제 체계의 조직과 기능에 관해서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91조 국군의 감사원은 전국적 통제 체계의 일부다. 국군과 부속 기관에 관련된 수입, 지출, 공공 재산의 감시, 통제, 회계감사를 그 직무로 한다. 국군 감사원은 국군 감사원장의 지휘와 책임 아래 놓아지며, 그 조직과 기능은 감사원의 권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정해진다. 국군 감사원장의 직책은 공개 경쟁을 통해 임명하도록 한다.

제5절 선거권력

제292조 선거권력(Electoral Power)은 전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조직(governing body)의 자격으로 관리한다. 선거관리 위원회에 종속된 기관으로는 전국 선거본부, 선거인 등록위원회, 정치 참여와 재정위원회가 있으며 그 조직과 기능은 관련 법률이 규정하도록 한다.

제293조 선거권력은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선거법의 규칙을 정하고 이 법이

포함하는 의문이나 미처 규정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2) 예산을 책정하여 직접 의회에 송부하며 행정적으로는 독립성을 인정받는다.

(3) 정치적 선거 홍보·재정과 관련된 지침을 공포한다. 불순종의 경우에는 처벌을 적용한다.

(4)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선언한다.

(5) 국민투표와 일반 투표로 공무원이나 관리를 선출하는 선거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조직, 행정, 지휘, 감독한다.

(6) 법률이 정한 조건에 따라 노조, 직업 집단(Professional Association),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의 선거를 조직한다. 또한, 시민 단체의 요청이나 대법원 선거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 다른 시민 단체의 선거 과정을 조직할 권한을 갖는다. 여기 언급된 조직, 단체, 조합 등은 자신들의 선거에 지출되는 제반 비용을 책임진다.

(7) 선거인 명부를 유지, 조직, 지휘, 감독한다.

(8)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의 등록과 등기를 조직하고, 이들이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데 있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규정을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감시한다. 세부적으로는 상기 단체의 구성, 갱신, 소거(消去)의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일과 그들의 합법적인 권한, 임시 명칭, 색깔, 상징에 대해 결정하는 일을 처리한다.

(9)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의 재정적 기금을 통제, 규제, 조사한다.

(10) 기타 법률이 정한 사안을 실행한다.

선거권의 기관들은 선거 과정에서의 평등성, 신뢰성,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보장하며, 투표의 사인화(Personalization)와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를 시행한다.

제294조 선거권력을 구성하는 기관들은 조직의 독립성, 조직의 기능과 예산상의 자주성, 선거 관련 기관의 비당파성, 공정성과 시민 참여, 선거 행정의 분권화, 투명성, 투개표(투개표)행위의 신속성 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제295조 선거관리위원회(National Electoral Council)의 구성원을 지명하는 후보들로 이뤄진 선거 신청위원회(The Election Nominations Committee)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제296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목적의 어떤 단체와도 관련되지 않은 5인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그 가운데 3인은 시민사회의 추천으로 선정하며 1인은 대학교의 정치학, 법학과 교수 가운데 또 다른 1인은 시민권력이 천거한 인물 가운데 선출한다.

시민 사회에 의해 추천된 3인은 6인의 대리인 후보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학교수와 시민권력의 추천으로 선출된 자는 2인의 예비 후보를 세울 수 있다. 전국 선거본부, 선거인 명부 관리위원회, 재정과 정치 참여위원회는 시민 사회에 의해 추대된 3인에 의해 각각 지휘된다. 선거관리위원들의 임기는 7년이고 각각 다른 시기에 선출된다. 시민 사회가 추천하는 3인은 의회 회기 개시 때, 나머지 2인은 회기 중간에 선출하도록 한다.

선거관리위원들은 의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은 법률에 따라 이들 가운데 선출한다.

선거관리위원들은 대법원의 사전 통지와 함께 의회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제297조 논쟁이 되는 선거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대법원 선거관리부와 법률이 정하는 법원이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제298조 선거 과정을 규제하는 법률은 선거일과 선거일 6개월 이전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형태로도 수정될 수 없다.

제 6장 사회 경제 체제 SOCIOECONOMIC SYSTEM

제1절 사회 경제 체제와 국가의 기능

제299조 볼리비아인 베네수엘라 공화국의 사회 경제 체제는 사회정의, 민주화, 효율성, 자유 경쟁, 환경보호, 생산성과 연대 책임의 원칙 아래 국민 전체의 발전과 공동체를 위한 위업과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연대적인 사적 발의권과 함께 (jointly with private initiative) 국가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증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적 부가가치를 높이며 국민 삶의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의 경제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는 또한 전문가의 협의를 거친 참여민주주의적 전략의 설계를 통하여 부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사법적 안정성, 견고함(solid), 역동성(dynamic), 지속가능성(sustainable), 경제 성장의 향상성(continuing)과 형평성(equitable)의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300조 사회적, 경영적 활동의 실현을 위해 기능적으로 분권화된 단체를 창설하기 위한 조건은 법률로써 규정한다. 상기 단체는 그 활동에 투자될 공공 재원의 경제적, 사회적, 합리적 생산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10 석유는 베네수엘라 경제의 기본으로서, 2000년도 수출 수익의 84퍼센트를 차지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유럽, 남미의 나라들이며 이런 거대한 양의 석유는 주로 Maracaibo 수역과 Barinas-Apure, 동부 유역에서 추출된다.

제301조 국가는 국영 또는 민간 기업체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역 정책(trade policy)을 채택한다. 외국인 개인, 기업 또는 조직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에 부여된 것보다 더 유리한 제도를 허용해줄 수 없다. 해외 투자는 내국 투자와 동등한 조건 아래 구속된다.

제302조 국가는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석유 산업¹⁰과 기타 산업, 채굴, 공공적 이익과 전략적 성격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관련 법률이 허가하는 한도 내에서 자체 보유한다. 국가는 재생 불가능한 자연자원의 채굴을 기반으로 하는 원자재 국영 제조업을 발전시킨다. 상기 제조업은 기술을 습득, 창안, 혁신하고 고용과 경제 성장을 복돋으며 국민을 위한 부와 복지를 성장시킬 목적으로 운영된다.

제303조 경제적, 정치적 주권과 국가적 전략을 이유로, 국가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또는 석유 산업의 운용을 위해 창설된 기관의 주식의 전부를 보유한다. 단, 계열 회사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의 비즈니스 발전의 결과로 구성되거나 이미 구성된 다른 회사들 전략적 제휴 회사의 주식은 예외로 한다.

제304조 모든 수자원은 생명과 발전을 위해 대체가 불가능한 국가의 공공적 재산이다. 그것의 보호, 이용, 복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법률로 규정하며, 국토 정리의 원칙과 수자원 순환의 국면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규정된다.

제305조 국가는 국민의 식품 공급의 안전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토대로 한 농촌 전체 발전을 도모한다. 상기의 목적은 국가적 범위에서의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충분한 공급원과 소비자 대중에 대한 식품의 항상적 적시 접근성에 대한 확보로 정의한다. 안정적인 식품 공급은 농업, 수산업, 목축업, 양식업 활동을 통한 국내 농수산 생산을 발전시키고 우선 성장 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식품 생산은 국가의 경제, 사회적 발전과 국가적의 근본적 이익이 걸려 있는 사안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재정, 통상, 기술 이전, 토지의 소유, 기반 시설(infrastructure), 직업 훈련과 자급자족의 표준 수준(strategic level)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여타의 조치들을 공포해야 한다. 덧붙여, 농업 활동에서 나타나는 고유의 불리함을 상쇄하기 위하여 국내외 국제 경제의 차원에서의 활동 증진에 힘쓴다.

국가는 소규모 어민들의 정착과 공동체 발전을 촉진시키며 법에 규정된 연근해와 원양어업의 어장을 보호한다.

제306조 국가는 고용을 확대하고 농민

복지의 수준과 그들의 국가발전예의 합류를 보장할 목적으로 농촌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장려한다. 또한, 기반 시설(infrastructure) 확충, 관련 장비의 보급, 차관(借款), 훈련과 기술 지원 사업 등의 원조를 통하여 토지의 최적의 이용과 농업 활동을 장려한다.

제307조 대토지소유제(The predominance of large land estates)는 사회적 이익에 반(反)하는 것이다. 법률은 유향 토지(fallow land)에 대한 과세를 위해 세법에 적절한 조항을 마련하고, 이 토지의 생산적 경제 단위로의 변화와 농업용 토지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다. 농민과 그 외의 농산품 생산자들은 관련 법률에 기록된 사례와 형식에 따라 토지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농업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소유의 조합적(associative), 개인적 소유 형식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한다. 국가는 농식품에 대한 잠재적 생산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용 토지의 지속적인 관리를 감독한다.

재정 관리, 학술 연구, 기술 협력, 기술 이전을 위시하여, 농업 경쟁력·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타의 활동은 기금 조성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유사한 재정적 기여(quasi-tax contributions)를 창설하여 그 예외를 인정한다. 이에 대한 규정은 법률 조항에 따른다.

제308조 국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cooperatives), 신용금고, 가족소유기업

(family-owned businesses), 소기업, 그리고 노동, 저축, 소비를 위해 형성된 모든 지역자치회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상기와 같은 지역자치회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근거를 두며, 국가의 경제 발전을 강화할 목적으로 운영되며 직업 훈련, 기술 협력과 적시(適時)의 자금 조달이 보장된다.

제309조 베네수엘라의 상징적 민속 산업은 국가의 특별 보호를 받아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예품의 제조와 상품 판매의 홍보 자금을 위한 대출 시설(Credit Facilities)의 혜택을 얻게 된다.

제310조 관광 산업은 국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활동이므로, 이 헌법에 예시된 사회 경제 체제의 기본 틀 안에서 국가는 관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양화의 전략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고 발전을 보장할 전략을 공포해야 한다. 국가는 관광 분야의 개발과 강화를 감독한다.

제2절 조세금융 체제

제1부 예산 제도

제311조 재정 행정은 효율성, 지불 능력, 투명성, 책임성, 재정의 균형을 원칙하

에 운영되고 집행된다. 재정 행정은 다년(多年)예산 계획을 통해서 정상적 지출(ordinary expenses)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기본 수입(ordinary revenues)의 확보 여부를 가늠한다.

행정부는 지출과 부채(負債)의 최대한도를 계획한 다년(多年)예산 계획을 법적 재가(裁可)를 위해 의회에 제출하여 국가 예산의 사용을 계획하도록 한다. 법률은 이 계획의 특징과 수정을 위한 조건과 이행의 조건들을 규정한다.

지하자원과 광물¹¹의 채굴로 얻은 이익은 일반적으로 생산적 실물 투자(finance real productive investment), 교육, 건강 등의 재정 요구에 쓰인다.

국가 재정과 경제 행정을 위해 규정된 원칙과 규정은 그것의 적용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또한 규제할 수 있다.

제312조 경제 규모, 재(再)투자, 공공 부채 원금 상환을 충당하기 위한 소득 형성 능력 등과 관련하여서는 신중한 조사를 통해 제정된 법률에 따라 공공 부채(public debt service)의 한도를 정한다. 법률이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공공 신용 거래의 운영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운영을 정식으로 허가하는 특별법을 필요로 한다. 특별법은 상거래 내역의 양식을 지정하고 관련 예산법에 규정된 대로 적절한 예산의 신용도(budget credits)를 인증한다.

11 베네수엘라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생산되는 광물질로는 철, 보크사이트, 석탄, 금, 인산염, 석회 등이 있으며 사금과 금광석에서 나오는 금도 풍부하여 알려진 세계 금 저장량의 12퍼센트를 점하고 있다고 함.

연간(年間) 부채에 대한 특별법은 예산법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국가는 법률에 따라, 공권력의 합법적 기관에 의해 상정된 의무 이외의 다른 의무를 승인할 수 없다.

제313조 국가의 경제적, 재정적 행정은 매년 법률의 심사를 통과한 예산안에 의해 운영된다. 행정부는 관련 법률이 정한 시일 내에 의회에 예산 집행의 초안(draft Budget Act)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행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의회에 법률이 정한 시일 안에 예산 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그가 의회에 의해 거부되었을 경우에는 현행 회계연도의 예산이 계속 유효성을 갖는다.

의회는 예산안의 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 수입의 감소를 불러오는 조치나 예산 법안에 기록된 세입 예산액을 넘는 지출은 승인하지 않는다.

다년간의 예산 계획, 특별 채무법(special indebtedness law), 또는 연간 예산안의 제출에 있어, 행정부는 재정 안정과 책임 원칙 아래 재정 정책을 장기적으로 뚜렷하게 명시하고 목표들이 달성의 방식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제314조 어떠한 경우에도 예산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지출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는다. 추가 경정 예산(Additional budget credit items)은, 국가 재정이 그와 같은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지니고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미처 예측하지 못했거나 그 재원이 부족한 항목에 대하여 필요 지출을 공포할 수 있

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각료 회의의 투표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휴회(休會) 중일 경우에는 위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315조 정부 산하(傘下) 모든 기관의 연간 공공 지출 예산에서는 각 예산 항목마다 그것이 지향하는 명확한 목표와, 목표 달성 후에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구체적 성과, 책임 공무원의 신원 등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상기의 항목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행 지수(performance indicators)의 표현을 통한 계량적 조항(quantitative terms)으로 제시해야 한다. 행정부는 회계연도(fiscal year) 마감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분(分)의 예산 집행 수치(budget implementation)와 연간 회계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부 세제(稅制)

제316조 조세 제도는 누진조세(progressive taxation)의 원칙과 국가 경제의 보호, 국민 삶의 질 향상의 원칙 아래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공 지출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의 징수를 위한 효율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317조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세금, 또는 수수료(contribution)는 징수할 수 없다.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 공제나 경감(輕減) 또는 어떤 형태의 세금 감면도 있을 수 없으며 어

면 세금 징수도 물수의 효과를 가질 수 없다.

납세의 의무를 개인적인 임무로 강제할 수 없다. 허위신고에 의한 탈세(tax evasion)는 법에 규정된 다른 처벌을 저해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공무원의 탈세 시에는 형벌이 배가(倍加)된다.

모든 세법은 세금 징수에 대한 발효 기간을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 규정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그 발효기간을 연속적인 60일 동안으로 정한다. 이 조항은 이 헌법에 의해 행정부에 부여된 특별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연방 세무 행정은 의회에 의해 통과된 바에 따라 기술적, 기능적, 재정적 자주성을 향유하게 된다. 법률에 규정된 규범에 따라, 세무 행정 권한의 한도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부 국가 금융 체제

제318조 연방 정부의 금융 권한은 베네수엘라 중앙은행(the Venezuelan Central Bank)에 의해 독점적으로 집행되도록 한다. 중앙은행 설립의 근본 목적은 물가 안정의 달성과 국내의 통화(通貨)가치 보전에 있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공화국의 화폐 단위는 볼리바르(the Bolivar)¹²로 정한다. 중남미, 카리브 해 연안 내에서 공동의 화폐가 제도화될

경우에는 공화국이 체결하는 조약의 대상인 화폐가 채택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권한 내의 정책의 기획과 시행을 위한 자주성을 가지는 공법상의 법인(public-law juridical person)이다. 중앙은행은 국가와 민족의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반적 경제 정책에 부응하여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상기 목표의 적합한 이행을 위하여 중앙은행은 금융 정책의 기획과 시행, 외환 정책 구상에의 참여와 집행, 화폐, 신용 거래, 이자율의 통제, 외환보유고의 행정과 법률이 정하는 모든 사안에 걸친 권한을 갖는다.

제319조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공공 책임의 원칙 아래 운영되며 법률에 따라 의회에 그 정책의 현황, 목표와 결과에 대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또한 국가 거시 경제 지표의 움직임(macroeconomic variables)과 중앙은행에 요구된 사안에 대해 충분히 분석한 후에 정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목표와 과제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그 지휘부가 해임될 수 있으며 행정적 처벌이 부과된다.

중앙은행은 감사원의 사후(事後) 감독과 은행감독원의 검열과 감독 아래 있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의회에 자신이 실시한 검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야 한다. 중앙은행의 운영 지출 예산은 의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 회계감사 결과와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된다.

제4부 거시 경제의 조정

제320조 국가는 사회복지의 보장을 위하여 경제 안정을 증진·수호하고 경제의 취약함을 진단·예방하며 화폐와 물가의 안정을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무부(The ministry responsible for finance)와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거시 경제 지표(macroeconomic objectives)의 달성을 위한 금융 정책과 조세 정책의 조화에 공헌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상기의 기능 수행에 있어 행정부에 지시에 종속되지 아니하며 적자 재정 정책을 추진하거나 그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대통령과 중앙은행의 공동 작용은 정책의 연례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 합의안에는 성장의 최종 목표와 사회적 반향, 국제수지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상기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필요한 도구적 중간 변수의 수준들이 조세, 외환, 금융 정책에 일치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이 같은 합의는 중앙은행장(President of the Venezuelan Central Bank)과 재무부 장관(the head of the ministry responsible for finance)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며, 의회에 의한 예산 통과 순간에 공포되어야 한다. 정책의 수행이 그 목표에 일치되도록 감독하는 것은 합의 서명자(signers of the agreement)들의 책임이다. 상기 합의에는 기대되는 결과와 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활동 등이 명시 되어야 한다. 연례 경제 정책 합의의 특징과 회계 보고의 제출 절차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제321조 거시 경제적 안정(安定)기금은 경상 수입의 변동에 대해서는 시, 지방, 연방의 차원의 국가의 지출 안정 보장을 위하여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다. 기금의 운영 규칙은 효율성, 형평성과 재원이 투입되는 공공 기관 사이의 무차별(nondiscrimination)의 기본 원칙을 가진다.

12 해방자 Simon Bolivar의 이름에서 따 온 것으로 추정. 2006년 현재 1달러 당 약 2150볼리바르의 환율.

제7장 국가 안보 NATIONAL SECURITY

제1절 총칙

제322조 국가 안보는 국가의 기본적 책임과 권한이며 총체적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가의 안보는 모든 베네수엘라인의 책임인 동시에 베네수엘라의 지리학적 영토 내에 있는 민간인과 법인(法人)에 관한 모든 공법·사법상 법인(法人)의 책임이다.

제323조 국가안보위원회(The National Defense Council)는 국가의 총체적 수호와 주권, 영토 보전에 관련된 공권력의 기획과 자문을 위한 최고 자문 기관(the highest consultative organ)이며, 따라서 국가의 전략적 개념을 수립할 책임을 갖는다. 상기 위원회는 대통령의 주재 아래 부통령, 의회 의장, 대법원장, 공화국 윤리위원장, 국방, 국내 치안·외교·기획 분야의 각료들과, 그밖에 참석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들로 구성된다. 국가안보위원회의 조직과 권능은 관련 법률로써 규정한다.

제324조 전쟁 무기를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는 오직 국가만이 갖는다. 국내에 이미 존재하거나, 생산되었거나, 외국에서 수입된 모든 무기는 아무 보상이나 절차 없이 국가의 소유로 전환한다. 국군(the National Armed Forces)은 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무기와 화약, 폭발

물 등의 제조, 수입, 수출, 보관, 수송, 등록, 조작, 검열, 통상, 소유, 이용을 단속하고 규제할 권한을 가진다.

제325조 행정부는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국가 안보에 관련된 작전의 기획 및 집행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기밀 유지와 유포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제2절 국가 안보의 원칙

제326조 국가 안보는 독립, 민주주의, 평등, 평화, 자유, 정의, 단결, 환경보호, 인권의 보장 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공동 책임을 근간으로 한다. 또한 국가 안보는 국가 공동체 전체의 완전한 보호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생산적인 발전 정책과 베네수엘라 인 개인이나 집단이 요구하는 단계별 회의에 기반을 둔다. 공동 책임의 원칙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지리학적, 환경적, 군사적 분야에 걸쳐 적용된다.

제327조 국경에 대한 경계 태세는 국가 안보 원칙의 이행과 적용에서 가장 우선시된다. 이를 위해 국경 근처에 안전 지대를 설립하고 그 지대 내의 주민 거주와 토지 이용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특별법을 규정한다. 그리고 자연공원,

원주민 거주지, 특별 행정 체제 아래 기타 지역을 명시적으로 보호한다.

제3절 국군

제328조 국군(the National Armed Forces)은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치적 목적 없이 조직한 필수적 전문 기관(essentially professional institution)이다. 국군은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군사적 방어와 국내 질서 유지를 위한 합동 작전, 국가 발전에의 적극적 참여 등을 통해 지리적 영토를 안전하게 보전해야 한다. 상기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국군은 국가에만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개인이나 정당만을 위해 복무해서는 안 된다. 국군은 규율과 복종, 충성을 그 중심 기반으로 한다. 국군은 육·해·공군과 국토경비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임무 수행 시 관련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하고 총체적인 사회안전제도(Social Security System) 아래 자신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통합적인 방식으로 기능한다.

제329조 육·해·공군은 국가 수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요구되는 군사 훈련의 기획, 집행, 통제를 기본적 책무로써 수행해야 한다. 국토경비대의 기본 책무는 상기 훈련의 발전에 협력하고 국가의 국내 질서의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훈련의 지휘 등이다. 국군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적 치안 유지 활동과

형사상 수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제330조 국군의 현역 구성원들은 법률에 따라 투표권을 가진다. 그러나 국민 선출직에 나가거나 정치적 선전, 투쟁, 선거 운동 등의 행위에 대한 참여는 금한다.

제331조 군인의 승진은 공적(功績), 계급, 결원의 발생 여부 등에 의해 시행된다. 이는 국군의 독점적 권한이며, 관련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국민 안보 기관

제332조 행정부는 법률에 따라, 공공 질서를 유지, 복구하고 국민과 가정 가족을 보호하며, 관계 당국의 판단을 지지하고 법률에 따라 헌법적 권리와 보장의 평화적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 (1) 제복을 착용하는 전국적 경찰단(A uniformed national police corps)
- (2) 과학적, 형사적, 범죄학적, 수사 기관
- (3) 민간 소방 기관과 긴급 사태 관리 기관(emergency management corps)
- (4) 민방위 조직과 재난 관리 기관(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국민 안보 기관은 민간 단체이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인권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국민 안보 기관의 기능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조건에 따라 주, 시의 관련 권한을 동시에 구성한다.

제8장 이 헌법의 보호 PROTECTION OF THIS CONSTITUTION

제1절 이 헌법의 보장

제333조 이 헌법은 헌법에 규정된 것과 다른 어떤 수단에 의해서 폐기되거나 강제적 힘에 의해 기능이 정지되어도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상기의 경우, 모든 사망감 있는 시민들은 그 유효한 효력을 복구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334조 이 헌법에 규정된 바와 일치하는 권한의 범주 내에서, 공화국의 모든 판사들은 이 헌법의 통일성(integrity)을 확보할 의무를 가진다. 이 헌법과 양립 불가능한 법률 조항을 있을 경우에는 헌법 조항을 따른다. 모든 소송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원칙은 직무상의 일(ex officio)이라 할지라도 법원에 귀속된다. 법률과 헌법의 직접적 또는 즉각적 실행에 있어, 공포된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들의 행위 또는 법률적 지위를 가지는 행위들이 헌법과 충돌할 경우 이들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헌법적 사법 기관으로써의 대법원 헌법 재판부로 제한한다.

제335조 대법원은 헌법의 규범과 원칙의 최고성(supremacy)과 유효성을 보장하며, 이 헌법의 최고·최종 해석 기관이 되어 이 헌법의 균일한 해석(interpretation)과 적용을 감독하도록 한다. 헌법

적 규범과 원칙의 범위, 또는 내용에 대해 헌법재판부가 규정하는 해석은 대법원의 타 재판부와 공화국 기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제336조 대법원 헌법재판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이 헌법과 상충하는 국제법이나 법률에 의한 의회의 기타 행위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무효를 선언한다.
- (2) 주(州) 헌법과 법률, 시의 법령, 또는 헌법의 직접적, 즉각적 집행에서 공포된 주(州)와 시의 관련 기관의 기타 행위가 헌법과 상충할 경우 이들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무효를 선언한다.
- (3) 헌법과 상충하는 행정부의 법률 행위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무효를 선언한다.
- (4) 헌법과 상충되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타 정부 기관에 의해 공포된 헌법으로부터의 직접적, 즉각적 집행에서 비롯된 행위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무효를 선언한다.
- (5) 대통령 또는 의회 의장의 신청에 의해 공화국이 체결한 국제 조약이 비준되기 전에 헌법과의 합헌성(constitutionality)을 검증한다.
- (6) 대통령에 의해 공포된 계엄령이 선언한 법령들의 합헌성을 모든 경우에, 즉 발효 중인 경우라도 확인한다.
- (7) 이 헌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나 규정에 대한 공포가 불가능할 경우, 또는 그 공포함이 미비했을 경우에 시, 주(州), 연방 입법 기관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 불일치를 선언한다. 상기의 선언에 결함이나 결핍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정정 이행의 지침과 정정 기간을 규정한다.

(8) 다양한 법적 조치와 규정 사이에 발생하는 상충을 해결하고 좀더 우선 시되는 조치에 대한 규정을 공포한다.

(9) 공권력 집행 기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헌법적 논쟁을 해소한다.

(10) 공화국 법원에 의해 양도 받은 권한으로 사법적 규범 또는 법률의 합헌성에 대한 헌법적 비호와 통제를 구체화하는 기존 관례를 법률에 정한 조건에 따라 검토한다.

(11) 기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사안을 실행한다.

제2절 계엄령

제337조 대통령은 각료 회의를 통해 계엄령(states of exception)을 공포할 권한을 가진다. 계엄령은 국가와 공공 시설, 국민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회, 경제, 정치, 자연 또는 생태학적 질서 등이 위협을 받을 경우 또는 상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 능력이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 공포한다. 계엄령 공포 시에는 일시적으로 헌법에 선언된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나, 생명권, 고문 또는 비공식적 구금에 대한 금지령,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알

권리, 기타 무형의 인권에 대한 법률은 제한 될 수 없다.

제338조 대참사(catastrophes), 공공적 재해(public calamities) 등, 국가의 안보 또는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유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비상령을 공포할 수 있다. 이 비상령은 30일간 지속되며 추가로 30일 더 연장될 수 있다.

국가 경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비상 경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제 비상령(A state of economic emergency)을 공포할 수 있다. 경제 비상령의 지속 기간은 60일간이며 추가 60일 동안 연장될 수 있다.

국가의 안보, 국민 또는 기관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내외 분쟁의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 또는 국외 내전 비상령(A state of internal or external commotion)을 공포할 수 있다. 국내외 내전 비상령은 90일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추가 90일 동안 더 연장될 수 있다.

비상계엄령의 연장에 대한 동의는 의회에 귀속된다. 계엄령을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되며 어떤 조치에 대한 채택 여부 또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제339조 기본권 제한을 규정하는 계엄령의 법령은 공포된 지 8일 이내에 심의와 승인을 위해 의회 또는 위임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상기 법령의 합헌성에 대해 대법원 헌법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 상기 법령은 인

권·정치권에 대한 국제 조약과 인권에 대한 미주 협약에 규정된 요건, 원칙, 보장을 따라야 한다. 대통령은 추가 90일간의 계엄령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엄령 공포의 동기가 된 상황이

종결 되었을 때는 지정된 기간 전이라도 의회 또는 위임위원회, 대통령 등에 의해 계엄령이 철회될 수 있다. 계엄령의 공포는 공권력 기관들의 기능을 중단시키지 않는다.

제9장 헌법 개정 CONSTITUTIONAL REFORMS

제1절 헌법 수정

제340조 헌법 수정의 목적은 이 헌법의 하나 또는 다수의 조항에 대한 추가 또는 정정을 위함이며, 기본적 구조의 변경은 불가(不可)하다.

제341조 이 헌법에 대한 수정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

- (1) 발의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시민들의 15퍼센트의 발의, 의회 재적의원수의 30퍼센트, 또는 각료 회의의 승인을 통한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진다.
- (2) 발의가 의회로부터 이루어질 경우, 헌법 수정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요구되며 법률의 제정을 위해서는 이 헌법이 정한 심의 규정에 따른 논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 (3)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수정안을 접수한 지 30일 이내에 이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 (4) 이 헌법에 규정된 내용과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 (5) 헌법 수정은 다수의 조항에 대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헌법의 원문을 변경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간된다. 출간 시에는 수정된 조항이 기록된 장(章)의 가장 아랫부분에 수정안의 번호와 수정 날짜를 주석으로 달아야 한다.

제2절 헌법 개정

제342조 헌법 개정(Amendments)의 목적은 이 헌법의 부분적인 검토와 하나 또는 다수의 헌법 조항에 대한 수정을 위함이며, 헌법 원문의 구조와 기본 원칙에 대한 수정은 불가(不可)하다.

헌법 개정의 발의는 의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각료 회의의 승인을 통한 대통령의 의향, 또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시민의 15퍼센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통과되는 것으로 한다.

제343조 헌법 개정의 발의는 의회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처리한다.

- (1) 헌법 개정안은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입법 회의에서 그 일차 심의가 이루어진다.
- (2) 이차 심의에서는 경우에 따라 부(部) 또는 절(節)별로 심의가 이루어진다.
- (3) 삼차 최종 심의는 조항별로 이루어진다.
- (4) 의회는 개정 신청을 접수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 안에 헌법 개정안을 승인한다.
- (5) 개정안은 의회 재적 의원 수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과된다.

제344조 의회에 의해 통과된 헌법 개정안은 재가 된 날짜부터 30일 이내에 국

민투표에 부처진다. 국민투표는 개정 헌법 전체에 대해 이루어지며, 만약 의회의 1/3 이상의 승인 또는 대통령의 개정안 발의가 있을 경우 또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 시민의 5퍼센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 조항의 1/3 까지 분리해서 투표할 수 있다.

제345조 찬성 투표수가 반대 투표수보다 많을 경우, 헌법 개정이 통과된 것으로 선언한다. 통과되지 않은 헌법 개정 발의안은 의회에 동일한 입법 회의 기간 안에는 다시 제출될 수 없다.

제346조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10일 이내에 개정된 사안에 대해 공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불이행(不履行) 시에는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치된다.

제3절 헌법제정의회

제347조 모든 베네수엘라 국민은 원천적 헌법제정 권력(constituent power)의 소유자다. 이 권력으로써 국민은 국가를 변혁시키고 새로운 사법적 질서를

창설하며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의 헌법제정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48조 헌법제정의회는 관료 회의를 거친 대통령의 발의에 의해 소집된다. 의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모든 시 입법위원회의 2/3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또는 선거인 명부 등록 국민의 15퍼센트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도 발의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제349조 대통령에게는 새로 제정된 헌법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 기성 권력은 어떤 형태로도 헌법 제정의회의 결정을 방해할 수 없다.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면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공화국의 공식 관보(官報)나 헌법제정의회의 관보에 상기 내용을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350조 베네수엘라의 국민은 공화국의 전통과 독립, 평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그들의 투쟁에 충실하여, 민주주의적 가치, 원칙, 보장을 침해하거나 인권을 경시하는 그 어떠한 체제, 입법, 당국도 무시할 수 있다.

폐기 조치 (Sole Derogation Provision)

1961년 1월 23일에 공포된 베네수엘라 공화국 헌법은 폐기된다. 사법적 질서의 나머지는 이 헌법과 모순되지 않는 한 유효할 것이다.

임시 규정 (Temporary Provisions)

- 헌법 제18조에 규정된 자치체(the Capital District)에 대한 특별법은 헌법제정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미란다주(State of Miranda)의 영토적 통합성을 보전해야 한다. 상기 특별법이 승인되면 연방 행정부에 의한 유기적 법률과 지방자치 제도에 의한 유기적 법률은 계속해서 효력을 갖게 된다.
- 헌법 제38조에 제시된 국적의 취득·선택·포기·회복과 귀화의 무효화와 철회 그리고 국내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며 베네수엘라 내에서 본적지(domicile)의 획득을 신청한 외국인 또는 2년 이상 합법적으로 생활비를 벌며 베네수엘라 영토 내에 거주한 외국인에 대한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해당 외국인은 베네수엘라에 거주할 권한을 얻는다.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지를 가질 경우 국내 거주를 지속할 의향(意向)을 표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헌법 제32, 33, 36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거주 지속의향에 대한 신고는 성년(成年)인 당사자의 법정 증서 작성으로 이루어진다. 당사자가 21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는 법적 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다.
- 의회는 취임식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사안을 가결(可決)해야 한다.
 - 헌법 제45조에 제시되어 있는 국민의 강제 실종(forced disappearance of per-

sons)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는 형법전(刑法典)의 부분적 개정

(2) 상기 개정 법안의 가결 시에는 가급적 미주협약(Inter-American Convention)의 339조에 따른 국민의 강제 실종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예외로 인정된 유기적 법률에 대한 사안

(4) Apure 주(州)의 Jose Antonio Paez와 Romulo Gallegos자치 행정부의 특별 제도에 대한 조건과 특징을 규정하는 특별법: 상기 법을 조직할 때에는 대통령, 국군, 유사주(類似州)가 임명한 대리인 또는 국경 문제와 관련된 기타 모든 기관 등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4. 의회는 취임식 후 1년 이내에 다음 사안을 승인해야 한다.

(1) 특별법 또는 형법전(Penal Code)의 형태로 된 고문(拷問)에 대한 형벌 규정

(2) 헌법과 베네수엘라에 의해 비준된 관련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 망명자와 망명권 보장에 대한 기본법

(3) 기본 노동법(the Organic Labor Law)의 개정과 관련하여, 헌법 제92조의 퇴직금 지급 원칙(근무 시간과 최근 월급 지급액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지급에 대해 언급)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를 10년간 보장하는 제도:

상기 개정 법안이 효력을 갖기 전까지는 근속 연수에 대한 보상 규정은 현재 유효한 기본 노동법을 일시적으로 따른다. 또한 상기 개정법은 근무 시간 제한과 그 제한에 의한 점진적 봉급 삭감에 대한 총체적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개정법은 공화국이 체결한 국제 노동기구 협약에 따른다.

(4) 자율적이고 특수화된 노동 재판권·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조건에 따른 노동자보호법의 보장과 기준에 대한 절차상의 기본 노동법:

절차상 기본 노동법은 진상의 규명, 형평성, 해당 판사의 권위 등의 가치보다 무상서비스, 신속성, 구두변론, 즉시성의 원칙에 우선하여 제정된다.

(5) 사법 제도, 국가 행정부, 시민권력, 선거관리위원회, 세법, 예산법, 공공 신용법에 관련한 법률의 제정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기본법:

상기 법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피고인의 변호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법 체계의 기능과 혁신 전략(Restructuring)에 대한 위원회를 결성하여 자율 관선 변호인 제도(the Autonomous Public Defender System)의 효율적 기능과 발전을 책임지도록 한다.

(6) 국가 공공 재정과 법률이 정한 원칙과 규정에 따른 공공 재정의 조세 규정, 공공 재정의 적용 원칙과 규제 원칙 등에 대한 법률

(7) 지방자치체와 관련된 합헌성의 원칙에 대한 법률:

상기 법률은 지방자치체와 기타 지방 기관, 그리고 각 관할권의 정치 행정 구역을 존중하며, 국가의 입법 기관에 의해 기관에 허가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기준 규정에 대한 심사와 판결의 과정을 거쳐 제정되어야 한다. 현존하는 시, 군은 상기 법률이 규정하는 새로운 체제에 개편될 때까지 현행 체제를 유

지하도록 한다.

(8)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에 대한 제한 법률:

이 법안은 상기 단체의 기능, 임기, 선거규정, 해임, 경쟁 불가능성(incompatibilities), 제도, 의장과 관리자 임명 시의 요구 사항·조직 방식과 기능의 범위 등에 대해 규정한다. 상기 단체의 이윤 적용에 대해 제한하고 규정하는 회계 원칙에 대해서는 그 계정과 수지에 대해 행정부가 선임하고 감사원이 관리하는 전문 회계사에 의해 중앙은행 행정부의 합법성, 성실성, 기회, 유효성, 효율성에 대한 연간 독립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상기의 법안에는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의 의장과 지도부의 기타 구성원들이 오직 국가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상기 지위의 후보자들의 신용과 장점을 평가하는데 공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명시되어야 한다.

상기 조항은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의 의장과 관리자 선임에 대한 권한이 행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이 공공 기관의 지시와 승인에 있어서 입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9) 국가 경찰 기관(national police corp.)에 관한 법률:

상기 법안은 국가 경찰 기관의 육상 운송 수단(terrestrial transport)과 통행 수단에 대한 경비망(transit vigilance)의 통합 방식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5. 의회는 본 헌법이 유효성을 갖게 된 후

일 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 세법을 발효(發效)시켜야 한다.

(1) 상기 법안의 목적과 경제적 중요성을 새기고 세법과 세칙(稅則)에 대한 모호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정밀한 해석.

(2) 법률에 의한 불소급 원칙(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에 대한 예외조항의 철회.

(3) 국세청의 편의를 위한, 국가에 귀속된 소득(imputed income)에 대한 개념 확장.

(4) 중대한 세법 위반(serious tax offenses) 제한 사항의 삭제: 상기 사항은 기본 세법전(the Organic Tax Code)에 정의되어야 한다.

(5) 세법 위반에 연루된 고문(顧問), 법률사무소, 개인 감사원과 기타 전문가 등에 대한 형벌 강화: 상기에는 직권 남용에 대한 정직 처분 기간(periods of suspension)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도록 한다.

(6) 세금 신고 기한을 연장시키는 허위 신고에 의한 탈세에 대한 형벌과 처벌의 엄정성(嚴正性) 강화.

(7) 더 엄정한 형벌의 적용을 위해 형벌의 완화 또는 심화에 대한 세부 내용 검토.

(8) 국세청의 감사 권한 확장.

(9) 세금 허위 신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불로소득세(rate of default interest) 증가.

(10) 관리자나 세금 자문 기관이 세법 위반을 종용하였을 경우 그들의 자산을 압류하는 연대 책임 원칙의 확장.

(11) 더욱 신속한 행정 절차의 도입.

6. 국회는 2년 안에 이 법률에 관련한 모든 사안을 가결해야 한다. 원주민과 교육, 국경에 대한 기본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7. 헌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의회와 지방 자치위원회의 원주민 대표자를 선출 할 경우에는 관련 유기법에 따라 다음의 추천 요구 사항과 방식을 따라야 한다. 모든 원주민 기관이나 위원회는 원주민 후보자를 추천할 권리가 있다. 후보자는 모국어 사용자이며 다음 조건 가운데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키는 자라야 한다.

- (1) 해당 공동체 내의 전통적 공공 기관(traditional Authority)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 (2) 원주민 문화의 정체성을 공인(公印) 받기 위한 사회적 투쟁에서 성과를 올린 사람
- (3) 원주민과 그 지역 사회의 공익을 위해 일한 사람
- (4) 합법적으로 설립된 원주민 공공 관현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일하고 있는 사람

행정구는 Zulia, Merida, Trujillo 주를 포함하는 서부(West), Amazonas, Apure 주를 포함하는 남부(South), olivar, Delta Amacuro, Monagas, Anzoategui, Sucre 주를 포함하는 동부(East)의 이상 세 구로 구분된다.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는 각 주(州)는 각자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 국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정구나

구역에서 유효 투표수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대표자로 임명한다.

주(州) 입법위원회와 원주민 거주지 내 지방자치위원회의 원주민 대표자 선출을 위해서는 중앙통계청(the Central Statistics)과 정보관리기관(Data Processing Office)의 1992년도 공식 인구 조사 자료를 참고 문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상기의 선거는 이 헌법에 규정된 규정과 요건을 따라 치러져야 한다. 국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원주민 집회와 관리 기구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8. 헌법 내 새로운 선거법의 공포에 따라 모든 선거는 국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소집, 조직, 지휘, 감독된다. 헌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국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첫 번째 회기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동시에 취임한다. 회기의 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2인의 구성원을 교체할 수 있다.

9. 헌법 제5장 4절(chapter IV of title V)의 조항에 따라 검찰청과 감사원의 기본법은 그 효력이 지속된다. 민중수호청의 의장은 일시적으로 헌법제정위원회에 의해 선출된다. 민중수호자(People Defender)은 헌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으로 기관의 구성, 통합, 예산적 또는 물리적 기반(budget and physical infrastructure)에 대한 사안을 처리한다.

10. 주(州)에 할당된 분배 몫의 최소 50퍼

센트 투자의 의무에 관한 헌법 제167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 부로 발효(發效)된다.

11. 공지7에 대한 국가 관리의 조항은 현재 규정된 바와 마찬가지로 계속 공권력에 의해 관리되는 것으로 한다.

12. 원주민 거주지의 경계에 대한 헌법 제119조는 본 헌법이 효력을 얻은 후 2년 안에 조항에 언급된 바대로 시행된다.

13. 주(州)가 주법(州法)을 시행하기 전까지 주(州)의 권력은 이 헌법의 제164조에 따라 현 체제대로 운영된다.

14. 지방자치체의 규정과 조령·기타 기준 규정과 관련된 헌법 조항의 원칙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보다 법규 명령(legal order)이 우선 적용되며, 이 명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체의 합법적인 권한과 분산된 과세(課稅)권한이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15. 헌법 제105조에 언급된 법안의 가결 시에는 본 헌법이 가지는 유효성보다 법규 명령을 우선 적용한다.

16. 국가의 역사적 유산의 보호를 위해서 헌법 제정 위원회의 연대 기록자(Chronicler)는 필요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서면으로 된 서류, 비디오, 디지털 녹화 기록, 사진, 정기간행물, 음성 녹취록과 기타 모든 증거 자료를 보호해야 한다. 이 모든 서류는 국가기록보

관소(the General Archives of the Nation)에 보관하도록 한다.

17. 본 헌법이 승인되는 즉시 공화국의 명칭은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대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으로 명명된다. 모든 공적(公的), 사적(私的) 기관과 시설은 즉각 문서, 증명서, 기타 모든 서류에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의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관례에 따라, 행정부는 5년 안에 현존하는 문방구를 모두 사용하고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문서 작성의 방식을 바꾸어 나가도록 한다. “베네수엘라 공화국”(Republic of Venezuela)의 이름으로 발행된 주화와 지폐의 유통은 헌법 임시규정 네 번째 조항에 규정된 바대로 중앙은행이 개편된 이후에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으로 변환하여야 한다.

18. 헌법 제113조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의회는 해당 원칙, 규정과 규칙에 대해 감독, 조정, 회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설립에 대한 법을 가결시켜야 한다.

상기 기관의 지휘자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의회 내부 특별 기관의 승인 보고서를 통해 임명된다. 법률은 관리(officer)를 임명하여 연방 정부와 사법부를 평가하고 그 내부의 논의를 해결하도록 한다. 이 관리의 헌법 규정에 역효과를 초래하지 않는 법

위 내에서 규제 원칙에 대한 독점적 우선권을 가진다.
 상기 조항은 공적(公的) 임무가 갖는 특권과 특권 소유자의 부당 이익, 공적임

무와 밀착된 투자 재정을 규제하고 관련 기관이 승인한 공적(公的) 특권의 향상(upgrade)과 확장에 대해서 관리한다.

찾아보기

가

가디언 283
 거시 경제 안정화 기금 328
 거시 경제 지표 317
 공공성 강화 395
 공공적 편익 396
 공동경영 66, 81, 257, 259, 264, 275, 281, 283, 389
 공동경영 기업 398, 401
 공동경영 제도 217, 218, 260
 관계적 계약 279
 관료주의 147, 173, 198, 201, 284, 385, 406
 관리위원회 228
 교육 기회 지수 332
 구스타보 33
 국가 사회주의 386
 국가 통계청 264
 국가발전기금 248
 국가주의 385, 406
 국민 주도성 402
 국민소환 75, 76, 105, 131

국민직접정치 102, 105, 136, 207
 국영석유회사 36
 국영전력회사 218
 국영전화공사 60
 급진혁명당 63
 기대 수명 지수 332
 기독교사회당 53, 99, 106
 까다페 220, 223, 225, 248
 까멜라 220, 223
 꼬니바 248
 꼬빈파 222
 끈비아사 248

나

나시오날 98
 나이지리아 35
 나프타 355
 남남 협력 372
 남부 대학 369
 내생적 발전 지대 236
 네덜란드 병 291, 292, 301
 노동 주도성 402

노르웨이 35
 노무현 140, 141
 노사모 410
 뉴스위크 33
 니카라과 77

다

대안적 공동체 381
 대중 참여와 신뢰발전부 183, 188
 대중경제부 188, 235, 236
 대중영합주의 21
 도시토지위원회 165, 184
 디오스다도 카벨로 174

라

라 비아 캄베시나 369
 라티노 바로메트로 40
 라틴 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 342
 라파엘 로드리게스 275
 랑헬 54
 러시아 35, 376
 로드리고 차베스 155, 166
 로열더치셀 297
 루이스 미킬레나 110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 368

마

마르타 하네커 192, 194
 마이클 레보비츠 82, 246
 마이클 알버트 277
 만민을위한조국 103

메넴 56
 메드로 248
 메르칼 240, 253, 272, 278
 메르코수르 344, 348, 355, 357
 메스티조 45
 멕시코 35
 모랄레스 365
 모비스타 52
 미국 35
 미국노동총연맹 130
 미션 39, 72
 미션 과이카이푸로 122
 미션 로빈슨 74, 122, 329
 미션 리바스 122, 329
 미션 메르칼 121
 미션 메르칼 75
 미션 밀라그로 329
 미션 바리오 아텐트로 75, 121, 367, 370
 미션 부엘반 카라스 74, 122
 미션 사모라 122
 미션 수크레 74, 122
 미션 아비타트 122
 미션 피아르 122
 민족주의 323
 민족해방운동 385
 민주 집중제 159
 민주공화연합 99
 민주연합 117
 민주행동당 32, 53, 99, 106

바

바리오 111

반신자유주의 38, 58, 385
 반차베스 34, 112, 114, 118, 131
 반혁명 163
 반혁명 쿠데타 71, 72, 169
 베네비전 113
 베네수엘라 22, 25, 208, 333, 349
 베네수엘라 공산당 53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326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 128
 베네수엘라 혁명 37, 391
 베네수엘라 협동조합 중앙회 231
 베네수엘라혁명당 94
 베탕쿠르 299
 볼리바르 45, 113
 볼리바르 혁명운동 200 96
 볼리바르주의 83, 351
 볼리바리안 대안 25, 83
 볼리바리안 대학 74
 볼리바리안 서클 73, 76, 111, 155, 162, 164, 166, 176, 197, 401, 409
 볼리바리안 정신 160
 볼리바리안 하우스 172
 볼리바리안 헌법 62, 234
 볼리바리안 혁명 77, 89, 91, 115, 127, 134, 135, 349, 386
 볼리바리안 혁명당 128, 287
 볼리비아 119, 358
 분권화기금 188
 브라질 77, 119, 345, 347, 349
 비공식 부문 80
 빼네팔 222
 빼드로 가르모나 71
 뷔에르토 라 꼬루스 360

사

사우디아라비아 35
 사회 경제 발전 기금 328
 사회민주주의 403
 사회보장제 56
 사회적 경제 82, 394
 사회적 생산 기업 81, 238, 245, 394, 409
 사회적 연대 383
 사회적 이익 396
 사회주의운동 53, 103
 사회주의운동당 70
 살리나스 56
 삼성전자 329
 석유 개방 304, 323
 선거전투단위 163, 172
 선의 축 365
 세계사회포럼 42, 76, 125, 211, 372, 373
 소액금융개발기금 188
 수권법 109
 스탠다드 오일 297
 시몬 로드리게스 84
 시몬 볼리바르 84, 337
 시스네로스 33
 신경계종합정책 57
 신사회주의 90, 126, 316
 신식민주주의적 정책 375
 신자유주의 33, 42, 55, 56, 115, 137, 151, 302

아

아단 차베스 284
아르헨티나 119, 345, 347, 355
아세안 355
아스시온 조약 344
아일윈 56
악마의 배설물 301
안녕하세요, 대통령 212
안데스 공동체 343, 347, 351
안데스 무역협정 363
알까사 220
알프레도 마네이로 104
알프레드 마살 273
애국전선 97
에너지석유부 188
에너지의 통합 353
에반스 맥도너프 컴퍼니 132
에제퀴엘 사모라 84
에과도르 77
엘리트주의 385, 406
연대성 152, 280, 284
연대성의 원칙 394
우루과이 119, 347, 359
워싱턴 컨센서스 57
의료위원회 187
이드로벤 248
이란 35
인간 개발 지수 331
인민민주주의 403
인베발 220
인베텍스 220
인베팔 161, 220, 229
인테사 304

일본 376
입소스 39

자

자본파업 71, 73, 75, 84, 170, 330
자주관리 40, 275, 397
전국노동자연합 218
전국민주주의기금 129
제한의회 65, 67, 91, 101
제3세계의 연대 376
제3세력 149
제5공화국운동 96, 99, 103, 128
조정자 155, 156, 171
주민자치위원회 73, 148, 177, 178,
183, 185, 186, 191, 408
중국 35, 376
중미자유무역협정 350
중부 아메리카 공동시장 343
지역개발기금 188
지역공공계획위원회 180

차

차베스 23, 24, 58, 64, 77, 97,
102, 107, 127, 138, 168, 182, 211,
214, 216, 262, 268, 282, 315, 351,
363, 371, 388, 391
차비스타 116
참여민주주의 180, 279, 403
참여정부 410
천연가스 네트워크 358
칠레 28, 119

카

카라카스 78, 219
카라카스 23, 45, 52, 58, 78
카를로스 란스 274
카를로스 모네데로 194
카리브 공동시장 343
카리브국가연합 353
카스트로 28, 124
칼데라 59
코요르 56
콜롬비아 119, 347
쿠바 123
쿠바 혁명 93
쿠웨이트 35

타

탄화수소법 68, 69, 109, 298,
306, 390, 395
텔레수르 368
토지개혁법 305
토지법 390
통합 혁명 정당 409
특별경제분담법 188

파

파라과이 347, 359
페레스 56, 57, 82
페루 119, 347
페멕스 312
페트로 수르 359, 361
페트로 아메리카 359

페트로 안디나 359
페트로 카리브 359, 360, 361
페트로브라스 312, 359
페트로에과도르 312
포폴리스트 21
포폴리즘 29, 145
폰데스빠 73
폰토피호협정 63, 300
프레디 길 182
프롤레타리아 27
플랜 볼리바르 2000 38, 67, 80, 95
피노체트 28

하

한미 FTA 41, 410
협동조합 66, 81, 259, 389, 394
협동조합 감독위원회 232
협동조합법 390
협력과 연대 353
호르헤 로드리게스 54
후지모리 56
휴머니스트 사회주의 211

기타

21세기 사회주의 42, 62, 77, 214,
276, 410
21세기 신사회주의 295
49개 개혁 입법 68
5공화국운동 64
5-Factories 239
ALBA 338, 339, 351, 363, 371, 385
CANTV 52

CLPP	180	NGO	149, 400
FFM	165, 213	OPEC	36, 299, 308, 358
Foreign Affairs	268	PDVSA	50, 69, 117, 120, 271, 303, 311
FTAA	353, 375	PODEMOS	53
GDP	47, 48, 118, 292	PPT	54
IMF	59, 78, 303, 355	SUNACOOP	242, 243
LAFTA	343	UNT	76, 84
MVR	53, 148, 172	WTO	385
NAFTA	344, 385		
NED	130		

❖
독자를 먼저 생각하는 정직한 출판



시대의창이 '좋은 원고'와 '참신한 기획'을 찾습니다

쓰는 사람도 무엇을 쓰는지 모르고 쓰는,
그런 '차원 높은(?)' 원고 말고
여기저기서 한 줄씩 뜯어다가 오려 붙인,
그런 '누더기' 말고

마음의 창을 열고 읽으면
낡은 생각이 오래 묵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열리는,
너와 나, 마침내 우리를 더불어 기쁘게 하는

맘으로 촉촉히 젖은 그런 정직한 원고,
그리고 그런 기획을 찾습니다.

시대의창은 모든 '정직한' 것들을 받들어 모십니다.